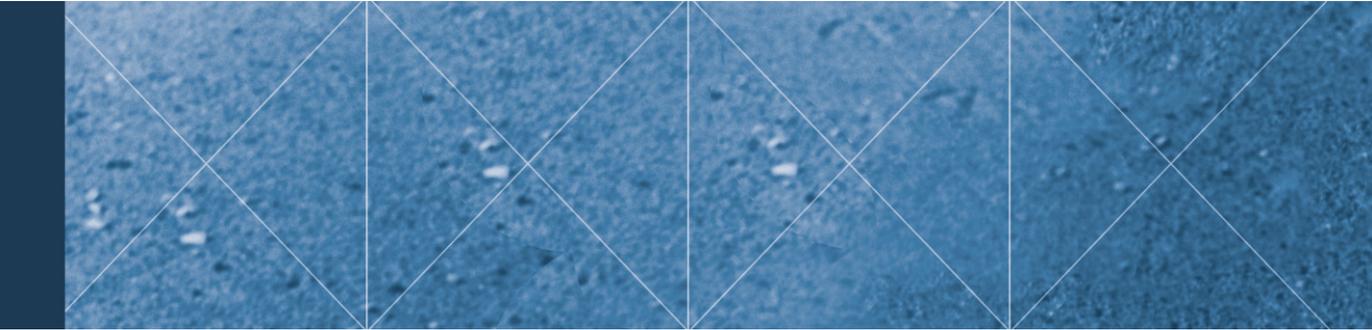


2005 국토연구원 연차보고서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국토연구원은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발전시켜 각급 공간계획의 수립에 기여함을 추구하는 흔들림 없는 국토정책의 선구자가 되겠습니다.

[발간에 즈음하여]



지난해는 참여정부 출범 후 3년째 되는 해이고 동시에 참여정부 5년의 중간 시기이기도 합니다. 참여정부는 출범과 함께 “더불어 함께 사는 균형발전 사회”를 3대 국정 목표의 하나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 지역혁신 클러스터 조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기업도시 건설 등 획기적인 균형발전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은 우리 연구원이 개원 이래 줄기차게 추구해 왔던 핵심 화두(話頭)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연구원이 수행해 왔던 국토·지역·도시 정책연구의 바탕에는 이러한 균형발전의 이념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해 우리 연구원의 수행연구 중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균형발전정책을 지원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주택·토지문제는 균형발전문제와 더불어 지난 한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이슈였습니다.

2004년의 이른바 10·29대책이 발표된 후 잠시 주춤했던 주택·토지가격이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부동산문제는 우리 국민의 중요한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부동산문제는 투기와 결부되어 양극화의 촉진, 근로의식의 저해 등 많은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부동산시장 왜곡을 시정하기 위한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밖에도 SOC, 건설경제, 환경, GIS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편리하고 쾌적한 국토, 삶의 질이 높아진 국토를 조성하기 위해 우리 연구진은 지난 한 해에도 변함없이 열과 성을 쏟았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연차보고서에서는 이렇게 해서 완성된 2005년도 179개 연구과제에 대한 대강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앞으로도 국토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창의와 효율을 접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곧 실현될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넘어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로의 진입을 위해 정부가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토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21세기 선진국도 창출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종합적·객관적인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실천방향을 도출해 나갈 것이며,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에도 적극 노력하여 하나뿐인 국토가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삶의 질 증시와 주 5일 근무제 정착, 노령사회로의 진입, 저출산 경향, 양성 평등

등 사회적 여건의 급변에 따른 새로운 국토관리수요와 국민의 다양한 요구분출을 합리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연구도 적극 수행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연차보고서를 발간하면서, 평소 국토연구원에 많은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우리 분야의 관계 전문가와 공무원 여러분께 지난 2005년 한 해의 공과 실에 대한 평가를 기대하며, 앞으로 더욱 노력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되짚어 보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 연구원이 국민과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새로운 이론과 기법을 개발하여 연구의 질을 더욱 높임으로서 국토의 미래를 선도하는 실효성 있는 연구를 꾸준히 수행해 나가는 연구기관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질책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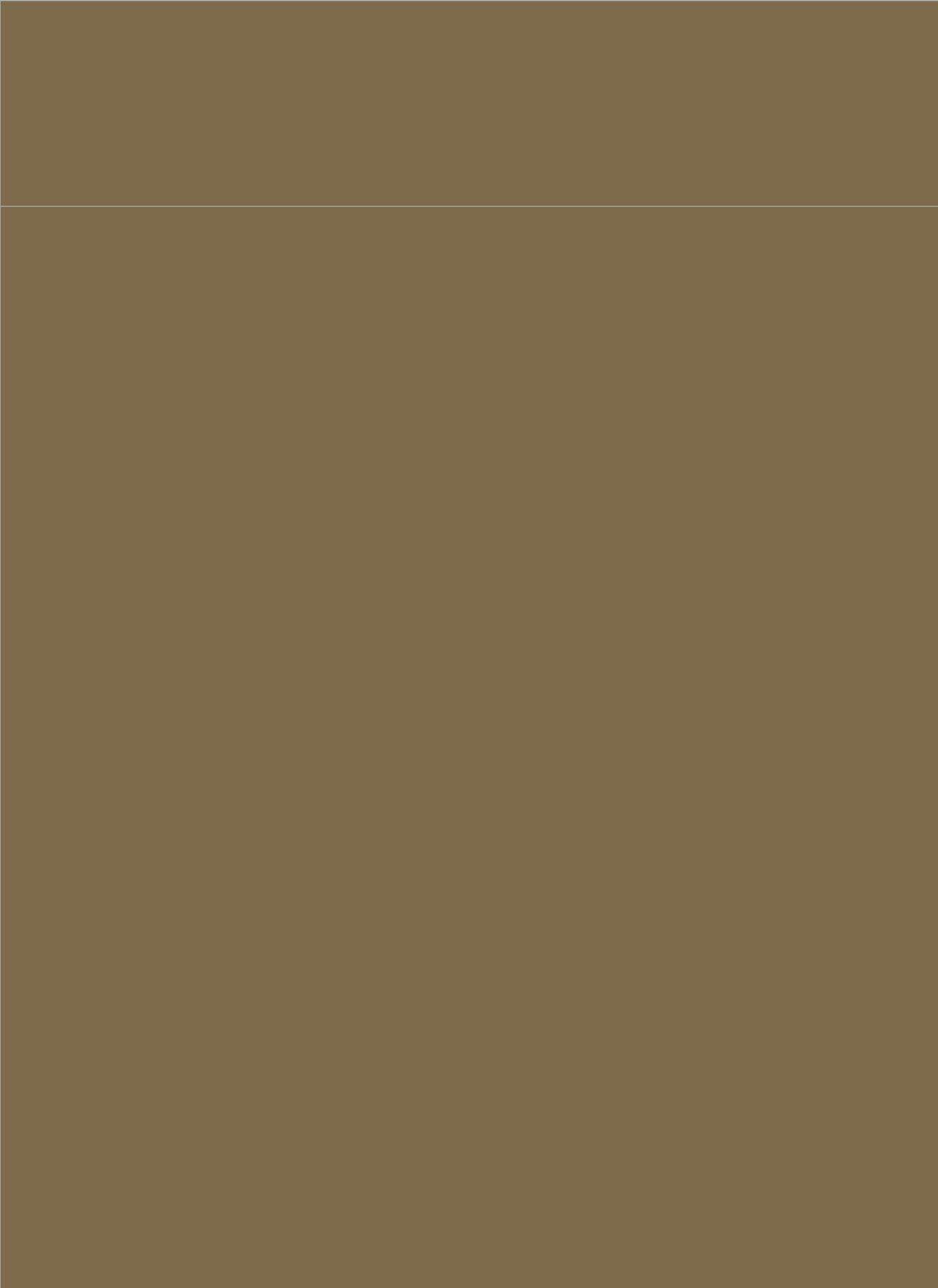
2006년 6월
원장 최병선

최병선

Contents

Chapter I	일반현황	8
	1.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10
	2. 인원 및 조직	11
	3. 2005년도 연구사업 수행 실적	12
Chapter II	분야별 주요연구	16
	1. 국토계획·환경	19
	2. 지역·도시	93
	3. SOC·건설경제	149
	4. 토지·주택	219
	5. GIS	257
Chapter III	연구 및 지원부서 소개	288
	1. 국토계획·환경연구실	293
	2. 지역·도시연구실	299
	3. SOC·건설경제연구실	307
	4. 토지·주택연구실	313
	5. GIS연구센터	319
	6. 도시혁신지원센터	323
	7. 연구지원부서	327

Chapter IV	연구지원사업	330
	1. 국제협력사업	332
	2.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개념 국제공모	333
	3. 21세기 국토포럼	334
	4. 제4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334
	5. 제10회 전국 초등학교 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335
	6. 기획단행본 발간	335
Appendices I	정기간행물 목차	336
	1. 국토(279호~290호)	338
	2. 국토연구(44권~47권)	347
	3. 건설경제(43권~46권)	349
	4. 국토정책Brief(78호~97호)	351
Appendices II	보고서 색인	352
	1. 보고서명 색인	354
	2. 연구자명 색인	360



일반현황

1.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10
2. 인원 및 조직	11
3. 2005년도 연구사업 수행 실적	12

1.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 설립목적

국토연구원은 하나뿐인 소중한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1978년에 설립되었다.

연구원 개원 이래 '아름다운 산하와 살맛나는 국토'를 만들기 위한 시대적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국토 건설, 균형 있는 국토 건설, 국토의 미래 선도, 지식기반국토의 조성을 위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주요기능

국토의 이용과 보전, 지역 및 도시계획, 주택 및 토지정책, 교통, 건설경제, 환경, 수자원, GIS 등 국토 전반에 걸친 폭넓은 연구와 국가의 중·단기 정책을 뒷받침하는 미래지향적이고 실용·실증적인 현장중심적 연구를 추구하며 21세기의 풍요롭고 안전한 국토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국토의 미래와 균형, 풍요와 안전을 구현하기 위해 다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국토종합장기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연구

국토의 이용·보전 및 자원관리에 관한 연구

토지·주택·도시 및 건설산업 등 국토관련 분야 정책연구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종합연구

국토공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급

지방자치단체·국내외 연구기관·국제기구와 공동연구 및 연구협력사업

정부·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 수탁

국토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국내외 국토관련 전문가 교육 및 위탁연수

연구결과의 출판 및 배포

위와 관련된 부대사업 및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2. 인원 및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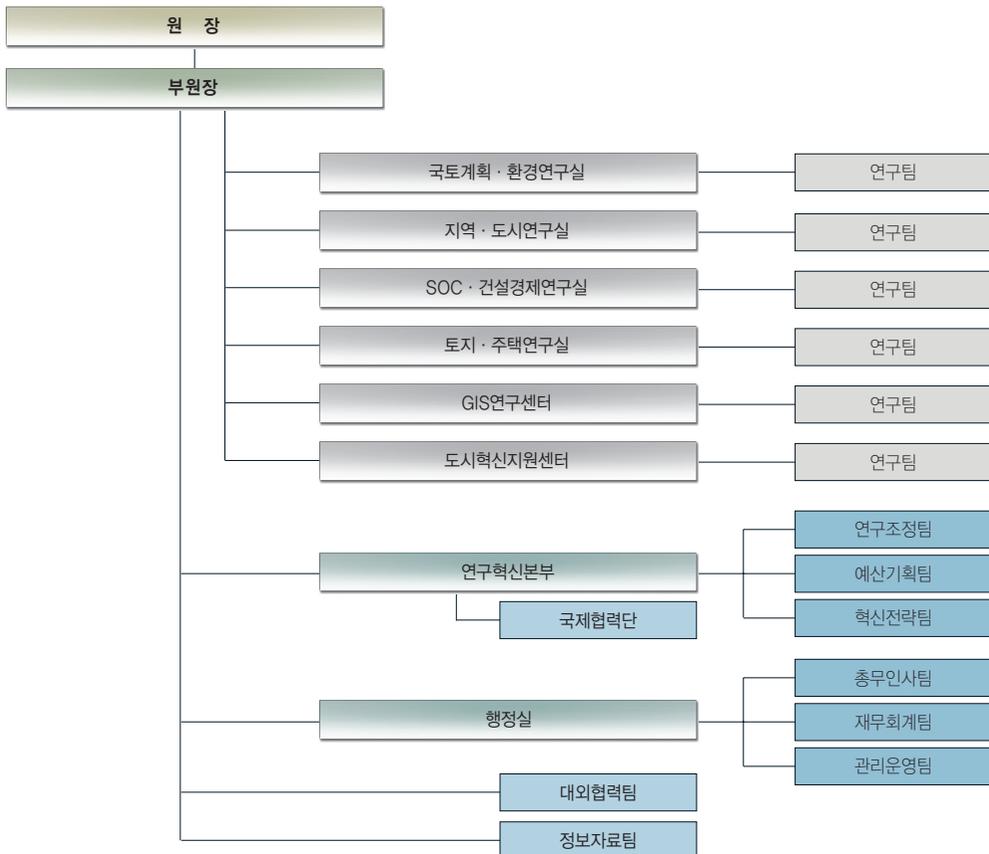
■ 인원

현원 141인(정원 219인)으로 이 중 연구직이 122인, 관리·전문직이 19인이다. 연구직은 도시 및 지역계획, 교통공학, 경제학 등 다양한 전문분야의 박사인력 67인, 석사인력 5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	임원	연구직		관리·전문직	
구성	원장 1인	박사 66인	석사 55인	관리직 18인	전문직 1인
141인	1인	121인		19인	

■ 조직

국토연구원의 조직은 국토계획·환경연구실, 지역·도시연구실, SOC·건설경제연구실, 토지·주택연구실, GIS연구센터, 도시혁신지원센터 등 6개 연구실·센터와 연구혁신본부, 행정실, 대외협력팀, 정보자료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보직자 현황

원 장	최병선
부원장	박양호
연구부서장	
국토계획·환경연구실장	서태성
지역·도시연구실장	박재길
SOC·건설경제연구실장	정일호
토지·주택연구실장	손경환
GIS연구센터장	최병남
도시혁신지원센터장	진영환
연구지원부서장	
연구혁신본부장	김영표
행정실장	양용태
대외협력팀장	방병무
정보자료팀장	신동빈

3. 2005년도 연구사업 수행 실적

■ 중점 연구 방향

21세기의 세계는 '무한경쟁'을 화두로 국가 간·기업 간 경쟁 심화 및 경제 개방과 경제규모 확대를 위한 노력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또한 내적으로는 사회의 다원화·종합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도래, 균형발전과 사회통합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발전 및 국민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과 정책수요의 변화는 새로운 연구환경의 패러다임을 가져와 국토연구원이 지향해 나가고 있는 '지속가능한 국토 건설을 위한 연구'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2003년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래 '전국 어디서나 고루 잘사는 나라 건설'이 주요 국정과제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

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도시와 농촌이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 국토, 수도권과 지방 어디에서나 균등한 기회를 제공받는 기회균등의 국토, 세계로 뻗어나가는 경쟁력 있는 국토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선도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지식과 소통(Communication), 정보기술에 바탕을 둔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지식기반국토'를 조성하기 위해 학문 간·전문분야 간 교류를 넓히고, 지역 간·국가 간 활발한 연구협력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가정책에 대한 기여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1978년 연구원 설립 이래 추구해 온 국민 삶의 질을 중시하고, 자연환경·역사·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연구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 더욱더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다양한 연구수요에 부응하며, 국토의 미래를 선도하는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 2005년도 수행 연구과제

2005년을 '국토역량 강화의 해'로 정하고, 통합국토네트워크 강화,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지역경쟁력 강화와 살고싶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1978년 개원 이래 27년 동안 총 1,922건의 연구를 수행하여 정부의 정책수립 및 집행에 기여하였고, 2005년에는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 등 기본·수시연구과제 65건,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연구」 등 수탁연구과제 114건 등 총 179건의 과제를 수행하였다. 이 중 기본 및 수시연구과제 65건, 수탁과제 59건 등 모두 123건의 과제를 완료하였고, 56건은 계속사업으로 2006년도로 이월하였다.

■ 범정부적 국정과제 수행

2008년 국민소득 2만 달러, 2013년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이 협력하고 상

2005년도 연구사업 수행 실적(2005. 12. 31 현재)

(단위: 건)

분 야	고유연구사업		수탁연구사업	계
	기본과제	수시과제		
국토계획·환경	5	8	23(13)	36(13)
동북아	1	4	2(1)	7(1)
지역·도시	5	11	33(17)	49(17)
SOC·건설경제	6	7(1)	31(12)	44(13)
토지·주택	5	7	12(7)	24(7)
GIS	4	2	13(5)	19(5)
합계	26	39(1)	114(55)	179(56)

주) 괄호 안의 수치는 2006년도 이월과제 건수임

생활 수 있는 국토정책이 요구된다. 국토연구원은 참여정부 출범 이래 국가적 대사(大事)가 되어온 전국 어디서나 고루 잘사는 「相生의 國土, 多核型 國土」 건설을 위해 대형 국정과제 수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기균형발전을 위한 국토공간정책 수립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방안,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 등 53건의 국토공간정책을 수립하여 정부에 제안하였다. 특히 참여정부의 12대 국가의제인 '지속가능한 국기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하여 통합 국토를 향한 지역 간 공동발전방안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상생발전의 틀 및 유형별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관련 연구

21세기 미래도시, 살고 싶은 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수립 및 개발구상,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관리 방안,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을 위한 분야별 전략연구 총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국제현상공모 관리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국제현상공모 관리를 통해 40개국 351개 팀의 미래도시 비전을 담은 참신하고 뛰어난 미래도시 설계 아이디어를 확보하여 기본계획, 개발계획, 실시계획의 기본개념으로 활용하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및 혁신도시 건설관련 연구

지역 간 불균형 완화 및 자립적 지역발전 촉진을 위해 국기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에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설정, 이전대상 기관 및 시도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의견 조사분석, 이전대상 기관의 지역별 배치방안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지원방안 등을 연구하여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지방이전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평가체계 정립, 입지선정 지침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혁신도시 입지선정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제시된 평가기준에 따라 2005년 12월 말까지 10개 혁신도시 입지선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였다.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관련 연구

8·31 부동산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부동산시장 분석 및 전망, 실거래가에 기초한 공평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인 부동산거래시스템 개발 연구를 수행하여 보유 및 거래제도 투명화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 실현방안 연구를 통해 수도권 및 광역시의 국민임대주택 개발가능지 분석, 지역별 배분 및 재원확보방안을 제시하고,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개발규모(200만㎡ 이하), 주택규모(11~24평)의 다양화 그리고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개정하는 데 기여하였다.

■ 전문분야별 현안과제 수행

경제발전과 국민의식의 성장에 따라 국민 삶의 질 향상과 합리적 정책 실현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이같은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고 시급한 현안과제에 적극 대처하여,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합리적이고 시의성 높은 해결방안 제시,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수립을 지원하는 연구를 확대하고 있다.

국토계획 및 환경 분야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를 통해 범정부·지자체 차원에서 추진 중인 지방분산·분권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고,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 및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국책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사회합의형성시스템 구축방안 연구를 통해 선진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필수조건이자 공공사업 효율화를 위한 국제적 표준절차인 사회합의형성시스템 구축 전략 및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역·도시 분야

새로운 도시개발 패러다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추진방안 연구를 수행하여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정책의 필요성, 개념과 비전, 국내 실태 및 주요 선진국 사례, 목표 및 전략과제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인구저성장 시대의 도시관리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구저성장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인구·주택가격 등 도시에 미치는 효과, 선진국의 도시관리정책 사례를 분석하고, 인구저성장 시대의 도시관리정책을 위한 법·제도 정비, 도시기본계획의 개선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SOC·건설경제 분야

고속철도 건설과 개통이 국토공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고속철도 사업의 긍정적 효과 제고방안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기여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국토공간구조 변화, 해외 고속철도 운행국가의 공간구조 변화 분석 등을 통해 국토의 변화를 전망한 고속철도와 국토공간구조의 변화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건설경기의 구조적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를 통해 경기부양과 건설경기 활성화의 관계 규명 및 건설경기 변화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 일관성 있는 건설경기 정책 추진방안 제시로 시의성 있는 정책수립에 기여하였다.

토지·주택 분야

주택산업의 과열·침체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고, 주택산업의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역할 수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민경제 안정을 위한 주택산업 발전방향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주택산업과 국민경제의 상호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를 통한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였다. 이외에도 서울시 강남주택시장의 구조분석 연구를 통해 강남의 주택수요 행태, 투자수요 유인분석, 주택가격 변동의 타 지역 파급효과의 분석을 통해 가격안정을 위한 간접수단 활용과 자본이득환수장치 강화 등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GIS 분야

폭설과 폭우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과 국민안녕을 위한 방재국토 구축을 위한 GIS 활용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공간정보와 GIS기법을 활용하여 방재업무의 선진화 기반 및 방재국토 구축방안, 자연재해와 도시재난을 효과적으로 예방·대처·관리하기 위한 GIS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가GIS의 현황과 중장기 수요 분석, 국가GIS 비전과 목표, 추진모델 정립 등 국가GIS 중장기 정책방향의 제시와 GIS기반의 전자지방정부 발전단계 모형을 정립하고 GIS기반의 전자지방정부 구현 전략을 제시하였다.



II

분야별 주요연구

1. 국토계획·환경	19
2. 지역·도시	93
3. SOC·건설경제	149
4. 토지·주택	219
5. GIS	257

01

c h a p t e r

국토계획 · 환경

01

1) 기본 · 정책연구

>> **국책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사회합의형성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Establishment of Consensus Building System for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National Development Project

김선희, 박형서, 조진철

■ **배경 및 목적**

국책사업 추진을 둘러싼 공공갈등이 확대되면서 국책사업 표류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개발과 보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지 못한 채 대안 없이 극한 대립과 갈등을 계속해 오면서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갈등은 공공정책 발전에 일정부분 순기능을 해오고 있다고 판단되나 장기간의 표류현상은 국가재정의 낭비, 사업지연에 따른 손실, 정부의 불신으로 나타나 궁극적으로 향후 국책사업 계획 및 실행을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거나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합의형성시스템을 구축해서, 갈등 잠재력을 협력의 잠재력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국책사업 추진 등 공공정책 결정에 있어서 시민의 참여는 정책에 대한 불신과 사회갈등을 예방한다는 소극적인 차원에서 의사결정의 책무성(accountability)과 정당성(legitimacy)을 향상하고, 결정에 대한 수용성(acceptance)과 합의(consensus)를 창출, 정부와 시민사회의 신뢰를 구축하는 적극적인 차원의 의미가 있다.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갈등관리에관한법률(안)」 제정을 통해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을 규정하고 갈등 예방을 위한 사회합의형성 시스템을 적용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책사업을 대상으로 한 갈등의 근본원인 분석과 이를 합의형성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질적인 절차와 수단 모색에 대한 연구는 미약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국책사업의 사회적 합의형성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이론과 국내·외 동향, 사례 등을 통해 찾아보고, 합의형성시스템 구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책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내용요약**

'합의형성(consensus building)'은 동의를 찾아가는 과정(an agreement-seeking process)으로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접근방식이다. 의견 또는 입장이 다른 이해당사자들이 다양한 교섭과 대화, 조정의 과정을 거쳐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며, 그에 대하여 상호 동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L. Susskind, 1999).

최근의 국책사업의 표류현상은 공공정책 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가치와 이해, 그리고 정책문제에 대한 해석들이 사회에 다양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실제 공공정책 수립이나 결정과정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강상규, 2005). 오늘날 국책사업의 표류와 갈등원인은 기존의 정책형성과 결정방법이 해당정책과 관련된 가치와 정보 등을 폭넓게 고려하지 못한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감소시킬 방법론적 도구로서 적극적인 참여, '합의형성 프로세스'가 요구되고 있다. 사업초기 정책형성단계부터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는 시민을 참여시켜 합의를 형성해 가면, 정책결정 품질개선, 비용과 시간 최소화, 합의형성능력 제고,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증대, 참여민주주의의 정착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수자원개발사업(한탄강댐)과 도로개발사업(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을 대상으로 갈등의 강도와 영향, 갈등의 원인, 주요 의견수렴 및 합의절차, 정책참여구조, 정책대응과정, 합의형성수준 등 주요 국책사업 환경갈등 현황과 특징, 합의형성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한탄강댐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이들 국책사업 정책형성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경제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수용성과 정책적·정치적 연계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해관계자별로 상이한 가치관과 담론(discourse)을 형성하며 정의적 갈등(definitional conflict)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탄강댐의 경우, 정책공동체 참여구조는 이해당사자 간 상호작용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고, 정책공동체 개방성 및 다양성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해당사자 규모 및 대립 역시 전국차원으로 광범위해지면서 정책공동체 권력구조도 조건적 협력의 대칭적 구조로 변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책결정·실행구조는 사업특성상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행과 절차대로 일방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단계에서 공청회와 주민설명회, 자문위원회와 정책협의 등이 이루어졌지만 사업시행자 중심의 공청회, 주민설명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이해당사자들의 인식과 입장 등 갈등의 근본원인과 배경 파악을 통한 갈등 예방과 관리에 소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정책대응 과정은 정부 내 절차적 대응 지역주민 참여 → 환경단체 및 정치권 개입 → 공식적 제3자 조정(PCSD) 과정을 거친 채 현재 국무총리실에 이관되어 있는 상태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경우, 사업초기 정책결정 단계에서는 정책공동체 참여구조가 비교적 낮고, 정책추진조직 간 정책공동체 권력구조가 비교적 비대칭적이고 협력적이다. 이해당사자 규모도 비교적 작다. 그

러나 설계단계 이후 민원제기에 의한 공청회 및 공사과정에서 불교계가 이해당사자로 출현하면서 정책공동체 다양성이 높아지고, 이해당사자 대립도 강해진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고 공사가 착공되면서 환경단체와 불교계가 서울지법에 공사중지 가치분신청서를 제출하고, 공사저지운동 등이 이루어지면서 갈등이 확대되고, 정책공동체 참여구조의 개방성과 다양성도 비교적 높아진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총론적으로 사업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 관계부처 협의 및 지역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국립공원 통과인허가 등도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된다. 그러나 공사과정에서 사업내용(노선, 입지, 환경영향평가의 미비 등)에 대해 환경단체와 불교계가 이해당사자로 나타나면서 갈등이 사찰 수행권, 환경가치 논쟁으로 확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공사중지 가치분신청 등이 이루어지면서 서울지방법원의 중재도 있었으나 갈등이 계속되어 국무총리실, 청와대의 공식적·독립적인 제3자 중재와 비공식적 중재 등을 통해 공사가 재개되었다.

한탄강댐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례는 사업초기 의사결정단계에서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의견수렴 없이 정부내부 및 기술전문가를 중심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국책사업의 전형적인 프로세스의 문제점과 과제를 보여주고 있다. 주민의견수렴이 정부 내부에서 기본방침이 결정된 후 이루어져,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공사단계에서 갈등 표출 후 독립적 제3자 중재와 조정을 통해 사회적 갈등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두 사례 모두 공식적 조정과 중재에 실패하여, 합의형성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와 책임 규정 등 기본규칙(ground rule) 및 대안 마련, 이해관계자 소집 등에 있어서 갈등 특성 등을 감안한 세심한 설계와 합의문화 등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합의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탈현상(runaway tendency)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와 내용의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원칙과

01

조치사항 등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과제로 제시되었다.

합의형성의 기본적인 절차와 참여적 의사결정의 틀을 구성·운영하여 합의도출에 성공한 사례로 국내 사례로서 신형정수도 후보지 선정사례, 영월댐 건설타당성종합검토사례, 울산-포항복선전철사업 노선조정사례 등이 있다. 해외사례로는 네덜란드 남부 고속철사업 추진결정사례, 프랑스의 파리 프랑씨리엔스선 노선조정 사례 등이 있다. 이들 합의형성사례들은 국가 및 사업유형과 갈등 특성에 따라 전문가네트워크(CPS), 참여적 의사결정, 공동토론회위원회, 공론조사, 제3자 조정 및 중재 등 다양한 수단과 절차 등이 도입되어 운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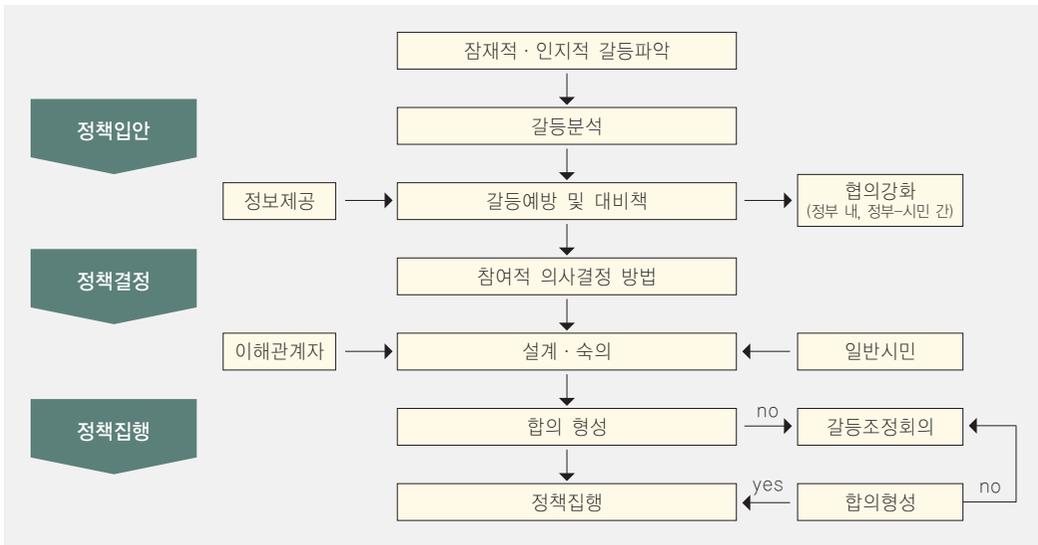
■ 주요결과와 평가

국책사업을 효과적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책사업 추진과 관련된 갈등의 원인인 정책 및 사업추진절차와 수단, 갈등관리 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갈등기제를

합의기제로 바꾸는 사회합의형성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국책사업 사회합의형성시스템(안)을 정책입안, 정책결정, 정책집행단계로 나누어서 제시하고, 갈등예방을 위한 합의형성절차와 갈등발생시 합의형성 절차를 제시하였다. 합의형성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갈등영향분석,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설계 및 채택, 갈등조정회의 등의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고, 갈등조정회의에 대해서는 한탄강댐을 대상으로 가상적 조정과정을 예시하였다.

사회합의형성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정책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정책적 제안으로 첫째, 국책사업 추진에 대한 의사결정시스템과 패러다임 전환, 둘째, 협력적 거버넌스형 시민참여 확대, 셋째, 정책결정의 내용적 합리성(substantial rationality)과 절차적 합리성(procedural rationality) 제고 등을 제안하였다. 특히 국책사업 추진에 있어서 내용적 합리성과 절차적 합리성을 아직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이를 제고시키기 위한 각각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책사업 사회합의형성시스템 추진절차〉



제도적 개선방안으로는 국책사업 의사결정과정에서의 합의형성절차 제도화, 타당성분석 등 의사결정 정책 분석 개선, 공청회의 재설계와 시민참여 촉진 프로그램 개발, 합의의 책무성 확보와 이탈(runaway tendency)의 방지장치 마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증진, 중립적 합의형성기구 신설, 국책사업 합의형성 촉진을 위한 교육확대와 전문가 육성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합의형성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책사업을 둘러싼 사회갈등을 사전에 예방·해결하고, 정책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제반 정책패러다임 전환과 절차와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국책사업의 정책형성 및 의사결정과정, 집행과정에서 정부와 국민 간의 쌍방향적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 그리고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실증적인 사례와 분석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잠재력을 협력잠재력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정책기제와 사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최근 국무조정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갈등관리에관한법률(안) 제정에 이론적·실증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국책사업의 합의형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공정책과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 국책사업 합의형성 성공사례 추적과 매뉴얼화 등의 과제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공문화될 필요가 있다.

연구기간: 2005. 1. 1~2005. 12. 31
 서지사항: 281면, 국토편 2005-20

>> 국토·교통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시행방안 연구

Application of the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to National Territorial and Transportation Plans

이용우, 윤양수, 심우배, 임상연

■ 배경 및 목적

환경을 둘러싼 갈등이 국가적인 이슈로 제기됨에 따라 단위 개발사업은 물론이고, 개발사업의 초기 의사결정단계부터 환경성 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미 1999년부터 각종 개발계획의 초기 단계부터 입지타당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기 위하여 도입된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법제도와 운영방법상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행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서 상위 정책적 계획에 대하여 전

략환경평가제도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토·교통관련 계획 중 정책적이며 중장기인 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첫째 국내외 선행연구 및 해외 전략환경평가 시행사례를 정리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전략환경평가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전략 환경평가 모형에서는 시행절차, 계획특성을 반영하는 평가항목 도출과 평가방법 설정, 보고서 작성 및 검토방법 등 운영방안이 제시된다. 둘째, 개발된 전략환경평가 모형을 2005년에 수립 중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

획에 시범적으로 적용하고자 한다. 셋째, 모형 개발과 시범적용을 통해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내용요약

개발사업의 초기 구상에 해당하는 유관계획 수립단계부터 실질적으로 환경성을 고려하는 방안으로는 기존의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개선하는 대안과 전략환경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대안이 있다. 전략환경평가의 도입이든, 전략환경평가의 개념에 충실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개선이든, 제도개선 논의의 출발점은 계획수립권자로 하여금 환경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환경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있어야 한다. 즉, 환경성 평가의 주체는 계획수립권자이어야 하고, 계획단계에서부터 환경성 평가가 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략환경평가의 개념과 틀을 도입하여 시행하는 방안이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개선보다는 합목적적이라 볼 수 있다.

유럽연합, 네덜란드, 영국, 미국 등 해외의 제도운영 현황을 보면, 제도형태, 시행근거, 명칭 등이 국가별로 모두 상이하다. 따라서 전략환경평가를 도입함에 있어서 우리의 실정을 최대한 반영하여 법적 근거나 명칭 등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외국의 제도에서는 스크리닝 및 스코핑 과정을 통해 평가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갈등을 예방하고 수준 높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전략환경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 전략환경평가 보고서의 작성은 계획수립기관에서, 검토는 환경관련기관에서 분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네덜란드, 영국, 유럽연합의 지역 및 도시계획, 교통, 수자원분야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를 살펴본 결과, 계획의 규모(전국적, 지역적)에 따라 평가항목과 대안 선정에 차이가 나타나며, 평가항목을 도출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계획과 관련된 다른 정책·계

획·프로그램을 검토하여 계획대상 지역의 환경, 사회, 경제적 여건과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지속가능성 이슈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다는 특징이 있다. 평가방법은 구득 가능한 자료 및 계획의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되고 있으며, 체계적·상대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해외 전략환경평가의 운영 및 시행사례를 검토한 후, 국내 여건에 적합한 전략환경평가 모형을 개발하였다. 전략환경평가의 모형은 평가계획 수립, 평가항목 설정, 환경성 평가, 평가보고서 작성, 평가보고서 검토, 모니터링 및 사후평가의 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별 주요 고려사항인 평가목적 설정, 평가항목 및 대안 설정, 평가방법 제시, 평가보고서 형식 및 작성주체, 평가보고서 검토주체, 계획집행에 따른 성과와 사후평가주체 등에 대하여 대안이 제시, 비교되었다.

전략 환경평가 항목은 평가대상 계획내용과 환경평가 항목으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환경평가 항목은 국가환경보전계획(안)(2005), 환경부의 전략환경평가 평가항목(2003) 등을 참고하여 생활환경, 자연생태, 자원 및 에너지, 지구환경의 4개를 제시하였다. 평가항목은 각각 2~4개의 세부 평가요소로 구성되며, 평가요소별로 평가내용을 서술하였다. 도출된 평가대상 계획내용과 환경평가항목은 매트릭스 또는 체크리스트 기법을 이용하여 평가표를 작성하였다.

전략환경평가 평가기법은 실제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과 적용사례를 정리하고, 이를 종합하여 제시하였다. 평가방법은 평가자료의 속성과 매우 밀접하여, 상위 정책적 기본계획일수록 계획의 광범위성과 추상성으로 인하여 정량적인 평가자료를 구득 또는 생산하기 어렵다. 따라서 평가자의 전문성과 사회일반적 통념과 가치에 따른 정성적 평가가 현실적인 평가방법이다. 다만, 정성적 평가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기준의 제시는 필요하다. 정성적 평가의 한계를 최대한 극복하기 위하여 환경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략환경평가 보고서는 일반주민이 이해하

기 용이하도록 서술되어야 하며, 전략 환경평가 절차에 준하여 차례를 구성하여야 한다. 전략 환경평가 보고서의 작성은 이미 제도를 도입한 외국과 마찬가지로 계획 수립주체나 제3의 전문기관이, 검토는 제3의 독립적인 '환경성검토위원회(가칭)'가 각각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주요결과와 평가

전략환경평가 모형을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에 시범적용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성과는 무엇보다도 최초로 전략환경평가를 시범적으로 시행하였다는 점에 있다. 즉, 계획수립 주체가 자발적으로 수립 중인 계획에 대하여 환경성을 검토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 다음으로, 우리의 현실을 감안한 전략환경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실제 적용하였다는 점이다. 평가에서 실제 사용한 평가항목 설정 및 평가방법 선정은 앞으로 전략환경평가의 다양한 기법개발에 있어서 출발점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정적 환경영향이 우려되는 계획내용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유관 및 하위계획과 연계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시범적용은 우선,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이 내용적으로 마무리 단계인 시점에서 환경성 평가를 함으로써 전략환경평가 본연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였다는 점, 평가항목 결정 및 대안 검토, 평가방법 선정, 의견수렴 등에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점,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의 내용이 종합적, 전략적인 관계로 환경지표나 모델의 개발 및 적용을 통해 환경적 영향을 계량화하지 못한 점 등에서 한계가 있다. 종합적으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는 시간과 절차상의 제약으로 인해 미흡한 점도 있으나, 우리 현실을 감안하여 개발한 전략환경평가 모형을 시범적용 함으로써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예견되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

후 제도의 본격 시행에 필수적인 내실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략환경평가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환경정책기본법'에 적용근거를 마련하고, 개별 관련법에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정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전략환경평가 보고서 등 환경성 평가결과를 검토하기 위한 독립적인 기구로 국무총리실 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산하에 '환경성검토위원회(가칭)'의 설치가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전략환경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략환경평가 시행지침을 계획수립기관이나 승인기관이 관련 전문연구기관과 공동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현행 상위 정책적 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가 계획수립과 병행하여 시행되기 위해서는 계획수립지침이나 과업 지시서에 전략환경평가 시행 관련 사항이 반영되어야 하며, 계획수립팀과 환경성 평가팀이 상호 협의,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 남북교류 및 동북아협력을 위한 국토계획 수립 연구: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Territorial Planning for Inter-Korean Exchange and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For the Revision of the 4th comprehensive National Territorial Plan

이상준, 김영봉, 김원배, 이문원, 이상수

■ 배경 및 목적

21세기에 들어서 급변하고 있는 주변 정세를 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황변화에 대응한 우리의 주체적 역량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2000년에 수립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의 수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급변하는 동북아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남북경제공동체 구축을 실현해 가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의 방향과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동북아 교류협력의 기회를 국토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추진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목적의 달성을 통해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수립에 기여하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 목적이다.

■ 내용요약

남북한 간의 경제교류협력(이하 남북경협)은 남북한 산업 간의 유기적 연계성 확보와 생산요소의 상호 보완성 구현을 통해 한민족 복지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통일 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과도기적 협력의 틀이자 수단을 의미한다. 동북아 경제협력은 제휴와 경쟁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동북아에서의 경제적인 관계 형성의 수단과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국제관계에서 국제협력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우호적인 관계형성만을 의미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간의 제휴와 연대, 그리고 경쟁을 기반으로 하듯이 동북아에서의 경제협력이

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국제관계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경협과 동북아경협 연계의 기본 구도는 정치적 평화와 경제적 번영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구현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남북협력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동북아차원의 협력과 무관할 수 없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안보측면의 협력과 남북경제의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은 연계되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북아협력과 남북협력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한반도와 동북아의 협력과제들은 연계하고, 병행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협력의 틀 내에서 남북협력을 활성화시키고, 남북협력사업을 동북아협력으로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 등 경제적 영역에서의 협력과 더불어 문화, 예술, 교육, 스포츠, 관광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정부와 민간기업, 그리고 국경을 초월하는 비정부 간 교류를 통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평화지향 원칙, 호혜주의 원칙 그리고 열린 지역주의 원칙 하에서 안보(평화)와 경제협력(번영)의 연계를 동북아시대 구상의 기본 구도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 구도 하에서 현재 진행 중인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자간 협력과 남북경협 그리고 동북아경협이 서로 연계해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현재 탈냉전, 세계화, 정보화의 흐름 속에 동북아 경

제협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동북아지역은 세계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의 21%에서 2020년에 3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동북아의 역내 교역과 투자가 FTA를 기반으로 더욱 증대되고 산업분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협력 역량 강화라는 목표 하에 ‘동북아 경제협력 거점의 개발’, ‘동북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및 자원개발 협력’, ‘동북아 소협력권의 협동적 개발 활성화’ 등 세 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경제협력 거점의 개발은 역내 국가들 간의 경제협력 경험이 보다 폭넓게 축적될 수 있고,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역내 국가들 간의 경제통합에 있어서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교류협력 거점은 우리 국토의 균형 있고 경쟁력 있는 발전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천, 부산·진해, 광양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동북아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경제협력 거점의 개발과 더불어 교류협력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협력이 중요하다. 이러한 인프라 개발협력은 제도적 인프라와 물리적 인프라 측면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동북아의 경제협력은 동북아 전체적인 공간범위 안에서 단계적이고도 순차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환황해권, 환동해권, 한일해협권 등 소협력권별 협력이 중요하다. 동북아에서 국가의 의미보다는 도시나 지역의 의미가 더 현실적으로 유용한 공간적 협력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협력권별 대도시와 지역의 ‘협동적 개발’이 향후 동북아협력의 주요 수단이 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동북아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동북아의 개발협력체로서 ‘동북아개발공동체’ 형성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북아개발공동체’는 교통·물류·에너지부문을 중심으로 동북아 선진지역과 후진지역의 발전격차 축소

를 지향하는 공동체를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인프라개발기구(가칭)’를 구성하여 역내 인프라 개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남북 간의 교류협력은 분단이후 상호 불신과 대립관계를 해소함으로써 긴장완화와 평화분위기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남북한 간의 교역 규모는 1989년 1,900만 달러에서 2004년 6억 9천만 달러에 이르러 15년간 36배 이상 증가하였다. 현재 남북 간에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투자협력 사업으로서 개성공단 개발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이 있고 정부 간의 투자협력 사업으로서 경의·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교류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설정하였다. 첫째로 접경지역의 종합적 관리를 통해 이 지역을 남북교류협력의 전초기지로 활용한다. 이를 위해 접경지역을 보전지역, 준 보전지역, 정비지역 등 특성별로 구분하여 종합관리하고, 한편으로는 접경지역의 사회경제적 인프라 확충과 교류협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선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 둘째로 단절된 남북연계인프라의 복원이 추진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북한지역 내 교통망 확충을 지원함으로써 남북 간 인프라 연계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로 남북한 교류협력거점의 조성이 필요하다. 남북한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시범농장, 생태공원, 평화의 섬, 교류협력지구 등의 협력 사업을 통해 접경지역을 평화벨트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로 자원의 공동이용 및 환경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남북한 경제의 상호보완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자연자원의 공동개발과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추진한다. 다섯째로 남북협력기반구축을 위한 효율적 추진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협력기반구축에 기여할 각종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남북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로서는 '접경지역 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한 평화벨트 구축'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북한 경제특구의 단계적 개발을 위한 남북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경제특구는 남북경협과 동북아경협의 주요 거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남북경협과 동북아경협의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4개 특구지역(개성, 금강산, 신의주, 나진·선봉)과 2개 특구예상지역(원산, 남포)의 지경학적 잠재력과 북한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감안할 때, 가장 현실적인 지역개발 구도는 우선적으로 북한과 주변국 간의 4개 접경지역 경제특구들을 중심으로 지역개발을 추진(1차 개발)하고, 장기적으로는 북한 국토발전의 두 축이 될 서해안 축과 동해안 축을 중심으로 지역개발을 단계적으로 확대(2차 개발)해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동서해안 개발축은 장기적으로는 평남-함남(평양-원산), 평북-자강(신의주-강계), 함북-양강(나진-혜산) 등과 같이 내륙지역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통합 인프라의 구축과 자원의 공동 개발'도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남북한의 통합적인 인프라 구축은 남북교류협력의 단계별로 우선순위가 설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우선순위는 북한 당국의 정책적 의지와 더불어 경의선 및 동해선을 두 축으로 하는 한반도교통망의 구축을 중심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남북 간의 연계인프라 복원 및 확충은 남북 간의 인적, 물적 교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남북경제협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제도의 개선'도 주요 과제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는 북한 경제특구의 개발에 참여하게 될 우리 기업들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에서 제시된 교류협력사업들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지원센터'를 설

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기구를 통해 교류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상호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과의 경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투자재원의 마련 측면에서 남한기업이 외국기업들과 공동으로 투자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데, 특히 일본 및 중국 등 동북아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류협력기반의 다각화 측면에서 남북한 지자체 간 교류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산업발전을 위한 남북한 주요 도시들의 교류협력 사업은 도시의 산업인프라 개발과 관리를 위한 관련 기술인력이나 공무원들의 교류 등 인적교류가 중심이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주요결과와 평가

주요 내용요약에서 제시된 추진과제들은 현재 가장 커다란 현안이 되고 있는 북한 핵무기 개발프로그램 문제의 해결과 연계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된 남북경협 및 동북아경협의 주요 추진과제들도 이러한 시나리오의 단계별로 추진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앞에서 제시된 남북경협 및 동북아경협의 주요 추진 과제들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소요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국민적 합의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적 합의의 도출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기간: 2004. 6. 1~2005. 9. 30

서지사항: 본 보고서 231면, 부문별 보고서 총 1,434면 (제1권 365면, 제2권 343면, 제3권 336면, 제4권 390면) 중 1권, 국토연자 2005-11

>> 남북인프라협력사업의 통합적 추진방안 연구

An Integrated Approach to Inter-Korean Cooperation for Infrastructure Development

이상준, 김원배, 김경석, 이성수 외

■ 배경 및 목적

21세기를 맞은 한반도가 동북아 교류협력의 새로운 21세기를 맞은 한반도가 동북아 교류협력의 새로운 거점으로서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남북분단의 극복이라는 민족적인 과제의 해결과 더불어 한반도에 경쟁력 있는 경제협력권을 구축하고 인프라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선택적 과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과제다. 동북아에서 한반도가 정치적, 경제적인 불안정지대로 머무를 경우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영원히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진정한 가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차원의 통합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한반도 차원의 인프라 구축은 경제적으로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정치·군사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역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한반도 차원의 인프라 개발은 동북아에서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극복하는 커다란 의미도 있다. 일본의 대륙진출을 위해 건설되었던 경의선 철도가 다시 복원되는 것은 단순히 단절된 교통망의 복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침략과 전쟁의 어두운 과거의 그늘을 걷어내고 평화와 화해 그리고 번영의 동북아시아대를 열어가야 하는 역사적 의미도 갖는 것이다. 이처럼 한반도 차원의 인프라의 개발은 경제적, 정치·군사적, 역사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한반도에서 하나의 통합된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업이 다층적이고도 복합

적인 요소들에 대한 고려하에서 신중히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2000년 6·15정상회담 이후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가 연결되고 개성공단이 건설되어 남측으로부터 전력이 공급되는 등 남북 간의 인프라 연결에 적지 않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남북인프라협력의 미래가 그리 밝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북핵문제 외에 남북인프라협력의 종합적인 추진구도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없는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제는 부문적이고도 국지적인 측면에서 남북 간의 인프라협력을 추진하는 초보적 단계를 벗어나서 한반도 전체의 통합적인 인프라 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 하에 진행되었다. 첫째, 남북경제협력 및 동북아 경제협력의 활성화와 장기적인 경제통합을 뒷받침하기 위해 남북인프라협력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및 연계추진 등 통합적 추진방안을 제시한다. 둘째, 남북인프라협력사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과 과제를 제시한다. 남북인프라협력이 부문별로 진행됨에 따른 비용낭비를 방지하고 남북경제협력과 동북아 경제협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통합적 접근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향후 남북인프라협력이 어떠한 방향과 구도 하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인지를 제시함으로써 남북한 당국의 관련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 내용요약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진정한 가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차원의 통합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 차원의 인프라개발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고려 하에서 신중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 핵무기개발프로그램(이하 북핵)관련 6자회담이 일정한 성과를 거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 정부는 한반도 차원의 종합적인 인프라개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남북인프라협력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및 연계추진 등 통합적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남북인프라협력사업의 통합적 추진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역할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남북인프라협력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문이라 할 수 있는 교통, 에너지 등 2개 부문으로 설정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남북교류 및 경제통합의 발전상황을 감안하여 남북경제통합 초기단계(단기), 확대단계(중기), 정착단계(장기) 등 세 단계로 설정하되, 남북경제통합 초기단계 및 확대단계 등 중·단기에 초점을 맞춘 통합적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남북인프라협력의 통합적 추진 개념의 설명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인프라협력 실태를 통합적 협력측면에서 평가하였다. 그리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분단 상황 하에서 인프라협력을 추진한 동서독의 사례를 살펴 보았으며, 남북인프라협력의 실태 평가결과와 동서독 사례 시사점을 토대로 향후 추진해야 할 남북인프라협력의 과제가 제시되었다. 또한 남북인프라협력의 과제를 중심으로 통합적 추진방안을 제시하였고 통합적 추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 주요결과와 평가

본 연구에서는 남북인프라협력의 수요측면과 공급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협력의 우선순위를 설

정하였으며 북한전문가 설문조사와 계량분석을 통해 협력수요측면의 우선순위를 검토하였다. 인프라협력의 공급측면에서는 비용의 규모와 재원의 조달가능성 그리고 정책적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였으며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의 검토를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동북아 경제협력측면에서는 철도망의 연결과 관련한 협력이 1순위로 나타났고, 2순위는 항만과 고속도로 연결, 3순위는 천연 가스망과 전력망 연결과 관련한 협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남북경협외의 추진과 관련하여 10년 이내에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인프라로서는 철도와 전력(1순위), 도로와 전력(2순위), 전력과 산업단지(3순위)의 순서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두 개발 축이라 할 수 있는 동해안 축과 서해안 축의 교통인프라 개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어느 축의 개발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효과가 클 것인가를 비교해 보았다. 그리고 대북송전의 경제적 효과도 분석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교통부문과 에너지부문 간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해 보았다. 그리고 교통부문과 에너지부문을 연계한 남북협력 추진의 향후 가능한 시범사업으로서 북한 최대의 마그네사이트광산인 함경남도 단천군의 용양광산 개발과 배후교통망 개선을 연계하는 사업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인프라개발을 추진한 후 단계적으로 주변지역의 지역개발과 연계하여 인프라를 개발하는 시범사업으로서 개성공단과 황해도지역의 인프라연계 개발 사업을 제시하였다.

>> 북한강 유역의 남북한 평화적 이용방안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the Bukhan River Basin through South-North Korea Cooperation

김영봉, 이문원, 조진철

■ 배경 및 목적

북한의 임남댐(금강산댐) 건설로 인한 북한강유역의 용수 부족과 생태계의 변화는 남북교류협력과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이 지역에서의 수자원 공동이용과 재해의 공동 대처에 대한 남북한 공동협력방안의 마련이 요청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교류협력의 활성화 및 평화정착을 위해서 제 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에서 제시된 한반도 '평화벨트' 구축의 일환으로 북한강유역의 임남댐 및 평화의 댐 연계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북한강 유역에서의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의 추진방안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 내용요약

북한강 유역에 건설된 북한의 임남댐으로 인해 이 지역에 조성된 남북한 긴장상태의 완화와 훼손된 생태계의 복구가 시급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임남댐과 남한의 평화의 댐을 연계하여 평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임남댐은 북한강 수계 금강산발전소의 조업용 댐으로, 하천의 물을 동해안 안변 지구로 보내 300m의 낙차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유역변경식 수력발전기에 활용하기 위해서 건설되었다. 임남댐은 1986년 공사를 시작해 1987년 가배수 터널을 뚫고 1992년 12월

에 가물막이 댐을 완공하였으며, 1996년 9월 1단계 공사를 마치고 담수를 시작하였다. 1996년 10월에 2단계 공사를 착공하여 2000년 10월에 2단계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3단계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당초 댐 높이가 121m, 저수량 26억 톤으로 계획하였으나 현재 댐 높이가 105m까지 축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남댐은 2000년 10월에 완공된 2단계 공사의 경우 총 10만kW의 발전용량에 저수량은 9억 톤이나 3단계 공사(20만kW, 저수용량 26억 톤)가 완공될 경우 북한강으로의 유입량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화천댐으로 유입되던 북한쪽 유수가 차단될 경우 발전과 농·공업용수 공급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대상지역의 공간분석을 위해서 현황분석과 토지피복분류, 그리고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였다. 북한강 유역의 공간분석을 위한 기초단위의 설정은 북한강 유역 주변의 행정구역에 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의 틀은 북한강 유역은 남북이 하나의 수계를 공유하고 있어 공간분석을 위해 수치지형도 1:250,000의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남한의 유역구분은 2003년 환경부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북한의 하천자료는 수치지형도의 하천관련 레이어를 추출하여 이를 환경부의 유역구분 자료에 중첩하여 분석하였고, 위성영상은 환경부에서 제공한 Landsat TM자료, 1989년과 1999년의 토지피복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북한강유역이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국토공간상에서의 지리적·경제적·사회적인 강점, 약점, 기회요인, 위협요인 등의 분석을 통해 잠재력을 평

01

가하고 교류협력 여건을 파악하였다. 강점은 접경지역으로 남북교류협력 용이, 역사 및 생태 관광 자원, 풍부한 수자원과 미개발 토지자원 등이며, 약점은 인프라 부족, 정주환경의 취약, 산업입지 취약, 교통연계망 미흡,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의 우려, 군부대 집중 등이다. 기회요인은 남북교류협력 증대, 금강산관광의 확대, 접경지역지원법 제정 및 종합계획의 수립이며, 위협요인은 핵문제 등 남북관계의 불가측성, 환경규제에 따른 마찰, 북한의 임남담 증축, 서부접경지역 교류협력사업의 우선 추진 등이다.

교류협력사업 추진상의 주요과제는 첫째, 정전협정상의 비무장지대 출입 및 활용의 법적문제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여 체결한 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의 당사자 등의 문제다. 둘째, 남북합의를 통한 사업 및 교류협력지구 선정문제로 남북이 상호 합의한 사업과 지역의 선택, 생태계 조사 등이다. 셋째, 임남담의 유로변경으로 인한 수자원 부족 문제로 금강산댐의 수력발전을 위한 유로변경에 따른 비무장지대 남방의 수자원부족으로 생태계의 변화 및 화전댐 발전중단 야기 등이다. 넷째, 주요생태자원 및 역사적 유적의 보전으로 교류협력의 진행에 따른 비무장지대 및 남북한 접경지역의 생태계 보전과 역사적 유적의 훼손방지 방안마련이다. 다섯째,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남북한 군사시설 이전문제로 비무장지대를 관통하는 북한강 본류 유역에서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남북한 군사시설 이전 문제다.

대상지역의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자원의 남북공동 이용으로 임남담 건설로 인한 북한강유역에서의 남북한 수자원 문제의 발생에 따른 용수의 부족 및 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공동방안을 마련하고 공유하천의 이용에 관해 남북한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둘째, 재해의 예방 및 공동대처로 홍수 및 한해 공동대책 수립을 통한 사전 피해방지 및 공동대처, 화재, 솔잎혹파리 등 산림재해 공동대처, 그리고 말라리아, 콜레

라 등 전염병 공동 예방 및 대책을 수립한다. 셋째, 수변생태자원의 보전 및 활용으로 북한강유역의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한 주변접경지역 중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을 선별하여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특별 관리하며 희귀생태자원의 보전 대책 수립 및 관광자원으로의 활용을 위한 생태관광지역지정 및 생태공원의 조성 과 생태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보전계획, 지원제도를 마련한다. 넷째, 북한강유역의 산림녹화로 북한강 중·상류의 황폐한 산야의 산림녹화를 통해 국토보전작업 착수, 산림의 자원화, 재해의 근원적인 예방을 도모한다. 다섯째, 역사적 유적지의 보전 및 복원으로 북한강 유역의 역사적 유적지의 공동 발굴 및 보존 작업, 역사적 고증을 통한 훼손 유적의 복원, 민족공동체 의식 고취를 위한 북한강 유역 남북한 유적의 연계 관리방안을 수립한다. 여섯째, 국토이용의 효율화로 대상지역의 자연생태계를 조사·분석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계획 수립, 시설의 설치와 개발 사업은 관련 기능과 유사시설을 집산화할 수 있는 특별구역에 설치하는 방안 마련, 인적·물적 교류협력을 위한 교통망 건설시 가급적 기존 루트를 중심으로 하여 설치하는 방안 마련 등이다. 일곱째, 협력주체 및 협력사업의 단계적 연계로 정부 및 국제기구 등 공공차원의 협력에서 민간 부문으로의 확대, 수혜성 협력을 우선추진하고 나아가 호혜성 협력으로의 발전, 국지적이고 소규모사업에서 유역전체와 대규모 사업으로의 추진 등이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남북협력사업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첫째로 수자원 공동이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긴장과 대립상태를 화합과 협력 분위기로 전환하고 북한의 수자원 공급에 대한 전력을 공급하며 수자원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협력사업의 추진으로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한다. 둘째로 남북협력의 단계적 확대를 통하여 남북관계의 전체적인 발전단계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접근하며, 북한의 개방과 남북한 교류협력의 진전에 따른 단계적 확대와 북한의 수용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협력사업을 추

진한다. 셋째로 각종 협력사업은 현재 남북한 접경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교류협력사업들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공간적으로는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시작하여 접경지역의 중부에서 동부로, 그리고 북한강 본류에서 지류유역으로 확대·추진한다. 넷째로 효율적인 추진체 구성 및 공동관리 유역의 설정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이를 담당할 남북한 당국 간 별도기구를 구성(가칭 남북수자원공동협력단)하고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동관리 유역을 설정한다. 다섯째로 국제기구 및 국내외 NGO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비무장지대가 유엔사의 통제를 받고 있으므로 국제기구나 국내의 NGO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여섯째로 주체별로 협력 및 역할을 분담하고 단계별 추진전략에 맞추어 민간, 지방정부, 중앙정부, 다국적 협력 등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을 유도하여 연계 발전시켜 나간다. 일곱째로 제도적 기반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기존 제도의 정비 및 특별법의 제정을 통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평화벨트 구축을 위한 협력사업의 선정은 1단계에서는 SWOT분석을 통해 잠재력 및 현안을 도출하고, 2단계에서는 교류협력 추진상의 주요과제를 도출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 4단계에서는 선정기준의 설정을 통하여 협력가능사업을 도출하였다. 사업의 세부평가 기준은 남북한이 시급하게 공동대처해 나아가야 할 시급한 현안, 남북한 상호협력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주요 생태자원 및 문화·역사적 자원의 보전, 북한의 사업 참여 가능성 정도, 교류협력 및 평화정착에 대한 파급효과 등이다. 주요 협력사업은 임남댐과 평화의 댐 수자원공동 활용 및 전력협력, 생태계공동조사 및 생태공원화,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북한강유역 산림녹화, 시범농장 조성 및 농업기반 확충, 단절된 교통망 복원, 수변관광벨트화 추진 및 내륙관광 연계, 문화·역사 유적의 공동조사 및 연계화 등이다.

추진단계의 설정은 남북관계와 북한의 대외개방 정

도에 따라 평화벨트 준비기, 평화벨트 형성기, 평화벨트 완성기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추진방안을 수립하였다.

‘평화벨트 준비기’의 주요 협력사업은 임남댐과 평화의 댐 평화적 이용방안 추진, 주요생태자원의 공동조사, 유네스코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설치 추진, 접경지역에서의 재난방지를 위한 협력방안 마련, 북한강유역 산림녹화, 시범농장 조성 및 농업기반확충 등이다. ‘평화벨트 형성기’의 주요 협력사업은 임남댐과 평화의 댐 연계이용방안 마련, 교통망 복원, 비무장지대 및 주변접경지역 생태자원의 공동이용 및 관광자원화 추진, 문화·역사유적의 공동조사 및 연계화 방안 마련, 북한강유역 수변 관광 벨트화 추진 등이다. ‘평화벨트 완성기’의 주요 협력사업은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을 위한 북한강유역의 평화지대화 설치, 금강산·설악산 남북관광특구와 연계한 중동부내륙 관광벨트 조성 등이다.

이와 같은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협력사업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공간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의 마련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 측 관련 제도 정비는 기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 ‘접경지역지원법’ 등을 정비하고 남북한 접경지역에서의 수자원공동 협력사업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가칭: 남북수자원공동협력에관한법), 그리고 재원조달의 다변화를 통한 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 특히 국고, 민자, 해외자본 등을 단계별로 조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다.

북한 측의 관련 제도 정비에 있어서는 현재 북한이 추진 중인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개발의 경우에는 북한이 특구로 지정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므로, 접경지역을 특별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고 남북 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가칭 ‘접경지역교류협력특별법’ 제정)하다.

단계별 제도적 기반의 구축은 초기단계에서는 남북한 간 소규모 사업 추진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다음으로는 남북 당국 간 합의서 실천을 위한 국내 하위 법규를 마련하며 마지막으로 특별법 제정을 통한 남북 접경지역의 종합적 관리 및 교류협력지구 설치 등 대규모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의 마련이다.

■ 주요결과와 평가

본 연구에서는 북한강 유역에서의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수자원 공동이용 및 교류협력기반의 조성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남북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기대효과는 임남댐건설로 인해 고조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이 지역에서의 수자원 공동이용과 관광협력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과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협력을 통해 북한강 유역에서의 남북한 교류협력의 활성화와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지역에서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추진은 임남댐 건설로 인해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과 남북한 긴장 상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하류로 내려오는 북한강의 물줄기를 차단하여 형성된 임남댐의 용수를 평화의 댐으로 흘려보냄으로써 그동안 강 수위가 낮아지면서 나타난 수변 공간 생태계의 심각한 변화를 회생시킬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하류의 댐들이 본래의 기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강이 통과하는 비무장지대와 남북한 접경지역의 생태계에 대한 공동조사와 관리를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생태계의 관광자원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북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평야와 구릉지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시범농장을 개발하고 나아가 북한의 접경지역에는 농업기반을 확충해 줌으로써 남북한 간의 인적·물적 교류협력을 활성화시

키고 분단 전의 생활권을 복원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먼저 남북한 긴장완화 및 상호신뢰 구축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북한 핵개발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긴장해소가 선결과제라고 볼 수 있다. 제4차 6자회담의 공동성명 채택으로 인하여 북한 핵문제의 해결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이 가능한 단계로 접어들었지만 이행 합의문 채택을 위한 북·미 간의 의견접근이 아직도 큰 난제로 남아 있어 완전한 합의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전협정상의 비무장지대 출입 및 활용에 따른 법적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당사자들의 동의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북한강유역에서의 남북한 교류협력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한 당국 간의 신뢰 회복과 핵문제로 인한 한반도의 불안요소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 생태관광 활성화방안 연구: 지역주민참여 유도를 중심으로

Basic Strategies for Promoting Resident-oriented Ecotourism based on In-depth Interviews and Case Studies

최영국, 임상연

■ 배경 및 목적

자연자원을 대상으로 한 지금까지의 관광은 수익성에 우선하여 시설 위주의 관광을 추진하면서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지역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나타난 것이 생태관광이다.

생태관광은 보전가치가 있는 자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대개의 경우 그러한 자원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그곳과 주변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제약이 뒤따르게 된다. 생태관광이 활성화 되려면 자원과 주민 간의 이와 같은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생태관광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소득을 창출하도록 함으로써 자원보전에 따른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결하자는 것이다. 기존의 생태관광 연구에서는 생태관광의 개념정립, 현황파악 등 개념과 이론을 소개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실제 주민의 역할과 참여과정에 대한 연구실적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참여가 핵심적인 사항의 하나라는 인식하에 생태관광 계획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촉진하기 위한 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 내용요약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며 자연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기존 관광의 대안으로서 등장한 것이 생태관광이다. 다양한 생태관광의 정의를 검토하였을 때, 결국 생태관광의 본질은 민감한 자연환경 속에서 관광활동을 하면서 생태계를 즐기고 감상하고 자연을 단순히 이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환경보전과 관광을 하나의 동반자 관계로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생태관광에서 지역주민참여가 중요하게 요구되는 이유는 지역주민이 지역의 환경적 특성과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가 가장 높고 자연자원과 문화를 관광상품화하여 혜택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지역주민이기 때문이다.

지역주민참여는 다양한 수준과 유형에서 나타날 수 있다. 여러 전문가들은 참여의 효과측면, 참여단계 및 참여자의 역할 측면 등 다양한 관점에 따라 지역주민참여단계를 유형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주민참여단계이론 및 생태관광추진 단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생태관광추진 단계를 참여를 위한 인식의 전환단계, 참여준비단계, 참여 및 성과획득단계, 운영 및 관리단계 등 4개의 단계로 구분하였다.

생태관광의 해외사례로 검토한 대상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돛토리사구, 지역주민조직체를 중심으로 생태관광사업이 추진된 오이타현 유후인정, 조업수립과 자연생태계 농업의 마을로 알려진 미야자키현 아야정, 지역만들기 전략인 일촌일품운동의 발상지 오이타현 오야마정 등 4개소다.

해외사례를 살펴본 결과, 사업의 공통적인 성공요인은 우수한 관광자원 및 관광프로그램, 적극적인 마을지도자의 존재, 정부의 적절한 지원 및 관광사업에 있어

01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라고 할 수 있다.

지역별 생태관광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 실태를 사례지역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사례조사를 위한 방법론으로는 사례연구를, 자료수집방법으로는 심층면접법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성한 조작적 정의에 따라 자연경관이 우수하거나 희귀한 관광자원을 지닌 강원도 영월군 문산리마을, 충남 태안군 신두리마을,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마을, 강원도 철원군 양지리마을, 경남 남해군 가천마을 등 5개 지역을 조사 대상으로 채택하였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아 신두리마을은 1단계, 문산리마을, 양지리마을 그리고 양수리마을은 2단계, 가천마을은 3단계에 해당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4단계의 생태관광을 추진하고 있는 대상지는 없다는 것이 연구진의 판단이다.

사례지역의 마을주민, 마을지도자,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 관련 시민단체, 언론기관 등 주요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생태관광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참여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생태관광에 참여하는 이해당사자별로 문제점을 종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 내부적으로는 마을지도자의 부재, 마을지도자의 전문성 부족, 마을지도자에 대한 지원 미흡, 마을주민들의 생태관광 및 자원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 마을주민들의 생태관광 추진능력 부족, 지역주민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관광 프로그램 부족 및 주변관광자원과의 연계성 미흡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둘째, 중앙정부 측면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체계 미흡, 중앙정부와 지역주민의 갈등 문제가 나타났다. 셋째, 지방정부 측면에서는 지방정부의 지원체계 미흡, 지방정부의 전문성, 추진력 미흡, 관광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미흡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넷째, 이해당사자들 간 갈등, 이해당사자들 간 협력관계 미흡, 이해당사자 간 생태관광에 대한 인식차이, 시민단체 운영상 예산 및 정부지원의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사례지역별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이를 이해당사자

별로 지역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실천과제를 도출하였다.

첫째, 생태관광의 정의 확립 및 관광 사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지역주민참여와 생태관광에 대한 인식제고 및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중앙·지방정부의 지원체계, 전문성 및 추진력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마을지도자의 전문성 및 추진력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 해소 및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과 같이 제시한 지역주민참여 활성화의 실천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도 및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였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우리 실정에 적합한 생태관광에 대한 정의를 확립하고 생태관광에 대한 관련 제도 제정을 제안하였다. 지금까지 관련 부처별로 다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생태관광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갖추기 위해 생태관광추진을 위한 제도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태관광 사업을 본격화하고 지속적인 정부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생태관광인증제도(생태관광자원 인증, 생태관광사업 인증, 생태관광지도자 인증 등), 순환관리상담원제도, 지역주민공동주제도 등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생태관광관련 사업의 부처 간 지원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생태관광 사업초기에 일정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생태관광 추진단계별 생태관광사업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강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 외에 생태관광추진을 위한 장기계획수립, 지역주민참여를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 등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생태관광은 지역주민이나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역주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그리고 관광

사업자들 간의 협력과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는 점과 각 이해당사자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 주요결과와 평가

본 연구를 통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존 문헌의 이론적인 수준에 머물렀던 생태관광의 실제 추진을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기존 관광과의 차이점을 부각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생태관광추진을 위한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정책의 방향설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주민의 역할과 참여의 폭, 방법 등에 대한 개략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생태관광 추진단계별 해결과제는 바로 생태관광 실천을 위한 수단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생태관광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방안 모색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째, 우리 실정에 적합한 생태관광의 형태를 제시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생태관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참여가 왜 중요한가에 대한 당위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생태관광의 추진이 단순히 관광사업의 관점을 넘어서 지역의 활력을 불어 넣는 역할을 한다는 관점에서 의미 있는 과제임을 부각하여 생태관광 추진의 의의를 새롭게 제시하였다.

>> 생태적 도시개발을 위한 물순환 체계 확보방안 연구: 분산식 빗물관리를 중심으로

Maintenance of Water Cycle for Ecological Urban Development: Focusing on Decentralized Rainwater Management

한영해, 최영국

■ 배경 및 목적

최근 들어 도시지역에서 물 순환에 대한 관심이 높다. 아스팔트와 콘크리트가 지표를 덮음으로써 빗물은 더 이상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있다. 기존 녹지와 자연지반이 훼손되면서 증발산량이 줄어들고 있다. 흐르던 빗물이 고여 있을 웅덩이도, 구불구불한 하천도 반듯한 수로로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순환되던 물의 흐름이 막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그 영향은 고스란히 우리에게로 돌아오고 있다. 한여름 밤의 열섬현상이나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메말라버린 하천들에서 그 심각성을 인식하게 된다. 그래서 그동안 개발로 치달는 과정에서 간과했던 자연적인 물의 순환을 다시금 되돌리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제도적으로 친환경개발이나 물 순환이 가능하도록 명시는 하고 있으나 이것이 계획과 현실에서 반영되지 않는 원인을 살펴보고 또한 외국사례를 검토하여 도시개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강우특성과 도시개발양상을 고려하여 자연적인 물 순환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내용요약

최근 생태적인 도시개발과 함께 물 순환이 논의되는 배경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지역의 불투수면 확대와 중앙집중식 빗물처리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분산식 빗물관리를 제안하였다.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유

출수를 현지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빗물이용, 침투, 저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공간계획상에 적용하기 위한 방법론을 검토하였다.

도시지역에서 분산식 빗물관리의 주요목적은 빗물의 침투·유출률, 증발산율을 자연계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고밀도 도시개발 양상을 고려할 때, 증가하는 유출량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검토된 분산식 빗물관리의 개념이나 주요 계획내용을 토대로 물 순환 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도시개발에 의한 물 순환 변화현황 및 이러한 변화를 공간계획상에 수용·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제도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택지 및 단지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물 순환 변화양상을 분석한 결과, 택지개발 단계에서는 개발 전·후의 총 유출량 변화가 약 10~20%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개발이 이루어진 후에는 불투수면적률이 50~70%로 증가하면서 유출률 또한 약 10~40% 정도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증가량을 현지에서 증발산, 침투, 저류로 처리한다면 도시개발로 인한 물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즉, 토지이용에 따라 인위적으로 변화된 물 순환 체계를 볼 때, 자연적인 물 순환 체계로 바꾸는 것이 생태적 도시조성을 위한 주요 과제라 하겠다.

그러나 아직까지 분산식으로 빗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나 제도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개별적으로 치수·재해방지 차원에서 시설기준이나 지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간

계획 시 친환경적으로 접근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실현화 할 수 있는 계획체계 및 실천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독일사례를 중심으로 공간계획상에 분산식 빗물관리가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기본적으로 독일은 생태적인 도시개발이 될 수 있도록 공간계획을 수립할 것을 관련 제도상에 명시하고 있다. 또한 물 순환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수단으로 용도지역에 따라 불투수포장률을 제한하거나 개발에 따른 자연훼손에 대해 보상조치, 우수세 도입, 경관생태계획 수립 등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조치들이 발휘될 수 있는 이유는 빗물이용이나 침투·저류에 관한 계획지침 및 설계기준이 개발되고, 다양한 환경정보가 구축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

국내 여건 및 독일사례에서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제도적 측면과 계획적 측면에서 국내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적으로 생태적 도시개발에 대한 주요원칙을 법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관련 법 및 규정에서 표명된 물 순환 관련 내용을 실천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다. 대단위 개발 사업에 대해 계획지표로서 최종유출허용량을 제시하는 것과 불투수포장률, 환경계획 체계의 수립, 우수세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셋째, 계획지침 개발이나 계획·평가에 필요한 환경정보를 구축함으로써 계획수립과 관련하여 제반여건 및 지원수단을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분산식 빗물관리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기존시가지의 경우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재생·복원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을, 신시가지의 경우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의 저감 및 보상조치로 분산식 빗물관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 주요결과와 평가

본 연구는 물 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의 하

나로 분산식 빗물관리를 제안하였다. 생태적으로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 물 순환 측면에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데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대되는 효과는 첫째, 분산식 빗물관리를 위한 공간계획과의 연계방안의 향후 계획체계 개선에 활용, 둘째, 관련 법 제도 제동 또는 개선방안의 기초마련, 분산식 빗물관리계획내용의 도시 관리 계획,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건축계획에서의 구체화, 분산식 빗물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원 확보 방안으로서 제안된 우수세 검토, 분산식 빗물관리를 위한 계획지침 작성의 기초자료 마련 등이다.

제도적 관점에서 분산식 빗물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 검토되어야 하는 내용을 주로 다루었으며, 연구기간(2005. 7~2005. 12)의 제약으로 인해 실제 계획내용 자체 및 분산식 빗물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다.

본 연구결과 정책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의 빗물관리는 공간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현재 논의되고 있는 물 순환 구축을 위한 계획지표, 계획체계 등이 법적 구속력을 가짐으로써 실천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셋째, 분산식 빗물관리계획의 내용상 수문해석 내용과 공간계획의 접목이 필요하다.

넷째, 분산식 빗물관리는 비단 물 분야뿐 아니라 녹지, 토양, 토지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들을 고려할 수 있게 각 요소별 공통정보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섯째, 사회 전반에 걸쳐 환경지향적 패러다임이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

>> 수자원관리 및 국토방재기반 구축: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Strategies for Water Management and Disaster Prevention; For the Revision of the 4th Comprehensive National Territorial Plan

김종원, 박태선, 이순자, 심우배

■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수, 치수, 수질환경, 그리고 방재분야별로 장기계획의 수립의 근거와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 내용요약

제4차 국토종합계획상에서 수자원부분은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표어 아래에서 수량, 수질, 하천환경을 종합적으로 다루면서 20년 장기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동안 이러한 계획에 의거하여 수자원분야의 정부계획이 차분히 실행에 옮겨져 왔다. 그러나 5년 동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자원·방재분야의 정책방향이 수정되거나, 새로운 정책의 추진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수정계획을 통하여 이러한 내용을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분야별 주요 추진계획의 수정이 이루어진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수분야의 경우는 지역 간 물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동안 추진하여 오던 광역상수도 공급 계획에 대한 재검토 결과, 광역상수도 공급 계획의 수정·보완이 이루어졌다. 수질관리 분야는 오염관리정책의 커다란 전환을 가져올 오염총량관리제도의 시행이 4대강 유역으로 전격적으로 도입되어 기존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 하천환경관리를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의 도입보다는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

을 지속적 추진하되, 수질관리와 치수계획을 연계하는 하천환경관리 계획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방재분야는 제4차 계획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국토방재기반 구축’이라는 모토하에 추진되었으나 이번 수정계획에서는 ‘재해에 강한 친환경적 국토방재기반 조성’으로 수정하여 향후 방재부문의 계획을 담고 있다.

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과제도 있다. 여기에는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수자원의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자원, 수요관리에 필요한 자원, 수질 개선을 위하여 추진되어야 할 자원, 홍수를 비롯한 자연재해의 예방과 복구에 필요한 자원 등을 예산부처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서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관련 계획을 차질 없이 집행한다면 이번 수정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과 재해에 강한 친환경적 국토방재기반 조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안전한 국토를 가꾸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 약동하는 통합국토를 위한 국토계획 기본골격 연구: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Basic Framework of the New Territorial Plan for Dynamic and Integrated National Territory :
For the Revision of the 4th Comprehensive National Territorial Plan

서태성, 이원섭, 윤혜철, 조진철, 박세훈, 정옥주, 박인권, 임상연

■ 배경 및 목적

국토종합계획은 국토를 · 이용 · 개발 보존함에 있어서 미래의 경제적 · 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으로서, 본 연구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연구 중 하나이다. 2000년 공포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이후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된 수정계획(2006-2020)은 원 계획을 대체하고, 이후 수립되는 모든 시, 시·군 종합계획, 부문별 계획은 수정계획의 기본방향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수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토연구원에서는 총괄분과, 지역혁신 분과, 도시관리 및 토지이용 분과, SOC 물류분과, 주거복지분과,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분과, 수자원 및 방재분과, 국토정보화 분과, 남북교류 및 동북아 분과, 분권 및 지역참여 분과 등이 분과별로 기초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본 연구는 이 중 총괄분과의 부문별 보고서다.

■ 내용요약

본 연구는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장은 수정계획 수립의 배경과 성격에 관한 부분으로서, 참여정부의 새로운 국토정책 패러다임과 기타 대내외적 여건변화를 국토계획에 반영할 필요성과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법적 위상에 대해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국토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며, 이를 토대로 향후의 국토여건 변화를 전망하고 국

토계획 측면에서의 과제를 도출한다. 다음으로 제3장은 수정계획의 기본 틀로서, 계획의 기조인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과 이를 위한 5가지 기본목표, 개방형 국토발전 축(軸)형과 다핵연계형 국토구조, 5대 추진전략을 논한다. 마지막 제4장에서는 국토종합계획의 집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 유역통합관리를 위한 재원확보방안 연구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for Integrated River Basin Management

김종원, 김창현, 심우배

■ 배경 및 목적

이 연구는 유역통합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수자원관련 재원의 흐름, 재원확보의 이론적 기준, 유역통합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방안, 분담기준 등을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하여 정립하였다. 이를 토대로 각각의 재원확보 대안의 장·단점을 비롯하여 활용방안을 다루고 있다.

■ 내용요약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뛰어 넘어 기존의 하천관리재원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 유역통합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맞추었다.

우리나라의 수자원관련 재원은 2004년 말 기준으로 총 6조 4,597억 원에 달하는데, 세입원(歲入源) 중 특별회계가 전체의 49%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일반회계와 지방비가 각각 전체의 24.1%와 23.2%를 차지하며, 수계관리기금 등 기타 재원은 수자원관련 전체 재원의 3.7%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수질개선관련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환경부가 전체 재원의 48.2%를 관장하고 있으며, 치수·이수업무의 주관부서인 건설교통부가 26.6%를 차지함으로써 양대 부처가 수자원관련 전체 재원의 약 75% 정도를 관장하는 특징을 지닌다.

다음은 유역통합관리가 사회적으로 보다 큰 편익이 발생한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유역통합관리 재원확보의 당위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수부분은 댐과 같은 저수자원과 하천수와 같은 유수자원으로 구분하여 개별적 이용 시와 유역 내의 지자체 간의 협력의 틀 속에서 이용할 경우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유역 내의 지자체 간의 협력적 이용이 개별 사용자체나 사회 전체적으로 모두 편익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치수부분은 유역 내의 지자체가 협조하여 홍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사회적 이익과 개별 지자체도 이익이 크다는 점을 홍수방지시설게임의 보수행렬을 통하여 지적하였다. 수질부분의 경우도 유역통합관리방식이 수질개선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일본의 사례를 인용하여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재원조달의 기본원칙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여기에는 수익자부담원칙, 원인자부담원칙, 공동부담원칙, 회피비용부담원칙, 능력부담원칙, 린달의 자발적 교환모형 등에 대하여 각각의 특성과 수자원 분야별로 어떠한 원칙이 합리적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특정원칙이 특정부문에 반드시 적합한 것이 아니라 유역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준조세를 통한 재원조달의 원칙으로 최적조세이론은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시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외국의 사례분석의 시사점은 유역통합관리의 재원은 크게 유역에 포함된 지역과 중앙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하여 유역관리를 도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유역 내의 지자체 간의 배분은 배분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요인을 먼저 선정하고 여기에 따라서 인자별 가중치를 바탕으로 배분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외국의 유역관리에 대한 재원확보에 대한 시사점으로부터 우리나라에 필요한 재원확보방안 마련에 좋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재원확보의 대안으로 준조세 및 분담금을 제시하였다. 준조세로는 새로운 부담금으로 가칭 '취수부담금' 신설의 필요성과 부과기준을 제시하였다. 현재 이수 및 치수목적의 유역관리 부담금은 없는 실정이다. 이수부분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수도요금의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하천수의 취수에 따른 수리권 문제에 따른 물 값 관련 분쟁을 해소하는 데도 현재의 물 값 부과방식과 물 이용에 대한 수리권이라는 법적 제도만으로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조직의 차원이 아닌 취수부담금과 같은 준조세의 신설로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으며 유역별 수량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취수부담금의 신설이 필요한 실정이다.

다음으로 고려할 수 있는 재원확보방안은 유역에 관련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분담을 통한 방법이다. 이를 위하여 앞에서 이론적으로 검토한 부담원칙과 유역 내의 이수, 치수, 그리고 수질별로 고려할 수 있는 인자를 추출하였다. 추출한 결과 모든 부분에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공통인자와 부문별 특성을 반영해야할 개별인자로 구분하여 분담방안을 정립하였다. 정립된 분담방안에 대한 전문가 AHP를 통하여 분담비중을 산정하였다.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유역통합관리를 위한 재원분담기준 중 공통적으로 적용할 결정요인 간에서는, 인구수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이어 지역 총생산과 자체재정수입의 상대적 중요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 유역면적의 경우는 그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둘째, 유역통합관리재원 분담기준 중 개별기준에 있어서는, 먼저 제2계층인 이수, 치수, 수질개선의 유역통합관리업무 간 상대적 중요도를 보면, 수질개선이 가장 중요성이 높은 가운데 치수와 이수의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나며, 이수, 치수, 수질개선 부문 각각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적용할 제3계층에 있어서는, 산업폐수방류량이 가장 중요한 가운데 생활하수발생량과 생·공용수 사용량, 홍수피해액이 그 뒤를 잇고 하천연장과 농업용수사용량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다. 셋째, 유역통합관리업무의 세 부문 간 상대적 중요도에 서는, 전반적으로 수질개선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으로 치수부문 그리고 이수부문 순으로의 관계가 지배적인 가운데 금강유역의 경우는 치수부문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으로 수질개선 그리고 이수부문이라는 타 권역과는 다른 특징을 보였다. 동시에 수질개선은 한강 및 낙동강 유역에서 상대적으로 중시되고 치수부문은 낙동강과 금강유역에서, 이수부문은 금강유역과 영산강·섬진강 유역에서 상대적으로 중시되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끝으로, 유역통합관리재원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간 분담비중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유역관리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특히, 하천정비, 홍수방지 및 피해복구 등과 같은 치수부문에 대해 중앙정부의 높은 재원분담이 필요한 반면 용수이용과 하·폐수방류 및 처리 등과 같은 이수 및 수질개선 부문에 대해서는 그 특성상 수익자이면서 원인자이기도 한 해당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재원분담비중이 높아야 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공통기준과 개별기준 간 분담비중 변화에 따른 유역 내 지역 간 분담구조 변화에 대한 4대강 유역별로 적용하여본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가 있다. 먼저, 유역관리재원에 대한 지자체 분담비중을 설정함에 있어서 전국 획일적인 분담구조가 아니라 유역별 특성차이를 고려한 차별적인 분담구조가 필요하다고 하는 점이다. 공통기준 결정요인들로 대표되는 부담능력의 지역 간 격차구조, 개별기준 결정요인들로 대표되는 이수, 치수, 수질개선 부문에서의 수익 정도나 원인 유발정도의 지역 간 격차구조 등이 적절하게 고려된 지역 간 분담비중의 설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분석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다. 즉, 재원분담을 위한 다양한 결정요인들에 의거한 지역별 분담비중의 결정은, 유역별 검토

에서 보듯이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준별 시
물레이션에 따른 지자체 간의 분담비중의 변화에 대한
의사결정단계에서 유역위원회에 관련된 중앙정부, 지자
체, 지역전문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합리적
인 대안을 도출할 경우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다음으
로, 한강과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경우는 다른 유역에
비하여 개별기준에 의한 수익·원인자 부담원칙에 충실
하는 것이 현실적 수용가능성이 높은 반면, 낙동강과 금
강 유역의 경우는 부담능력을 중시하는 재원분담방안의
현실수용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 주요결과와 평가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역관리
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통하여 실질적인 유역통합관
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
다. 둘째, 기존의 준조세 성격의 물 이용부담금에 대한
평가를 통한 합리적 조정 및 이용을 도모하였다. 셋째,
유역의 통합적 관리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식의 전환을
통해 물 관리체계의 전환 및 물이용의 형평성을 도모하
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제시하고 있는 취수부
담금의 도입은 유역관리재원의 확보라는 본래의 목적
을 달성하는 것 외에도 부수적으로 최근에 빈발하는 물
값 분쟁, 하천법의 개정을 통하여 수리권의 허가수리권
으로의 통합을 하기 위한 정책을 보다 손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수자원의 관리가 중앙
정부 주도에서 유역별 관리로의 이행을 통하여 지자체
중심의 유역관리체계로 전환되어 유역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였다. 다섯째, 이해당사자 간의 공동의 노력을
통하여 유역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수자원관련 분쟁을
사전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섯째, 현
재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가칭 국가물관리위원회
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조직에 대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가 정부의 정책 수립에 있어 적기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지방분권과 지역참여를 통한 국토계획 수립연구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A Study on Provincial Development Directions and Implementation Improvement
: For the Revision of the 4th Comprehensive National Territorial Plan

김창현, 박영철, 전대윤, 이성수 외

■ 배경 및 목적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이 수립된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고속철도 개통, 주5일 근무제 실시 등 국토공간상의 커다란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수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는데 이를 본 연구의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의 수립과정에서 시·도부문 계획내용인 시·도별 발전방향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시·도부문 계획내용의 집행력 제고를 통한 국토계획의 실효성 제고방안과 국토종합계획의 하위계획인 도종합계획의 기능 및 역할 정립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 내용요약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장 시·도부문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에서는 계획내용의 기본방향을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했다. 첫째,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시·도별 특성과 발전, 둘째, 국가균형 3대 특별법 제정,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고속철도 개통, 주5일 근무제의 도입, 신국토 구상의 발표 등 새로운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지역 특성과 발전, 셋째, 지역 간 이동성의 제고와 문화 관광 생태에 대한 체험 학습 등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여 지역고유의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넷째, 건강·운동 등의 증시와 옥외 활동의 증대 등 삶의 질 제고로의 주민생활패턴의 변화추이를 수용하는

쾌적한 주거환경과 자연친화적인 지역환경의 조성 및 유지관리, 다섯째, 지역 간 접근성 제고와 연계성 확대 추세에 대응하고 지역의 자립적 공생적 발전기반 구축을 위한 지역 간 협력 연계 강화를 그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시·도별 발전방향은, 이러한 기본방향에 의거하여, 각 시·도별로 공간구조의 개편과 개발 정비, 지역혁신과 경쟁력의 강화, 지역·교통·물류 및 정보통신망의 구축, 지역 자원의 보전과 관리, 생활 복지기반의 선진화, 자치역량 강화와 주민참여 확대, 지자체 간 협력사업의 발굴 및 추진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3장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내용 중 '시·도별 발전방향'을 다룬다. 이의 부문별 계획내용과 각 시·도별 의견에 입각하여 향후 계획기간 동안에 각 시·도가 지향하는 지역발전 방향을 담고 있다. 이러한 시·도별 발전방향은 국토종합계획을 지역 차원에서 구체화한 시·도 종합계획 등에 대한 지침(guide line)의 성격을 갖는다.

시·도별 발전방향에서는 위에서의 기본방향과 주요 내용에 의거하여, 수도권의 서울특별시, 세계 일류 도시, 인천광역시, 물류중심·경제자유 도시, 그리고 경기도는 지식산업 중심지역을 지향하도록 한다. 강원도는 생명건강 중심지역, 충청권의 대전광역시는 과학 기술 중추도시, 충청북도는 바이오산업 중심지역, 그리고 충청남도는 국가행정의 새로운 중심지역을 지향하도록 한다. 전라북도는 신산업 생산 및 물류 중심지역, 광주권의 광주광역시는 첨단과학·광산업·문화 중심 도시, 그리고 전라남도는 물류·관광·미래산업 중심

지역을 지향하도록 한다. 대구권의 대구광역시는 과학 기술·문화·교육 혁신도시, 경상북도는 첨단산업·문화 중심지역을 지향하도록 하고, 부산권의 부산광역시는 해양·물류 중심도시, 울산광역시는 자동차·첨단 지식기반 산업도시를 지향하도록 하며, 경상남도는 지식기반·첨단산업 선도지역을 지향하도록 한다. 끝으로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로의 성장·발전을 지향하도록 한다.

제4장에서는 국토종합계획 중 시·부문계획의 집행력 제고를 위해서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지방재정의 확충 및 효율성 강화, 참여주체 간 협력네트워크와 협력촉진형 전담기구의 설치 등 지역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중앙정부 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을 위해서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하에 있는 계획입안-결정 패턴 구조를 시정하고 지자체 자율의 계획수립 및 집행이라는 분권화된 계획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자치권과 집행기능의 지방이양을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재정의 확충 및 운영효율성 강화를 위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의 지방세이양, 지방소비세 도입, 재산과세 과세표준율의 현실화와 과세대상 확대, 과세자주권의 강화, 지방채의 적극적 활용,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도입, 민간자본의 유치 등의 추진이 필요하며,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포괄보조금(Block Grant)제도의 도입, 차등지원제도의 활용, 사업예산제도의 개편과 사후평가의 강화 등의 추진이 필요하다.

지역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참여주체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촉진형 전담기구의 설치가 요망된다. 중앙, 지방정부, 민간부문 등의 다양한 참여주체들이 동반자로서 참여하여 연계·조정·통합을 이끌어 내는 거버넌스에 의한 계획수립과 추진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국토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거버넌스 체계의 대안으로 자치단체 간 수평적 협력파트너십 등 다양한 주체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폐지된 상태에서 국토계획은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종합계획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계획이라는 주체적 한계로 말미암아 중요도에 비하여 계획적 위상은 떨어지고 있으며 도종합계획도 마찬가지로의 입장에 있다. 종합행정단위로서 도의 각 부서는 거의 모든 중앙부처와 연계된 도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이들 간 연계체계의 확보 없이 각종 계획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며 도종합계획도 '많은 계획 중 하나'로서 그 종합적 위상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다. 도 계획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의 위상이 먼저 확립되어야 한다. 즉, 국토계획의 위상 확립과 계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중앙단위 계획들의 경우 국토공간과 관련되는 모든 계획들이 국토계획과 연계체계를 형성하도록 해야하며, 도 단위에 있어서는 계획 간 수직·수평적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 주요결과와 평가

향후 국토종합계획에서의 시·도별 발전방향이 국토계획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님으로써 국토계획 전체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하위 도종합계획에서 구체화됨으로써 도종합계획이 그 기능과 역할을 정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지방재정의 확충 및 효율성 강화, 참여주체 간 협력네트워크와 협력촉진형 전담기구의 설치 등 지역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이 긴급하다. 이와 함께 도종합계획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의 위상이 먼저 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단위 계획들의 경우 국토공간과 관련되는 모든 계획들이 국토계획과 연계체계를 형성하도록 해야 하며 도 단위에 있어서는 계획 간 수직·수평적 연계를 통하여 계획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1) : 참여정부의 분산·분권형 균형발전정책의 진단과 개선방안

Decentralization Strategies and Policy Guidelines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I)

서태성, 김현식, 이원섭, 문정호, 윤혜철, 박세훈, 박인권, 임상연 외

■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의 첫 번째 연구로서 현재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분산·분권정책을 진단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분산·분권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관련 정부 정책들의 전체적인 구조 합목적성을 재검토하고 대응과제를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러 부처와 위원회가 제각각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최종적 정책목표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하위정책들이 국토균형발전의 일관된 전략에 따라 우선순위와 상호관계가 설정되어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전략적 대응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 내용요약

개념적으로 분산은 공간적·물리적 개념인 반면 분권은 비공간적 개념으로 분권이 되지 않고도 분산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분산과 분권은 상호 연계되어 분권의 정도가 높은 국가는 분산의 정도도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분산과 분권은 상호보완적 관계로 이해될 수 있다. 분산은 행정의 능률성이나 민주성에 취약할 수 있고 분권은 형평성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양자 간의 보완적 관계가 필요하다.

한편, 참여정부의 국토균형발전정책 기조는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역의 잠재적 내부역량을 강화하는 자립형 지방화전략으로 요약된다. 현재 국토균형발전과 관련된 여러 정책들은 대통령자문기구인 각종 위원회 중심으로 추진 중이다. 국토균형발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3개로, 각 위원회는 필요한 정책들을 기획하고 부처 간의 업무를 조정하지만, 실제 업무의 추진은 소관부처에서 담당하는 기획과 실행의 이중구조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평가대상정책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기업도시, 지역혁신체계 구축, 혁신클러스터 조성, 지역전략산업 육성, 지방대학 육성, 낙후지역 활성화, 재정분권, 사무 및 인력이양 등 총 10개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정책을 평가하는 개별정책평가와 정책 간 관계를 보는 정책 간 구조평가, 그리고 계량모형을 활용한 정량적 평가인 파급효과평가를 병행하여, 그 결과를 종합한 후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개별정책평가는 연구진 자체의 정책분석평가와 외부전문가를 통한 정책포럼 평가로 구분된다. 평가 결과를 보면, 평가대상의 모든 정책이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정책별로 지역혁신발전정책, 지방정부역량강화정책, 그리고 균형발전전략거점개발정책 순서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요컨대, 개별정책들은 정책목표는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으나 시행과정의 효율성과

01

적절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책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높으나,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신뢰도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책의 개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평가는 모든 정책에서 고르게 높이 나타나고 있어 향후 정책추진이 국가균형발전에 중요한 요소임을 인정하고 있다.

둘째, 정책 간 구조평가는 개별정책 간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연계성, 중복성,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우선 연계성을 살펴보면, 균형발전거점개발정책, 지역혁신발전정책 및 지방정부역량강화정책 등 3대 정책부문은 상호보완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균형발전전략거점개발과 지역혁신발전정책 간 관계에서는 지역혁신발전을 위한 물적 토대로 균형발전전략거점개발이 전제된다는 연계성을 내포하고 있다. 다만 균형발전전략거점개발정책과 지역혁신발전정책 간의 연계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지방정부역량강화정책과 여타 정책부분과의 연계성도 높여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일부 정책에서 중복성도 나타났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균형발전전략거점정책과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혁신발전 부문 사업들이 나열적이고, 분산중심으로 구성되는 등 병렬적 중복성을 보이고 있어서 비효율이 예상되고 있으며, 난개발과 투기과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기업도시, 혁신도시, 지역전략산업, 혁신클러스터, 낙후지역 등이 국토계획과 국토관리라는 차원에서 통합하여 하나의 공간정책 틀 안에서 재검토되고 신중히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우선순위의 경우에도 일부 개선되어야 할 점이 드러났다. 균형발전거점개발, 지역혁

신발전, 지방정부 역량강화정책 군 간 우선순위는 명시적으로 설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현상적으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등의 다핵 분산형 균형발전 전략거점 정책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역량강화정책과 지역혁신발전정책이 병행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그러나 균형발전전략거점개발정책과 지역혁신발전정책 등의 제 시책은 일정 수준의 지방정부역량강화정책 성과의 기초 위에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식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지금의 균형발전전략거점개발 중심의 정책추진 체계를 최소한 지방정부역량강화정책이 균형발전거점개발전략과 동등한 수준에서 추진되도록 그 우선순위가 설정될 필요가 있다.

셋째, CGE 개량모형을 이용하여 분산·분권정책의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시나리오로 균형발전전략거점개발정책과 지역혁신발전정책 두 가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각각 전국의 지가가 동일수준을 유지할 경우와 10% 상승할 경우를 나누어 지역 내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상의 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함의를 얻을 수 있다. 첫째, 균형발전시책 중에서 지역혁신전략산업의 투자를 통한 지역혁신발전전략이 균형발전전략거점개발정책에 비해 경제성장의 효과가 큼을 알 수 있다. 둘째, 지역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지역 간 인구 이동을 촉진시킬 만한 전략이 강구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 지역정책의 지역격차 완화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뿐만 아

〈분산·분권형 균형발전정책이 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

구분	균형발전전략거점 개발(조 원)	지역혁신발전(조 원)
지가가 동일수준을 유지할 경우	-10.44	+152.95
지가가 10% 상승할 경우	-15.11	+149.87

나라 정주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토지가격의 안정이 필요하다. 수도권 토지가격이 토지생산성을 크게 상회할 경우 수도권의 경제 선도성이 매우 약화될 수 있다. 역으로 수도권 토지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을 경우 수도권으로의 투자는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비수도권 지역에도 동일하다. 따라서 최근 비수도권지역의 토지가격 상승과 같은 현상을 막지 못한다면 국가균형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주요결과와 평가

본 연구는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념적 정책목표에 눈높이를 맞추어 분산과 분권, 지역혁신발전이 중심이 되는 정책들을 중간 점검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책평가연구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6가지 기본원칙과 대응과제를 정리할 수 있다.

기본원칙으로는 첫째, 균형발전전략거점전략과 지방정부역량강화정책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균형발전전략거점 모형의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책의 사전 검증 및 갈등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지가의 안정과 지속적 투자유지를 위한 정책의 개발이 요구된다. 다섯째,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분산·분권정책의 지방화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해야 한다.

대응과제로는 첫째, 균형발전전략거점정책과 지방정부역량강화정책은 그 우선순위와 집행강도를 균형 있게 운영하도록 건의하였다. 둘째,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균형발전전략거점 건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사전에 기존 도시와의 위상과 연계 등 대안 등의 검토가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셋째, 정책의 사전검증 및 갈등관리 체계의 구축을 건의하였다.

넷째, 지가안정과 지속적 투자유지가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의 추진이 담보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분산·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추진이 지방으로도 전이되어 지방에서도 수용력을 증대하고 지방의 역할과 역량을 키우는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연구기간: 2005. 1. 1~2005. 12. 31

서지사항: 본 보고서 339면, 자료집I 344면, 자료집II 234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5-03-01·02·03, 총 3권

>>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전략 및 추진방안: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ies: For the Revision of the 4th Comprehensive National Territorial Plan

최영국, 김선희, 이용우, 이승복

■ 배경 및 목적

제4차 국토계획이 수립된 지 4년이 지났다. 2002년의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그리고 동북아 중심국가의 실현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4년 초에 신국토구상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국정과제와 신국토구상의 정책방향과 과제들을 수용하기 위해 제4차 국토계획은 4년 만에 수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4차 국토계획 수정계획의 환경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본 연구는 수정 국토계획의 기초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내용을 작성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와 지난 4년 동안 수립된 각종 환경관련 계획의 내용을 수용하면서 기존 국토계획에서 수정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계획내용은 요약되어 수정 국토계획의 부문인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에 포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대한민국 정부 보고서」와 이 보고서를 지원하고 있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시안(국토연구원)」의 계획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 내용요약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에 대한 노력은 끊임없이 있어 왔지만, 국토이용 및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과 오염문제는 언제나 상존하고 있다. 국토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다음 6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활발한 반면에, 지속가능발전전략 및 지표, 국토개발 및 계획에 대한 환경성평가체계, 환경친화적 개발지침과 개발모형 등의 실천수단 마련이 미흡하다. 둘째, 산림, 하천, 연안 등 생태계 구성 요소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미약한 개발 및 보전정책으로 생태계의 건강성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셋째,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 및 오염에 대한 사전적 조치 및 사후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방법과 기술개발이 환경인식변화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넷째, 대기질 및 수질의 경우 우리나라는 높은 인구밀도와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로 인하여 단위 면적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며, 특히 대도시의 대기오염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 또한 비점오염원에 의한 수질오염, 교통소음문제 역시 심각한 실정이다. 다섯째, 화석연료자원을 토대로 한 에너지 절약정책이 에너지 자원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환경오염과 환경파괴를 최소화하여 지속가능한 국토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부족하다. 폐기물 처리 역시 소득향상, 산업구조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섯째, 지구환경변화 및 동북아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수단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9위를 기록하고 있어, 2013년부터 의무감축 대상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 산업 부문의 대책은 미온적이고 특히 국토·교통·건설정책부문에서는 기후변화협약 등 그린라운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수단이 미흡한 실정이다.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목표로 하였을 때 이와 관련된 여건들은 다방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국토공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다음의 4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지속가능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증대함에 따라 '환경친화적' 및 '지속가능성' 개념을 이론적 수준에서 정책 수단적 단계로 진전시켜 이를 구현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개발 모형이나 지침에 대한 논의와 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둘째, 효과적인 환경행정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촉진되면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다. 셋째, 국가균형발전과 토지이용규제완화는 일시적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환경오염부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생태계 및 경관훼손이 심화되어 산림을 비롯한 자연자원이 사라질수록 국민들은 자연에 대한 향수를 더욱 가지게 될 것이다. 넷째, 세계화와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은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에서도 글로벌 스탠더드를 강력히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상의 현재 국토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여건변화 그리고 기존 국토계획의 환경보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계획기조와 수정 국토계획의 계획기조 및 기본목표를 감안하여 수정 국토계획에서는 '건강하고 쾌적한 녹색국토조성'을 계획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계획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i)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 및 실천수단 마련, ii) 친환경적 국토이용여건 마련을 위한 국토 생태망 구축, iii) 효율적 자원관리를 통한 자원절약형 국토이용 및 개발, iv)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환경 조성, v) 분권화 및 글로벌 시대의 국토관리체계 마련 등 5개 항목을 제시하였다.

추진전략별로 3~4개 정도의 추진해야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 및 실천수단 마련을 위한 과제로서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전 방위적 도입에 따른 국토관리의

환경성 강화, 국토관련 계획에 대한 전략 환경평가제도의 도입, 환경친화적 지역 및 도시개발모형의 정립과 지침작성 그리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국토개발 및 이용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구축 등 4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 친환경적 국토이용 및 여건마련을 위한 국토 생태망 구축의 과제로서 국토 생태망 구축을 위한 국토 생태축 관리방안 마련, 국토생태계 보전 및 복원을 위한 기반조성과 국토이용의 사전 예방적 조치 강구, 그리고 산-하천-농촌-도시-연안 등의 국토생태계 연결성 강화 등 3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세 번째, 효율적 자원관리를 통한 자원 절약적인 국토이용 및 개발을 위한 과제로서 자원효율적인 국토 및 도시개발을 위한 실천 수단 강구, 환경오염원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마련,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고려한 지역 및 도시계획 수립 및 개발유도, 그리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사용촉진을 위한 공급체계 구축 및 기술투자 확대 등 4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 석유시대의 환경오염원 배출을 전제로 한 지역 및 도시계획수립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사용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계획수립에 대비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4차 국토계획 기간에 태양에너지를 위주로 한 환경도시를 위한 제도적, 기술적 수단을 강구하기 위한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네 번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환경 토대마련을 위한 과제로서 수질 및 대기질 개선, 토양환경의 보호와 복구, 그리고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 등 3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국토계획과 큰 차이는 없으나 토양환경과 폐기물처리 부분을 분리하여 다루었다. 토양환경에서는 계획과 관련하여 추진하여야 할 시책들을 열거하였다.

마지막으로 분권화 및 글로벌 시대의 국토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과제로서 지역 환경관리체계 구축, 지구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토관리체계 구축 그리고 한

반도 생태계 복원과 동북아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 등 3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에 대비하여 지역 환경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들을 제시하였다.

■ 주요결과와 평가

현재 국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여건변화 그리고 기존 국토계획의 환경보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계획기조와 수정 국토계획의 계획기조 및 기본목표를 감안하여 수정 국토계획에서는 “건강하고 쾌적한 녹색국토조성”을 계획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계획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i)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 및 실천수단 마련, ii) 친환경적 국토이용여건 마련을 위한 국토 생태망 구축, iii) 효율적 자원관리를 통한 자원절약형 국토이용 및 개발, iv)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환경 조성, v) 분권화 및 글로벌 시대의 국토관리체계 마련 등 5개 항목을 제시하였다. 이 5개의 추진전략별로 3~4개 정도의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연구기간: 2004. 6. 1~2005. 9. 30
서지사항: 150면, 국토연 2005-8

>> 지식기반산업의 군집형성 요인에 관한 연구: 캐나다 밴쿠버의 바이오산업을 사례로

Factors Affecting the Formation of a Biotechnology Industry Cluster in Vancouver

장철순

■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캐나다 밴쿠버시의 새로운 지역성장 동력 산업으로 생명공학 산업의 성공요인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정책적 시사점과 적용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내용요약

캐나다 밴쿠버시는 제조업의 발달이 미약하였으나 연방정부 및 주정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명공학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밴쿠버의 생명공학(Biotech) 산업의 성공요인을 분석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는 크게 5개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에서는 생명공학산업의 현황을 다루었다. BC

주(주로 밴쿠버시)의 생명공학 산업은 90개의 개인기업, 12개의 연구단체, 3개의 제조업체, 6개의 임상실험단체, 7개의 벤처기업, 8개의 정부 조직, 3개의 비영리조직, 3개의 연구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인간 건강·치료분야에 집중(60% 이상)되어 있으며, 일부는 농업생물공학분야이다.

밴쿠버 생명공학산업의 특징은 기업체수, 고용자수, 벤처캐피탈 등에서는 토론토나 몬트리올에 비해 적지만 R&D에 대한 투자, Bio 과학자수 등 연구개발 분야는 다른 도시에 비해 두드러진다. 밴쿠버의 생명공학 기업들은 UBC(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FU(Simon Fraser University) 등 대학에서의 창업(spun-offs)기업이 대다수이며, 50인 이하의 소규모기업이 67%를 차지하며, 이들 기업의 대부분이 UBC

캠퍼스, Vancouver 종합병원, Burnaby / New Minister 산업단지 등 3곳에 집적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생명공학 산업 육성정책을 다루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명시적인 정책수단은 없으며, 주정부 주도하에 육성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연방정부의 생명공학 육성정책은 생물과학연구소(IBS), 식물생명공학연구소(PBI), 생명기술연구소(BRI), 해양생명과학연구소(IMB), 생명진단연구소(ID) 등 5개의 중앙연구소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 연구소들은 산업체, 대학교, 정부기관을 연결하는 고리역할을 수행하면서, 자금지원, 연구조정 등을 하고 있다. BC주의 생명공학 정책은 UBC, SFU 등 대학연구소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 이외에 R&D비용에 대한 세금혜택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밴쿠버의 생명공학산업 집적의 성공요인을 다루었다. 밴쿠버는 경쟁도시들인 미국 서부도시들에 비해 저렴한 사무실 임대·유지비용, 풍부하고 저렴한 전력,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삶의 질, 사업세, 연구개발에 대한 세금 감면 등 세금우대 정책,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 그리고 풍부한 창조적 자산의 형성 등이 성공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연구혁신체계(ISRN)의 활동과 연구결과를 다루었다. ISRN은 1998년 3개 연구회의 연구기금을 출자하여 2001년부터 2005년까지 1단계 연구를 수행하였다. ISRN의 목적은 국가와 지역차원에서 사회·경제·정치조건들이 혁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이들이 경제발전에 기여하는지를 밝히려는 것이다. ISRN은 캐나다 전역을 4개의 ISRN서브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8개 산업군, 5개 지역군으로 나누어 26개 산업클러스터를 비교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지역혁신의 성공요인으로 학습(learning)활동, 노동력(Labor)의 확보, 지도력(leadership), 공공의 역할, 혁신중심지(innovation entrepot) 등 5가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제5장에서는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을 다루었다. 우

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지역 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시너지효과 극대화의 필요성이다.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오를랜드, 산호세, 로스앤젤레스, 샌디에이고 등 북미 서부지역의 대규모 생명공학 클러스터 형성이 밴쿠버의 생명공학 산업 활성화에 영향을 미쳤으며, 문화적, 언어적 동질성이 투자리스크를 줄여 FDI 확대를 가져 왔다. 따라서 국내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을 연결하는 거대 클러스터 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살기 좋은 생활여건과 풍부한 창조적 자산의 형성이 필요하다. 밴쿠버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 하나이고 창조적 자산이 풍부하여 도시 발전의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창조적 계급의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정주여건 조성이 필요하며, 특히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신도시 조성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 셋째, 생명공학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적 관리와 연계가 필요하다. 개별적 지원정책을 통한 육성정책보다는 정부연구소, 협회, 단체 등을 통한 포괄적 지원정책을 통해 조정과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무실 유지·임대비용, 세금 등 운영 및 관리비용의 경쟁력이 필요하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특정 부문에 대해서는 국가가 파격적인 지원이 추진되어야 한다.

>> 통합국토를 향한 지역간 공동발전 방안 연구(Ⅲ): 제도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Promotion of Interregional Cooperation in Territorial Development

이원선, 양하백, 정옥주, 박인권

■ 배경 및 목적

지역 간 공동발전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심화되고 있는 지역 간 경쟁 및 중복투자와 이로 인한 비효율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뿐만 아니라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 계획이 지향하는 ‘약동하는 통합국토’를 실현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처럼 개념적이고 국지적인 관점을 벗어나 구체적인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고 거시적인 국토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 간 공동발전을 한국적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보다 세부적인 연구 목적은 첫째, 제1차 및 2차 연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역 간 공동발전과 관련한 기존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진단을 통해 제도적 접근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한다. 둘째, 국내외의 지역 간 공동발전과 관련한 제도를 분석하며, 셋째, 지역 간 공동발전의 실천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패러다임을 정립한 다음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지역 간 공동발전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내용요약

우리나라에서 지역 간 공동발전의 제도기반 구축은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측면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동발전, 두 번째 측면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한 지역 간 공동발전, 세 번째 측면

은 지역 간 공동발전의 실천을 지원하는 재정, 조직, 법률 등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협력이 전개되는 공간적 범위에 따라 적합한 지원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역 간 공동발전은 지리적 범위에 따라 大, 中, 小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역 간 상생발전을 가장 넓게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동발전(大相生)이 되고, 가장 좁게 보면 기초지자체 간 공동발전(小相生)이 된다. 그 중간은 광역지자체 간 및 광역-기초 간 공동발전(中相生)이다. 한편, 지역 간 공동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행정제도는 지역 간 공동발전을 지원하는 행정적 장치와 절차를 규정하고, 재정적 제도는 지역 간 공동발전을 지원하는 재정적 장치를 규정하며, 법률적 제도는 지역 간 공동발전을 지원하는 법적 기반을 포함한다.

이 같은 상생유형별 제도기반 구축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동발전(大相生)을 위해서는 수도권 정책과 지방육성 정책을 통합된 제도적 틀 아래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통합하는 가칭 ‘국토균형발전법’을 제정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 법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에 관한 내용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입지규제 및 지방이전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수도권과 지방을 포함하는 국토 전체의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광역지자체 및 광역-기초지자체 간 공동발전(中相生)을 촉진하기 위해서 광역적으로 진행되는 각종 지역

개발에서 지자체 간 협력사업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광역권 개발, 특정지역 개발, 인프라 개발, 초광역 산업클러스터 개발, 문화관광권 개발 등의 추진 시 광역지자체 간 협력사업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할 수 있다. 도시계획 분야에 있어서는 연담화 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의 보편화와 이를 위한 지원확대가 요구된다.

기초지자체 간의 공동발전(小相生)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소규모 클러스터 형성 사업을 들 수 있다.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혁신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농림어업, 제조업 등 분야별 지역특산물 산지를 연계하는 다지역형 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문화관광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지리적으로 연결하여 산, 하천, 문화 등 자원을 공유하는 지역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자원의 절약과 함께 사업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 또한 각종 시설의 광역적 설치 및 이용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서비스를 공동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

지자체 간 협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행정·재정·법률적 지원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행정관련 제도에는 지자체 간 지역발전 투자협약제도의 활성화, 지역 간 공동사업 추진조직으로서 광역발전기획단의 설치,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의 정책협의회 구성, 지자체 간의 각종 행정협력제도의 활성화가 포함된다. 재정지원 제도에는 지자체 간 협력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기 위한 지역발전협력기금의 설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협력계정 설치 및 지자체 간 협력사업에 대한 우선지원 활성화, 지역 간 협력사업에 대한 지방재정조정 수단의 운영방식 개선, 지역 간 협력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우대 및 지방채 발행 우선승인이 포함된다.

■ 주요결과와 평가

지역 간 공동발전을 위한 법률적 기반구축을 위해서

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과 기존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 먼저 지역 간 협력법은 현재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지역 간 협력관련 내용을 통합하여 지자체 간 협력사업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토균형발전법은 기존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통합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수도권과 지방을 포함하는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법률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은 지자체 간 협력을 지원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장치를 포함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

지역 간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물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시점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협력과 공동발전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직원과 지자체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또한 지역 간 협력사업은 실천가능한 영역에서부터 출발하여 협력의 폭과 깊이를 단계적으로 넓혀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 간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취약한 제도적 지원장치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지역 간 협력제도가 국토계획의 큰 틀 아래에서 지역개발사업의 실천성과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토 및 지역정책의 전반적인 구조 재편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한·일해협권 통합지역경제 기반구축을 위한 전략

Collaborative Regional Development across the Korea-Japan Strait Zone

김원배, 박형서, 이성수 외

■ 배경 및 목적

한국과 일본은 세계화와 지역화의 추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성장잠재력 감쇠의 측면에 직면해 있다. 이들 양 국가는 OECD국가들 중에서 경제의 국가 간 연계 측면에서 극히 미진한 편이다. 더욱이 중국 경제의 급성장은 한국과 일본의 산업공동화의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일본에 비해 기술적 우위에서 뒤처지는 한국은 더욱 더 암울한 미래에 직면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있다.

이러한 경제 내외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수년 내에 다른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사실상 양 국가는 2005년 말까지 양국정부의 FTA협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었다. FTA나 그 밖의 여타 무역협정을 통해 제도적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것은 회원 국가의 무역과 후생수준을 증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TA가 장기적으로는 국가 전반에 걸쳐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FTA의 영향은 산업과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작용한다. 게다가 FTA와 여타 자유화의 추세로부터 야기되는 경쟁의 심화는 경제활동의 합리화 및 산업의 구조조정의 과정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들의 지리적 영향은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다. 혁신능력을 가진 경쟁지역들은 FTA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 기회를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나 반면에 단순 가공이나 조립 등에 특화된 경쟁력 열위 지역들은 경쟁에서 낙오하게 될 것이다.

금융자본, 인재, 그리고 선진화된 서비스의 부존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 내에서 핵심지역은 당연히 우월한 입

지를 누리고 있으며, 세계적인 역량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주변지역은 심화되고 있는 지역 간 경쟁에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FTA와 국경의 약화는 위협요인뿐만 아니라 기회요인을 제공한다.

국경개방이나 세계화의 압력은 지역 조직체 간의 월경적 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현재 한국과 일본에서 경험하고 있는 분권화의 과정은 지방정부차원에서 국제적 협력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고 있어, 대내외적 차원에서 한국과 일본의 지방정부차원의 월경적 협력을 위한 조건은 성숙되어 간다고 볼 수 있다. 월경적 협력은 경쟁력 창출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월경적 협력의 필요성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않은 비핵심지역에서 더욱더 절실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리적 근접성, 경제적 보완성, 문화적 유사성 등을 만족시키는 한·일해협권은 향후 월경적 협력의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 내용 요약

본 연구는 세계화, 무역자유화, 그리고 지방 분권화라고 하는 거시적 환경의 변화 추세에서 지역 중심의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그간 지역 발전전략이 대부분 국내적 시각에서 중앙과 지방의 관계 또는 수도권대 비수도권이라는 낡은 틀 위에서 구상되어 왔다면, 본 연구는 지방차원의 국제적 협력 특히 인근지역과의 월경적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의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연구의 대상 지역은 한·일 해협권 내에서도 경제적

교류관계가 밀접한 부산-울산-경남(부울경)과 후쿠오카-나가사키-사가-야마구치(후나사야)에 한정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해협권 전체를 대상으로 협력의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다. 방법론적 측면에서 국가가 아닌 지방이나 지역차원에서 월경적 협력을 다룸으로써 국제경제학에서 간과되고 있는 지역을 강조하였다. 또한 일본 측과의 공동연구 수행을 통하여 일방적인 관점이 아니라 쌍방적인 관점을 택했다는 점이 기존 연구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월경적 협력의 필요성을 동북아의 경제 환경변화, 특히 자유무역협정의 움직임과 관련시켜 살펴보고, 궁극적으로는 지역발전 전략의 일부분으로서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해협권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나 모형을 유럽과 북미의 사례검토를 통하여 도출하고자 하고 있다. 유럽의 경험에서의 중요한 시사점으로는 통합 유럽의 출현과 이에 따른 초국가적 기구의 중요성이 유럽의 월경적 협력에 중요한 환경적 요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동북아에서는 이를 쉽게 모방할 수는 없으나 월경적 협력의 제도적 장치들은 동북아지역에도 적용가능 할 것이라는 점이다. FTA의 지역 효과분석과 이에 따른 지역차원의 대비책을 논의하고 있다. 동시에 본 연구에서 실시한 FTA 및 해협권 협력에 대한 기업인과 지역지도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지역과 후나사야(후쿠오카-나가사키-사가-야마구치)지역의 경제적 기반, 미래 전략산업, 그리고 양 지역이 공통으로 갖는 잠재력과 약점을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월경적 협력의 가능성을 월경적 지역에서의 산업클러스터 형성과 FTA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현재 상당한 집적을 이루고 있는 자동차/부품산업에서의 협력관계를 살펴보고, 부울경 지역의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기계 산업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해협권에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환경산업에서의 월경적 협력가능성과 북부큐슈지

역-한국의 정보통신 분야의 협력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관광분야, 의료/건강서비스 산업, 물류, 과학기술교류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주요결과와 평가

월경적 지역 구축을 위한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어떻게 단계적으로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비전설정은 양 지역의 지자체와 기업,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지만, 가상적으로 소극적 비전과 적극적 비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비전 설정의 과정은 협력의 목적과 추진체계를 포함하게 된다. 지역차원의 월경적 협력의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요구사항에 대해 논의하면서, 단계적으로 협력을 추진해가기 위한 방법론상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월경적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어떻게 설립할 것인지를 동북아의 현실과 유럽이나 북미의 경험에 비추어 제시하고 있다.

해협권에서 구축 가능한 월경적 협력의 구조와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월경적 협력의 구조는 스칸디나비아 제국에서 행하고 있는 방식을 도입하여, 국가 간 협정을 통하여 지역차원의 협력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한·일 간에 협상 중인 자유무역협정에서 지역/지방 차원의 월경적 협력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해협권 양 지역의 지자체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월경적 협력의 제도적 구조는 협의회, 위원회, 사무국으로 구성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단기에서는 기존의 한 일해협권지사회의 등을 활용하여 실천이 용이한 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협력의 실천과제로서는 크게, 제도적/물적 기반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경제와 산업에 직접 관련된 내용적 협력분야로 나눌 수 있고, 이 장에서는 이러한 과제들을 제도적 준비와 자금소요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연구기간: 2004. 1. 1~2005. 2. 28
 서지사항: 439면, 국도연 2005-1

>> 홍수피해특성 분석 및 홍수피해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Analysis of Flood Damage Characteristics and Development of Flood Damage Index

박태선, 김광목, 윤양수, 이승복

■ 배경 및 목적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피해가 빈발하고 있으나 시군구 간의 홍수피해 발생빈도나 피해액을 비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론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 232개 시군구의 홍수피해 특성을 분석하고, 홍수피해지표라는 계량적 지표를 개발하였다. 홍수피해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지난 33년(70~03)간의 전국 및 시군구별 홍수피해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빈도분석 이론을 이용하여 시군구별 홍수피해 발생빈도-피해액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홍수피해지표를 산정하기 위해 관련 문헌들로부터 홍수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들을 선정 후, 인자별 표준화 값과 전문가조사에 의한 인자별 가중치를 곱하여 시군구별 홍수피해지표를 산정하였다.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해 문헌조사와 전문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계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인자 간의 상관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발생빈도-피해액 관계 분석의 방법론, 분석결과의 적정성, 홍수피해지표의 산정방법 및 산정결과 그리고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 내용요약

우선, 선행연구들의 연구방법과 한계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와 관련성이 높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0)'에서는 홍수피해 잠재능이라는 지수를 도입하여 치수

단위구역별로 홍수피해의 위험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치수단위구역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홍수발생빈도에 대한 고려나 관련 계수 산정의 이론적 근거도 미흡하였다. 지역별 홍수피해 정도를 계량적인 지표로 나타내기 위해, 계량화와 관련된 최근의 연구인 '자연형하천정비를 위한 하천환경특성 분석 연구(2004)'도 참고하였다. 관련 이론은 크게 홍수피해특성 분석관련 이론과 홍수피해지표 산정관련 이론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홍수피해특성 분석관련 이론에서는 확률분포관련 이론과 빈도분석관련 이론을, 홍수피해지표 산정관련 이론에서는 계량적 지표화 기법을 중심으로 가치화 기법, 표준화 방법, 가중치 산정방법 등의 방법별 특징과 장 단점을 살펴보았다.

홍수피해는 지역에 따라 발생빈도나 피해규모가 다르다. 따라서 그동안의 전국 및 시군구별 홍수피해 발생추이를 살펴보고, 과거의 홍수피해 자료를 이용하여 홍수피해 발생빈도-피해액 관계를 중심으로 전국 및 지역별 홍수피해 특성을 분석하였다. 전국적으로는 2003년도 불변가격 기준으로 지난 33년간 총 24조 6,385억 원, 연평균으로는 7,466억 원의 홍수피해가 발생하였다. 지역별 홍수피해 현황은 도시규모별, 인구 규모별, 유역별, 당해 연도의 최고치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거의 홍수피해액 자료를 토대로 확률도시법에 의한 점빈도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발생빈도-피해액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K-S검정방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전국적으로 평균 3.7년에 한 번꼴로

7,466억 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지난 2002년에 발생한 6조 2,511억 원의 피해는 약 90년 빈도의 피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특성은 시군구별, 도시규모별, 인구규모별, 유역별 등으로 구분하여 발생빈도-피해액 관계를 분석하였다. 시군구별로는 평균 5.1년마다 38.3억 원의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군구별 발생빈도와 피해액을 Z-Score를 이용하여 무차원화 함으로써 무차원 발생빈도-피해액 관계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피해우심지역이나 특별재해지역의 선정기준을 검토하였고, 국가가 지향해야 할 홍수방어확률년도 제시하였다.

또한, 홍수피해지표를 산정하기 위해 홍수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도출하고, 이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인자들을 선정하여 '홍수피해지표'라는 계량적 지표를 이용하여 시군구 간의 잠재적인 홍수피해의 위험성 정도를 수치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지표를 이용하면 홍수피해에 특히 취약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선정하여 사전에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지표화를 위해 우선 기존의 홍수피해 원인분석과 관련된 문헌들로부터 홍수피해의 주요 요인들을 도출한 후, 이들을 자연적 요인, 사회적 요인, 정책적 요인, 시설적 요인으로 세분하였다. 또한, 제2장에서 검토한 계량적 지표화 기법들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시군구별 홍수피해지표라는 하나의 지표로 나타내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홍수피해지표를 산정하기 위해 각 요인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인자들을 정리한 후, 인자선정원칙과 자료구득의 용이성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11개 인자를 선정하였다. 또한, 인자들의 크기와 단위에 따른 편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Z-Score를 이용하여 인자 값들을 표준화하였으며, 인자별 가중치는 전문가조사를 통해 점수할당법으로 산정하였다. 시군구별 홍수피해지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어진 인자별 표준화 값과 인자별 가중치를 곱한 후 선형합에 의해 모두 합하여 산정하였다. 또한 인자 간의 상관성과 인자로서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11개

인자 간의 상관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홍수피해지표가 전체 232개 시군구 중에서 상위 10%(23개) 이내에 들면 홍수피해의 잠재적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홍수피해지표 산정결과는 시군구별 치수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 주요결과와 평가

본 연구의 의의는 점빈도 분석이라는 이론적 방법을 이용하여 전국 및 시군구별 홍수피해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홍수피해지표'라는 계량적인 단일지표를 이용하여 시군구별로 홍수피해의 잠재적 위험성을 분석하였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홍수피해지표 산정결과를 토대로 홍수피해의 잠재적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된 지역에 대해서는 홍수피해특성 분석에서 제시된 발생빈도-피해액 관계를 토대로 홍수피해특성을 파악하였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조사와 같은 구체적인 원인분석을 통해 홍수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적절한 사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홍수피해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발생되기 때문에 피해원인이나 피해의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홍수피해의 직접적인 원인분석은 실시하지 않았으며, 홍수피해의 정도도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물질적 피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시군구별 홍수피해지표는 전국 232개 시군구 간의 상대적인 홍수피해 위험성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지역에 대한 절대적 의미의 판단은 피해야 할 것이다. 향후에는 최근의 기상변화에 따른 홍수피해 특성분석에 대한 연구나 본 연구의 결과를 도시계획이나 SOC시설의 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환동해경제권 형성을 선도하기 위한 동해안지역의 대외전략

Strategies for Inter-Local Cooperation in the East Sea Region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s East Coast Area

김원배, 박형서, 이상준, 이성수 외

■ 배경 및 목적

환동해권에 면한 각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1990년대 이후 동북아 경제지존의 심화 및 협력증대를 기회요인으로 환동해경제권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도모해 왔으나, 환동해권역의 정치, 경제 체제상의 이질성, 발전 수준의 격차, 산업구조 및 기반시설의 취약성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하여 커다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친선교류에 그치고 있다. 특히 북한의 폐쇄적인 체제로 인하여 환동해권에서의 교류·협력은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의 실천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과도한 의욕과 국제적 협력체계의 미비도 성과부진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동해권 지방 간 협력의 필요성은 상존하고 있다. 대부분 나후지역으로 이루어진 환동해권 내 지역의 지자체들은 동북아 경제협력의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면 나후지역으로 상존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동북아 전체의 발전구도에서 볼 때, 환동해권은 시장의 힘에만 의존할 수 없는 특수한 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 등을 통한 동북아의 경제통합이 진전되면, 동북아 내 하위지역 간의 격차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산업발전이 지체되고 경제력이 약한 환동해권은 불리한 여건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건에 대한 인식은 환동해권의 관련 국가와 지방 모두가 공유하고 있어, 최근에는 다양한 정책이 시도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차원에서 동북아 에너지협력과 수송체계 구축에 대한 관심의 증대,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의 자

국 내 주변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로 인해 환동해권에서 지자체 간 협력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발전시켜 환동해권에서의 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하는 것은 환동해권의 발전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의 경제 협력과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환동해경제권 형성의 가능성과 제약요인을 동북아의 전반적인 정치경제 변화요인을 고려하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하고, 그간 지자체 간의 협력 성과가 미진했던 이유를 부문별 협력가능성과 기업의 협력동기와 같은 미시적인 차원에서 조망하여 환동해권에서의 실천 가능한 협력전략을 도출하고자 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환동해권 관련 국가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동해권을 둘러싼 이해관계와 전략을 검토하였다. 여기에서의 착안점은 환동해권을 구성하는 다양한 국가와 지역이 공유할 수 있는 최대 공약수를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우리 동해안 지역의 역할을 모색함과 동시에 경제권 형성에 촉진제가 될 수 있는 협력가능분야 및 협력사업의 발굴과 실천을 위한 추진체계를 제시하는 것이다.

■ 내용요약

환동해권에 대한 지리적 범위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환동해 연안지역만을 포함하는 협의의 환동해권과 직접적인 배후지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환동해권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두 권역에 대한 분석을 병행하여 시도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주요한 접근방법으로서 현지 워크숍을 통하여 가능한 범위 내

에서 대안(對岸)지역의 시각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는 민간기업의 시각과 견해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협력 가능분야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동원하였다.

지난 10여 년간 추진되어 온 지방차원의 환동해권 교류와 협력 촉진 노력은 비록 뚜렷한 경제적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상징적인 차원에서 협력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월경적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는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환동해권의 지역 경제 및 교류 현황에 대해 상술하면서, 환동해권의 교류활동이 저조한 이유를 권역 내 인구나 경제의 규모와 정치·경제적 제약요인에서 탐색하고 있다. 환동해권 연안지역의 또 다른 특징인 대규모 도시가 거의 전무하다는 점도 교류와 협력의 구조적 부진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편 권역 내 상이한 경제체제 및 수준을 가진 다수의 지역이 혼합되어 있는 것도 환동해권 등 다른 국지경제권에 비해 불리한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환동해권과 유사한 맥락을 가진 유럽의 북해지역과 발틱해 지역의 경험에서 교훈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북해지역이나 발틱해 지역 모두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은 환동해권의 장래 지향점에 대한 시사점이 될 수 있고, 북해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산, 문화·관광, 통신·교통, 비즈니스 개발 및 환경의 5개 분과 협력 사업은 환동해권에서도 참고로 할 수 있는 유익한 내용을 담고 있다.

환동해권의 발전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 시나리오에 의해 설명될 수 있으며, 환동해권에 가장 유리한 시나리오는 정책주도적인 지역공공재의 개발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역공공재 개발시나리오는 국가 간 합의에 기초하여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실현가능하므로, 단기적으로는 환동해권 관련국 중앙정부의 지원 하에 거점지역을 설정하고 이들 간의 연계망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임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협의의 환동해권은 경제기반의 취약성과 자재완결성의 부족으

로 인해 권역 내 추동력이 약한 만큼, 배후지를 포함하는 광의의 환동해권에서의 교류와 협력체계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할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환동해권의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관광, 물류/수송, 환경, 농수산 분야가 협력이 가장 유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을 제외한 분야는 상기한 거시적 관점에서의 협력유망 분야와 일치하고 있다. 본 연구의 기업체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자원개발, 관광, 물류가 유망분야로 주목받고 있으며, 정보통신, 자동차 부품, 철강, 조선 등은 일부 지역기업에서 관심을 가진 분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물류·수송, 관광, 농수산, 에너지 4개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 주요결과와 평가

환동해경제권 형성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경제권 또는 교류권 형성을 선도하기 위한 우리 측 동해안 지역의 역할과 전략을 도출하였다. 동북아의 정치환경과 국가 간 관계의 유동성 등으로 인해 환동해권에서 경제적 통합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전략적 접근을 통한 국지적 교류활동의 확대를 추구해야 한다고 제시하면서, 다중적 접근방식, 소규모 선도사업 추진, 다양한 월경적 협력 기구의 통합, 그리고 전략적 이념과 도구의 개발이라는 네 가지 원칙을 열거하였다. 환동해권에서의 협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협력 기구들을 가칭 ‘환동해권 광역협의회’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기구에서 협력의 의제개발과 전략적 방안을 도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환동해권 자유지역연계망’, ‘환동해권 단체관광 무비자제도’, 그리고 ‘환동해연안 물류수송 복합 축의 조성’이라는 세 가지 전략적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 European Port-City Interface and Its Asian Application

유럽 항만-도시 간 상호관계에 대한 분석과 아시아에의 적용

Cesar Ducruet, 정옥주

■ 배경 및 목적

세계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오늘날 항만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공간적·경제적 문제점들이 유럽과 아시아에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한편, 유럽과 아시아의 서로 다른 공간적 특성들(예를 들면 유럽과 아시아 대륙의 바다-육지의 지리적 배치, 항만도시의 공간적 분포, 지배적인 항만도시 유형, 당면하고 있는 주요 공간문제 등)로 말미암아 서로 다른 항만-도시 공간유형이 형성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에 착안하여 수적으로 많지 않은 기존 항만-도시 간 관계에 대한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유럽과 아시아 항만도시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항만도시들의 유형을 분류하고 대륙 간 항만도시 패턴 차이를 밝혀냄으로써 항만도시정책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내용요약

본 연구는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제1장 서론에서는 유럽과 아시아 항만도시에 대한 비교분석틀을 설명하고, 제2장에서는 기존의 관련 연구내용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인구 20만 이상의 컨테이너 화물처리 시설이 입지하고 바다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69개 유럽 항만도시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도시규모(인구, 면적), 항만 교통 하부구조, 물동량 서비스 등에 대한 총 13개 변수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4개의 주요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

로 유럽항만도시를 일반도시, 해운도시, 통합교통항만도시, 관문도시로 유형분류 하였다. 제4장에서는 이들 도시 중 8개 도시의 특성을 광역과 국지 수준에서 정성적으로 살펴보았다. 제5장은 앞에서 유럽 항만도시 분석에 사용한 정량적·정성적 접근법을 58개 아시아 항만도시에 적용하여 이들 도시의 유형과 성격을 살펴보았다. 특히 이 장에서는 유럽 항만도시와 아시아 항만도시를 하나의 모집단으로 하는 요인분석을 시도하여, 유럽과 아시아 간의 패턴 차이를 밝혀 보고자 하였다. 결론을 대신하는 6장에서는 항만도시 개발을 위한 광역과 국지 단위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2) 수시 및 수탁연구

>> 가야문화권 광역관광개발 계획

Formulation of the GAYA Cultural Area Tourism Development Plan

윤양수, 이용우, 양하백, 손주동, 최자은

경북 고령군 주변지역은 고대 가야문화가 번성하였던 지역으로, 고대가야역사문화유적을 가장 잘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야역사문화를 발굴·보전하고 현대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동시에 지역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 지역의 가야역사문화를 중심으로 한 광역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기간: 2006. 1. 6~2007. 1. 5
발주기관: 고령군(가야문화권지역발전혁신광역협의회)

>> 개성공단 및 남북한 서해안 연안지역 개발전략 연구용역

Strategies for Joint Development between Gaeseong Industrial Zone and the West Sea Region on the Korean Peninsular

이상준, 조진철, 이성수

북한 개성공단의 단계별 발전전략에 대한 연구와 이와 연계된 남북한 서해안 연안지역과의 개발전략을 연구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지역적으로 개성공단의 개발전략을 중점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지역적인 한계를 보인 반면, 본 연구는 개성과 그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고려함으로써 현재 진행중인 개성공단의 개발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개성공단과 남북한 서해안 연안지역의 연계개발청사진에 대한 개발계획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개성과 그 주변지역, 경기 서북부, 인천 등의 지역현황과 개발잠재력, 지역차원에서

수립된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이들 지역에서의 연계개발 가능성이 높은 분야 및 산업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연구기간: 2005. 5. 31~2006. 2. 28
발주기관: 한국토지공사

>> 고속철도 주변지역의 효과적 개발방안 연구

Effective Development Strategies for the Impacted Areas of the High Speed Rail

서태성, 이용우, 정진규, 류승한, 박세훈, 김현중, 윤영모

고속철도 개통(2004. 4)으로 예상되는 국토공간구조의 재편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속철도 개통을 지역발전 및 경쟁력 제고의 새로운 전기로 활용하는 중장기 비전과 이를 구현할 수 있도록 국토 및 지역개발 계획과 연계한 전략적 개발방안 및 효과적 추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과제의 목적은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한 직·간접적 파급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고속철도 개통효과의 극대화 방안과 고속철도 주변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효과적 개발방안을 제시함에 있다. 주

요 연구내용은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중남부지역의 역할 정립 및 지역발전방향 설정, 고속철도 개통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고속철도 정차역 주변지역의 효과적 개발방안 제시,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한 국가균형발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광역적 지역개발모형 정립 등이다.

연구기간: 2005. 9. 30~2006. 12. 29
발주기관: 건설교통부 지역정책발전팀

>>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관리 연구

Valuation and Management on Selecting Models for Enterprise City

진영환, 서태성, 유재윤, 이용우, 문정호, 조진철, 윤영모, 유선철, 권영선, 배인성, 김현중

■ 배경 및 목적

기업도시특별법의 국회통과 이후 기업도시 시범사업에 8개 지역이 신청함에 따라 선도적 모델의 기업도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8개의 신청지역은 산업교역형 1건(무안), 지식기반형 2건(충주, 원주), 관광레저형 5건(해남·영암, 하동·광양, 사천, 무주, 태안)으로,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한 전문기관인 국토연구원 및 관련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전문평가기구를 구성하여 공정·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책과제인 기업도시 시범사업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전문 평가기구를 구성하고, 8개 지자체·기업의 기업도시 신청서의 검토 및 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선정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하여 기업도시위원회의 시범사업 선정 근거

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 내용요약

시범사업 선정업무는 ① 예비심사, ② 본 평가, ③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확정의 순으로 진행되며, 예비심사 및 본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토연구원 등 8개 국책연구기관으로 「시범사업평가지원단」을 구성하고, 참여 연구기관별로 관련 학회 등에서 추천받은 60~70명의 전문가로 「시범사업평가단」을 구성하였다. 여기서 평가지원단은 평가기준·지침 마련, 평가자료 구축 및 평가단 구성·운영 등 시범사업 평가업무를 주관하고, 평가단은 평가자료 검토 및 현지답사 등을 거쳐 격리된 장소에서 세부평가를 수행하였다. 시범사업의 최종 선정은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기업도시위원회에서 기업도시 제도의 취지 및 조기가시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결정한다.

본 평가는 특별법상의 5대 요건(① 국가균형발전기여도, ② 지속발전가능성, ③ 지역특성·여건부합성, ④ 사업실현 가능성, ⑤ 안정적인 지가관리)을 공통기준과 도시유형별 개별기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종합한 결과 산업교역형은 단독 1위 무안; 지식기반형은 1위 충주, 2위 원주; 관광레저형은 1위 태안, 2위 무주, 3위 해남·영암, 4위 사천, 5위 하동·광양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도시위원회는 이러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균형발전효과·계획의 보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를 하였으며, 8개 신청지역 중 4개 지역을 선정하고 2개 지역(해남·영암, 태안)은 1개월 후 재심의, 2개 지역(사천, 하동·광양)은 탈락으로 결정하였다. 선정된 시범사업 지역은 전남 무안(산업교역형), 충북 충주, 강원 원주(지식기반형), 전북 무주(관광레저형)이고, 재심의 지역이었던 해남·영암과 태안은 이후의 추가 보완대책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기업도시는 본 시범사업 선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선

정 및 개발이 이루어질 계획에 있는 바, 평가절차 및 평가운영, 그리고 평가 기준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이 제시되었다.

첫째 평가절차에 관한 개선사항으로는 기업도시 신청지역이 사전 준비기간을 충분히 갖도록 할 것, 전체적인 선정절차를 확실한 계획 하에 진행시킬 것, 공통기준과 개별기준의 단계적 평가 필요, 지자체의 과도한 유치경쟁 규제, 충분한 평가기간의 필요 등이 있었고, 둘째 평가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으로는 신청 서류의 정형화, 상대평가제 및 과락제도의 개선, 관계기관의 검토의견 반영, 평가위원 Pool 제도 도입, 평가단 상시운영 등 평가체계의 시스템화, 기존사업과의 갈등방지대책 마련 등이 있었다. 마지막 평가기준 개선사항으로는 평가항목의 내용 및 목적의 명확화, 유형에 따른 경쟁관계의 명확한 제시와 이에 따른 평가기준의 조정, 평가항목의 가중치 재산정 등이 제시되었다.

>> 기업도시 타당성 검토기준 및 개발이익 산정기준 연구

Study on the Criteria for the Feasibility Investigation and the Development Profit Estimation of Enterprise City

유재운, 김창현, 조진철, 박화권, 김훈상

■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민간의 투자촉진과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제정·공포(법률 제7310호, 2004.12.31)됨에 따라 이에 의거한 기업도시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구역지정의 제안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의 투명하고 공정한 환수를 위한 객관적 기준의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내용요약

본 연구는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과업의 배경과 목적, 범위, 추진체계와 과업수행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제2장에서는 기업도시 타당성 검토기준을 다루었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도시 개발의 필요성과 입지선정의 기본원칙, 외국의 기업도시 개발사례와 시사점을 통해 우리에게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타당성 검토 및 평가항목을 구체화하고 전문가 조사를 통하여 이들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설정하였다. 제3장은 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기준을 다루고 있는데, 개발이익의 개념과 원칙, 개발이익 관련 제도 및 법규를 검토하였으며, 사례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살펴본 후 구체적인 산정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개발이익의 차등적 환수방안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기업도시 사업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타당성 검토의 가이드라인과 개발이익 산정기준을 담았다. 개발구역 지정의 타당성 검토·평가 가이드라인과 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기준이며, 마지막으로 부록에는 연구과정에서 개최된 회의내용을 수록하였다.

드라인과 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기준이며, 마지막으로 부록에는 연구과정에서 개최된 회의내용을 수록하였다.

연구기간: 2005. 3. 19~2005. 12. 31
 서지사항: 262면(최종 보고서)
 발주기관: 건설교통부

>> 대체수자원 확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ttainment of Alternative Water Resource

이승복, 윤승환

본 연구는 그동안 지속적인 수자원시설 공급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물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빗물, 해수담수화, 강변여과수 등의 대체수자원을 개발·이용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연구기간: 2005. 5. 10~2006. 2. 9
 서지사항: 255면
 발주기관: 건설교통부 수자원정책팀

>> 도시홍수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Institutional Reform for Flood Management in Urban Area

김종원, 심우배, 박세훈, 박화권

최근 우리나라의 주요재해를 살펴보면, 1996년, 1999년 경기북부 문산 지역의 집중호우, 1998년 및 2001년 서울의 집중호우, 2002년 8월 말의 태풍 ‘루사’ (강릉, 김천시 등)와 2003년 9월 중순의 태풍 ‘매미’ (마산, 부산, 대구시 등) 등 집중호우 및 홍수 등의 풍수해로 인한 재해가 대부분이다. 특히, 사람이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는 도시지역의 하천 유역에서 침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하고 있으며, 침수피해 위험성 또한 증대되고 있다. 현저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그와 같은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화 진전에 따라 하도 및 제방정비, 저류 및 침투시설의 설치, 홍수조절 댐의 정비 등 적절한 홍수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시홍수관리를 위한 구조물적 및 비구조물적 대책의 수립, 건설, 유지관리의 주체가 다양하며, 이에 관계되는 법규 역시 다양하여, 종합적인 침수피해방지 대책수립이 곤란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도시 내의 침수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관련 법규들을 상호 연계·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홍수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홍수피해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향을 강구하고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기간: 2005. 10. 31~2006. 8. 30
 발주기관: 건설교통부

>> 밀양댐 건설공사 사후평가 연구

Ex-Post Evaluation of Miryang Multipurpose Dam

박태선, 이승복, 김수현

■ 배경 및 목적

공공건설공사를 경제적이고, 능률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 건설공사 시행과정의 내용을 유기적·체계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총 공사비가 5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준공 후 3년 이내에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건교부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사후평가의 내용, 시기, 방법, 활용 등 구체적인 평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내용요약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광역적 용수공급 및 홍수조절 등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다목적댐의 하나인 밀양댐 건설공사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였다. 사후평가를 통해 밀양댐 건설공사가 주변지역에 미친 경제·사회적 변화, 공사 전후의 수요 비교, 건설공사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사업의 효과 분석, 전반적인 평가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현재까지 다목적댐 건설공사에 대한 사후평가방법이 없기 때문에 밀양댐을 사례로 다목적댐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를 위한 분석방법론을 제시하였다.

>> 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 사업시행방안 기본조사

Regional Cooperation for the Building of Busan · Gyeongnam Multi-regional Water Supply System

김종원, 김창현, 이순자, 한정화

■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낙동강 하류지역의 숙원사업인 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사업의 재추진을 위해서, 광역상수도사업의 전반적인 기본구상을 재검토하고 기술적, 사회적 타당성 분석을 통해 광역상수도사업의 원만한 시행방안을 도출하는 연구이다.

연구의 목적은 부산·경남지역에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적·사회적 측면에서의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사업관련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 시행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 내용요약

주요연구내용은, 광역상수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조사로서 대상 지역의 용수수급에 대한 상위계획을 검토하고, 기존 취수원에 대한 수질자료의 검토를 통하여 원수대체 필요성을 검토하며, 지자체 시설과의 상시·비상시 연계 등을 고려한 단계별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댐 용수의 공급에 따른 조정정책, 즉 상류지역 부정적 영향의 해소방안, 상류지역 지원 및 상·하류 지역 간 협력방안 등을 수립하며, 댐 상류지역의 지원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 북한의 국토개발 및 관리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Investigation Report on the Territorial Development and Management in North Korea

이상준, 김원배, 사공호상, 이성수, 황용선

■ 배경 및 목적

북한의 국토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남북협력과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북한의 산림과 하천 그리고 도로와 주택이 어떠한 상태인지, 그리고 우리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상호 이해와 협력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의 국토는 황폐화된 산림과 농촌 그리고 고층건물이 즐비한 평양의 시가지 등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근 남북 간의 인적 교류가 증가하고 북한의 국토관련 문헌과 인공위성 영상정보가 국내에 유통되면서 북한의 국토실태에 대한 정보가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체계화된 실태파악은 아직 미진한 실정이다. 수자원 및 교통 등 부문별로는 인공위성 영상자료 분석을 통해 대략적인 북한의 실태를 가늠할 수 있지만, 이것이 종합적인 측면에서 분석되고 정리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국토관련 연구들이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복적인 자료수집과 분석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물론 이것은 연구 성과물들이 관련 연구자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원활하게 유통되지 못하는 북한관련 연구의 특수성에도 기인하고 있지만, 종합적인 연구의 부재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각론적으로 세밀한 연구도 필요하지만, 북한의 국토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도 병행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확대되고 있는 남북경제협력에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도 북한의 국토관련 실태 파악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

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동북아 경제협력 차원의 에너지 및 수송망 연결사업 역시 북한의 국토 실태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객관적인 정보 없이는 효율적 정책수립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북한의 국토개발·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의 국토개발·관리 실태와 향후 발전 잠재력을 파악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한반도의 장기발전 측면에서 필요한 북한의 국토개발 과제와 남북협력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내용요약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북한 전역이다. 시간적 범위에 있어서 북한의 국토개발·관리 분야의 실태 및 정책 평가는 1945년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국토개발·관리 분야의 향후 과제는 현재를 기준으로 단기, 중·장기 등 두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단기는 남북교류협력의 제도화되고 이를 기반으로 교류협력이 점차 확대되는 시기로서 현재부터 대략 3년 이내의 시기로 가정하였다.

북한 국토의 실태와 향후 북한의 국토개발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의 북한 국토관련 문헌분석, 인공위성 자료를 기반으로 한 지리정보분석, 국내의 북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북한이탈주민 면접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특히 최근의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핵심적인 분야로 부각되고 있는 교통부문과 광물자원 및 에너지부문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실태분석을 하였

다. 그리고 향후 북한의 관광자원으로서 활용잠재력이 높은 문화재부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다. 구 동독 등 체제전환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교통·물류 부문과 광물자원 및 에너지부문 그리고 문화관광부문은 향후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통해 국토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부문들이다.

북한의 국토 및 지역개발과 관련한 국내 전문가들의 협력을 위해 2003년부터 국토연구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연구모임인 '북한포럼'을 적극 활용하였다. 이 포럼을 통해 협동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물들을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하였다. 그리고 평양, 남포, 해주 등 9개 주요 도시에서의 기업입지 실태와 교통인프라 실태 및 주거 실태에 대해서는 문헌분석과 인공위성 영상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자문을 받았다.

>> 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이용계획 수립 연구

Land Use Planning for the Saemangeum Reclaimed Area

양하백, 윤양수, 민범식, 류승한, 이순자, 김진범, 이재원, 최자은, 장은교

■ 배경 및 목적

1991년 11월, 제1호 방조제 공사착공을 시작으로 2006년까지 외곽시설 완료와 2011년까지 내부개발 완료를 목표로 시행중인 새만금 간척사업은 그동안의 막대한 재원투입에도 불구하고 1997년 시화호사고를 계기로 수질오염 및 갯벌보전 등 환경문제가 제기되면서 사업진척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정부는 1999년 5월부터 2000년 6월까지 민관공동조사단 활동을 통해 전문적인 문제점 도출과 구체적인 보완대책 등을 제시한 바 있고, 2001년 5월에는 순차적·환경친화적 개발원칙을 담은 정부조치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경문제와 함께 새롭게 조성될 새만금 내부 토지자원 이용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토지수요에 대비하여 정책적 차원에서 미래지향적인 새만금 토지이용방안 마련이 절실해졌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우선 새만금 미래 발전비전을 구상하고, 급변하는 여건에 대응하여 장래의 국가경영전략상 새만금 간척지의 타용도 활용가능성과 더불어 국가와 지역발전에 동시에 도움이 되는 효율적 토지이용 구상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내용요약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 범위로 새만금 방조제 내측(필요할 경우, 고군산군도 포함)을, 그리고 시간적 범위

로는 1단계 목표연도(2011~2020)와 2단계 목표연도(2030년 이후)로 구분하여 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이용대안을 구상하고 있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우선, 새만금 관련 연구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계획들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찬반으로 나뉘어 제기 및 대립되어 온 주요 이슈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둘째, 새만금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사회·경제적, 물리적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한계를 도출한다. 셋째, 장래 새만금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외적 여건변화를 전망하고, 새만금 지역의 잠재력과 계획과제를 도출한다. 넷째, 이상의 분석결과들을 기초로 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이용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부문별(농업, 도시, 산업, 관광, 항만 등) 토지이용 구상대안을 작성한다. 다섯째, 이렇게 도출된 부문별 토지이용 구상대안들을 환경성, 경제성, 기반시설공급가능성, 지역발전효과 등의 주요 평가기준을 통해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토지이용 대안구상들 가운데 최적안을 도출하고, 여기에 포함된 부문별 사업들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연구기간: 2003. 11. 27~2006. 6. 30

발주기관: 국무조정실, 농림부, 해양수산부

>> 서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

West Coast Tourism Belt Development Plan

윤양수, 이용우, 양하백, 권재원, 김진성, 이수옥, 성은영, 최자은

■ 배경 및 목적

주 40시간 근무에 따른 여가시간 증대와 중국, 일본 등 동북아 관광시장의 급성장 등 국내외 관광환경 변화에 따른 국민관광 수요증가와 관광행태 변화에 부응한 새로운 관광기반 육성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서해안지역은 서해안고속도로 건설과 새로운 관광행태 변화로 새로운 관광목적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기업도시 조성, 국제공항 건설, 새만금 방조제 건설 등 관광기반이 확충되고 있다. 따라서 서해안의 다양하고 풍부한 자연·생태자원 및 역사문화자원 등 관광잠재력을 최대한 발현시킬 수 있는 서해안지역 전체의 체계적인 관광육성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서해안이 지니고 있는 관광잠재력을 극대화하여 관광환경변화에 따른 국민관광수요와 국민관광 향유기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관광개발체계의 구상, 둘째, 지역의 경쟁력 있는 잠재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통하여 지역 및 국가균형 발전 도모, 셋째, 현황해권시대에 대비한 국제적 해양관광지역으로서 관광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대비한 서해안 관광발전 비전의 정립에 있다. 본 계획의 대상지역은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지역 중 서해안과 접해 있는 20개 시군이며, 총면적인 전 국토의 9.3%인 9,269km²에 달한다.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관광개발 여건분석, 유사사례분석, 관광수급분석, 개발타당성 평가 등 관광개발 여건 및 환경분석, 계획의 기본구상(비전, 목표), 개발전략, 공간체계, 권역별 개발방향 등 관광개발구상, 중심거점 개발기본계획, 연계관

광지 개발기본계획, 전략별 개발기본계획, 기반시설계획, 환경보전계획, 지역사회 발전계획 등 관광개발기본구상,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 집행추진계획, 재무타당성분석, 파급효과 분석 등 계획집행의 4개 부분이다.

■ 내용요약

서해안지역은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정주기반과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나, 향후 새만금간척, 기업도시 건설, 신공항 건설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시설과 정주기반 확충으로 지역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서해안지역은 남북 340km의 광역 선형 해안지역으로 수도권 등 남북간 연결이 용이하고 남북중국과 인접하고 있다. 서해안지역은 3개 국립공원, 3개 철새도래지, 14,110km의 해안선과 350여 개의 섬, 전국의 50%를 차지하는 광활한 갯벌, 해안절경 등 다양하고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특성이 다양하고, 해양, 해안, 섬 등 공통 자연환경에 대한 차별화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

서해안관광벨트의 비전은 21세기 웰빙시대를 대비한 한반도 해양관광 중심축 형성에 있으며, 구체적인 목표로 웰빙시대와 부합하는 국민관광휴양지역, 해양, 생태,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한 통합관광지역,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발전 선도지역, 국제적 수준의 동북아관광 거점지역으로 설정하였다. 목표 달성을 위한 개발전략으로 서해안관광벨트의 인문·자연특성을 감안한 권역별 관광개발 구상, 집객력 있는 해양

관광거점 조성과 연계관광지 개발, 해양, 섬, 음식 등 지역성이 부각되는 관광상품 개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친환경적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추진, 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와 관광기반 조성, 실천성 확보를 위한 단계적 개발추진과 체계적 집체적 구축을 제시하였다.

서해안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핵심적인 전략은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거점의 조성 and 연계관광지 개발전략이다. 서해안지역의 경쟁력 있는 자원 및 시설을 선택적으로 집중 개발하여 관광 흡인력을 극대화시키고, 지역 부존 자원 및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개발을 파급효과 확산을 위하여 주요관광지를 선정하여, 조성하도록 한다. 주요 관광지는 안면도, 원산도, 대천, 새만금, 변산, 고군산도, 무안 창포레저 및 건강보양단지 등을 선정하였다.

둘째, 바다, 도서, 갯벌 등 지역특성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전략이다. 서해안지역의 다양하고 풍부한 해양 자원을 적극적으로 관광자원화하기 위하여 도서의 테마화, 일출 및 낙조의 명소화, 등대 자원화 등 다양한 해양 및 해안자원을 발굴하고, 다기능어항과 마리나시설을 확충하여 광역유람선을 운항하는 등 경쟁력 있는 연안 친수공간을 조성하며, 서해안 드라이브 1,400리, 해안 및 해수욕장 정비 등 친환경적 해안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생태체험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수 갯벌지역을 중심으로 생태체험 시범지역을 조성하고, 교육 및 생태체험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파트너십에 의한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한다. 문화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역사문화 자원의 체험적 가치부각을 통한 관광상품화, 지역별 역사인물 발굴과 유적지 정비 및 프로그램 개발, 종교역사 자원의 발굴 및 연계 관광상품화, 서해안 먹거리의 연계를 위한 음식지도 개발 및 활용 등을 추진한다. 서해안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연계 개발하기 위하여 조류탐사, 맛기행, 영산강역사 등 숙박형 광역루트와 고군산군도 웰빙 자전거 루트, 경관 드라이브 루트, 가족 역사문화 체험, 재미있는 종교문화

여행 등 당일형 테마루트를 개발한다.

셋째, 주민 주도에 의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전략이다. 서해안 농어촌체험마을을 선정하여 유형별 체험마을을 조성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집중적인 홍보 및 상품화하며, 마을 및 주민에 대한 교육, 주민에 의한 지속적인 관광아이템을 개발한다. 중저가 관광호텔과 관광펜션 빌리지, 오토캠핑장, 유스호스텔 등 중저가숙박시설을 확충하는 등 서해안지역 숙박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관광과 지역산업을 연계시키기 위하여 아산 디스플레이 단지, 시흥 게임시티 등 지역 전략산업이나 신규 테마산업을 관광산업화하며, 지역 이미지의 브랜드화를 통한 지역특산물 마케팅을 추진한다. 환경친화적인 관광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보호지역이나 개발제한지역은 개발대상지에서 제외하고, 개발대상지 내에서는 환경친화적 개발 유도하며, 해안경관관리지침을 작성, 실천하도록 한다.

넷째, 지원체계 강화전략이다. 서해안관광벨트 구축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속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기간교통망이 확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서해안 18개 시군의 주요 도시와 관광지를 연계하는 국도 77호선의 정비가 시급하다. 또한 관광객 유치에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적이고 대표적인 서해안 관광이미지 정립, 공동 홍보마케팅 강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표적시장별 다양한 전략 수립 등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국제적인 기능의 연구소 또는 전시시설을 설치하고, 국제회의 및 전시회를 개최하여 국제관광수요를 창출하며, 서해안 도시와 지역전략산업의 국제화로 서해안을 국제명소화 하는 등 서해안의 국제적 명소화를 위한 연계시설 및 사업이 발굴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광역권 관광계획의 제도적 기반 마련, 국가에 의한 관광개발사업 지원 강화, 계획추진실적 평가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 용수 재배분을 통한 가용수량 평가 및 확보방안(I)

Evaluation and Securing of Available Water through Water Reallocation(I)

김종원, 김창현, 윤태연

■ 배경 및 목적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와 환경단체의 반대 등으로 인해 신규 댐건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현 우리의 수자원 분야에서 기존 용수사용에 대한 합리적 평가를 통해 기존의 수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수리권이나 용수 재배분, 그리고 환경용수의 보장 등을 평가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 용수 사용자가 더욱 효율적으로 용수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 내용요약

신규 및 기존 용수사용에 대한 평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기존 용수사용 계획량과 실제 사용량을 비교 및 검토하고 우리나라 용수사용 평가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를 검토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하천유지용수 산정 및 확보 방안과 용수사용 평가 및 하천유지용수 확보에 관한 외국 사례를 연구하여 신규 및 기존 용수사용 평가개선 방안과 적용 가능한 용수사용 평가체계를 구축하였다.

>> 용수 재배분을 통한 가용수량 평가 및 확보방안(II)

Evaluation and Securing of Available Water through Water Reallocation(II)

김종원, 김창현, 윤태연

■ 배경 및 목적

1차 연도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구체화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현행 국내에서는 기존에 배분되어 있는 댐 용수를 재평가 할 수 있는 기초연구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실제 홍수통제소 담당자가 수리권을 허가 및 재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로 구체화된 용수사용 평가절차를 제시하고, 특정 댐을 선정하여 해당 댐의 실제 수급량을 비교분석하여 생·공용수,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등 각 사용용도별 재배분 가능량을 추정하는 것이다.

■ 내용요약

용수사용 평가를 신규 수리권 허가시와 기존 수리권 재평가시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평가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또한, 대청댐을 대상으로 연간, 월별, 사용용도별 구체적인 재배분 가능량을 추정하였으며, 생·공용 댐용수를 하천유지용수로 전환하기 위한 수자원공사와 정부 간의 비용처리 방안을 검토하였다.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경관기본계획

The Landscape Comprehensive Plan for Songdo District in Incheon Free Economic Zone

양하백, 최영국, 민범식, 김원주, 정옥주, 김경모, 오선영

■ 배경 및 목적

본 계획은 인천경제자유구역(209.5km²)의 세 지구(송도, 영종, 청라) 전역에 대한 경관기본구상과 송도지구(53.3km²)에 대한 경관기본계획으로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살기에 쾌적하고 개성 있는 도시로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외국인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생활 및 투자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수립된 비법정계획이다.

■ 내용요약

제1장은 과업의 배경과 목적, 범위, 주요내용, 기대효과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제2장은 관련 계획 및 제도에 대한 부분으로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 계획, 도시계획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계획·법률·조례 등의 관련 내용과 이것이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송도지구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 있다. 제3장은 경관기본구상 부분으로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전역을 다루고 있다. 먼저 인천경제자유구역 지구별 이미지를 설정하며, 그 다음으로는 송도, 영종, 청라 지구별로 경관상의 문제점과 잠재력을 분석하고, 조망경관, 축상경관, 거점경관, 경관중점관리 지역에 대한 경관기본구상을 한다.

제4장은 본 계획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송도 지구에 대한 유형별·권역별·공구별 연출방안, 경관시범지구 조성 예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형별 경관계획에서는 스카이라인, 조망점 등 조망경관을 다룬 후에, 4개의 일반가로와 8개의 특화가로에 대한 축상경관형성방안, 가로시설물과 옥외광고물 디자인에 대해 다

루고 있다. 이 중 스카이라인 계획과 가로 경관에 가장 초점을 두어 경관계획을 수립하였다. 권역별 경관계획에서는 먼저, 송도지구를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공간 구조를 고려하여 10개의 중권역과 23개의 소권역으로 구획하고, 녹지·생태·문화·색채·야간경관과 건축물에 대해 계획하였으며, 이 내용을 10개의 중권역별로 최종적으로 종합하였다. 다음으로 공구별 연출방안에서는, 장차 개발될 공구들에 대한 시사점 도출에 중점을 두어 기 개발 공구인 2·4공구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경관 상으로 송도에서 가장 상징성이 큰 곳이라 할 수 있는 해양공원 변산책로 주변지역에 경관시범지구를 설정하고, 최종적으로 3개의 경관 대안을 도출하였다. 이 대안들에 대해 직접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물어 그 결과를 경관계획 내용에 반영하였다.

제5장은 경관계획 내용들을 적용하기 위한 실천방안에 관한 내용이다. 실천방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에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과 체크리스트 제시, 새로 제정될 경관기본법(안)의 내용을 고려한, 인천시 경관조례와는 구분되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조례(안) 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경관전담조직 구성 등이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록에는 각 지구별 관련 도면이 포함되어 있다.

연구기간: 2004. 8. 24~2005. 12. 23

서지사항: 최종 보고서 216면, 국내외사례집 95면, 자료집I 430면, 자료집II 206면, 요약본 49면

발주기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연구

A Study on the Revised Plan of the 4th Comprehensive National Territorial Plan

이규방, 최병선, 유덕상, 이재영, 진영환, 박양호, 서태성, 이원섭 외 247명

■ 배경 및 목적

국토종합계획은 국토를 이용·개발·보존함에 있어서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으로서, 본 연구는 2000년 공포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이후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국내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수립을 그 내용으로 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국토연구원에서는 총괄분과, 지역혁신분과, 도시관리 및 토지이용분과, SOC 물류분과, 주거복지분과,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분과, 수자원 및 방재분과, 국토정보화 분과, 남북교류 및 동북아 분과, 분권 및 지역참여 분과 등이 분과별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들과 지방자치단체, 정부부처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였다.

■ 내용요약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은 총 다섯 편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 수정계획의 배경과 성격에서는 참여정부의 새로운 국토정책 패러다임과 기타 대내외적 여건변화를 국토계획에 반영할 필요성과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법적 위상에 대해 설명한다. 제2편 국토계획의 여건과 전망에서는 우리나라 국토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의 국토여건 변화를 전망하고 국토계획 측면에서의 과제를 도출하며, 제3편 계획의 기본방향에서는

계획의 기초와 목표, 약동하는 통합국토구조의 구축, 그리고 6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제4편 전략별 추진계획에서는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의 구축, 동북아 시대의 국토경영과 통일기반 조성,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아름답고 인간적인 정주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 관리, 분권형 국토계획 및 집행체계 구축 등을 위한 추진과제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5편은 권역별, 시도별 발전방향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연구기간: 2004. 4. 12~2005. 12. 31

서지사항: 본 보고서 231면, 부문별 보고서 총 1,434면(제1권 365면, 제2권 343면, 제3권 336면, 제4권 390면)

발주기관: 건설교통부

>> 제주광역도시계획 수립연구

Jeju Regional Comprehensive Planning

양하백, 문정호, 이춘용, 류승한, 이순자, 김진범, 이재원 외

■ 배경 및 목적

제주도의 4개 시·군은 단일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규모와 기능이 상호 불균형적으로 성장·배분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인구와 산업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본 과업에서는 이들 도시를 하나의 도시권으로 묶어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도시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도시기능의 조정 및 도로·상하수도 등 광역시설의 합리적 배치방안을 제시함과 아울러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지침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내용요약

본 과업은 크게 6개의 부문으로 나누어 추진할 예정이다. 첫 번째는 도시현황 분석 부문이다. 국토 및 동북아시아에서의 제주광역권의 위상을 검토하고, 대내·외 여건의 변화를 분석하여 향후 제주광역도시권의 인구, 사회경제 및 문화적 여건변화를 전망한다. 두 번째는 계획의 목표와 지표설정 부문이다.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의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미래상을 제시하며, 인구·경제·생활·환경 등과 관련된 주요 지표를 설정한다. 세 번째는 도시공간구조 구상 부문이다. 지금까지의 도시성장형태와 목표연도의 계획지표를 감안하여 미래지향적인 공간구조의 대안을 제시한다. 네 번째는 부문별 계획수립 부문이다. 생활권계획 등을 비롯한 약 10개의 부문별 계획을 수립한다. 다섯 번째는 집행 및 관리계획 부문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

치단체의 역할 분담 및 방향을 제시하고, 주제별·단계별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한다. 끝으로 제주형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부문이다. 광역도시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을 검토한다.

>> 지역특성화연구개발사업 과제발굴 및 권역별 연구단 사업추진방안 연구(총괄연구단)

The Projects Selection and Operation System for Regionally Characterized Construction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 in Research Management Group

최영국, 이종열, 천현숙, 장철순, 최일기, 이성수, 이강식, 김태영, 오선영

■ 배경 및 목적

건설 분야에 있어서 지역마다 특수하게 요구되는 건설기술 수요와 애로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역별 또는 관련 연구기관별 다양한 과제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유사한 과제 또는 중복적인 과제들이 많아 과제추진의 비효율성을 나타내고 있다.

본 과제는 2008년부터 시작되는 건설기술혁신5개년계획(CTRM)의 일환으로 추진될 지역특성화연구개발사업의 지역기반형 건설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과제를 선정하고 권역별 연구단의 개략적인 사업추진전략 및 운영관리방안 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내용요약

본 과제는 지역특성화연구개발사업에서 추진할 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분야로 나누어 지역특화를 고려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지역특성화연구개발사업의 성격 및 추진방향을 정립하고 권역별 연구단 구성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진단 및 대안을 제시하고, 실용화 및 사업화를 통한 연구성과 극대화를 위한 개략적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 춘천미군기지 이전부지 및 그 주변지역의 활용방안 조사 연구용역

The Comprehensive Plans for the Relocated Military Base Site at Chuncheon City

김영봉, 이문원, 박세훈, 최정환, 박채운, 이지나

■ 배경 및 목적

미국은 냉전 이후 새로운 군사력 재편 필요성과 걸프 전 이후 군사과학기술의 진보적 진화를 반영한 군 개혁의 일환으로 해외주둔미군재배치전략사업의 추진에 의한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춘천캠프페이지를 2005년까지 조기반환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이전 부지를 활용한 도시공간구조의 재편이 필요하게 되었다. 춘천미군기지는 국방과 한·미 간의 안보 역할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지역사회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측면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춘천시는 미군기지의 이전적지의 활용을 통해서 낙후된 지역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군기지를 포함한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적정 활용대안의 제시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한 개발방안을 구상하며 춘천미군기지 부지에 대한 적정 용도의 부여, 사업성 분석, 그리고 기존의 각종 개발계획(구상) 및 기개발지와의 연계방안을 검토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춘천시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보다 미래지향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내용요약

대상지역 설정은 첫째, 미군기지의 설치로 인해 직접 법률상 피해를 받는 지역을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규제범위 파악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둘째, 주변지역의 낙

후도를 고려하고, 물리적으로 매우 낙후된 지역은 이전 부지의 개발을 통하여 재개발되어야 할 지역으로 설정하여 이전부지와 연계하여 검토한다. 셋째, 도로에 의한 공간분리 정도를 고려하고, 주요 간선도로에 의해 분리되는 지역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상지역을 설정한다.

대상지역은 군용항공기지법상 비행안전구역으로 그 중 제3구역이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미군기지 인근 지역의 건축물의 노후 정도를 분석하여 이전부지와 함께 재개발하도록 설정하였다. 대상지역의 총면적은 약 38.4만 평으로 이 중 미군기지부지가 21.3만 평이고 그 주변지역이 약 17.1만 평이다.

미군기지는 도심과 인접해 있으며, 주요 간선도로가 캠프페이지를 통과할 수 없어 주변으로 우회하여 도로망이 형성되어 있고, 부대주변의 교통현황은 남북축은 주간선 도로가 있고, 동서축은 일반상업지역에 따른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화물차의 주정차로 인하여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다. 용도지역은 금강로, 중앙로, 남부로를 중심으로 일반상업지역이 분포하며, 미군기지의 주변에는 고도제한에 따른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분포하고 있다. 미군기지는 대부분 잡종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양동 주변은 대부분 대지로, 근화동 주변은 대지와 전, 철도용지로 이용되고 있다. 미군기지의 소유현황은 국방부 소유 89.7%, 기타 10.3%(철도청, 강원도, 춘천시, 국세청, 개인 등)이다.

대상지역은 미군기지 초기 이전, 서울-춘천 간 동서고속도로 및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 춘천시의 특성을 고

려한 신산업육성정책 추진 등 발전여건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미군기지 주변지역의 강점은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높고, 청정 환경 및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질의 수변 공간 활용이 가능하고, 풍부한 개발 유보지를 보유하고 있다. 약점으로는 제조업기반의 취약, 관광자원의 개발이 미약하고 토지이용상 각종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을 들 수 있다. 기회요인은 고속도로 및 복선전철 개통으로 교통여건이 개선되고, 주5일근무제로 인한 여가생활의 확대,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의 추진 등이다. 위협요인은 교통망 확충에 따른 여건변화와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활성화, 경기북부·강원남부의 성장수요 증대 등이 위협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지역에 대한 활용을 위해 도입기능을 도출하기 위해서 춘천시관련 상위계획과 관련 계획을 검토하고, 춘천시의 개발수요를 분석, 춘천시민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분석과정을 수행하였다. 도입가능 기능은 크게 주거, 산업, 공원, 관광레저, 행정기능 등으로 도출되었으며,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에서는 산업, 공원, 관광레저, 행정기능 등 전문가 그룹에서는 관광레저 및 산업기능이 중요시되었고, 수요분석에서는 공원, 관광레저, 행정기능의 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주민설문조사에서는 공원기능이 우선시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미래산업중심 안, 공원녹지중심 안, 행정기능중심 안 등 3개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전부지 활용의 기본원칙은 춘천시의 미래상에 부합하는 도시기능 유치 및 공공성의 확보를 우선으로 하며, 도심의 재생과 친수 공간 등의 친환경적 공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계획을 구상하였다. 최종적으로 주변 개발계획 등의 검토 및 수요 분석을 통한 적정 기능 배분과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미래수요의 수용을 위해 단계별 개발을 고려하여 춘천시민의 의견 수렴 및 반영이 가능한 공간구상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춘천시 미군기지 이전을 위해서는 이전부지의 활용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조달 방안이 검토

되어야 하는데 춘천시의 재정현황을 보면 재무상태가 비교적 취약하며, 2~3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을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사업비는 미군기지 이전부지 21.3만 평을 대상으로 추정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용지매입비, 부지조성비, 건축비, 기타 비용으로 구분하여 산정하였다.

활용대안별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미래산업중심 안은 총 사업비가 2,219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용지매입비 1,308억 원, 부지조성비 259억 원, 공원건설비 423억 원, 기타비용 22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공원녹지중심 안은 총 사업비 2,706억 원이 소요되며, 용지매입비 1,308억 원, 부지조성비 259억 원, 공원건설비 909억 원, 기타비용 228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행정기능중심 안의 총 사업비는 3,196억 원으로 추정되며, 용지매입비 1,308억 원, 부지조성비 259억 원, 행정시설 건축비 909억 원, 공원건설비 490억 원, 기타비용 228억 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 평택시 장기종합발전계획

Pyeongtaek Comprehensive Planning

양하백, 류승한, 이순자, 김진범, 최자은, 이재원, 장은교, 이명재, 한정화 외

■ 배경 및 목적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시 이전과 관련하여 미군기지가 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지역주민의 소득, 복지 및 경제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특별지원사업을 발굴하고 그 추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장기적인 성장과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내용요약

본 연구에서는 먼저 계획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현황 조사와 기존 관련 계획의 검토, 미군기지 입지에 따른 여건변화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현황 조사에서는 지역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지역의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중시하였다. 현황분석 등을 토대로 지역발전의 목표와 미래상, 계획지표 등을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과 공간개발 구상을 제시하였다. 또한 계획의 목표 등을 실현하기 위해 10개의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였다. 개별 부문별계획에서는 계획과제와 목표 및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약 100여 개의 부문별 사업을 발굴하였다. 이들 부문별 사업 중 정부가 우선적으로 시행해야할 특별지원 사업 4개 군 20여 개의 세부사업을 제안하였다. 이들 지역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교육·연구단지 조성사업,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의 다양한 여가기회의 제공을 위한 평택호관광지

개발사업, 공여지 주민들의 생업기반 조성과 농업의 고부가 가치화를 위한 첨단농업시범단지 조성사업 그리고 기지주변지역의 계획적 도시개발 및 재정비를 위한 기지 주변지역 정비사업 등이다. 마지막으로 본 과제에서 발굴한 사업들의 사업비와 파급효과 등을 추정하여 제시하였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수립 연구

Megalopolis Plan for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서태성, 문정호, 이춘용, 심우배, 왕광익, 조판기, 유선철, 권영선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근지역 간의 기능적 연계·분담과 계획적 관리를 통해 행정도시의 국토균형발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거점도시권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행정도시 거점도시권의 지속가능한 성장관리를 위한 환경보전, 광역시설의 체계적·효율적 정비와 배치, 수도

권과의 연담화 지양 등 장기발전 전략 및 정책을 제시한다.

연구기간: 2005. 7. 8~2006. 5. 7
발주기관: 건설교통부

>> 효율적인 빗물관리방안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 Management of Rainwater

이승복, 김광목, 박태선, 심우배

■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상수원 사용량의 90% 이상을 수도관 중심의 선적공급에 의존하고 있으나, 향후 대규모 시설 설치를 위한 적지 감소 및 지역주민의 납비현상 등으로 안정적인 물공급을 보장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근래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집중호우의 빈발,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지표면의 불투수층 확대 등으로 도시 내 홍수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근원인 빗물을 적절히 이용·관리함으로써 홍수피해의 최소화, 대체수자원 확보 및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빗물을 저류시켜

가뭄에 대처하고 도시의 수해방지 목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빗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빗물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내용요약

본 연구는 수자원 전반에 있어 단지 빗물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부문으로 공간적 범위를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내용적 범위는 빗물관련 국내·외 현황 및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빗물관리의 개념을 정립하고 효율적인 빗물관리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연구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제2장 빗물관리의 현황 및 문제점에서는 우리나라의 빗물 특성, 이용실태, 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빗물관련 조항은 수도법 제11조의3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 동법 시행령 제15조3항 '빗물이용 시설의 설치대상', 동법 시행규칙 제4조3항 '빗물이용 시설기준 등'에 상당히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설치대상을 지면면적이 2,400㎡ 이상이고 관람석수가 1,400석 이상인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등 지면면적이 넓은 시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제3장 외국의 빗물관리 사례에서는 일본, 독일, 미국의 사례를 정리·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일본의 경우는 빗물이용에 대한 규정만을 담고 있는 법률은 아직까지 없고, 1963년 제정된 생활환경시설정비 긴급 조치법에 근거하여 시정촌의 하수도 정비 및 이용, 빗물대책, 수질 처리 등에 대한 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반면, 독일은 빗물관련 법령은 빗물을 저장·이용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빗물을 지하로 침투시켜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해 건설기초법, 물관리법, 음용수관리법 등 다양한 법률에 빗물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4장 효율적인 빗물관리방안에서는 우리나라의 빗물이용 실태와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빗물관리의 개념 및 기본방향을 설정한 후, 향후 빗물저장을 통한 용수이용, 저류를 통한 홍수예방 및 지하침투에 의한 토양수분 함양의 환경보전 등의 개념을 통합하는 빗물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및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효율적인 빗물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령 개선방안은 빗물이용시설, 우수·저류시설, 침투시설을 포함하는 빗물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도법을 개정하는 방안, 개발관련 개별법에 반영하는 방안, 빗물만을 위한 독립법을 제정하는 방안들을 검토하였다.

빗물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으로는 인센티브 부여방안, 용자제도 활용방안, 부담금부과방안 등

을 고려하였고, 기타 제도 개선방안으로 빗물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부서를 법적 근거에 의해 신설하여 부처 대내외의 업무 조정이나 빗물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홍보 및 빗물관련 업무를 담당할 조직체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중수도와의 연계체계 모색, 빗물을 이용한 연못 등의 친수공간 조성 및 자연녹화 등 빗물의 다양한 활용방안 등도 함께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용·관리되고 빗물을 이수·치수 환경측면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법령체계는 크게 빗물시설을 개발관련 개별법에 반영하는 방안과 빗물만을 위한 독립법을 제정하는 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지원방안의 경우는 크게 인센티브 부여, 용자제도 활용, 부담금 부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기타 제도 개선방안으로는 빗물관련 조직체계 정비, 중수도와의 연계방안 및 빗물활용 방안 등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 후 기대되는 효과는 첫째, 도시 내 지표면의 불투수층에 흡수되지 않는 빗물을 저장 활용함으로써 홍수기 하천의 침투 유량을 감소시킴으로써 도시 내의 홍수예방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여름철 빗물을 잡용수로 활용함으로써 침투 우수수요 절감 및 물 부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셋째, 용수 공급을 위해 건설하는 댐이나 상수도관 매설을 통한 환경훼손을 억제하여 생태 공간 확보를 통한 친수공간 조성이 가능하다.

3) 기타활동

국책사업의 갈등관리와 합의형성 세미나

■ **과제명** : 국책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사회합의형성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 **일 시** : 2005. 10. 10, 14:00~17:30

■ **장 소** : 국토연구원 강당

■ **참석자**

조상행(평화교육훈련센터 소장), 김형렬(건교부 국민참여팀), 박태순(PCSD 갈등관리정책팀), 이련주(국무조정실 정책공보과), 오성규(환경정의 사무처장), 강상규(미국 콜로라도 대학교 정책학 연구원), 홍성만(고려대학교 공공행정학부 교수), 강찬수(중앙일보 전문기자) 및 연구진(김선희 연구책임자), 박형서(연구위원), 조진철(책임연구원), 기타 일반인

■ **주요내용**

국책사업의 갈등특성과 합의형성시스템 구축방안 발표 및 토론

분산·분권 정책포럼(전문가 공론조사) 1~3차

■ **과제명** :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I)

■ **일 시** : 1차(2005. 8. 12), 2차(2005. 8. 19), 3차(2005. 8. 26)

■ **장 소** : 국토연구원 2층, 3층 회의실 및 강당 / 산업연구원, 지방행정연구원

■ **참석자**

- 김지현(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 윤인숙(한국토지공사 토지연구원 수석연구원), 이상호(한밭대학교 교수), 이재선(연세대학교 교수), 임경수(성결대학교 교수), 지우석(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최정석(중부대학교 교수), 김정연(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김현아(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현호(경원대학교 교수), 송미령(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양재(원광대학교 교수), 임연기(공주대학교 교수), 임천순(세종대학교 교수), 조진행(한라대학교 교수), 김순은(동의대학교 교수), 소진광(경원대학교 교수), 손희준(청주대학교 교수), 유재원(한양대학교 교수), 이상운(자치평가원 박사), 이재성(지방자치인력개발원 박사), 최남희(청주과학대학교 교수), 최진혁(충남대학교 교수)(이상 국토연구원 주관)

- 박영철(성결대학교 교수), 박용규(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윤윤규(한국개발연구원 전문연구원), 윤철석(경북전략산업기획단 정책기획실장), 이재호(한국개발연구원 전문연구원), 이상운(한국산업기술평가원 선임연구원), 주성재(경희대학교 교수), 최지선(과학기술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이상 산업연구원 주관)

■ **주요내용**

분산·분권정책 관련 분야 전문가의 정책 전반에 걸친 평가의견 및 개별정책의 목표 및 수단, 집행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의견, 정책 개선방안, 정책효과 제고방안 등에 관한 심층적인 의견을 도출

참여정부의 분산정책 평가 심포지엄

- **과제명** :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I)
- **일 시** : 2005. 12. 13, 14:00
- **장 소** : 국토연구원 강당
- **참석자**
김순은(동의대학교 교수), 강현수(중부대학교 교수), 변창흠(세종대학교 교수), 윤윤규(한국개발연구원 전문연구원), 박용규(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최진혁(충남대학교 교수), 손희준(청주대학교 교수), 조규영(안양대학교 교수)
- **주요내용**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의 최종결과물에 대한 정리 및 기관 간 연구성과 공유

분산·분권 워크숍(1-4차)

- **과제명** :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I)
- **일 시** : 1차(2005. 6. 10), 2차(2005. 7. 21), 3차(2005. 8. 29), 4차(2005. 10. 3)
- **장 소** : 국토연구원 강당
- **참석자**
원내 연구진, 산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 **주요내용**
공동연구진 간 연구진행 상황 조정 및 협의

대규모 간척용지의 장기활용 방안모색을 위한 국제세미나

■ **과제명** : 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연구

■ **일 시** : 2005. 4. 1, 13:00~18:00

■ **장 소** : 국토연구원 강당

■ **참석자**

진평전(중국과학원 교수), 오니시 다카시(동경대학교 교수), 세거렌 월(BU상하수처리기술위원회 위원장), 안동만(서울대학교 교수), 김성귀(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박형창(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온영태(경희대학교 교수), 이정재(서울대학교 교수), 임종완(농어촌연구원 연구실장), 최영진(중앙일보 전문위원), 최지용(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구진(양하백 연구책임자 외 5개 기관 내부연구진), 기타 일반인

■ **주요내용**

대규모 간척용지의 토지이용 해외사례 및 간척용지 개발방식에 대한 발표 및 토론

서해안관광벨트 개발전략에 관한 세미나

■ **과제명** : 서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

■ **일 시** : 2005. 5. 26, 13:00~18:30

■ **장 소** : 국토연구원 강당

■ **참석자**

국내발표자 : 윤양수(선임연구위원) · 이용우(연구위원), 김향자(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남조(한양대 교수), 임경수((주)이장 대표이사)

국외발표자 : 첸슈(부경신주그룹 한국부 부장), 쿠사노 기이치 · 최자령((주)노무라종합연구소 아시아 · 중국건설팀 수석연구원, 연구원)

토론자 : 이경진(공주대학교 교수), 김진강(호남대학교 교수), 김영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철모(전주대학교 교수), 오성규((사)환경정의 사무처장), 오순환(한국문화관광연구소 소장), 김대관(경희대학교 교수), 오미숙(순천향대학교 교수), 이의영(일양여행사 대표)

■ **주요내용**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및 일본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서해안지역의 관광개발에 대한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모색

하천관리제도 개선 공청회

■ **과제명** : 하천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 **일 시** : 2005. 7. 28, 14:00 ~ 18:00

■ **장 소** : 국토연구원 강당

■ **참석자**

윤용남(고려대학교 교수), 전병성(건교부 수자원기획관), 이한세(건교부 하천환경팀장), 김재승(하천사랑운동 대표), 박재현(인제대학교 교수), 심순보(충북대학교 교수), 오성규(환경연대 사무처장), 이상돈(중앙대학교 교수), 이재응(아주대학교 교수), 한건연(경북대학교 교수), 연구진(이승복 책임연구원, 오영석·윤승환 연구원)

■ **주요내용**

- 하천등급 등 하천체계 조정방안 및 하천구역 등 하천법 개정에 관한 발표 및 토론
- 하천등급체계 조정 및 하천주변지역인 하천구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홍수관리제도 도입 등 하천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 중부권 공청회

■ **과제명**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연구

■ **일 시** : 2005. 8. 31

■ **장 소** : 국토연구원 강당

■ **참석자**

이정식(안양대학교 교수), 이왕기(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문미성(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염돈민(강원발전연구원 연구본부장), 이정중(서울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왕기(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서종국(시립인천전문대학 교수), 이재준(협성대학교 교수), 조응래(경기개발연구원 교통정책연구부장), 이정용(도국제스포츠지원단 시설과장), 김경욱(건교부 수도권 계획과장) 및 원내 연구진(연구책임자 서태성 국토계획·환경연구실장 등), 기타 일반인

■ **주요내용**

2006-2020년을 계획연도로 하는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혁신체계 구축 등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방향을 모색함과 동시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

동북아 그랜드 디자인 수립 국제워크숍

■ **과제명** : 동북아 생태관광 및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그랜드 디자인

■ **일 시** : 2005. 9. 28, 09:00~18:00

■ **장 소** : 국토연구원 강당

■ **참석자**

박영철(성경대학교 도시계획과 교수), 김성일(서울대학교 산림자원학부 교수), 周牧之(동경경제대학 경제학부 조교수), 眞板昭夫(경도차이대학 관광디자인연구소장), Gao, Guoli(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토개발구역 경제연구소), 梁春媚(동북재형대학 관광호텔 관리학원 강사), 사육룡(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토개발구역 경제연구소 성시발전연구소장), 사와이(총합연구개발기구 이사), 김원배(선임연구위원), 이상준(연구위원), 김정석(연구위원)

■ **주요내용**

동북아의 생태관광 및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중심으로 한 한국, 일본, 중국 간의 협력방향 논의

한반도 통합적 인프라구축에 대한 국제워크숍

■ **과제명** : 한반도의 통합적 인프라구축에 대한 국제워크숍

■ **일 시** : 2005. 9. 29, 10:00-18:00

■ **장 소** : 국토연구원 강당

■ **참석자**

Li kun(중국 국가계획위원회 교통연구소 연구위원), Anatoli N. Kachur(러시아 과학아카데미 태평양지리연구소 소장), Ikuo Mitsuhashi(일본 환동해연구소 연구위원), Kent Calder(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 교수), 강정모(경희대학교 교수), 이창재(KIEP 동북아경제협력센터장), 안충영(중앙대학교 교수), 이강철(NIRA), 오재학(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승직(에너지경제연구원 동북아에너지연구소장), 장형수(한양대학교 교수), 윤덕룡(KIEP 연구위원), 박창원(SK SUPLEX Management 연구소 연구위원), 오승렬(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임강택(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고일동(KDI 선임연구위원), 김원배(선임연구위원), 이상준(연구위원)

■ **주요내용**

한반도의 통합적 인프라 개발을 위한 정책방향과 6자 회담 참여국들의 공동협력 방안 논의

도시홍수관리 제도개선을 위한 세미나

■ **과제명** : 도시홍수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 **일 시** : 2005. 12. 8, 15:00

■ **장 소** : 국토연구원 강당

■ 참석자

송재우(한국수자원학회 회장, 홍익대학교 교수), 김국일(하천협회 부회장, 동부엔지니어링 사장), 이종태(도시홍수재해관리기술연구사업단 단장, 경기대학교 교수), 안경수(한국방재학회·대한토목학회 부회장, 인천대학교 교수), 김창석(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부회장,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이종영(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중앙대학교 교수), 오성규(환경정의실천연대 사무처장), 전병성(건설교통부 수자원기획관), 안시권(건설교통부 하천관리팀장), 김중식(건설교통부 하천관리팀), 김종원(연구위원), 심우배(책임연구원), 박세훈(책임연구원), 박화권(연구원), 지자체 공무원, 언론인, 일반시민 등

■ 주요내용

-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의한 뉴올리언스 피해현황 및 시사점
- 일본의 특정도시하천 침수대책법의 개요와 시사점
- 도시홍수관리의 한계와 제도개선방향

02

c h a p t e r

지역 · 도시

1) 기본 · 정책연구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투자재원 확보방안 연구

Intergovernmental Fiscal Transfers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이동우, 김상욱, 정윤희

■ 배경 및 목적

참여정부 들어서 다양한 종류의 국가균형발전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거점도시 중심의 분산정책은 파급효과가 일부 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갖추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역개발 투자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하여 첫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3가지 재정지원제도를 대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투자재원으로서의 활용가능성을 비교한다. 이를 통하여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보다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입증하고, 우리나라의 독특한 지방재정 지원제도로써 2005년에 새롭게 도입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위상을 정립한다. 둘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 확충과 관련하여 현행 재원의 구조적 문제점을 규명한다. 제도의 도입목적 등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이 주세(酒稅)와 각종 부담금 및 타 회계 전입금에 의존하는 세입구조는 세입의 안정성 측면에서나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셋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새로운 재원 확보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새로운 목적세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원인자부담금 또는 수익자(受益者)부담금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재

정 운용의 경제적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 내용요약

제2장에서는 우선 이론적 관점에서 일반교부금과 보조금을 중심으로 한 지방재정 지원제도의 개념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지역 간 재정격차 실태를 살펴보고,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지방재정 지원제도의 내용 및 현황을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역개발 투자지원 수단 가운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갖는 의미를 재정립하였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첫째, 세입구조의 불안정성이다. 특별회계의 자체재원인 주세와 부담금(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과밀부담금, 개발부담금)수입은 경기에 따라 수입의 변동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제도의 목적과 재원 성격과의 정합성이 모호하다. 특별회계의 핵심재원은 주세(酒稅)로서 세입의 53.5%를 차지하지만 왜 주세(酒稅)가 국가균형발전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지 명분을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셋째, 일반회계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특별회계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세출예산을 확정해 두고 자체예산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채우는 식의 예산 운용은 특별회계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예산운용의 불투명성과 비효율성을 초래하기 쉽다.

제4장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지원제도의 외국사례를 살펴보았다. 조사대상 국가는 단일국가인 일본, 영국, 프랑스, 스웨덴과 연방국가인 독일, 캐나다, 미국의 총 7개국인데,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가 일반회계 교부금으로 지방재정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교부 목적과 교부방식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형평교부금(Equalization Transfer)은 교부금의 목적이 지역 간 재정력의 균등화에 있음을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그러한 목표와 연동하여 교부금 규모를 결정한다. 독일의 연방보충교부금(BEZ)처럼 주(州) 간 1인당 세입의 균등화라는 확실한 목표를 설정해 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둘째, 지자체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재정적으로 부유한 지자체에 의한 출연금 각출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 간의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는 재정분권화가 진행된 스웨덴, 독일 등에서는 보편화되어 있고 프랑스에서는 레지옹 간 불균형시정기금(FCDR)의 형태로 도입되어 있다. 프랑스 FCDR의 재원은 전액 지자체의 출연금으로 운용되는데 총 22개 레지옹 가운데 기금 출연 지자체는 일드프랑스 등 3개 레지옹에 불과하다. 셋째,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특수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목적세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미국의 주단위에서는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는데 주로 소비세, 소득세, 자원채굴세 등 세입의 일부를 지방재정 지원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영국의 사업용 레이트(Non-domestic Rates)도 일종의 목적세로 간주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신규재원을 검토하였다. 검토된 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목적세 신설, 그리고 과밀부담금 확충 등 3가지다. 신규재원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는 공평성, 중립성, 경제성의 일반적 조세원칙과 더불어 원인자부담원칙 또는 수익자부담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원인자부담원칙이라 함은 수도권집중의 원인제공자가 납세하여야 한다는 원칙이고, 수익자(受益者)부담원칙이라 함은 실제 세

금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어 국가균형발전(또는 수도권인구 안정화)이 이루어졌을 때 이익을 받는 자가 납세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 주요결과와 평가

대안별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대안인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은 실현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판단되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지자체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의 출연금 납부라는 '부담'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수도권의 질적 발전이라는 '수익'을 향유할 수 있게 되므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적합하고, 둘째, 특별회계의 운용에 참여함으로써, 회계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고, 셋째, 지역격차의 완화로 중앙정부의 재정분권을 촉진할 수 있으며, 넷째, 수도권 규제시책의 개혁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두 번째 대안인 목적세 신설과 관련하여서는 수도권 주민의 개인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수익자부담의 원칙이나 공평성, 경제성의 관점에서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지방세인 주민세개인소득세할에 부가세(sur-tax) 형태로 목적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건의되었다. 세 번째 대안인 과밀부담금 강화방안과 관련하여서는 부과대상지역을 현재의 서울시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확대할 것과 부과 대상건물의 기준 면적(현재 업무용 건축물은 바닥면적 2만 5천㎡ 이상, 판매용 건축물은 바닥면적 1만 5천㎡ 이상)을 대폭 하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대안들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정책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본격적인 학·연 간 공동연구가 요망된다.

>> 도시개발제도 개선방안 연구: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중심으로

Measures to Improve the Urban Development Project System

박은관, 안용진

■ 배경 및 목적

현행 도시용지 공급관련 제도로써 일반법인 도시개발법에 근거한 도시개발사업보다 특별법인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례가 더 많은 실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임대주택법, 경제자유구역, 특구, 지역균형발전법, 기업도시법, 혁신도시법 등 각종 특별법에 근거한 도시개발이 더 많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반법보다 중앙의 관계부처가 개별 부처의 목적에 따라 특별법을 제정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예상되는 도시계획과의 정합성여부 등의 문제점은 그간 수차례 지적되어 온 바 있으나, 현재 여건상 각종 특별법을 일반법으로 통합하여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 단계에서는, 특별법 위주의 도시개발방식을 지양하고 복합적인 목적에 대응이 가능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제도를 활성화하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수 있다. 이를 위해 현행 도시개발사업과정에서 도시용지의 공급을 지연시키는 요인을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 내용요약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도시용지의 공급체계와 이에 근거하여 그동안 공급된 도시용지 규모를 살펴봄으로써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현황과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그간의 도시용지 공급체계의 문제점은

크게 도시지역 내 개발가능 토지고갈, 도시계획 수립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용지확보 지연, 여건변화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의 탄력성 부족, 민간 도시개발의 위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참여 주체부문에 있어, 공공부문의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민간에게 설계 및 분양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개발법에서도 민간제안을 통한 민간부문의 개발을 허용하고 있으나 사업절차상에 애로요인이 많아 활발한 개발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는 점을 지적하였다.

제3장에서는 도시개발사업 현황 및 사업단계를 고찰하였다. 도시개발법에 근거한 도시개발과정은 크게 대상지선정/타당성검토 단계, 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 실시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 단계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대상지선정/타당성검토 단계에서는 원활한 도시개발 사업용지 확보와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는 개발계획 수립내용, 개발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기간, 구역지정/개발계획 승인까지의 소요기간/절차, 기반시설 부담, 도시개발 특별회계 운용현황 등에 대해 분석하였고,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는 각종 영향평가 협의(환경, 인구, 교통 등) 소요기간, 중복성 등 각종 인허가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외에 사업시행단계와 관련해서는 사용/수용/환지/혼용 등 사업방식별 문제점을 분석하고 기존사업방식별 개선대안과 개발방식 다양화의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며, 민간참여가 부진한 사유에 대해 사업시행주체의 자금력, 용지확보의 어려움,

기반시설부담의 과중, 각종 인허가 절차의 복잡 및 시간소요, 사업시행방식의 다양함 등의 항목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실태조사와 전문가협의, 기타 문헌조사 등을 통해 현행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상의 현황 및 문제점을 도시개발 사업용지의 확보, 기반시설 부담, 사업추진(인허가) 절차, 사업시행방식, 민간참여 등 다섯 부문으로 정리하였고, 제5장에서는 제4장에서 정리된 내용을 토대로 도시개발사업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도시용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향후 일정기간 동안 소요될 도시용지 면적에 해당되는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수립관련 제도 내 토지 비축 기능을 포함하도록 하며, 지가상승으로 인한 용지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개발예정지구지정과 함께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토지거래 신고제를 실시하고 도시개발예정용지의 용도지역변경을 사업시행자가 용지를 취득하기 전까지 유보하여 지가상승을 억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기반시설부담 및 재원조달방안과 관련하여 개발계획이 승인되면 해당 구역 밖의 도로 등의 기반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거나, 민간사업자의 기반시설부담금을 통해 위탁사업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반시설의 종류와 부담범위 및 주체를 명시하되 공공부문이 부담해야 할 기반시설 재원조달방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래 세수입 증가분을 담보로 하는 조세증가재정(Tax Incremental Financing)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사업추진 절차 간소화 측면에서는 사전 환경성 평가와 각종 영향평가의 중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의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되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사전 환경성 평가는 본래 법적 취지에 맞게 계획단계에 적합한 수준에서 검토된 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각종 영향평가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소요기간을 단축하도록 제안하였으며, 절차장기화에 따른 초기 사업비 증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 및 자문 등 추진 절차상의 기간 명시화, 업무추진의 투명성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업시행방식 개선과 관련해서는 소유자-개발사업자 간 파트너십, 신탁개발방식 등 새롭고 다양한 방식의 도입으로 민간부문에서 사업방식의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민간참여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시행자의 토지 수용과정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계획이 승인되면 공공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아 공공이 위탁시행을 통해 의무적으로 토지수용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제안하였다.

■ 주요결과와 평가

이 연구는 특별법 위주의 도시개발방식을 지양하고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도시개발제도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제도를 활성화하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되었다. 도시용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행 국토계획법을 근간으로 하는 도시용지 공급시스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현황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장·단기 개선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아 이 연구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제도의 단계별 과정에 초점을 맞춘 한계로 말미암아 도시용지 공급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폭넓은 분석과 고찰이 부족한 점이 아쉽다. 따라서 향후 도시용지 공급과 관련한 계획체계 및 관련 제도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이와 아울러 이 연구에서 도출된 제도개선대안별로 보다 심도 깊은 대안모색을 위한 후속 연구도 필요하다.

>> 도시경관 관리제도 정비방안 연구

Measures for Improving Urban Landscape Management System

민범식, 김명수, 안용진

■ 배경 및 목적

현재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형태의 경관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건교부에서는 도시계획에 의한 지구지정, 용도지역지구제에 의한 건축행위규제,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 건축심의를 통해 경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심의제도를 통해 주로 자연지역 경관을 관리하고 있으며, 문화관광부에서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양각규제를 통해 건축물 높이를 규제하고 있으며, 농림부에서는 농촌계획을 통해 농촌마을 위주로 경관을 관리하는 등 각 부처마다 다양한 관리방식을 보이고 있다.

여러 부처에서 도시 및 자연경관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관리를 수행하고 있지만, 운영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계획에서 규제·심의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체계화하고, 각종 경관관련 제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 내용요약

1) 국내 경관관리 제도의 현황 및 과제

국내 경관관리 제도의 문제점을 계획의 체계성, 규제수단의 적용성, 심의기구의 효율성 측면에서 분석하고, 개선할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계획의 체계성
 - 광역도시계획 경관부문-도시기본계획 경관계획-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경관계획을 작성하고 있으나 일관성 부족
- 도시기본계획의 경관계획에서 하위계획에 대한 지침적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립과 심의과정에서 경관계획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짐
- 도시기본계획에서 용도지구지정이나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에 지침적 성격의 계획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도시기본계획 경관계획을 별도 보고서로 작성할 수 있는 규정 적극 활용
 - 규제수단 적용성
 -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용도지구(경관, 미관, 보전, 고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 등이 적용되고 있음
 - 포괄적 적용수단인 지구단위계획이 작성비용, 장기간 소요로 적용성에 한계를 보임
 - 소규모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적용할 수 있는 경관 기준 미비
 - 경관관리대상 유형별로 손쉽고 일반적으로 사용가능한 규제수단 마련(소규모 개발행위허가 포함)이 필요하며, 규제수단으로 지자체 조례 활용 가능
 - 심의기구 효율성
 - 각종 개발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야 하지만, 사전환경성검토는 구체적 경관지침이 미흡하여 예측성 부족
 - 사전환경성검토는 중앙정부가 관리하므로 지자체

- 계획과 어긋날 수 있음
- 심의기간 단축과 객관적 심의지침 필요(앞의 규제 수단과 병행하여 적용)
 - 경관심의위원회를 통한 합목적적 심의와 관련 위원회 합동심의 병행 필요

2) 외국의 경관관리제도 분석

도시계획과 경관계획과의 연관성 측면에서 일본과 독일은 별도의 계획으로 진행하면서 상호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경관유형별로 각각의 법률로 관리하던 것을 경관법을 제정하여 통합 관리하는 체제로 정비하였다.

집행수단의 경우 일본은 경관지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독일은 일반지역에는 건축조례로 특정지구에 지구상세계획을 중첩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경관법에 의해 관련 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도시계획에 경관계획을 포함시키면서 토지이용계획도에 경관보전지구 등을 표시하여 관리하고 각각의 관련 법률에 규제와 허가기준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3) 경관관리 제도정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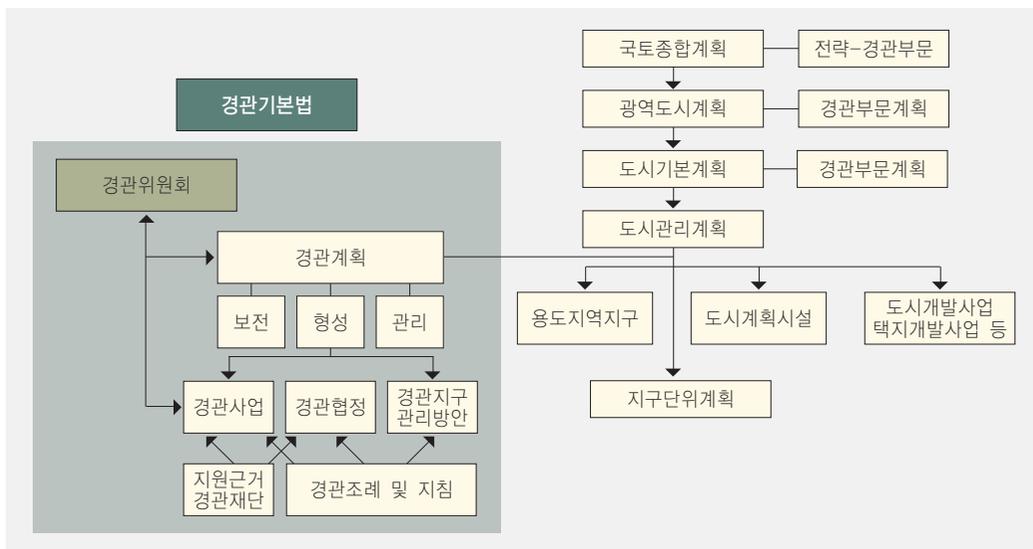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관관리 제도의 문제점은 법령 체계의 복잡성에 따른 혼란과 부문계획 간의 정합성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경관관리 정책과 계획의 실효성 부족을 낳았다.

본 연구에서는 경관관리제도의 정합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새로운 경관기본법 제정을 제안하며, 기존 제도 및 계획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경관기본법은 경관관리 정책 및 계획의 기본방향만을 규정하고 많은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만,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결정된 경관관련 지구의 관리방안 제시와 경관형성을 위한 지침의 제시와 경관사업은 계획내용에 포함할 수 있다. 기존 국토계획과 경관계획의 관련성 및 새로운 경관기본법에 의한 경관 계획 체계는 다음 그림과 같다.

연구기간: 2005. 4. 1~2005. 11. 30
 서지사항: 186면, 국도연 2005-15

〈경관 계획 체계〉



>> 미래지향적 도시계획과 합리적 토지이용관리 체제 구축: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Managerial System Establishment for Future-oriented Urban Planning and Rational Land Management: For the Revision of the 4th comprehensive National Territorial Plan

박재길, 정희남, 채미옥, 민범식, 신동진, 박은관, 김승중, 김중은

■ 배경 및 목적

2000년 1월부터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이 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급속한 국내의 여건변화로 말미암아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한 현실이다. 이 연구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도시관리와 토지이용관리 부문의 기초연구로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전체 계획기조를 반영하여 도시관리와 토지이용관리 부문의 계획수립 기초 및 부문 계획(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 내용요약

계획기조로서 첫째, 사람이 존중되는 거주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도록 한다. 지금까지 양적 성장 위주였던 도시개발을 지양하고 생활환경의 질적 수준을 제고시킴으로써 인간중심적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개별도시 또는 도시지역만을 중심으로 해오던 도시관리방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도농통합 차원의 광역적 도시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도시와 농촌지역을 통합적으로 계획·관리해 나가도록 한다. 둘째, 기존의 도시계획과 토지이용관리체계를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합리적인 체제로 재구축하도록 한다. 즉, 토지이용관리제도 중심의 규제 위주 체계로부터 선계획-후개발의 적극적 도시계획체제로 전환한다. 또한 목표위주의 획일적 도시개발에서 참여와 협력을 통한 과정을 중시하는 도시개발로 전환

하여 합의형성의 도시계획 체계를 구축해간다. 이러한 계획기조를 토대로 계획의 주요과제를 크게 균형적인 도시체계 구축 및 정주체계 정비,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선계획-후개발 국토이용체계 정립,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도시계획체계 구축 등의 네 가지로 설정하였다.

도시체계 구축 및 정주체계 정비의 주요과제로서 첫째, 국가도시체계를 수도권 중심의 중주도시체계에서 균형적이고 수평적인 네트워크형 도시체제로 재편한다. 특성화된 산업 클러스터 등으로 광역도시권별 기능을 형성하여 국토공간구조의 다핵화를 도모하며, 광역도시권 내에서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배후지역 간의 네트워크형 도시체계를 형성한다. 둘째, 광역도시권이 지역의 중추적 발전에 기반이 되도록 관리해 간다. 연담화된 도시지역은 광역도시계획을 추진하여 광역도시권 내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셋째, 중심도시-기초중심지-마을로 연결되는 도농통합적 정주체계를 설정하여 정주단위별로 생활서비스 시설을 정비한다.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의 주요과제로서 첫째, 생활 주변을 인간중심적 환경으로 정비하는 일에서부터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를 추진해간다. 커뮤니티의 기초 생활환경시설인 주차장, 골목길, 소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노후불량주택의 재건축, 재개발 등을 통해 주거환경수준을 개선하며, 근린생활 중심지는 이동성이 약한 노인, 주부 등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아울러 지역사회 교류의 장이 되도록 정비해 나간다. 둘째, 역사문화자원의 발굴과 정비를 통해 정체성 있는 동네를 조성해간다. 역사적 건축물이나 장소 및 소재를 찾아내

어 생활공간 구석구석에 역사적 흔적을 부각시키고, 지역의 특징적인 자연, 역사, 예술 및 문화자원과 함께 지속적인 경관자원 조사를 통하여 경관소재를 발굴하고 개발한다. 셋째, 자연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한다. 시가지에서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곳의 공공시설 옥외공간, 이전적지, 도로변, 동네 야산 등에 녹지를 확충하고, 단절된 공원녹지에 보행자 전용도로, 녹도, 수변녹지 등을 조성하여 이용효율을 높이며, 도시 간 녹지를 연계하여 생태회랑도 조성한다. 넷째, 대중교통 위주로 도시공간구조를 개편해 간다. 대도시 도심부는 재정비를 통해 주거기능을 도입하고, 외곽도시에는 자족기능을 확대하여 직주근접을 통한 정주환경을 개선하며, 지하철, 고속철도 역세권, 환승센터의 입체적 토지이용과 복합용도 개발을 통해 대중교통에 대한 이용접근성을 증대시킨다.

선계획 후개발 국토이용체계 정립의 주요과제로서 첫째,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개발사업'의 수직·하향적 도시계획 운용체계를 각각 수평적이고 상호 내용이 연관되는 삼각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도시기본계획의 계획기능 회복과 사업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도시기본계획은 미래 목표 및 정책과제 중심의 장기계획으로 정착시키고, 도시관리계획은 토지이용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제도로 그 기능을 강화해간다. 둘째,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따라 도시용지를 적지(適地)·적시(適時)에 적가(適價)·적량(適量)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시개발체계를 운용한다. 사전에 수립된 도시기반시설 투자계획과 연계하여 신개발과 기존시가지 정비가 추진되도록 도시개발체계를 정비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개발사업자와 최종소비자, 그리고 지자체가 광역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는 장치를 강구한다. 셋째, 농지 및 산지의 계획적 관리를 강화한다. 농지나 산지의 소유규제는 완화되되, 보전대상인 농지 및 산지는 계획 및 이용규제를 강화한다. 넷째, 공정하고 투명한 토지이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장기적으로 용도지역제(zoning) 중심의 토지이용관리체계를 지

구단위계획 중심의 관리체제로 전환하고, 개별법에 의한 용도지역 신설 및 구역지정을 제한한다.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도시계획체계 구축의 주요과제로서 첫째, 민주적 도시계획 과정을 정립해가기 위해 도시계획 과정에 해당 주민과 전문가, 기업, 기타 이해관계자 등이 공정하게 참여하여 상호 협력하는 계획수립 과정을 제도화한다. 주민에 의한 도시계획 입안제도의 활성화 등 주민참여 제도를 다양한 형태로 강화하며, 주민자치형 주민참여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주민이 직접 계획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계획행정에 반영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둘째, 도시계획결정 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역할분담을 추진한다. 중앙정부는 바람직한 환경수준의 도시개발을 유도 지침을 마련하고 국가전체 관점에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한다. 도시환경 수준에 관한 최소기준을 마련하고 시범도시를 선정하여 장려하며, 낙후지역·도시 등에 대한 차등적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위한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정비하고, 비상산적 분쟁을 조정·통합할 수 있는 관리체계도 수립한다.

■ 주요결과와 평가

이 연구에서 제시한 균형적인 도시체계 구축 및 정주체계 정비,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선계획-후개발 국토이용체계 정립,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도시계획체계 구축 등의 네 가지 주요과제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계획기조인 '약동하는 통합국토'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의 요소이므로 향후 우리나라 도시관리와 토지이용관리 부문의 각종 시책을 통해 점진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민간제안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실태와 발전방안

Measures to Facilitate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in Urban Development Projects

윤혜정, 김현식

■ 배경 및 목적

도시개발법은 택지개발촉진법으로 대표되는 특별법 위주의 도시개발방식을 지양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활성화하여 도시미관 및 경관을 고려한 적정밀도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되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에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다양하고 고급화된 도시토지를 공급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같은 취지에서 도입된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사업추진상, 제도적·운용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민간의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통해 향후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조성이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사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 내용요약

본 연구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성장과 개발원칙, 뉴버니즘에 입각한 TND 및 TOD원칙, 영국의 계획허가지침(PPG3) 등을 종합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원칙을 정리하였다.

법 제정 이후 전국적으로 도시개발사업구역의 지정 현황을 살펴보고, 민간도시개발 사업지구 중 사례를 선정하여 사업내용 및 제도의 문제점 등을 조사하였다.

도시개발법이 시행된 이후 2004년 말까지 전국에서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59개 지구이며,

총 면적은 약 2,947만㎡이다. 경기도 12개 지구를 포함하여 수도권에서 21개 지구, 충남과 경남에서 각 8개 지구, 광주광역시와 경북에서 각 4개 지구가 지정되었다. 지정면적으로 보면, 수도권에 총 지정면적의 절반을 넘는 약 1,500만㎡가 지정되었다. 민간제안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사업구역은 2004년 말 현재 25개 지구이며, 그 중 19개 지구가 주택지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주요결과와 평가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행자 특성을 보면, 사례지구 5개 중 한 지구만이 순수주민조합에 의한 사업이고, 도시개발조합 시행자 중 2개 지구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대부분의 토지를 매입하여 토지소유자로 참여하여 시행하고 있다.

둘째, 사업면적이 클수록 사업기간이 길며, 주민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조합운영의 미숙, 계획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상대적으로 장기화되고 있다.

셋째, 수도권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의 기부채납비율이 높다. 경기도 내 사업지구의 경우 사업면적의 30%가 넘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것 외에도 지구외 도로의 구조개선 등 교통영향평가에서 요구하는 추가의 공공시설을 부담하고 있다.

넷째, 각종 부담금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천안지역의 사업지구를 제외하고는 사업비의 20~35%에 달하는 금액을 농지조성비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광역교통부담금 등으로 납부하고 있다. 시행자는

사업 수지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더 많은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므로 각종 부담금이 개발밀도를 더욱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다섯째, 자금조달 면에서 1개 지구만이 조합원의 부담과 체비지 판매금액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다. 그 외 지구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식으로 금융권이나 시공자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

여섯째, 아파트건설용지비율이 높아 토지이용과 지구단위계획이 단조롭다. 대부분의 사업지구는 단독주택용지는 토지환지를 원하는 일부 주민에게 환지용으로 남겨두고 전체면적의 50% 이상을 아파트용지로 배분하고 있다.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양상이 되어버렸다.

일곱째, 개발 사업이 해당 지구뿐 아니라 주변 지역의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는 단초가 될 수 있게 하는 도시계획적 관리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특히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점포용 주택이 허용되는 가구에 대한 제어수단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개발사업의 목표가 주거용지개발이므로 일정시간 내에 주택이 공급되도록 도시 관리주체가 지원하고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연구기간: 2005. 1. 1~2005. 6. 30
서지사항: 100면, 국토연 2005-8

>> 산업단지개발편람 연구

A Handbook of Industrial Park Development

류승한, 김광익

■ 배경 및 목적

건설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산업입지법의 제정 직후인 1991년 공업단지개발편람을 작성한 바 있다. 1991년 발간된 공업단지개발편람은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계획기준과 적용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산업단지 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동 편람이 발간된 후 15년이 경과함에 따라 기존의 공업단지 편람을 새로운 여건변화에 따라 수정 보완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1990년

대 이후 산업 입지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제도 개편의 결과 기존의 공업단지 편람으로는 충족할 수 없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기존 통계적 기준을 갱신하여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1991년 공업단지개발편람 발간이후 이루어진 새로운 제도 및 사회경제 여건의 변화를 검토하고, 산업단지 개발 실무에 있어서 이러한 여건변화를 어떻게 반영하여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고 있다.

■ 내용요약

이 연구는 모두 6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연구의 목적,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산업단지 개발에는 다양한 법규 및 계획기준이 적용된다. 서론에서는 이 연구가 이러한 관련법규와 계획기준을 검토함으로써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된 법제도 대해 살펴보고 있다. 특히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산업입지 제도의 근간을 구성하고 있는 두 법률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산업입지개발지침'과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및 '산업단지 관리지침' 등 산업단지 관련 지침의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산업입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제3장에서는 산업단지의 개발목적과 개념정의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특히 이 장에서는 산업단지 개념에 대한 법적 정의와 산업단지 유형구분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다. 먼저 산업단지 개발의 목적과 기대효과에 대해 살펴보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산업단지의 법률적 정의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범위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산업단지의 유형구분 기준과 목적에 대해 제시하고 있으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형구분과 그 외 법률에 의한 유형구분의 차이에 대해 밝히고 있다.

제4장에서는 산업단지 개발의 필요성과 타당성 분석, 산업단지의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주요 내용, 산업단지 개발절차 등에 대해 밝히고 있다. 산업단지 개발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에서는 산업단지 입지 선정, 유치업종의 지정시 고려 요인, 산업입지 수요 검토 방법 등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산업단지의 지정에서는 산업단지 지정요건 및 지정시 검토사

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산업단지 개발계획 검토에서는 개발계획의 내용 및 주요 고려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과 관련된 영향평가제도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부문별 계획의 기본방향과 계획기준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장에서는 산업입지 원단위 경험치와 전망치를 제시함으로써 산업단지 개발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산업입지 원단위는 2003년도를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미래 전망치는 2011년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세분류 업종기준의 원단위 및 시군별 제조업 평균원단위를 산정하여 부록에 별도로 제시하였다. 부문별 계획 기준검토는 토지이용 및 업종배치계획, 기반시설계획, 지원시설계획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다. 기반시설계획은 다시 교통계획과 용수공급계획, 하수처리계획, 폐기물 처리 계획, 공원·녹지계획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계획기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먼저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지원제도를 간략히 살펴보고, 지원의 근거와 지원범위에 대해 검토한 후, 실제 국가 지원의 적용기준과 적용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추진방안 연구

The Making of Livable City in Korea

박재길, 김현식, 김광익, 이왕건, 변필성, 황승미

■ 배경 및 목적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실천하기 위한 연구방법론과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지속된 도시정책은 주민들이 원하는 살고 싶은 도시의 모습과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이 도시개발 수요의 양적 충족에 치중하여 진행되어 왔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살고 싶은 도시의 모습이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도시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들을 언급하고 있다.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내용요약

2장에서는 우리의 도시정책이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기존의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와 도시계획 분야의 이론을 토대로 논증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쾌적성을 생활환경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인식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특히 주거 선호도 조사에서 사람들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거주하기를 원하는 지역 사이에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제인 제이콥스, 캐빈 린치,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이론과 일본의 시빌 미니멈, 하버마스의 생활세계와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다루어졌다. 또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는 도시민에게 매우 중요하며, 커뮤니티 차원에서 시민참여를 통해 성

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3장에서는 영국, 미국, 일본을 포함한 3개국을 사례 대상국가로 선정하여 도시정책을 전개해온 경험을 개관하였다. 이들 3개 국가의 공통점은 도시정책이 시민 참여와 커뮤니티 차원의 계획을 결합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로 전환하였다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지역주민의 선호도에 맞추어진 어반빌리지 운동과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기업, 지역주민, NGO단체의 파트너십을 지원하는 체제로서 근린재생에 관한 국가전략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즉, 지방전략 파트너십, 근린재생보조금)을 검토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주도하여 근린단위의 도시계획을 수립한 시애틀시의 사례와 주정부, 지자체, 지역주민 및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파트너십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주택 및 도시개발부(HUD) 산하의 커뮤니티 계획 및 개발청의 프로그램을 검토하였다. 일본의 사례는 마찌즈꾸리(まちづくり) 운동과 시민참여에 근거한 상향식 계획시스템의 운용을 검토하였다.

4장에서는 2장, 3장에서 논의된 내용을 근거로 한국적 여건에 부합하는 살고 싶은 도시의 비전과 도시 만들기의 개념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비전과 모델의 적용을 위한 실태를 진단하였다. 살고 싶은 도시의 비전은 도시마다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1) 주거, 의료, 복지, 안전, 교통에 대한 기초욕구를 충족할 것, 2) 풍부한 일자리와 교육기회의 제공, 3) 자연경관과 개성 있는 문화의 보존. 개념적인 모델은 사람과 커뮤니티 중심이

02

며, 도시에 근거한 접근방식이며 지역주민, 기업체, 중앙정부, 지자체, NGO와 같은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의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적 상황에 대한 검토는 9개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사례조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지역에서 각각 4개의 도시를 선정하여 이루어졌다. 8개의 도시는 도시의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4개 집단으로 분류되었다(100만 이상, 50~100만, 10~50만, 10만 미만). 공간적 위치나 인구규모와는 상관없이 9개의 생활기반시설 가운데 환경, 교통, 주거에 대한 중요성이 고르게 강조되었다. 수도권 외곽의 인구성장도시와 지방중소도시에서는 문화, 정보시설이 결핍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일부 소도시에서는 교육, 의료·복지시설이 결핍된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5장에서는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힘써야할 도시정책을 다루고 있다.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는 기본적으로 지자체 단위에서 주민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중앙정부도 나름대로 추진해야 할 역할이 있다. 중앙정부는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를 공론화하고 정책화하는 데 필요한 의제발굴에 힘써야 한다. 또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촉진함과 아울러 리더를 육성할 사회조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가 된다. 주체 및 추진체계에 있어서는 주민, 지자체, 이해당사자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정보와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 주요결과와 평가

이 연구는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의 필요성과 우리의 현실에 맞는 살고싶은 도시의 개념을 밝히는 데 일차적인 의미를 두고 있다. 요컨대, 이 연구는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당장 정책이나 제도개선으로 활용될 연구 성과를 제시하는 것은 후속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그러한 정

책은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정부의 다양한 지원 속에서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들이 사업을 실천해 나감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정책은 단계적이며 점진적인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수도권 대규모 개발사업의 집합적 파급영향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Agglomeration Problems and Policy Directions of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in Capital Region

박상우, 박형서, 이범현, 변세일

■ 배경 및 목적

수도권에 대규모의 주거, 산업 및 관광단지가 다수 개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양적으로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대규모 단지가 집적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간과되고 있다.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단지의 집적개발에 의해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의 실상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수도권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의 현황을 검토·분석한다. 둘째, 개별단위의 대규모 사업들이 다수가 상호영향권 내에 집적하여 발생하는 수도권 문제의 심화요인을 분석 평가한다. 셋째, 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개별단위의 개발사업이 집합적으로 분포하는 데 따라 발생하는 수도권 문제의 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연구방법론으로는 사례분석기법을 중심으로 하였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파주와 용인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고, 인접한 신도시 규모의 개발이 이루어진 일산과 분당을 비교분석하였다.

■ 내용요약

우리나라에서는 개발사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기반시설의 등급은 낮아지고 개발사업의 규모가 증가하면 보다 상위의 광역서비스시

설을 공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개발이 기존의 개발된 지역에 인접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시설공급규정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이미 개발된 지역과 인접하여 신규로 추가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 두 지역을 합한 면적에 해당하는 시설기준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지역과 신규지역을 포함하는 상위시설이 공급되지 못한다. 대규모 개발사업은 소규모 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규정하는 필수시설인 국지적 시설 외에도 추가적인 광역시설의 공급이 필요하다. 또한 동일한 시설일지라도 대규모 사업의 기반시설 공급 규모가 광역적이거나 고급시설로 되어 있다.

대규모 사업이 인접하여 집적하는 데 따른 긍정적인 효과는 첫째로 집적경제효과(agglomeration economy effect)이며, 부정적 효과로는 경제활동의 과도한 밀집에 따른 도시혼잡이나 환경악화다. 더욱 중요한 문제점은 개발사업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대규모화함으로써 추가적인 서비스시설이나 기반시설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필수적으로 공급되어야 할 시설의 범위가 소규모 개발에 한정되어 있어서 대규모 단지에는 부족한 수준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기반시설 부족과 서비스 시설 부족은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 주요결과와 평가

대규모 개발사업의 집적에 의한 문제점 개선을 위하

02

〈개발단위에 따른 등위별 기반시설〉

	교통시설	공공서비스	교육·문화	의료·보건	상업판매
1단계 (단지)	단지 내 도로 진입도로 개인주차장	마을회관 경찰지서	초등학교 유치원 마을복지관 노인회관	의원	소형수퍼마켓 마을잡화점 등
2단계 (지역)	지역 내 도로 공용주차장	동사무소 경찰파출소	중등학교 복지회관	병원 보건지소	편의점 동네재래시장 대형수퍼마켓
3단계 (시·군)	지역간선도로 고속도로	시·군청 경찰서	고등학교 시·군·구민회관 문화회관	종합병원 보건소	백화점 종합쇼핑몰 전문점

여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는 소규모 개발에 따른 시설공급 부족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족한 시설의 공급비용을 개발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개발사업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차등적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영향평가제도의 평가주체 및 심의방법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로는 현재 개별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개별사업의 개발구상은 지역 또는 광역구도 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넷째로는 대규모 단지개발을 촉진하고 중소규모 개발사업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집적에 의한 문제점의 완화가 필요하다.

>> 인구저성장시대의 도시관리정책 방향 연구

Urban Growth Management Policy in the Age of Slow or No Population Growth

이왕건, 김중은, 박경현

■ 배경 및 목적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구저성장 추세는 단순히 인구 증가율이 낮아지는 변화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적 여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중요한 요인이 될 전망이다. 도시관리정책 차원에서 시대적 변화에 기반한 대책 수립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인구저성장에 대비하기 위한 도시차원의 정책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저성장에 따른 다양한 파급효과와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현재 운용되고 있는 관련 법률, 제도를 인구저성장의 관점에서 검토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인구저성장을 이미 경험한 3개국(일본, 영국, 프랑스)을 대상으로 도시관리정책의 변화과정, 법률, 제도의 특성과 운영현황 등을 분석한 후, 도출된 시사점을 토대로 인구저성장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도시관리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 내용요약

우리나라의 인구저성장과 고령화 추세는 인구저성장을 경험한 선진국에 비해 매우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는 특성이 있다. 인구저성장 추세는 인구계층구조의 변화와 고령화, 전통적인 가족구조의 해체와 같은 사회적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총부양비의 증가, 노동인구의 고령화와 생산성의 하락, 저축률 하락과 소비위축에 따른 자본공급 감소 및 투자위축, 사회복지를 위한 국민부담 증가와 공공재정 적자확

대, 경제성장률의 둔화와 같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유발할 것이다. 이러한 인구저성장 추세는 도시에도 영향을 미쳐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전국 84개 도시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37개 도시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인구저성장은 도시용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개발수요를 축소시켜 기성시가지의 쇠퇴 및 노후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주택 및 토지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사회계층구조의 변화는 도시 지역에서 교육시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변화를 유발하며, 도시개발에 필요한 공공재원의 부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도시관리정책 분석을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지침 및 운영현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조례 등을 분석하였다. 그 중 인구저성장 관점에서 본 도시기본계획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인구지표 설정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도시기본계획의 현실성을 약화시킨다. 둘째, 인구증가를 전제로 한 계획인구 추정방식으로 최근의 인구저성장 추세가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실제보다 인구를 과다하게 추정하고 있다. 1990년부터 2004년까지 전체 81개 도시 가운데 29.6%에 해당하는 24개 도시에서 25-50%의 인구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며, 100% 이상의 인구성장을 목표로 설정한 도시도 전체의 17.3%인 14개 도시나 되었다. 셋째, 아동·청소년 계층의 감소나 노인인구의 증가와 같은 인구구성의 질적 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 넷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내용의 비현실성을 들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관리

정책 및 개발방식의 경향은 기성시가지 정비보다는 토지구획정리, 교외택지 개발, 공업단지 조성 등 신규 용지공급에 편향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대동소이(大同小異)' 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들 수 있다.

인구저성장을 경험한 일본의 도시정책은 도시재생에 초점을 두고 있다. 1998년 '중심시가지 활성화법' 제정, 1999년 지방분권일괄법을 정점으로 하여, 도시계획이 지방자치법의 자치사무로 시행되어 시정촌 도시계획마스터플랜도입으로 인한 시민참여가 증가하였으며, 용도지구의 조례 위임, 시정촌의 신청제,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의 토지이용규제, 도시계획제한제도 등이 도입되었다. 주민참여에 근거한 마찌즈쿠리가 중심시가지의 활성화를 위한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분권화, 주민참여, 정보공개, 민관협력 등과의 연계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일본의 지방분권과 주민참가, 마찌즈쿠리의 방향은 인구저성장시대의 대안으로 평가될 수 있다.

영국은 도심재정비를 산업구조개편과 연계하였으며, 주택수요는 기존 낙후된 내부시가지의 정비를 통해 충족토록 하였다. 중심지를 포함한 생활권 지역을 보행 중심으로 개선하고, 훼손 및 방치된 주택재고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정책을 추진하였다. 도시개발공사(Urban Development Corporation)와 엔터프라이즈 존(Enterprise Zone)을 통해 집중적인 개발을 유도하였으며, 시티 챌린지(City Challenge)를 통해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도시재생방식을 채택하였다. 공동화 방지를 위한 협력형 환경개선사업으로는 도심관리(Town Center Management)와 그라운드워크 트러스트(Groundwork Trust)가 있다.

프랑스는 1980년대 초반 미테랑 정권의 지방분권화 개혁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조직을 유연화하고 지자체에 대한 국가 또는 상위 지자체의 계층적 감독에서 탈피하게 함으로써 지방의 권한과 책임의 확대를 통한 지방자생력의 증대에 기여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 간

에는 개별도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지역특성에 부합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광역적인 협동조직들이 발달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조직들의 활성화는 인구저성장으로 인한 도시쇠퇴문제를 개선하는 기반이 되었다. 사업방식은 관련주체 간의 유연한 관계 형성을 통해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 주요결과와 평가

인구저성장시대의 도시관리정책은 인구저성장의 다양한 파급효과를 적절히 수용하고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첫째, 도시기본계획을 환경보전, 경제성장, 삶의 질을 동시에 고려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도시성장관리계획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기성시가지의 계획적 관리 및 정비를 유도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법률 및 제도, 실행프로그램의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변화하는 개발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용도지역지구제(zoning)를 부분적으로 개편하거나 대폭 손질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향후 도시관리정책은 인구계층구조의 변화에 따른 생활편익시설의 수요변화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사회계층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주거 유형의 제공 및 지역적 균등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계획의 수립방식은 지자체가 계획의 고권을 가지고 다수시민이 참여하여 계획내용을 수립하는 상향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성시가지의 도시개발사업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잠재력 분석 연구(II): 지역의 제도적 역량 및 조직화 능력을 중심으로

The Evaluation of Local Capacity for the Self-sustaining Development in Korea(II):
Focusing on Local Institutional or Organizing Capacity

김태환, 류승한, 김광익, 변필성, 황승미 외

■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잠재력 분석을 목적으로 2개 연도에 걸쳐 수행된 연구 프로젝트의 2차 연도 과제로서 지역 잠재력의 한 부분인 제도적 역량 및 조직화 능력을 논의한다. 2004년도 연구는 지역 잠재력의 또 다른 부분인 자원을 2차 자료를 토대로 고찰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의 지역이 지역발전을 위해 자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해당 지역이 어떤 자원을 갖고 있는가의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게 되었고, 이러한 인식 하에 2005년도 연구가 수행되었다.

본 연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지역의 제도적 역량 및 조직화 능력을 분석하기 위해, 하나의 지역 내 리더 및 이해관계자가 해당 지역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도적 역량은 자립적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지역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를 조직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역량은 이해관계자의 지속적인 참여와 협력을 가능케 한다. 그리고 그러한 참여와 협력은 파트너십과 네트워크로 나타난다. 지역발전을 위한 제도적 역량의 분석을 통해, 지역 잠재력에 바탕을 두고 자립적 발전을 수행하는 노력으로부터 유용한 교훈을 얻고자 한다.

■ 내용요약

본 연구는 두 가지 주요 구성요소를 가진다. 1) 지역 개발 이론과 정책, 지역 경쟁력, 제도적 역량에 관한 기존 문헌의 이론적 고찰, 2) 지역발전을 위해 핵심 산업을 육성하는 지역에 대한 사례연구가 그것이다. 사례연구는 핵심 산업육성에 있어서의 지역의 제도적 역량을 고찰한다. 또한 사례연구가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방법이다.

이론적 고찰은 2005년도 본 연구를 이끌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재차 강조한다. 첫째, 지역이 어떻게 자원을 이용해서 지역발전을 추진하는가의 문제가 해당 지역이 어떠한 자원을 갖고 있으며 또 그 자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의 문제보다 중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지역자원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것이다. 바꾸어 말해, 지역자원은 지역에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창출된다는 점이다. 셋째, 지역발전이란 지역자원과 그것의 가치를 평가하고 활용하는 능력 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것이다.

사례연구를 위해, 본 연구는 여섯 개의 지역과 해당 지역의 전략산업을 선정하였다. 1) 전주시의 IT기반 미디어산업, 2) 춘천의 애니메이션산업, 3) 여주의 도자기산업, 4) 보성의 녹차산업, 5) 고창의 복분자산업, 6) 보령의 머드산업.

이렇게 여섯 개 지역을 선정한 첫 번째 이유는 지역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전략산업의 육성에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련 이해관계자를 조직화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가를 해당 여섯 개 지역에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사

례연구는 사례지역 전략산업의 역사와 현재의 위상, 해당 산업 클러스터의 구성 및 특징, 해당 산업발전의 요인으로서 제도적 역량, 사례지역과 전략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 다른 지자체에게 유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포괄하였다.

두 번째 이유는 여섯 개의 사례가 2004년도 연구가 지역자원을 토대로 전국 지자체를 분류함으로써 도출된 다섯 개 유형 중 네 개의 유형에 속하기 때문이다. 사례연구에서 배제된 유형은 전국에서 지역발전 수준이 비교적 높은 지자체를 포함한다. 그리고 여섯 개 사례지역과 전략산업은 전국의 지자체가 지역발전을 위해 전개하는 노력에서 나타나는 두 개의 주요한 추세를 반영한다. 즉 지식기반 하이테크 신규산업의 육성 그리고 지역의 전통적 자원과 농촌 어메니티에 바탕을 둔 사업 추진이 바로 그것이다.

사례연구에서 도출된 함의는 지역자원에 근거한 지역발전의 추진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지속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이해관계자를 조직화하는 제도적 역량이 부여되는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 주요결과와 평가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전 제시자로서 리더의 역할이 과소평가될 수 없다. 왜냐하면, 리더는 사실상 지역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에 대해 이해관계자를 조직화시키고 더 나아가 그들 간의 수평적 협력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리더십은 지역발전 추진에 보다 유용한 집단 리더십으로 발전될 수 있다. 리더는 지역 정치가와 지방정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업가 정신을 갖춘 지역 생산업자 및 사업가도 포괄할 수 있다.

둘째, 지역 내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 네트워크는 형성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위해, 네트워크는 지역 주민을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구축될 필요가 있고, 구성주체들에게 적절하게 역할이 부여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 외부 전문가 및 기업가와와의 협력은 지역 내 협력 네트워크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 점은 지역의 부와의 협력 네트워크가 지역의 능력상의 제약을 보완할 수 있을 때 유효하다.

넷째,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 산업의 육성은 지역발전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핵심 산업과 기능적으로 연계된 산업을 육성하는 전략, 즉 다각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각화 전략 단계적 접근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성공적인 지역발전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경향이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들은 성공사례가 보여주는 결과보다는 오히려 지역 이해관계자를 조직화시키고 지역발전에 자원을 활용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또한 성공사례에서 확립된 브랜드 파워와 이미지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제까지 제시된 결론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는 미래의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첫째, 사례연구가 보다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다. 본 연구의 사례연구는 지역주민 및 다른 이해관계자를 포괄하지 못하고 지방정부 공무원과 핵심 리더와의 면담조사에만 의존했다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사례의 수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그로 인해, 본 연구는 지역자원을 지역발전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 이해관계자를 어떻게 조직화시켜 지속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는가라는 문제에 관해 체계적이고 매뉴얼화된 지식을 제공하지 못한다.

>>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 구축: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Strategies for Self-sustaining Regional Development: For the Revision of the 4th Comprehensive National Territorial Plan

이동우, 윤양수, 권영섭, 김태환, 박형서, 김상욱, 변세일, 최자은

■ 배경 및 목적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은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이라는 기본 이념 하에 균형국토, 개방국토, 복지국토, 녹색국토, 통일국토의 5대 계획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으로, 1)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의 구축, 2) 동북아시아의 국토경영과 통일기반 조성, 3)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4) 아름답고 인간적인 도시·주거환경 조성, 5)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 관리, 6) 분권형 국토계획 및 집행체계 구축의 6가지를 들고 있다.

본 연구는 제4차 국토계획 수정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6가지 전략 가운데 첫 번째 전략인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의 구축에 관한 구체적인 시책방향을 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내용요약

제2장에서는 지역발전의 동향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하였다. 지역발전 동향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첫째, 지역 간 인구분포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은 과밀의 폐해에 시달리는 반면, 지방은 인구감소에 따른 활력저하를 경험하고 있다. 둘째, 인구분포의 불균형에 수반하여 수도권과 지방간의 경제력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셋째, 계속되는 이촌향도 이동으로 농촌지역의 공동화 및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넷째, 공장의 해외 이전 확대 등으로 지역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다섯째, 지역경쟁력의 중요한 요소인 문화·관광 여건이 미흡하다. 한편, 세계화를 비롯하여 노령화, 지방화, 정보화, 환경가치의 중시 등 여건의 변화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개별적으로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나, 전체적으로는 지역 간 격차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제3장에서는 지역개발정책의 기초와 목표, 전략을 설정하였다. 우선, 향후의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3가지 측면에서 지역개발정책의 기초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첫째, 수도권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소극적 지역균형발전정책에서 적극적 지역균형발전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경제의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지역 간 경쟁에서 국제적 지역 간 경쟁으로 경쟁의 대상이 바뀌어야 한다. 셋째,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의존적 개발행태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여야 하며, 중앙정부의 역할 또한 결과적 지역격차 해소에서 지역발전의 잠재력 제고로 변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2020년의 지역개발 정책 목표는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 구축’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1) 중추기능의 지방분산과 지역발전 잠재력 확충, 2) 지역특성을 살린 개성 있는 발전전략 추진, 3)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 4) 문화·관광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의 4가지를 선정하였다.

제4장에서는 첫 번째 전략인 중추기능의 지방 분산과 지역발전 잠재력 확충을 위한 시책들을 검토하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

신도시 건설, 수도권 소재 기업 및 대학의 지방 이전 유도, 10대 광역권 정비, 경제자유구역과 국제자유도시 등의 경제협력거점 조성, 기업도시 건설, 고속철도 역세권 정비 등의 시책들이 제안되었다.

제5장에서는 지역특성을 살린 개성 있는 지역발전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들이 공간단위별로 검토되었다. 우선 수도권에 대해서는 세계도시로의 육성시책이 제안되었다. 서울은 국제금융 및 국제업무 중심의 세계도시로, 인천은 동북아의 물류중심도시로의 육성시책이 검토되었으며, 경기도는 지식기반산업의 중심지 특화전략이 제시되었다. 둘째, 광역시와 도청소재지 등 지방 중심도시에 대해서는 중추관리기능을 강화하여 권역의 자립적·통합적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구도심을 재개발하는 한편, 권역 내 타 도시와의 기능분담과 연계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셋째, 중소도시에 대해서는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감안하여 전문기능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는데 문화예술도시, 대학도시, 관광·휴양도시, 의료산업도시, 첨단산업도시, 연구도시, 자동차도시, 영상도시, 산업·물류도시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농산어촌의 활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세부 전략과제들이 제시되었는데, 농업구조의 재편과 친환경·고품질 농업 육성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농림어업에 제조업, 관광, 유통 등이 융합된 산업클러스터 형성 유도, 체육·관광·레저·노인복지시설 등의 유치와 특성화된 관광마를 조성, 교육·의료·교통 등 농촌 기초생활여건 개선, 개발촉진지구·신활력지역 등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고 있는 낙후지역 지원사업의 통합,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통한 자립적 특화발전 유도 등이다.

제6장에서는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책들이 검토되었다. 지역의 특성과 산업기반을 고려한 권역별·지역별 전략산업 선정 및 육성, 종래의 기업집적형 산업정책에서 탈피하여 기업·대학·연구소·기업지원시설의 집적을 통한 혁신클러스터 구축, 창원·구

미·울산·반월·시화·광주·원주·군산 산업단지를 비롯한 기존 산업단지의 혁신 클러스터 전환시책 등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었다.

제7장에서는 문화·관광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전략이 검토되었다. 문화·관광자원의 특성 및 분포, 접근 교통체계,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전국을 특화된 몇 개의 문화관광권역으로 구분하는 방안, 남해안·서해안·동해안 및 접경지역의 광역관광벨트 구축 전략, 백제문화지역·유교문화지역·지리산 등 광역관광권에 대한 문화관광특정지역 지정방안, 관광레저도시 조성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었으며, 광역적 관광연계 교통망 확충, 종합적인 관광안내 정보시스템 구축,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및 생활문화자원의 체계적 발굴·육성, 지역문화산업의 자생적 기반확충을 위한 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주요결과와 평가

참여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특히 중요한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하여 왔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은 참여정부 국토정책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시책들이다. 본 연구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을 근간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공간전략과 시책을 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내용들은 2005년 12월 30일에 공표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에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 국토기본법에 의하여 국토종합계획은 5년마다 재검토된다. 따라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은 2010년을 전후하여 재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집행 성과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2010년 이후의 새로운 국토정책 형성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지방분권에 따른 국토도시계획체계 재정립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Readjustment of the National Territorial and Urban Planning System to the Decentralization of Power to Local Governments in Korea

김상조, 변필성, 정윤희

■ 배경 및 목적

최근 참여정부는 대통령직속으로 지방분권추진위원회를 두고 각종 승인 및 결정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다. 도시계획분야의 경우도 시장·군수가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의 승인권한은 이미 건설교통부장관에게로 도지사에게로 이양되었으며, 각 시·군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한 역시 도지사에게로 이양하고자 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도시계획관련 권한들이 지방으로 이양된다고 하더라도 중앙정부의 역할은 분명히 존재하며, 앞서 지적 하였던 환경의 건전성, 국가계획과의 연계, 도시정책방향의 적절성은 국토의 이용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만큼 이러한 우려의 해소를 위한 대안마련은 필수적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우선 국토·도시계획체계에서 각 계획체계가 가지는 기능과 역할을 분석하고, 도시기본계획 승인권한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이 차하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한다.

둘째,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방향을 도출하고 제도개선 방향에 따른 국토·도시계획체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내용요약

제2장에서는 국토·도시계획체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국토·도시계획체계의 개념과 국토계획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의 특징 및 운용실태를 분석하였다.

국토계획 분야와 도시계획 분야의 운용실태를 점검하면, 우선 국토계획 분야에 있어 문제점은 첫째, 국토기본법 내에서도 각각의 계획체계 간에 연계성이 부족하고 둘째, 선연적 공간발전방향이나 국가 기간시설사업 위주로 제시되어 실현성이 떨어지고 공간계획에 있어 예방적·유도적 기능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셋째로 국가주도의 계획 수립은 지방이나 시민의 참여가 제한되어 지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본다.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의 운용실태를 중점 점검하였는데, 우선 계획 내용차원에서 본다면 계획의 논리적 타당성, 친환경적 측면,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획수립 및 결정과정에서는 민주적인 절차 및 주민참여의 기회, 중앙부처 및 인근 지자체와의 협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너무 길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마지막으로 집행 및 운용상의 문제점으로는 도시기본계획이 시정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계획의 실현성과 민원의 대응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도시계획 분야에서의 지방분권과 향후 추진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0여 년 동안 도시기본계획의 승인권한을 행사해오던 중앙정부가 그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한 역시 시·군으로 이양하려 하고 있다.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도시계획 분야에서 최초의 권한 이양은 1982년 도시 기본계획이 도입되면서 도시관리계획(당시는 재정비계획)의 결정권한이 도지사에게로 이양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도시기본계획의 승인권한이 많은 논쟁 끝에 시·군에서 수립하는 것에 한해서 도지사에게로 이양되었고,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한은 도사에서 시·군에게로 이양하는 방안이 대하여 검토 중이다.

우선 도시기본계획의 운용실태와 비교하여 승인권한의 이양 후의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우선, 주민참여의 기회 확대와 함께 절차상에 있어 보다 민주적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며 둘째, 기본계획 승인기간의 단축으로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으며 셋째, 해당지자체의 정책승인과정에서 중요한 참고도서로서의 가치를 높일 뿐 아니라 계획의 실현성을 높이고 민원에 대한 대응성을 높여줄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러나 부정적 효과를 살펴보면 도시기본계획의 승인권한 이양은 첫째, 국가계획을 포함한 상위계획이나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이며, 둘째, 중앙관계기관과의 협의나 인근지자체와의 협의에 있어 상당한 갈등을 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계획의 논리적 타당성과 친환경적인 측면 역시 낮아질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어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의 시·군 이양은 국가계획 및 도계획과의 연계성 약화나 아직 도시계획 역량이 부족한 시·군에서 민원에 좌우되는 도시계획이 수립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도시계획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지자체장의 무리한 도시계획 행보에 대하여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따라서, 국토·도시계획체계의 재정립을 위한 개선 과제로는 첫째, 도시계획체계간의 연계강화, 둘째, 공간계획을 위한 일반적·객관적 기준제시, 셋째, 상향식 접근방식에 의한 계획수립으로 들었다.

4, 5장에서는 도시기본계획 승인권한이 중앙정부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으로써 촉발되는 계획분야에서의 지방분권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향후 우리나라 국토·도시계획체계 개편의 기본방향을 논의하였다. 기본방향은 국토·도시계획체계를 지방분권이라는 상황에 알맞게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중앙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고 및 역량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도시계획 승인 및 결정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제도 개선은 결국 중앙정부가 이들의 심의과정을 통하여 주요하게 다루었던 세 가지 주안점, 즉 환경의 건전성, 도시정책의 적절성, 국가계획과의 연계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계획수립과정에서 초점을 맞추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대세로 기울어진 지방분권의 취지를 존중하고, 도시계획 결정권한의 지방이양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역할을 제고시키고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객관적인 기준을 일반화시키는 정책개발에 주력하고, 지방의 도시계획 입안과정에 협의주체로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와 함께 현시정에 정통하면서도 기초자치단체를 관리할 수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즉 광역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에서 국가정책 및 계획의 방향을 전달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요구를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가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는 도시환경이 건전할 수 있도록 과도한 선심성 도시계획을 억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소수 특권계층에 의한 계획의 전유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계획수립과정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통해 자정능력을 키우고 전문 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따른 도시계획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만이 현시정사의 물이해와 지나친 간섭이라는 지방정부의 불만을 해소하고 지방정부의 계획권 결

정권한을 존중하여 지방분권의 취지를 살리는 길일 것이다.

■ 주요결과와 평가

5장은 제4장에서 논의한 지방분권에 따른 우리나라 국토도시계획체계 재정립을 위해 요구되는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의 역할제고 및 역량강화 방안을 토대로 해당 체계의 재정립방안을 단기적 대안과 중장기적 대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단기적 대안은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적응기간을 갖게 하기 위해 현 체계를 유지하되, 도시계획 승인 또는 결정권한의 이양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는 차원에서 강구되었다. 단기적 대안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가질 수 있다. 첫째, 중앙정부 차원의 (가칭)도시정책 가이드라인 제시와 중장기 도시정책개발이 급선무일 것이다. 둘째는 광역도시계획을 활성화시켜 현재 필요한 경우에만 수립하게 되어 있는 광역도시계획을 특별시 및 광역시, 인구 50만 명(또는 30만 명) 이상의 중급도시와 그 인접한 도시는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한다. 셋째는 통합도시계획의 운용으로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시·군이 아닌 경우,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통합해서 수립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는 실질적인 시민참여 및 중앙정부·인접지자체와의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가칭)계획수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 중앙정부의 파견관, 인접 지자체의 담당공무원, 전문가 등이 수립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중장기적인 대안으로서는, 단기적 대안에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만 적용토록 한 도시정책 가이드라인을 우리나라 공간정책과 관련된 모든 제도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국토·도시정책 가이드라인(가칭)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도시정책 가이드라인은 국토종합계획이나 도종합계획과의 법적 위계 및 효력 측면에서 중복될 가능성

이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국토정책에 대한 방향은 국토·도시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SOC사업의 경우는 국토기본법의 부문별 계획으로 대체하며 국토종합계획은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동시에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는 도종합계획과 단기적인 대안으로 제시하였던 광역도시계획을 모두 (가칭)지역정책 가이드라인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도종합계획은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단기적 대안으로 제안되었던 광역도시계획은 원래의 취지대로 인접한 지자체들 간의 특성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체제로 환원시킨다. 또한 단기적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통합도시계획을 전 시·군으로 확대하여 원하는 시·군의 경우 통합적으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한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농공단지의 혁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novation Strategy of the Rural Industrial Complex for Activating Regional Economy

배경화, 김태환

■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지역의 경제활성화와 농외소득원의 창출, 더 나아가서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위해 현재의 농공단지에 대해 지역혁신단지로의 전환과 역할 재정립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의 농공단지 조성정책은 “농촌지역에 소규모 공업단지를 건설하고, 여기에 기업체를 집단적으로 유치하는 것인데 값싼 공업 용지를 마련하고 조세감면, 금융지원,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체를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살린다는 점”에서 그동안 개별 분산적으로 추진한 농촌개발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최근 참여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낙후지역개발이라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침체된 농어촌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산업구조 개편을 촉진하기 위한 균형정책 수단으로서 농공단지 조성정책이 갖는 중요성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낙후지역인 농어촌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농공단지에 대한 혁신과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새로운 개념의 지역혁신단지로의 전환이 시급한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 내용요약

우리나라의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은 대중교통 부족, 인력난, 주거지 등 인프라 부족, 공공이용 부대시설 부족 등 다양한 부문에서 애로사항 및 불편한 점을 호소하고 있으며, 판매와 마케팅 등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농공단지의 지역혁신단지로의 전환을 위한 전제조건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농공단지가 단순히 농외소득정책 중의 하나가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농공단지가 국가경제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로서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1) 「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의 개정과 적용을 농공단지의 현실에 맞게 해야 할 것이다. 2) 향토산업과의 연계성을 통해 농공단지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3) 수요자중심의 현장 밀착형 지원체제의 구축을 위해서, 기술·경영지도 및 판로지원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4) 단지조성 및 운영·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공단지 조성 및 지원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역할을 강화하여 낙후지역 및 지역균형발전의 전담기구화하는 등의 다양한 제도적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가균형발전정책 측면에서는 1) 농공단지가 들어서 있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따라야 한다. 2)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한 농촌지역의 혁신 및 개발을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들간의 파트너십이 강조되는 한편, 전문가 그룹의 참여가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3)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지역혁신단지로 효과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혁신인프라와 혁신주체의 내발적 자생력을 길러주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농공단지 유형을 산업창출형과 산업복

합형으로 구분하여 유치산업, 주변인프라, 혁신환경 조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산업창출형 농공단지란, “기존에 추가지원 농어촌지역 및 우선지원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농공단지”를 의미한다. 이러한 산업창출형 농공단지는 지원프로그램의 차별화를 통해 입주기업은 물론, 농공단지를 통합화하고 구조조정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산업복합형 농공단지란, “일반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농공단지로서 산업의 창업 및 성장인프라가 일정 수준 갖추어져 있어 자체적인 성장이 가능하며, 대도시와 수도권에 인접한 농공단지”를 의미한다. 이 유형의 농공단지는 산업창출형 농공단지와는 달리 다른 무엇보다 주변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연구소, 대학, 공공기관 등과 같은 지역 혁신주체와 어떻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느냐가 중요한 성공의 관건이다.

■ 주요결과와 평가

본 보고서에서는 낙후된 농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자생력을 길러 주고, 혁신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농공단지를 지역혁신단지로의 전환 전략을 살펴보았다. 과거 농공단지 조성정책이 확대 일변도의 정책이었다면, 앞으로의 정책방향은 농촌지역의 혁신 메커니즘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립해야 할 시점이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우선, 농공단지가 우리나라 지역경제 현실에 적합한 소규모 지역 혁신단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국가 및 지방 산업단지와의 효율적인 네트워크 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다. 둘째, 농촌지역경제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기존 농공단지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현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있어 무분별한 선진국 지역혁신체제의 답습과 모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정부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차단이 필요하다. 특히, 새로운 형태의

산업단지 조성보다는 기존 농공단지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유효 적절한 한국형 지역혁신단지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농공단지의 지역혁신단지로 차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단지를 선별하고, 그 유형에 따라 단지를 차별화·전문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국가균형발전정책에 있어 과거 농공단지 조성정책이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정책이라면, 지금부터는 지방정부와 정책추진기관들이 상호협력하여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혁신인프라로서 거듭나야 할 것이다.

>> 지역특성화 발전을 위한 혁신 클러스터 육성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nnovation Cluster Strategy for Regional Specialization

권영섭, 정석희, 강호제, 박경현

■ 배경 및 목적

지방에서는 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갖는 상품을 개발하고 기업 활동하기 용이한 체제가 갖추어져 있는 곳이 그나마 대도시다. 대도시는 지식기반경제를 견인할 교육, 연구, 사회 문화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혁신 클러스터 성과는 대도시에 편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과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지방 3개 대도시의 대표적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혁신환경, 혁신 창출수준,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의 강·약점 등을 분석함으로써 클러스터의 발전수준과 현재의 위상을 밝히고 성공적인 혁신 클러스터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 내용요약

지방대도시들이 특정산업과 혁신자원에서 어느 정도 특화·집적을 이루고 있으며, 어떤 제도적 지원들을 받고 있는지, 특화산업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상의 전략산업과 일치하는지 분석하였다. 그 중에서도 전략산업으로서 해당지역을 대표할 만한 산업, 정부지원 사업으로 지역산업을 기 추진하여 어느 정도 기반이 있는 사례, 그리고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여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에서 각 한 개 대도시 전략산업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대도시 전략산업은 부산 기계 부품·소재산업, 광주 광산업 그리고 대전 정보통신산업이다. 각각의 산업을 대상으로 지역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

고 집적규모, 생산연계, 연구개발 및 기술협력연계, 혁신수준 및 유형, 전략산업 클러스터 내 기업들의 수요 등을 파악하였다.

부산, 광주, 대전을 대상으로 한 전략산업 클러스터 실태분석에서 공통점은 첫째, 3개 사례지역 전략산업 클러스터 내 기업들의 혁신창출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고객기업이며, 혁신의 수준은 국내최초가 대부분이다. 둘째, 구매·판매연계로 본 국지적(동일시군) 집적 정도는 높지 않고, 지역적 집적수준은 전략산업의 공간 범위와 일치하고 있다. 셋째, 사회적 자본 형성의 기초가 되는 네트워크 형성 수준이 전반적으로 취약하다.

부산·광주·대전 클러스터의 발전단계를 보면 산업의 집적수준은 부산이 3단계로 가장 높고 광주와 대전은 형성기로 나타났다. 혁신지원환경은 대전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혁신인프라에 해당하는 인력양성, 연구개발 활동, 기술 인프라, 지식서비스, 금융지원, 기술거점, 정보화 등에서 대전은 부산과 광주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부산과 광주 역시 3단계에 있어서 낮은 수준이라고는 볼 수 없다. 혁신지원 환경은 클러스터의 산업 집적수준, 혁신지원환경, 상호관련성, 혁신성 및 국제성 네 가지 분야 중 가장 우수한 분야다.

상호관련성은 국지적 지역 내 고객-공급자 관계, 연구개발 네트워크 관계, 지식 및 비전 공유 관계로 측정하였는데, 부산, 광주, 대전 모두 2단계로 나타났다. 국지적 지역 내 부가가치체인상의 혁신주체들 간 연계가 긴밀할 때 상호관련성은 높게 나타난다.

혁신성 및 국제성은 연구개발비 비중, 종사자 1인당

매출액, 혁신경험 기업 비중, 세계최초 혁신 비중, 1인당 수출액, 해외구매·판매거래 비중, 해외와의 공동연구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연구개발비 비중, 혁신경험 기업 비중, 혁신수준(세계최초비중), 1인당 수출액 등이 우수한 광주가 2단계 수준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부산과 대전은 1단계로 평가되었다.

부산 기계 부품·소재산업 클러스터의 경우 혁신 클러스터로 성장·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특정지역 부문에서 집적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기관과 연계기관을 발굴 육성하여야 장기적으로 클러스터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개발을 조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공공연구기관을 유지하거나 신규 설립하여 지역기업들의 연구개발수요를 충족시켜, 기술력 있는 기업들을 활용한 동반성장을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혁신적 기업들의 비중을 높여나가고 이를 위해서는 공동 연구개발 사업을 활발히 추진·연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광주 광산업 클러스터가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핵심기업이 지역 내 광관련 중소기업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 각종 공동연구개발, 세미나, 연구회, 비공식 모임 등을 활성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으며, 연구기관-소기업 연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산업의 집적수준이 아직 취약하여 기업들의 집적과 연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대전 정보통신산업 클러스터가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특구사업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산업을 선택과 집중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지역 내 수요가 적은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타 지역 전략산업육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전략산업과 관계가 없는 연구기관이 이전한 이전지에는 세계적인 대기업, 기술력을 지닌 중견기업, 연구개발센터 등을 유치하여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산학연관의 협력을 통해 벤처기업과 대기업의 연계를 통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인 지원도 요구된다. 특히 산업의 집적 수

준이 취약하여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의 집적과 연계를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주요결과와 평가

본 연구의 특징은 다양한 자료와 연구방법 활용, 특히 공간검색통계량을 활용한 집적지 도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상의 전략산업 중 가장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3개 대도시 전략산업 선정, 3개 대도시 전략산업 클러스터가 벤치마킹할 만한 세계에서 가장 유사하고 적합한 사례, 3개 대도시 전략산업 클러스터의 발전수준과 단계 분석 등을 추진하여 육성방안을 도출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연구과정에서 도출된 정책 권의사항으로는 세 가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각 지역이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지역이 혁신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특성화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기간인 5년이라는 단기간 내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3단계에서는 지역 간 균형을 목표로 삼고 도농 간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각 지역은 지역이 가진 고유한 자원을 살려서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정책사업을 발굴하여 중앙에 제시하고 예산을 배정받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 각 지역은 특성화발전을 하게 되며, 서로 나눌 것이 있기 때문에 협력이 가능하고 상생발전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수시 및 수탁연구

>>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수립연구

Master Plan for Busan Metropolitan City (2000-2020)

신정철, 이인재, 박용희, 왕광익, 김형진, 임형빈, 신소영

■ 배경 및 목적

부산광역시는 21세기를 맞이하여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추진사업 등의 수용,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의 활용 및 관리방향의 제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른 새로운 법체계에 의거한 장기발전방향 제시의 필요성이 증대하게 되었다.

이에 부산광역시는 기존 도시기본계획을 재검토하고, 21세기 동북아시대의 해양수도 건설을 위한 새로운 도시발전의 미래상 수립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방향을 마련하고자 이 연구를 추진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바람직한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등 급격한 도시여건변화에 부응하며, 토지이용, 기반시설, 공원·녹지 등 물리적 계획을 수립하고, 인구, 산업 등 사회·경제적 측면을 포괄하여 도시관리계획 등 하위계획의 지침이 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내용요약

본 연구에서는 첫째, 계획수립에 있어서 시민 홈페이지 운영, 시민설문조사, 공청회 개최를 통한 시민참여, 부문별 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역대학의 참여, 기업체 기업환경 설문조사 및 면담 실시를 통한 기업체 참여, 지자체 연구기관 및 도시계획관련 전문가의 연구심의회 개최를 통한 전문가 그룹의 참여, 시민단체 협의

회의 의견수렴을 통한 시민단체의 참여 등 다양한 참여 주체를 통한 의견수렴에 노력하였다.

둘째, 2020년 목표연도 계획인구를 410만 인으로 설정하였으며, 부산의 21세기 미래상의 기조로서는 '삶의 질 향상·경쟁력 강화·문화의 육성을 통한 국제기반의 구축'을 바탕으로 생활기반·복지의 거점, 항만물류거점, 무역·금융거점, 정보·관광거점, 역사전통·예술거점을 추구하여 '세계도시 국제교류거점 해양수도 : 부산'을 미래상으로 설정하였다.

셋째, 계획의 주요내용으로 동북아 경제중심 도약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완성, 국제허브항으로 부산신항 본격가동, 항만배후도로 완공, 동남경제권 중추기능강화를 위한 신국제공항 건설, 서부산권 배후주거 기반구축, 도심 속 생태공원과 다수의 소규모 공원 조성, 고속철도 역세권개발과 광역관광거점 위상 확립, 동부산 관광단지 조성에 의한 체류형 관광의 메카 구축 등을 미래의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권역별로는 서부산권이 생산·물류·자연생태 거점으로, 중부산권은 무역·금융 거점으로 동부산권은 관광·정보·컨벤션 거점으로 각각 특화하였다.

본 연구는 2005년 2월 24일에 과업을 종료하였으며, 최종보고서, 요약보고서, 자료집 등의 성과품을 부산광역시에 납품하였다.

연구기간: 2000. 8. 17~2005. 2. 24
서지사항: 373면
발주기관: 부산광역시

>> 2025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연구

Master Plan for Suwon City (2005-2025)

신정철, 김상욱, 임정민, 황정현

수원시는 국내여건 변화, 국가균형발전 정책, 수도권 지방분산책에 부응하고, 광교테크노밸리 개발, 호매실택지지구 개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도시여건변화에 대응하는 계획수립의 필요성이 증대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재검토하고 2025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수원시 도시비전의 설정과,

도시공간구조의 틀 및 부문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기간: 2005. 4. 5~2006. 4. 5
발주기관: 수원시

>> 2025 파주도시기본계획

2025 Master Plan of Paju City

민범식, 문채, 전병혜, 김영철, 이범현, 노희순, 안용진, 박익순

■ 배경 및 목적

비도시지역은 별도의 시·군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었으나, 1990년대 비도시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이 기반시설부족 등 사회적 문제가 되자 정부에서는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행정구역 내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전체면적을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재수립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파주시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규정의 완화로 지금까지 수도권에 신설될 수 없었던 대규모 첨단제조업 공장인 엘지필립스 LCD 공장이 입주하게 되고, 수도권 제2기 신도시인 파

주운정신도시가 개발되는 등 인구와 산업의 기반이 급격하게 변모하는 중이었다.

이러한 제도상의 변화 및 새로운 개발여건의 변화를 수용하여 도시를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어 기존의 ‘2016 파주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대폭적으로 수정하는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다.

■ 내용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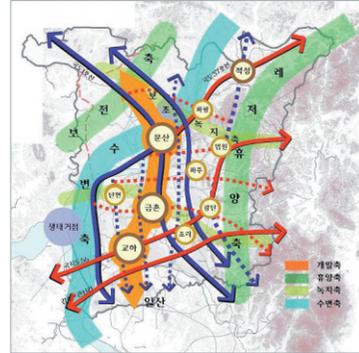
도시의 미래상은 파주시의 여건과 정책의지 및 주민 의견 등을 바탕으로 하여 설정하였는데, 우선 경제기반은 남북교류의 증대에 따른 남북교류협력기능과, LCD

단지 등 첨단디지털산업기능, 출판문화기능을 중추로 하는 미래산업기능 중심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혁신 클러스터가 될 수 있도록 전자산업단지와 같은 관련산업기능을 보완하고 혁신기능으로 교육 및 연구개발, 창작단지를 추가로 도입하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 기존의 양호한 생태환경을 바탕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미래상으로 설정하였다. 난개발과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도록 시가화에정용지는 기존의 도시지역에 밀집하여 개발되도록 배치하였고, 도시 내에서는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중저밀도의 시가지가 되도록 인구를 배분하였다.

그리고 도시전체에 골고루 생활편의시설을 공급할 수 있도록 다핵공간구조를 조성하도록 하였다. 다만 생태환경을 고려하여 집중분산형 다핵공간구조로 계획하였고, 도시와 농촌지역을 원활하게 연계하기 위해 그물 형태의 도로망을 구상하였다.

〈종합토지이용구상도〉



연구기간: 2003. 5. 2~2006. 2. 24
 서지사항: 388면
 발주기관: 파주시

>> 경기 서북부 국제업무 신시가지개발 타당성분석 연구

A Feasibility Study for the International Business District in the Western-Northern Area of Gyeonggi Province

정석희, 황성수, 한미정, 최명섭

고양, 파주, 김포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경제 및 문화활동 중심성 강화의 일환으로 고양시 일원에 지역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제업무 및 상업기능 중심의 신시가지 개발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의 수도권 공간구조 개편전략을 재검토하며, 서북부지역의 개발여건 및 잠재력을 발굴한 후, 수도권 타지역의 국제업무용지 수급 비교분석을 근간으로 당해지역의 도입시설별 입지수요의 예측과 개발구상 및 사업성 분석 등 '신시가지개발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분

석하고자 한다.

연구기간: 2004. 1. 27~2004. 12. 26(연구 중지)
 발주기관: 대한주택공사

>> 공공갈등예방 및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System for the Public Conflict Assessment and Management

박형서, 황승미, 김희주

최근 많은 공공사업과 관련된 갈등이 발생하여 사업의 추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간정책과 개발사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의 관리와 해소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다.

첫 장에서는 갈등예방과 해소를 위한 사전절차나 기법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규제협상, 시나리오 워크숍, 합의회의, 시민배심원, 공론조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소를 위하여 이와 같은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 절차를 담고 있는 갈등기본법안을 마련 중에 있다.

제2장에서는 갈등관리의 절차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례연구 부분으로 울산-포항간 복선전철 노선과 관련된 갈등사례가 시범적으로 선정되었다. 시범사업 분석에는 갈등기본법(안)에서 정하고 있는 갈등영향분석과 조정을 통한 합의형성 절차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갈등초기의 갈등관리가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소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둘째, 갈등조정이나 관리 중에 기본적인 운영규칙 적용이나 회합방법은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갈등영향분석과 갈등조정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지만 매우 중요하다. 이해관계자나 조정자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이슈와 관계된 공공갈등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분석방법을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기간: 2005. 6. 29~2005. 12. 28
서지사항: 206면
발주처: 건설교통부

>> 과천시지식정보타운(가칭) 개발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Research on a Plan Development for Gwacheon Knowledge-Information Town and Its Feasibility Study

김현식, 이용우, 김성수, 신동진, 변세일, 임상연, 임지영, 김현중, 김훈상, 박승미, 김광구, 문채

■ 배경 및 목적

과천시는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계획적 개발과 과천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서는 지식정보기능의 유치와 필요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에 따른 행정기능의 이전과 기존 시가지의 재건축 등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합리적 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이에 과천시는 자족적이고 경쟁력 있는 지식정보타운의 개발, 환경친화적이고 편하고 즐기며 살 수 있는 도시개발, 시장 주도적이고 실천 가능한 개발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국토연구원과 경기개발연구원에 본 연구용역을 의뢰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과천시의 미래비전을 제시함과 동시에 과천시지식정보타운을 조성함에 있어 지침으로 활용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이다. 세부목적은 과천시의 특성에 적합한 지식기반산업 집적지 조성방안과 개발여건, 유치기능, 입지수요 등을 감안한 수요자중심의 개발구상 및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전략적 활용방안 및 향후 법정계획의 구체적 방향에 대한 지침을 각각 제시하는 것이다.

■ 내용요약

본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과천시지식정보타운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과천시지식정보타운의 개발비전 및 개발개념을 설정하고 대상지 개발여건 검토 및 관련 계획, 법제도를 검토한 뒤 투자수요 및 유치기능을 분석하였다.

둘째는 과천시지식정보타운의 개발구상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과천시지식정보타운의 개발구상을 수립하고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한 뒤 부문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선도사업의 재무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셋째는 과천시지식정보타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집행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재원조달 및 투자유치 촉진방안과 개발추진 및 관리방안을 각각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천시의 차세대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자족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클러스터링 및 혁신환경 조성, 수요자 중심 개발, 매력적인 도시환경을 창출하는 '기업하기 좋고 살고싶은 과천시지식정보타운'이라는 비전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하여 관련 계획 및 법제도를 검토한 결과 현재 과천시지식정보타운 대상지는 수도권정비계획상의 과밀 억제권에 속하여 제조업의 입지가 어렵기 때문에 업무·연구·상업·주거기능이 어우러진 복합도시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대상지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영개발을 통해 단계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여건분석을 통해 각종 규제 및 개발계약에도 불구하고 과천시지식정보타운 대상지는 첨단지식산업의 유치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구현하기에 양호한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유치기능 및 투자수요를 분석한 결과, 과천시지식정보타운은 EGR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하는 업무지

역과 입주수요가 충분한 주거지역을 1:1의 비율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주변지역과의 경쟁회피, 틈새시장 입지수요 선점, 인접지역 산업클러스터 간 연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터닝, 게임, IT R&D를 중심으로 한 EGR클러스터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 개략 개발규모는 전체 개발가능 면적 25만 평 중 12.8만 평(51.4%)은 첨단업무용지 위주의 업무용지로, 12.2만 평(48.6%)은 주거수요가 충분한 주거용지로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EGR클러스터 육성, 과천 지역혁신체계구축, 장소마케팅, 성공사례 벤치마킹, 차별적인 투자유치 촉진전략, 주체 간 효율적 역할분담 등이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셋째, 첨단지식기반 업무단지, 친환경 복합단지, 쾌적한 주거단지라는 기본 방향에 따라 업무용지와 주거용지를 1:1로 배분하고 저밀도의 환경친화적 개발밀도를 설정하며 첨단업무 용지를 중심지 주변에 배치하는 공간구조에 의거하여 각 부문별 구상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본구상의 취지에 부합하게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공원 및 녹지계획 등 세부계획의 내용을 담는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였다. 기본구상에서 토지이용계획에서 유치기능에 따른 zoning 개념을 도입한 것과 경관계획에서 주요결절부에 거점경관을 계획하고 통경 축을 확보한 것, 부문별 계획에서 보육정보센터 설치, U-Circle 도입 등은 새로운 시도로 돋보이는 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공공선도 사업 중 과천시지식정보센터의 경우에는 재무적 타당성이 없으나 과천시지식정보타운의 활성화 위해 공익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역세권PF사업의 경우에는 재무적 타당성은 있으나 분양가 조정 및 건축공사비 절감 등의 대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계획단계, 토지개발단계, 건축단계 등 단계별 재원조달, 마케팅전략, 개발주체, 관리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였다.

재원조달은 계획단계에서는 기금 및 지방채 발행, 토지개발단계에서는 지분 50%의 공동회계방식, 건축단계에서는 토지분양대금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마케팅전략은 대상별로 전략을 달리하되 계획단계에서는 과천시 이미지 및 입지여건 홍보, 토지개발단계에서는 핵심기업의 유치, 건축단계에서는 개발사업자 및 투자자의 유치가 중요하다. 개발주체는 토지개발단계에서는 지분참여방식에 의한 공동주체로 하고, 건축단계에서는 과천시지식정보센터의 경우 과천시 단독으로 추진하고 역세권PF사업은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리운영을 위한 단계별 추진조직은 계획단계, 토지개발 및 건축단계, 관리운영단계 모두 사업소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었다.

본 과업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국토연구원과 경기개발연구원 외에도 11개 기관의 전문가들이 연구에 동참하였고 수많은 협의회와 자문회의를 통해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약 2년간에 걸친 연구 끝에 수립한 과천시지식정보타운 개발계획이 담긴 연구보고서를 준공일인 2005년 4월 26일에 과천시에 납품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가능지역의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개발방안과 환경친화적이며 국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지식정보타운 개발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과천시의 후속 개발계획, 각종 영향평가, 실시계획의 가이드라인이 되고 수요자 중심의 실현가능한 투자유치계획을 수립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광역교통체계 기반의 포천 신도시 개발 전략 연구

Research on the Developmental Strategy of Pochon New Town Based on Metropolitan Transit System

염형민, 진정수, 김경석, 조춘만, 최창영, 박찬호, 이경아, 이진희, 윤별아

■ 배경 및 목적

포천은 상대적으로 도시개발수준이 낙후되어 있으나, 개발압력이 증가하면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도시 성장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도시성장에 필요한 적정 대상지의 체계적인 개발과 새로운 대중교통시설 건설을 통해 도시의 효율적인 성장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대중교통체계와 연계한 도시개발구상을 사전에 준비하여 현재 수행중인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기간: 2004. 2. 27~2006. 6. 26
발주기관: 포천시청, 대한주택공사

>> 김포신도시 개발구상 및 주변지역 관리방안 연구

An Analysis of Master Planning and Growth Control Planning in the Peripheral Area for Gimpo New Town

정석희, 황성수, 김형진, 최명섭, 신연

정부는 수도권 주거생활 안정과 난개발방지를 위해 김포시 양촌면 일원에 약 332만 평 규모의 자족적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자족적 도시기능 및 효율적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서는 기존의 계획지표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환경성·자족성을 만족하는 개발구상을 도출하며 이와 더불어 사업대상지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주변지역관리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기간: 2004. 11. 30~2006. 12. 29
발주기관: 한국토지공사

>> 내륙 지방거점도시 삼각테크노벨트 구축방안

Establishment of Triangle Techno-Belt in Inland Large Cities

권영섭, 이동우, 박형서, 박경현

■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수도권 집중과 국토 불균형의 심화로 기업 활동과 혁신 창출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내륙 지방거점도시(지방대도시)인 대구·광주·대전을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하여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장차 삼각 테크노벨트를 구축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R&D 특구 개념 및 지역혁신정책 동향을 점검하고, 내륙 지방거점도시 R&D 특구 필요성 및 타당성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R&D 특구를 통한 혁신 클러스터 형성 방안까지 포괄하여 삼각 테크노벨트 구축을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 내용요약

R&D 특구는 다른 곳에서는 실시하지 않는 R&D에 관련된 특별한 제도를 실시하는 한정된 지역으로 경제 특구의 한 종류이자 지식 창조형 경제특구의 한 유형으로 생산, 교역의 복합 이외에 서비스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세계적 수준의 신상품과 서비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리적 공간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R&D에 기반한 혁신 클러스터 개발을 목표로 미국의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RTP), 프랑스 소피아 앙피폴리스, 핀란드 올루 테크노폴리스, 일본의 간사이 학술문화연구소 등을 건설하였으며, 아일랜드와 폴란드는 특구를 활용한 클러스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지적 자원 유치, 내부의 특장점을

활용한 내생적 발전, 상생을 통한 발전, 지역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특구를 조성, 지식창조형·미래형 특구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지식기반경제시대에 성공적인 지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신생기업을 대기업으로 신속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능력은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보다는 대도시가 더 높게 나타난다. 지방대도시에는 지방경제 고도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할 기능들이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내륙 지방거점도시는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교육·행정·문화, 교통접근성 그리고 권역 내 파급효과 등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륙 지방거점도시의 혁신환경에 대한 SWOT 분석을 통해 내륙 지방거점도시 R&D특구의 필요성은 자립형 지방화의 구체적 실천 수단, 규제완화와 혁신촉진환경, 선택의 폭이 넓은 선진형 국토, 지역 특화·전략산업을 키워낼 신산업 공간 등으로 나타났으며, R&D 특구의 타당성은 R&D 거점의 기 구축, 권역 내 지리적 최적 거점, 대도시 혁신역량 최대한 활용 등으로 분석되었다.

내륙지방거점도시의 R&D 특구지정은 국가균형발전, 국가과학기술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내륙 지방거점도시에 R&D 특구를 동시 지정 시 참여정부의 국정목표가 달성가능하며, 혁신 클러스터 형성, 우수두뇌유출방지, 대도시 경제회생, 자립형 지방화 달성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R&D 특구 지정을 통한 혁신 클러스터 형성을 위하여 글로벌 수준의 정주여건, 전략산업·특화산업별 혁신

02

클러스터 형성, 연구개발 역량강화 및 산업화, 상업화 지원체제 구축 및 마케팅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 삼각 테크노벨트 구축은 국토공간을 위계구조에서 네트워크 구조로 개편하고 국내·외 지역 간 교류 확대로 이어지게 된다. 결국 지식기반산업 육성으로 신성장

잠재산업 집적지와 연구협력을 통한 혁신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국토균형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다.

연구기간: 2004. 5. 28~2005. 2. 18
서지사항: 본 보고서 300면, 요약 보고서 102면

>> 도시화지역 획정을 위한 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the System for the Delimitation of Urbanized Areas in Korea

김광익, 변필성, 최병남, 장호연

최근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결합된 도농복합시가 형성되면서 시 명칭이 있는 기초지자체 전체를 도시지역으로 간주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초단위지역인 통계청의 기초단위 구를 기초로하여 도시화된 지역의 획정이 정책적·통계적으로 필요해졌다.

이를 위하여 급속한 도시화로 대도시권으로 성장하고 있는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도시화지역 경계설정을 수행하며, 아울러 GIS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고자 한다.

연구기간: 2005. 11. 28~2006. 7. 31
발주기관: 통계청

>> 산업입지제도 개편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Policy for the Industrial Site

류승한, 장철순, 황승미, 윤별아, 박영철

■ 배경 및 목적

기술혁신, 정보화 등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와 기업의 요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종합적인 산업단지 제도 개

편이 요구되고 있다. 지식기반경제시대를 뒷받침하고 성장동력을 지원할 수 있는 산업입지 개념 변화 및 관련 정책과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산업입지관련 여건 변화가 산업입지 개발 및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고, 이에 부합하는 새로운 산업입지 정책 방향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내용요약

산업입지 정책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해 우선 산업입지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산업입지 여건변화 전망과 대응과제를 설정하였다. 외국의 산업입지제도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산업입지 수요자, 공급자 및 전문가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산업입지제도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산업입지 정책 및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과 여건변화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산업입지제도 개편의 주요과제를 도출하였다. 첫째, 새로운 산업입지 개념 도입을 위하여 새로운 산업입지 제도적 틀을 구축, 둘째, 정책방안으로서 1) 산업입지 복합화정책 추진, 2) 기존 산업집적지역 구조재편 및 활성화, 3) 기업활동의 범세계화와 남북교류 확대에 대응, 4) 입지수요 감소에 대한 적극적 대응, 5) 지방화에 따른 합리적 산업입지 수급체계를 구축, 셋째, 종합적인 산업입지 개발·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외국의 산업입지제도 분석은 말레이시아, 일본, 영국, 대만 등을 대상으로 산업입지 관련법률과 개발제도, 산업입지 현황과 공급유형 및 공급체계, 산업단지 관리제도, 지원제도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산업단지 지원제도의 다양화와 확대, 산업구조 고도화에 부응하는 산업단지 유형 재설정, 공장 및 산업단지 재개발 활성화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실증분석은 산업입지에 대한 수요자(기업), 공급자(사업시행사, 지자체) 그리고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산업입지 정책 및 제도의 운용실태, 산업입지 수요특성조사 등으로 구성, 실행하여 산업입지 정책 방향 및 제도개편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산업입지제도 개편의 기본방향은 첫째, 기업의 요구와 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 개발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제도 명료화를 통해 산업입지에 대한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 둘째, 현안 문제와 국가 및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에 부합하도록 기술혁신을 촉진·지원하고, 환경과 지역사회를 고려하며, 지방분권화 경향에 부합하도록 한다. 셋째, 산업입지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개발유형 및 공급방식을 다양화한다.

산업입지제도 개편방안으로는 첫째, 국가 산업입지 정책 조정 역량 강화를 위해 1) 산업입지 공급계획 제도 개편, 2) “산업입지 정책심의회”의 기능 강화, 3) 국가의 산업입지 관련 기초조사 기능 강화, 둘째, 산업단지 개념 및 유형구분 체계 개편을 위해 1) 산업단지 개념 및 대상사업 범위를 확대, 2) 산업단지 유형구분 체계 개편, 셋째,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체계 개편을 위해 1) 산업단지 입주허용 업종분류체계화, 2) 산업단지 지정·관리권의 지방 이양 확대, 3) “산업단지 재지정” 제도 도입, 4) “복합단지” 개발 활성화, 5) “맞춤형 산업단지” 개발 제도 도입, 6) “임대형 산업입지” 공급 활성화, 7) 택지개발지구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허용, 넷째, 기존 산업입지의 재정비를 통한 산업입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1) “산업단지 재정비” 활성화, 2) 개별입지 집적지역 정비를 위한 “준산업단지” 제도의 도입, 3) “제2종 산업형 지구단위계획 지구”의 활성화, 다섯째, 산업입지 지원제도 개편을 위해 1)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2)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체계 개편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관련 법제 정비 추진을 위해 제도 개편 대안별 장단점을 비교하고 법률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 수도권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지방이전 추진방안 연구

The New Action Plan of Public Agency Relocation in Korea

김태환, 김광익, 이동우, 민범식, 정옥주, 김형진, 정유진

■ 배경 및 목적

수도권으로의 일극집중이 심화됨으로 인해 각종 집적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즉, 주택가격의 상승, 교통혼잡, 환경오염의 악화, 공공서비스 공급비용 증대 등 많은 문제가 노정되면서 집적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속하여 왔으나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거나 수도권 집중 및 지방의 낙후현상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방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립형 지방화를 추진할 내생적 역량이 소진되어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실천전략의 하나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전대상 수도권 공공기관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이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기관 이전정책의 실천력을 제고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 내용요약

지방이전 추진계획 수립에 관해서는 추진방식, 이전방식, 시도별 배치과정, 배치를 위한 세부사항 등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추진방식에서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일괄배치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지역별 배치의 기본원칙은 균형발전 목표달성을 위한 형평성 원칙, 지역의 특성화 발전을 지원하는 효율성 원칙, 그리고 이전주체의 의견수렴 세

가치를 제시하였다. 공공기관의 시도별 배치과정은 4단계(기능분류단계, 지역별 차등규모 산정단계, 이전주체의 의견 분석단계, 지역연계성 검토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세부 검토사항을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효율적 지방이전 추진방안에서는 추진절차 및 추진체계, 이전 지원방안, 자원조달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추진절차와 관련하여 지방이전계획 확정 발표 이후 시·도 내에서의 배치 결정, 기관의 지방이전계획 결정, 지역의 유치계획 결정, 이전지치 활용방안 확정, 집단이전단지 조성 및 이전추진 등 각 과정별로 검토되어야 할 조치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이전지원방안은 이전기관에 대한 지원과 이전직원에 대한 지원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지원사항을 검토하였다. 이전비용은 기관별로 현재 청사를 매각하여 조달함을 원칙을 하되, 직원들의 이사비용 등은 정부지원방안을 검토하였다.

공공기관의 이전지치와 관련하여 청사 및 부지소유기관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전지치 관리의 기본방향 및 세부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세부 활용방안은 용도지역이나 주변 환경 등 입지조건 및 건축물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네 가지 사례 유형별로 활용방안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전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인 지역발전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과 구체적 집행수단으로서 집단이전단지 또는 혁신도시 조성사례를 검토하였다.

연구기간: 2004. 2. 11~2005. 8. 10
 서지사항: 368면
 발주기관: 건설교통부

>> 수도권발전대책 국제용역에 따른 지원용역

The Project Management of 'Research on the Development Strategies of Capital Region in Korea'

이동우, 변필성, 심소희

■ 배경 및 목적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의 국토 균형발전 시책추진과 병행하여, 수도권은 인구 안정, 경쟁력 강화, 삶의 질 개선 등을 통해 세계중심도시의 하나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하여 여러 가지 범정부적 대책을 강구하여 왔으며, 2005년 5월 20일 개최된 제4차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서는 수도권의 경쟁력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전략 및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국제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수도권에 대한 진단 및 평가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하였다.

이에 건설교통부는 국제적 공신력을 갖춘 전문용역 기관으로 하여금 수도권의 경쟁력과 삶의 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함께 수도권을 세계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게 하여, 그 결과를 수도권 발전대책 및 수도권정비계획 등에 반영함으로써 수도권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수도권 발전대책 연구 용역'을 추진하였다. 이 연구는 '본 용역(수도권 발전대책 연구)'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제적인 전문연구기관을 선정·발주하고, 연구의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여, 용역업체의 원활한 연구진행을 지원함으로써, '본 용역' 연구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연구결과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되었다.

■ 내용요약

본 연구에서는 첫째, '본 용역(수도권 발전대책 연

구)' 수행을 위하여 최적의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각종 inquiry에 대한 답변, 선정절차에 대한 관련 기관회의, 제안서 접수, 업체평가기준 마련 및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 과업지시서 작성 등의 용역발주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지원하였다. 둘째, 용역업체(아서디리틀: ADL)의 원활한 연구수행을 지원하고 연구결과의 질을 높이고자, 착수보고 및 1, 2차에 걸친 공정보고를 통해 과업공정을 관리·감독하였으며, 과업설명회와 전문가간담회 및 최종보고회를 통한 의견 수렴 및 자문 과정을 거쳤다. 셋째, 2005년 12월 25일~26일간 서울 리츠칼튼호텔 금강홀에서 개최된 국제 심포지엄의 주제 및 프로그램 구성, 발표자 및 토론자 섭외, 초청장 발송 및 홍보, 행사 진행 등을 지원하여 국제심포지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게 하였다. 넷째, '본 용역' 과업의 성과품인 1차 중간보고서, 2차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초안을 검토하고 내용을 감리하였다.

본 연구의 지원에 힘입어 '본 용역'은 계약만료일인 2005년 12월 22일에 무사히 과업을 종료하였으며, 국·영문 최종보고서, 국·영문 요약보고서, 국문 자료집 등의 성과품을 건설교통부에 납품하였다.

연구기간: 2005. 7. 8~2005. 12. 24
서지사항: 108면
발주기관: 건설교통부

02

>> **옹진군 종합발전계획**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for Ongjin

정석희, 황성수, 황정현

■ **배경 및 목적**

서울시에서 서쪽으로 약 40km 이상 떨어진 옹진군은 23개의 유인도와 77개의 무인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흥도와 선재도는 연속되어 있고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대연평도, 소연평도는 남북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본 지역은 도서지역이 갖고 있는 지리적 특성과 옹진군만의 지정학적 여건 및 토지이용규제로 상당기간 개발이 억제됨에 따라 경제·사회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다. 그러나 옹진군은 인천국제공항,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항 등이 인접해 있고 남북화해·협력무드가 조성됨에 따라 이와 같은 여건을 활용할 경우 지역적으로 크게 발전할 도약기를 맞고 있다.

옹진군은 수도권의 12개 연안 시·군·구 중 특히 해수욕장, 갯벌 등 해양관광자원이 가장 많은 곳으로 이와 같은 지역의 여러 가지 잠재력을 활용할 경우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본 계획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도서종합개발계획, 접경지역종합계획,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여타 관련 계획의 지침과 내용들을 선별·반영함과 아울러 지역의 잠재력과 특성에 맞는 독자적 개발전략을 발굴, 이를 기본으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여 여타계획과 상호 연계된 실천적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내용요약**

본 계획은 기준연도 2003년, 목표연도 2013년의 중

장기 종합발전계획으로서 주택 및 택지개발, 토지이용, 교통·통신·전력과 상·하수도 및 쓰레기·분뇨처리 등의 기반시설 확충, 관광개발, 산업진흥, 교육 및 보건 복지 증진, 환경보전·관리의 7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들 부문별 계획에서 제시된 총 사업건수는 499건으로 사업비는 2조 5,777억 원이 산정 되었는데 바 전반기인 2004년~2008년간에는 전체의 69.9%인 1조 8,031억 원, 후반기인 2009년~2013년간에는 전체의 30.1%인 7,746억 원이다. 그리고 재원별 분담률은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을 47.5%: 31.1%: 21.4%로 책정하였는데 국비의 비중이 높은 것은 옹진군이 갖는 낙후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본 계획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여러 차례의 주민설명회와 전문가 간담회, 관계관 협의회를 거쳤으며 특히 옹진군 연안관리지역계획과의 상호보완성을 높였다.

연구기간: 2003. 11. 27~2005. 1. 25
서지사항: 360면
발주기관: 옹진군

>> 이집트 토지개발 정책 평가와 감시능력 강화사업

The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and Local Monitoring Systems to Observe and Evaluate Land Development Policies in Egypt

김현식, 박은관, 김미정, 강호제, 안용진, 이재석, 이정수

이집트는 현재 6,700만 명의 인구가 사막을 제외한 전 국토의 4%에 밀집하여 살고 있으며, 급속한 인구증가 및 도시집중화로 도시외곽지역의 계획적인 토지관리 체계의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이집트 측에서는 현재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비공식적이고 불법적인 난개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 측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토지개발방식 및 정책방향에 대한 기술지원을 요청하였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원조사업의 일환으로 본 과제는 수행되었다.

본 과제는 이집트의 토지개발 실태와 관련 제도를 분석하여 토지개발의 계획적 관리방안과 토지개발 사업방식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과 이용관리를 도모하고 경제발전 증진에 기여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연구기간: 2005. 7. 12~2007. 1. 11
발주기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

>> 전주광역권 도시계획수립 용역(1차)

Jeonju Wide Area Urban Plan

박형서, 진정수, 신정철, 김의식, 임영태, 김영단, 김희주, 최성환

본 전주광역도시 계획권 내에는 전주시를 비롯한 4개의 중소규모 도시를 포함하고 있다. 본 계획 권역지역의 도시 성장과 인구 유입에 따라 광역적 관점에서 지역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광역 공공시설과 관련된 지역정책의 협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광역계획은 상호협력을 위한 지침적 역할을 하게 될 지역의 장기비전, 토지이용, 공공시설 배치를 위한 기본적인

기준과 광역지역의 통합된 행정시스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기간: 2005. 6. 13~2006. 12. 19
발주처: 전라북도

>>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연구

Research on the Drafting of the 3rd Capital Region Readjustment Plan

이동우, 박형서, 이용우, 심소희

■ 배경 및 목적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국내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경제 개방화의 진전에 따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혁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제2차 수도권 정비계획(1997~2011)을 초기에 종료하고 새로운 수도권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담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2006~2020)을 입안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기간: 2005. 3. 4~(연구중지)
발주기관: 건설교통부

>> 중부내륙광역권 개발계획

The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for Central Inland Region towards the Year of 2020

박양호, 황성수, 인연정

■ 배경 및 목적

중부내륙권은 원주시, 충주시를 제외한 9개 시·군이 낙후도에 있어 전국 170개 시·군 중 하위 30%에 해당하는 낙후지역이며 특히 지역 내 광역 대도시나 국가산업단지의 부재, 도시 간의 인접성 미흡 등은 지역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본 권역은 산악, 수변공간 등 우수한 자연환경 그리고 삼국시대 및 조선조의 역사문화자원과 석회석 등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자원적, 지역적, 입지적 우위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권역은 자연 및 역사문화 관광자원, 지하자원의 공동개발·관리와 권역 내 3×3 격자형의 국가간선도로망 확충을 근간으로 지역 간 연계개발에 따른 지역의 정체성 부여, 응집력 제고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본 계획은 '균형국토' 창출을 위한 타 권역과의 유기적 개발, 다양한 자원의 환경친화적 개발과 효율적 이용 및 보전·관리를 통한 지역발전, 지역·도시개발의

체계적 추진, 첨단산업의 유치,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적정 확충 및 내륙물류기반조성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계획수립의 목적을 두고 있다.

■ 내용요약

본 계획은 기준연도 2000년, 목표연도 2020년의 장기종합발전계획으로서 크게 산업진흥, 관광개발, 사회복지증진, 문화체육진흥,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의 5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들 부문별 계획에서 제시된 총 사업건수는 70건으로 사업비는 8조 9,329억 원이 책정되었는데 2006년~2010년간에는 전체의 39.8%인 3조 5,513억 원, 2011년~2015년간에는 전체의 34.0%인 3조 412억 원, 2016년~2020년간에는 전체의 26.2%인 2조 3,405억 원을 배정하였다. 그리고 재원별 부담률은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을 45.1%: 21.5%: 33.4%로 하였는데 국비의 비중이 높은 것은 중부내륙권이 갖는 낙후성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본 계획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청회, 주민공람, 관계부처협의 및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국토정책위원회, 전문가 간담회, 관계관 협의회 등의 심의·협의를 거쳤으며 특히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과의 상호보완성을 높였다.

연구기간: 2001. 8. 1~2006. 2. 28
 서지사항: 425면(요약 보고서 235면)
 발주기관: 충청북도, 강원도, 경상북도

>> 철원 평화시 건설 기본구상 연구

A Study on the Conceptual Design for Cheorwon Peace City(New Town)

염형민, 진정수, 김영봉, 김현식, 최창영, 박찬호, 조미향, 최지영

21세기 국토통합의 실현을 기조로 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으로 접경지역의 종합적 관리 및 평화벨트 조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남북교류 활성화와 남북교류 정착을 위해 국토중앙지대의 철원에 ‘철원 평화시’ 건설과 지역특성을 살린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국토중심지대로

서의 역할 부여를 목적으로 한다.

연구기간: 2004. 12. 27~2006. 4. 26
 발주기관: 강원도

>>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학술용역)

A Development Plan for New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박재길, 민범식, 강태수, 최병남, 이춘용, 김상조, 조춘만, 김명수, 심우배, 권영상, 이범현, 김형진

■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12조에 근거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용하여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되 국제공모의 결과, 전략연구과제, 자문, 세미나,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 각 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을 위한 구체적 사업계획으로서, 각 부문별로 구체적인 결과물을 담은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기본방향 및 학술용역 부문에서 제시하는 기본구상 부문을 토대로 토지이용, 교통, 환경 등 부문별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실시계획수립 영역의 기본설계 및 제 영향평가 등 물리적 부문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개발계획의 실행이 가능하도록 구체화한다. 더불어, 공공시설·간선기반시설 등에 대한 인·허가 협의를 수행하고, 학술용역 부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도서 및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 내용요약

본 연구는 크게 아래와 같이 5가지 주요 연구내용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개발계획의 방향을 제시한다.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의 연계, 개발계획 수립지침 적용방안 검토, 개발계획 수립 관리 및 기타 개발계획수립 관련 세부추진

전략연구 관리 등을 수행한다. 둘째, 공간구조 구상을 구체화한다. 기본계획의 공간구조 구상에 대한 개념 및 계획수립 방향이 토지이용계획 등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구체화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최상의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공간별 인구수용 및 생활권 계획을 제시한다.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인구를 기준으로 단계적 개발방향을 고려한 인구수용계획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수용계획을 마련하고, 인구수용 규모와 밀도, 주택유형 및 유형별 규모, 공급형태별 구상 등을 검토하여 기술부문의 토지이용계획수립 등에 반영되도록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다. 한편, 생활권 계획에 있어서는, 계획적으로 인구를 수용하고 자족적 생활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생활권 단위를 설정한다. 생활권 단위구분은 공간구조 구상에 적합하도록 설정한다. 넷째, 전략연구과제를 수행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연구기관 또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략연구과제를 시행하고, 연구결과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한다. 다섯째, 공청회 개최 및 관계기관 협의 및 여섯째, 보고서 작성 및 편집을 실시한다.

연구기간: 2005. 5. 27~2008. 5. 12
발주기관: 건설교통부

>> 행정중심복합도시 국제공모관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국제공모)

A study on International Urban Ideas Competi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Master Plan(International Urban Ideas Competition)

박재길, 이왕건, 권영상, 김연준, 이승용, 이승욱, 정호식

■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정부는 수도권에 인구가 산업이 과다하게 집중함으로써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여 국가의 발전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방분권, 수도권 발전전략 등과 함께 국토의 균형발전을 선도할 핵심 사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개념 국제공모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21세기 미래도시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참신하고 뛰어난 도시개념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것이고 공모를 통하여 새로운 도시문화, 도시형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공모에 제시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미래의 도시개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국제공모 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원활히 진행시킴으로써 양질의 결과물을 확보토록 하며 차후 진행될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에 중요한 계획 및 설계지침으로 활용될 것이다.

■ 내용요약

행정중심복합도시를 21세기 세계적 모범도시로 건설하기 위한 참신하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얻고자 시행한 국제공모는 지난 5월 27일 공모 공고를 시작으로 참가자 등록 접수(6.1~7.11), 대상지 자료 배포(7.12), 질의응답(7.12~7.29) 및 현지답사 등과 같은 사전준비 작업을 거쳐 10월 31일 작품접수를 마감하였다. 전 세계에서 총 351개팀(국내 169개팀, 국외 182개팀)이 참가

등록을 하였으며 그중 25개국 121개팀(국내 57개팀, 국외 64개팀)이 작품을 제출하였다. 제출된 작품에 대해 국내외 저명한 건축가와 도시계획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4일(11.11~14)동안 심사하여 당선작을 선정하였다. 심사위원회는 David Harvey와 Nader Tehrani(공동심사위원장), 민현식, 박삼욱, 온영태, 유결, Arata Isozaki, Winy Maas로 구성되어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간의 관계, 삶의 질, 세계관, 제안되고 활용 가능한 기술 등의 요소 등을 심사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심사위원들은 공모에서 흔한 일은 아니지만 의견수렴을 거쳐 5팀의 공동당선자와 최종 프로젝트에 기여할 수 있는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5팀의 공동 장려작을 선정하는 데 동의하였다.

■ 주요결과와 평가

당선작의 아이디어를 수용하여 환상(Ring)형 도시구조를 기본으로 설정하고 자족성 확보를 위해 입지특성에 따라 다핵으로 분산토록 하였으며, 금강 인접지에 자연생태 상황에 알맞은 친수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국제공모에 수상작으로 결정된 10개 작품에 대한 시상식과 작품발표회가 개최되었고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고 적극적인 관심을 모으기 위해, 전국 주요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연구기간: 2005. 5. 27~2006. 3. 25
서지사항: 391면
발주기관: 건설교통부

>>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A Master Plan for New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박재길, 민범식, 강태수, 최병남, 이춘용, 김상조, 조춘만, 김명수, 심우배, 권영상, 이범현, 김형진

■ 배경 및 목적

2003년 신행정수도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수행하던 중 정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정으로 타절준공 한 바가 있다. 본 연구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세계적인 모범도시로 건설할 수 있도록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그 개발의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도시형성 및 성숙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개발계획의 준거가 되는 지침을 마련한다. 본 연구는 또한 국제공모 당선작의 내용을 반영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세계적인 모범도시로 건설할 수 있는 기본구상을 작성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이전기관배치, 토지이용, 교통, 환경 등 부문별 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설치, 재원조달방안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법 제20조에 따라 수립될 개발계획의 준거가 되는 지침을 마련). 특히, 부문별 전략연구과제를 통해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의 준거가 되는 연구와 근거자료를 제공한다.

■ 내용요약

본 연구는 크게 12개 전략연구과제에 대한 공동연구 수행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본계획 수립 등 2개 부문으로 나누어진다. 전략연구과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성 확보방안’, ‘미래형 선진교육 인프라 구축방안’, ‘주거수요분석 및 미래형 주거지 조성방안’, ‘인간과 환경중심의 미래형 교통체계 구축방안’, ‘자원절

약형 도시환경을 위한 환경순환시스템 구축방안’, ‘시민친화도 및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배치방안’, ‘미래형 복지 인프라 구축방안’, ‘안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방호체계 구축방안’, ‘품격 높은 문화인프라 구축 및 도시문화 조성방안’, ‘다양한 위험요소로부터 안전한 방재체계 구축방안’, ‘미래형 삶의 질 향유를 위한 첨단정보도시 구현방안’ 및 ‘도시이미지 구현을 위한 경관 조성방안’을 포함한다.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본계획은 계획의 개요, 현황분석, ‘개발목표와 추진방향’, ‘이전대상기관 배치 기본방향, 국제공모의 주요 아이디어 분석, 인구배치, 공간구조 구상, 부문별 기본구상(토지이용, 교통체계, 경관 및 환경보전, 주거지 조성방향, 공원·녹지 및 친수공간, 문화재보호, 교육·문화·복지시설, 도시정보화, 주요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설치, 기반시설, 도시 방호 및 방재), 시범단지, 주변지역 관리방향, 이주 및 생활대책, 도시관리 및 운영방향, 재원조달방안 및 개발계획 수립지침 등으로 이루어진다.

연구기간: 2005. 5. 27~2006. 9. 20
발주기관: 건설교통부

>>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개발지침 및 편람작성 연구

Guidelines and Handbook for the Development of Innovation Polis

권영섭, 강호제, 박경현, 이일

■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 등이 혁신도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타당한 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개발에 대한 기본방향과 세부사항 등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기본방향과 세부사항은 첫째, 혁신도시의 기본개념과 개발방향 등 혁신도시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 및 분석 내용을 담은 편람작성 연구, 둘째, 해외사례 연구, 셋째, 혁신도시 건설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제고를 위한 계획지침(안)을 담은 지침연구이다.

■ 내용요약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편람작성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혁신도시 건설배경과 기본개념, 혁신도시의 구성요소, 혁신도시 유사사례 및 유형들을 제시하여 혁신도시 기본구상 및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데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제3장에서는 이전기관이 확정되고, 혁신도시 입지선정이 마무리 되었던 바 입지선정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여건, 이전기관 특성,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혁신도시의 목표 및 전략, 개발될 혁신도시 유형, 혁신도시 내 유치기능 및 도입시설 그리고 혁신도시의 규모설정을 통해 혁신도시 건설관련 전체적인 모습을 조망하였다. 제5장에서는 혁신도시 개발의 기본방향, 도시공간구조, 부문별 도시개발 기본방향, 효율적인 혁신도시사업 추진방안 등 혁신도시 개발

방향을 다루어 지방자치단체들이 각 지역의 혁신도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하도록 구성하였다. 제6장에서는 혁신도시가 경쟁력이 있는 도시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혁신환경조성, 혁신도시 기능 확충 및 혁신환경 창출, 혁신도시 성공축진을 위한 산학연 유치와 연계, 기업지원서비스 구축 및 장소마케팅 방안 등 지역혁신역량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제7장에서는 혁신도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의 목표, 관리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제8장에서는 현행제도 및 관련법들을 검토하여 혁신도시 건설 및 관리 지원에 대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편람작성 연구에서는 기본방향 제시뿐만 아니라 사례 및 분석 내용을 관련 그림 및 표 등으로 상세히 제시하는 편람형식을 취하였다.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해외사례 연구’에서는 혁신도시를 조성한 사례가 국내외적으로 없으므로 가능한 유사사례를 선정하여 각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된 사례,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관련된 사례, 계획적 조성 사례 및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사례, 혁신도시 유사사례 중 성공사례 및 실패사례 등을 제시하였다. 혁신도시 건설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제고를 위한 계획지침(안)에서는 지자체가 혁신도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기준이 될 내용을 편람에서 발췌하여 제시하였다.

연구기간: 2005. 5. 18~2006. 3. 17
 서지사항: 본 보고서 304면, 해외사례 보고서 225면, 개발지침 60면
 발주기관: 한국토지공사

>> 혁신도시 입지선정기준 연구

Guidelines for Site Selection of the Innovation Polis Project

권영섭, 이동우, 김광익

■ 배경 및 목적

정부는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의 특성화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혁신도시를 건설하여 기관과 종사자들을 수용할 계획이다. 혁신도시는 이들을 수용하는 기능뿐 아니라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을 입지시켜 산·학·연·관 기능이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혁신여건과 주거·교육·문화 등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이 연구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책과 관련하여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수용하고 지역의 혁신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될 혁신도시 또는 혁신지구의 입지선정 원칙과 기준 및 절차 등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내용요약

본 연구에서는 첫째, 혁신도시의 개념, 필요성, 건설 목적, 입지결정요인과 개발유형, 혁신도시의 구조와 규모 등 혁신도시와 관련된 유사사례 및 이론 등을 분석하였다. 둘째, 혁신도시 입지선정의 기본방향 및 원칙, 입지선정시 고려사항, 입지선정기준, 입지선정 절차 및 추진체계 등 혁신도시 입지선정방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셋째, 혁신도시 입지선정평가의 기본방향, 입지선정평가방법, 입지선정 평가체계 등 혁신도시 입지선정평가체계를 정립하였다. 넷째,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안)을 제시하여 정부가 바람직한 입지선정기준을 제시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위하여 제시된 입지선정기준으로는 크게 구분하면 혁신거점으로서의 발전가능성, 도시개발의 적정성, 지역 내 동반성장 가능성이다. 분야별로 혁신거점으로서의 발전가능성에는 간선교통망과의 접근성, 혁신거점으로서의 적합성, 기존도시 인프라 및 생활편익시설 활용가능성이 제시되었다.

도시개발의 적정성에서는 도시개발의 용이성 및 경제성, 환경친화적 입지가능성이 제시되었다. 도시개발의 용이성 및 경제성에는 산업단지, 택지 등 기계발지 활용가능성, 관련 법령에 의한 개발제한 여부 등 토지 확보의 용이성, 도로, 용수공급 등 기반시설 설치의 용이성, 지가의 적정성 및 부동산 투기방지대책 등 네 가지 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환경친화적 입지가능성에서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여 친환경적 개발이 가능한지,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이 가능한지를 주요 내용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역 내 동반 성장 가능성에서는 지역 내 균형발전 가능성, 기초지자체의 혁신도시 개발이익과 성과공유 계획, 기초지자체의 지원계획 등이 제시되었다.

연구기간: 2005. 6. 20~2005. 8. 19
 서지사항: 102면
 발주기관: 건설교통부

3) 기타활동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추진방안 연구 워크숍

- 일 시 : 2005. 7. 8
- 장 소 : 국토연구원
- 참석자
 - 사회자 : 강병기(도시연대 대표)
 - 주제발표 : 박재길(지역·도시연구실장)
 - 지정토론 : 김문환(서울대학교 교수), 김홍식(명지대학교 교수), 이정진(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이은진(경남대학교 교수), 장명수(전 전북대학교 총장), 최병선(원장, 전 경원대학교 교수), 황기원(서울대학교 교수), 홍형욱(경희대학교 교수)
- 주요내용
 - 살고싶은 도시의 비전을 주제로 살고싶은 도시의 필요성, 개념, 외국사례, 우리나라 도시의 최근 동향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

행정중심복합도시 국제공모 수상작 시상식 및 작품발표회

- 일 시 : 2005. 12. 19
- 장 소 : 서울 프레스센터
- 참석자
 - 수상팀(10팀)의 대표 및 팀원 총 24인(국외 19인, 국내 5인)
 - 이해찬 국무총리, 최병선 추진위원장, 강용식 자문위원장, 김안제 초대위원장, 칠레대사, 안건혁 단장, 심사위원(민현식, 윤영태, 유결), 유종상 단장, 이춘희 부단장
 - 추진위원, 자문위원, 행정중심복합도시 연구단, 전문가, 시민 등
- 주요내용
 -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개념 국제공모에서 수상작으로 결정된 당선작 5작품과 장려상 5작품에 대한 시상식 개최

02

행정중심복합도시 국제공모 수상작 작품토론회

- 일 시 : 2005. 12. 20
- 장 소 : 서울 프라자호텔
- 참석자
 - 수상팀(10팀)의 대표 및 팀원 총 24인(국외 19인, 국내 5인)
 - 안건혁 단장 외 연구진
- 주요내용
 - 당선작의 도시개념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방안 토의

지역·도시정책포럼

- 일 시 : 1차(2005. 6. 22), 2차(2005. 8. 23), 3차(2005. 10. 24)
- 장 소 : 국토연구원
- 참석자
 - 1차: 권원용(서울시립대 교수)
 - 2차: 박삼욱(서울대학교 교수)
 - 3차: 이정재(서울대학교 교수)
- 주요내용
 - 1차: 도시 및 지역계획가의 위상과 역할
 - 2차: 서비스세계와 경제공간의 변화
 - 3차: 농촌발전의 새로운 방향 모색

지역정책연구회

■ 일 시

1차(2005. 3. 28), 2차(2005. 5. 31), 3차(2005. 7. 1), 4차(2005. 10. 20), 5차(2005. 11. 25), 6차(2005. 12. 22)

■ 장 소

국토연구원, 건설교통부

■ 참석자

- 1차: 김광익(연구위원), 건설교통부 지역정책과장, 황태근(한국토지공사 지역균형개발처 과장)
- 2차: 이무용(서울시정개발연구원 박사)
- 3차: 서천범(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장)
- 4차: 김용석(한국철도개발(주) 사업1본부장), 안석욱(한국토지공사 신도시사업1처 차장)
- 5차: 이한경(농업기반공사 팀장), 문윤태(대한주택공사 부장)
- 6차: 김영준(문화관광정책연구원 관광정책팀장)

■ 주요내용

- 1차: 시·군별 발전잠재력 지표 분석; OECD 지역개발지표; 지역발전 촉진수단으로서 테마파크 개발 동향 및 지역개발 파급효과
- 2차: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장소마케팅 전략
- 3차: 골프장 건설과 지역개발
- 4차: 일반철도의 효율적인 역세권 개발방안; KTX개통에 따른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전략
- 5차: 농어촌 복합정주공간 조성을 위한 Senior Complex 사업구상; 고령자주택 시범사업 추진현황
- 6차: 문화관광부의 6대 광역관광개발계획의 주요내용

공간계획제도연구회

■ 일 시 : 2005. 3. 11

■ 장 소 : 국토연구원

■ 발표자

- 이왕건(연구위원)

■ 주요내용

- 시민 중심적 도시계획 수립

02

지역도시계획방법론 연구회

- 일 시 : 2005. 6~12
- 장 소 : 국토연구원
- 참석자
 - 지역·도시연구실 및 국토계획·환경연구실 연구원(김중은, 김훈상, 박경현, 안용진, 임상연, 임지영, 정윤희, 황승미)
- 주요내용
 - 지역도시계획방법론 관련 서적 발제 및 토론
 - Evans, 2004, Economics and Land Use Planning
 - Hall, 2002, Urban and Regional Planning
 - Stephen Graham ed., 2004, The Cybercities Reader, Routledge

바람직한 미래 도시상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마스터플랜 수립방향에 관한 세미나

- 일 시 : 2005. 4. 19
- 참석자
 - 사회자 : 안건혁(서울대학교 교수)
 - 발표자 : 김홍규(연세대학교 교수), 박재길(지역·도시연구실장), 이왕건(연구위원)
 - 토론자 : 김영섭(건축문화설계연구소 대표) 외 7명
- 주요내용
 -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세계적인 모범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의 아이디어를 교환
 - 주제발표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바람직한 미래 모습,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국제현상공모 수행 방안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방안 공개토론회

- 일 시 : 2005. 4. 28
- 참석자
민법식(연구위원) 외 토론자 8명
- 주요내용
 -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
 - 평가방법, 평가항목, 항목에 대한 가중치 설정 등에 관하여 논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방안 공청회

- 일 시 : 2005. 5. 27, 14:00
- 참석자
사회자 : 윤진식(서울산업대학교 총장)
토론자 : 이양재(원광대학교 교수) 등 11인
김태환 · 김광익(연구위원)
- 주요내용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을 통해 우리의 국토 구조를 다핵분산형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바람직한 균형발전을 위한 워크숍

- 일 시 : 2005. 6. 28
- 참석자
박재길(지역·도시연구실장), 서태성(국토계획·환경연구실장)
- 주요내용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 :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02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과제 워크숍

- 일 시 : 2005. 6. 30 ~ 7. 1
- 참석자
초청강연 : 김문환(서울대학교 교수)
발표 : 기본계획 수립 방안(국토연구원 지역·도시연구실), 전략연구과제(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및 9개 기관)
- 주요내용
- 기본계획의 연구를 수행하는 관련 학회와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가 21세기 모범도시가 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10개 과제의 연구방향을 모색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공청회

- 일 시 : 2005. 12. 2, 14:00
- 참석자
이동우(연구위원) 외 토론자 9명
- 주요내용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건설 추진 등 국내적 여건이 변화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 새로운 계획 수립을 모색

03

c h a p t e r

SOC · 건설경제

1) 기본 · 정책연구

>> 건설경기의 구조적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

The Construction Business Cycle, Construction Industry and National Economy

김재영, 안흥기, 권혁진, 김민철

■ 배경 및 목적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건설투자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므로 생산유발계수가 유의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범위는 좁혀졌다. 수요압력이 없고 공급여력도 충분하더라도 이미 경기 저점을 지난 시점이라면 경기를 부양하고자 했던 당초의 의도와는 달리 경기를 과열시키게 된다. 이처럼 경기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경기에 대한 구조적 이해를 토대로 경기순환국면에 맞게 정책 변수와 집행규모, 그리고 집행시기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정부정책들이 경기조절 이외의 정책적 요인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어 건설경기와 거시 경기를 교란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건설경기 변동의 특성과 정부 정책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주택200만 호 건설 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을 평가해 봄으로써 그 파급효과와 시의성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신도시 개발 사업들이 향후 건설경기에 미칠 영향 등을 토대로 건설경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내용요약

건설수주, 건축허가, 건설용중간재 출하지수, 그리고 건설업취업자수 등 4개의 지표를 이용하여 NBER(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방식으로 건설경기 종합지수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비확률적인 접근방식인 NBER방식은 분석자의 임의성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확률모형인 국면전환용인(Markov Switching Factor: MSF)모형을 이용하여 건설경기지수를 작성하였다.

그 결과 건설경기는 82년 2월, 86년 4월, 92년11월, 99년 7월이 저점이었으며 84년 1월, 90년 1월, 98년 1월, 2003년 9월이 정점이었으며 2003년 9월 이후 불황으로 접어들 확률이 높았으며 실질적으로 그 이후 건설경기는 침체국면으로 접어들어 2005년까지 이어지고 있다.

건설경기종합지수를 통하여 건설경기 순환구조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첫째, 건설경기는 호황국면이 길고 불황국면이 짧은 비대칭성을 보이고 있다. 둘째, 건설경기 순환주기

〈건설경기 기준순환일의 정의〉

구분	저점	정점
제1순환기	81.2	84.1
제2순환기	86.4	90.1
제3순환기	92.11	98.1
제4순환기	99.7	2003.9

가 길고 진폭이 크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정책은 비대칭성을 띠고 있다. 주택200만 호 건설이 종료되고 난 뒤에도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SOC투자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게 되는데 이는 정부정책기조가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10년 가까이 경기 부양으로 일관되게 추진되었음을 드러낸다. 이렇게 정부정책의 비대칭성이 커지면서 산업계를 비롯하여 시장 전체가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과도하게 반응하고 관성적으로 반응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잠재 성장률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분석기간에 따라서 구축물 장비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비율이 다소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경제성장률과 구축물 및 장비의 성장기여율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국민경제에서의 건설투자의 비중은 서서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일 것이다.

신도시 건설로 건설수요가 주거용과 비주거용에 다소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서 부문별 건설투자도 주거용, 비주거용 부문의 증가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도시, 혁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개발로 총 건설투자수요는 129,87조 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2008년부터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건설경기는 빠른 속도로 회복될 것이며 이러한 추이는 2009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2009년을 정점으로 건설경기는 점차 하강국면으로 접어들어서 2011년에 저점을 통과하면서 점차 회복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며 2013년경에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변동폭은 주택 200만 호 건설시기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이들 대규모사업의 추진이 건설경기 순환구조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건설업체 특히 지방건설업체의 입장에서는 지역별 건설시장이 확장되고 무차별적이지만 건설시장 참여 기회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 건설자재산업이나 인력시장의 측면에서는 총량적으로는 수급상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건

설자재나 인력공급기반이 취약한 비수도권에서 주로 건설투자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수급 불안정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예상되는 문제점들로는 첫째, 비수도권의 건설자재 및 인력 수급 불안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환경문제로 바닷모래 채취지역을 확대할 수 없고 비축기지 지정과 확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골재 특히 모래부족 현상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건설기능 인력의 절대적 부족이 예상되며 건설인력시장 구조상 지역이동이 어려운 우리의 실정을 감안하면 지역별 비대칭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결과와 평가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건설산업 내에 존재하는 한계 기업들이 상당부분 구조조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설업BSI가 하락하면 SOC예산 조기집행이나 선급금 지급 비율확대 등으로 대응하려는 경향이 관찰된다. 이처럼 시장을 미세조정(fine tuning)하다 보면 전과 같은 정책실패가 재연될 수 있다. 따라서 미세조정보다는 안정 순환경로를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건설경기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GDP대비 건설투자의 비중이 일정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민간건설투자의 움직임과 반대 방향으로 SOC예산을 운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경기 대응적인 정책기조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부분의 대규모 개발 사업이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경기조절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비수도권의 건설경기 대응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넷째, 사전 건설경기 영향평가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제도변경을 남발함으로써 건설경기가 교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전 건설경기 영향평가 체계가 필요하다.

연구기간: 2005. 1. 1~2005. 12. 31
 서지사항: 194면, 국토연 2005-35

>> 고속철도와 국토공간 구조의 변화(I)

High Speed Rail and the Changes of Spatial Structure(I)

조남건, 정진규, 김종학

■ 배경 및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국토공간에 변화를 주는 영향요인을 검토하고 선진국의 관련 연구를 통해 고속철도 개통 후 예상되는 국토공간 구조의 변화를 전망하고, 고속철도를 활용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부수적으로는 고속철도 개통초기에 고속철도의 이용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정리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고속철도 이용자들의 통행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결과를 포함하여 3회(2004. 11, 2005. 1, 2005. 7)에 걸친 설문조사 내용을 비교하였다(평균 유효율 94%). 그리고 고속철도 개통 후 고속철도 정착도시 거주자의 생활권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거주요인, 통근·통학행태, 쇼핑통행 등을 대전과 천안의 도심지에서 조사하였다(총 조사부수 1,108부). 역 주변의 토지이용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대전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내용요약

우리나라에서 고속철도 개통에 의한 국토공간 구조의 변화를 전망하기 위해, 주로 일본을 중심으로 국토공간 구조의 변화과정을 검토해 보았다. 일본의 고속철도 정착역 도시의 공간구조 변화과정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정착역 도시에서 유사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고속철도의 활용을 높이는 방안의 하나로 정착역, 도시의 역을 중심으로 도시공간 구조를 변화시

켜가는 전략도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 고속철도 개통 1년 만에 가시화되고 있는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고속철도의 여객증가와 항공 및 고속버스, 승용차 이용자의 전환이다. 이러한 교통체계의 변화에 따라, 고속철도는 지역 간 여객수송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통행보다 개인용무의 통행이 많은 것은 우리나라 고속철도가 수요증대 시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정기간 이용자의 일부는 고속철도를 통근수단으로 이용하면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변화'를 보여주었다. 전체 이용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지만, 정기간 이용자는 그나마 국토공간구조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인식될 수 있다. 고속철도가 대중적인 통근수단으로 발전하는 데 여러 가지 제약점이 있지만, 수도권인 인구재배치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려면 고속철도와 고속철도역을 잘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고속철도 대전역을 중심으로 조사된 내용에 의하면, 일부 상업업무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나, 급격한 토지이용의 변화는 없었다. 역세권 개발이 가시화되어야 공간체계와 토지이용의 변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현재 시점에서 고속철도로 인해 우리나라 국토공간구조에 나타난 변화는 부분적이며, 향후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고속철도 역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공간구조의 변화는 어느 정도 예상되지만, 지자체와 철도공사 등의 개발의

지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반영되느냐에 따라 시공간적인 파급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 주요결과와 평가

현재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을 정책목표로 세우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개발이 고속철도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깝다. 고속철도의 이용을 늘리고, 고속철도가 갖는 고속성의 특성과 대량수송의 장점을 살리려면 도시개발관련 국책사업이 고속철도와 가깝게 연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공공참여를 통한 도로사업의 갈등관리방안

Public Involvement for Resolving the Social Conflict in Road Construction

조응래, 이춘용

■ 배경 및 목적

도로 사업에 대한 주민, 환경단체의 반대로 인하여 사업이 장기간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문제의 발생 원인을 갈등참여주체, 갈등내용 별로 파악하고, 이와 같은 갈등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적 예방방안과 사후적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사전적 예방을 위해서는 기존에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참여(Public Involvement: PI)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도로의 계획, 설계 및 건설 단계별로 공공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후적 관리를 위해서는 갈등상황을 대처해 나가기 위한 방안과 각종 제도정비를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내용요약

도로와 관련된 분쟁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첫째는 도로건설로 인한 생활환경의 악화 문제다. 둘째 도로건설이 자연환경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도로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갈등의 종류는 정부 간 갈등, 정부와 주민 간 갈등, 주민 간 갈등으로 구분되며 그 원인은 경제적, 기술적, 정치적, 행정·제도적, 심리·문화적 요인 등이다.

도로사업 관련 갈등발생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갈등이 발생하면 이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도로사업 지연에 대한 적극

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외국에서는 그동안 민주적인 절차를 정비하여 도로사업 추진체계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 형성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통하여 절차의 민주성뿐만 아니라, 사업초기단계부터 정보공개, 국민의견조사, 토론 확대 등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주민의 합의를 얻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외국의 경우 전략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일반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사업초기의 타당성조사 단계부터 환경성 및 환경가치 평가를 의무화하여 환경영향평가의 불신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도로사업관련 갈등관리방안은 첫째, 공공참여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사업초기단계에서부터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함으로써 주민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 사업 시행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갈등관리 주체들의 갈등 해결능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현재 도로행정관련 부서의 공무원과 도로설계와 시공을 담당하는 엔지니어들이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시행부서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참여 제도의 필요성 및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아울러 법적, 사회적 전문지식을 가진 조직을 별도로 구성하여 갈등 해결능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갈등을 고려한 선진화된 도로설계기법을 도입하는 것이다. 현재 도로건설과 관련한 주민민원의 대부

분은 도로건설로 인한 환경훼손,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조망권 침해, 학교 교육환경 저해, 성토로 인한 지역 간 단절, 토지 및 주택가격 하락 등의 문제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면서 도로를 건설하기는 어렵겠지만 도로설계시 주거지를 통과하는 노선구간의 경우 소음, 진동, 조망권 등에 대해 사전 검토하고, 이에 대해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주민들에게 제시함으로써 도로건설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될지를 보여주게 되면 시공 도중에 민원을 제기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갈등해소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집행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현재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갈등해소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에 대해 별다른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공공참여 제도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비에 포함시킴으로써 사업시행자가 보다 능동적으로 공공참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기간도 공공이 참여하는 점을 감안하여 충분한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도로사업의 구상단계에서 공청회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타당성 조사단계에서는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여론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구체적인 설문조사 방법 등은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갈등보고서 작성의 일환으로 도로건설에 따른 피해의 정도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3차원 그래픽을 활용하여 문제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설계항목 및 설계예산에 반영하여 실제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로법의 경우 도로정비기본계획의 심의 및 승인 전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고 및 열람의 경우도 인터넷에 계획내용을 올려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개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기본계획이 확정(변경)된 후에는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주요 내용을 관보·도보에 고시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관심 있는 주민이 항상 찾아 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사전환경성 검토단계에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여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환경보전과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한 대안의 설정·분석 등 평가를 통하여 환경 측면의 적정성·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사전환경성 검토 제도의 효율성 및 사회적 갈등에 대한 사전예방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와 함께 이의 시행방안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광역대도시권 SOC 정책의 새로운 방향(II): 전략교통모형을 중심으로

A New Guidance for SOC Policies in the Metropolitan Region:
Focusing on the Strategic Model in Transportation Field

김경석, 김종학, 신정철, 윤하중

■ 배경 및 목적

신도시 개발과 함께 교통문제는 도시에서 벗어나 광역대도시권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다. 광역대도시권의 교통문제는 도시내부의 교통문제가 주로 면적으로 확대되는 것과는 달리 주로 연결 축을 따라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그간의 노력은 주로 광역도로 및 철도의 건설, 환승센터의 건설 등 시설공급에 머무르고 있으며, 대중교통중심의 정책이나 수요관리를 위한 운영·관리측면의 접근이 부족하다. 우리도 이미 경험을 통해 교통시설공급은 수요를 만족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세계 교통정책의 흐름 역시 시설공급정책에서 최근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부분으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광역교통정책은 기존의 시설공급정책에 다양한 수요관리방안의 조합을 통한 통합적인 시행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통정책 측면의 시설공급과 수요관리 등 다양한 정책요소를 포함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전략교통모형(STM)의 대표적인 사례인 집계 QV함수를 활용한 평가를 통하여 최적 광역대도시권 교통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도시계획(개발규모와 입지)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작성하고 이들 방법론을 통해 광역대도시권의 새로운 교통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내용요약

본 연구는 2차연도로 수행되었으며, 1차연도에서는

평가방법론 설정의 기본 틀을 제시하고, 2차연도에서는 1차연도에 제시한 평가방법론의 보완과 검증 그리고 사례적용을 통한 활용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사례적용 지역으로 수도권을 선정하였으며, 특히 최근 개발규모의 논란이 있었던 김포 신도시와 또한 최근 신도시 구상이 되고 있는 포천 신도시를 대상으로 광역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본 연구의 방법론을 적용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시나리오에 포함되는 내용 또한 광역권에 적용될 수 있는 모든 도시계획 및 교통정책과 목표를 포함할 수 있으나, 정책의 다양성을 감안하여 기존 연구나 설문을 통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정책에 국한하여 시나리오 구성요소를 한정하였다. 시나리오 평가 요소 역시 기존의 연구에서 많이 언급된 효과성, 경제성, 형평성, 통합성, 환경성 등 5개 분야보다 근본적인 기초자료인 유통통행비용, 총주행거리, 주행시간 및 통행속도를 평가요소로 선정하여 대안별 평가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에서는 기본적인 연구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방법론이 정리된다. 또한 선행연구검토를 통한 차별성 부각과 1차연도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을 정리하여 본 연구의 양호한 결과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제2장에서는 방법론 설정을 위한 이론적 검토로 본 연구가 다른 연구와 차별화되는 두 가지 방법론, 즉 시나리오기법과 집계QV함수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시행하고 또한 광역대도시권 교통정책의 새로운 접근 방법

에 대한 국제적 추세를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1차연도에 작성된 방법론의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는 특히 시나리오 구성을 위한 각종 정책 및 요소의 선정 부분에 대한 보완, 그리고 시나리오 평가모형과 의사결정모형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의사결정모듈에서는 효용분석법의 만족도함수와 가중치부여 등의 한계를 공감하여 단순한 평가지표의 계량적 비교를 시도하는 다기준-다차원 의사결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사례적용으로 김포와 포천의 두 신도시를 선정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의 두 가지 적용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신도시 건설이 수도권 전체의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적정 신도시 입지를 결정하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개별 축별로 다양한 도시 및 교통정책을 포함한 패키지의 개선효과를 산출하여 평가함으로써 신도시의 입지 결정 후 최적의 교통정책패키지 선정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신도시 개발 이후 일정한 교통서비스 수준 유지를 위한 개발규모의 조정방안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의 검증으로 특히 집계QV함수를 사용했을 경우와 기존의 4단계 모형을 적용했을 때의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분석시간이 훨씬 단축되었음에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였다. 또한 의사결정모듈 역시 표준화를 활용한 계량화 결과와 비교하여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는지 검증하였다.

■ 주요결과와 평가

본 연구가 기존 연구와 다른 점을 찾기 위해 기존 방법론의 한계를 분석하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나리오 기법, 집계QV함수 그리고 다기준-다차원의 사결정방법 등을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가 기존 연구나 방법론과 같은 차별성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정

리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기존 방법론이 시설공급 위주의 정책을 반영하고 있는 반면에 본 연구는 수요관리 정책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기존 방법론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분석시간과 자료취득의 어려움 등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은 시간단축과 수요관리 기능의 분석 기능을 강화하는 집계QV함수를 활용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는 교통수요와 공급 간의 균형관계를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집계QV함수의 장점으로는 별도로 분석 기초 자료를 구축하기 보다는 현재 있는 자료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집계QV함수 추정법은 네트워크 구축단계에서 GIS 툴을 이용하여 토지이용 계획과 동시에 도면상의 분석이 용이하다. 셋째, 집계QV함수 추정법은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고려하였고 또한, 교통시스템의 서비스 레벨을 고려하여 도시개발밀도를 조정할 수 있다.

>> 국가기간교통망의 유고(有故) 대응전략 연구: 도로 재난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Development of Emergency & Evacuation Management System for National Road Networks

이상건, 김호정, 오성호, 정선영

■ 배경 및 목적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태풍, 집중호우 등과 같은 자연재난으로 약 1,300명의 인명피해와 13조 원에 달하는 재산피해를 본 바 있고, 아울러 1994년 성수대교 붕괴에서 최근 대구지하철 참사에 이르는 각종 인위재난으로 인해 11만 명 이상이 숨지고 2.6조 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러한 재난은 대부분 국가기간교통망의 유실과 단절을 초래하여 막대한 국가 및 지역경제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재난 발생 시 이에 따른 교통수요를 주어진 교통체계 및 일반적인 교통관리 방안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재난으로 인해 야기될 피해 규모를 미리 예측하고 주어진 교통시스템을 이용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소개 경로 및 피해복구 도로 우선순위 등을 선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각종 재난에 의해 국가기간교통망에 유고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유고유형별 피해 규모를 예측하고, 보다 효율적인 소개전략모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국가적 차원의 인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재난 단계별 대응전략과 도로 재난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과학적인 판단근거에 따라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내용요약

본 연구에서는 첫째, 자연재해, 인적재난 등 주체 및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되는 용어의 개념을 ‘재난’이라는 하나의 용어로 통일하여 정립하고, 그 원인에 따라 자연재난, 인위재난,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최근 10년간 재난에 의한 국내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연재난 중 태풍 및 집중호우에 의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전체 피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내 재난관련 기관인 기상청, 소방방재청, 건설교통부의 재난대응 체계와 미국, 일본, 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의 재난대응 체계를 비교·검토하고, 일본 미야기현 지진, 미국 9·11테러, 미국 카트리나 등 선진국의 재난대응 사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재난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어도 과학적인 판단기준 없이 의사결정자의 주관에만 의존하여 판단해야 하는 경우 대형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이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피경로 선택, 피해규모 최소화를 위한 대피전략 수립 등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의사결정자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을 지원하는 분석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앞에서 검토한 국내 재난대응 체계에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기상청의 경우 재난대비 단계에서 손실을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강수량 예보와 충분한 대비시간을 가지고 기상특보를 발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강수현상을 과학적으로 예측하여 지역별로 세분화한 강수량을 예보하기 매우 어렵고 불확실성이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기상예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예보내용이 전달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소방방재청의 경우 종합상황실 시스템 관리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예보 및 경보 장비가 노후화 되어 재난 발생시 전화, 팩스,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교통부의 경우 현재 마련되어 있는 재난대응 지침의 내용이 정확한 판단기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모호한 표현에 의존하고 있어 실질적인 대응을 위한 지침으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고 도로에 유실 또는 침수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피 규모를 고려하여 최단시간 내에 대피시킬 수 있는 전략이 없이 임기응변식으로 대피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이러한 문제점 분석을 통해 재난대비, 재난대응, 재난복구 단계별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재난단계별 주요 전략을 구현한 도로 재난관리시스템의 재난대비, 재난대응, 재난복구 단계별 주요 기능 및 전략을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재난대비 단계에서는 영향권 분석을 위하여 지난 4년간 강원도 지역의 태풍 및 집중호우에 의한 도로피해 현황자료를 조사하였고, 강수량 예보의 오차를 보정하여 궁극적으로 강수량에 따른 예상 영향권 반경을 산출하는 모형을 개발하였다. 재난대응 단계에서는 대피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단 대피경로를 탐색하여 대피 경로별로 적정 대피규모를 산출하였고, 대피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제한된 시간 내에 대피 규모를 최대화하기 위한 대피경로 설정 모형도 제시하였다. 재난복구단계에서는 복구 효과가 가장 높은 순서로 피해도로 복구 우선순위를 선정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였고, 실제 복구 우선순위에 따라 피해도로를 복구할 경우의 효과를 재난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 주요결과와 평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재난 단계별 대응전략을 통해 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도로재난관리시스템(RoadEMS)'은 의사결정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이 시스템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등 국가재난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도로재난관리시스템(RoadEMS)'에서 지원하는 재난의 유형이 태풍과 집중호우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과 자료 구득의 한계로 구득이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이 수행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향후 재난과 관련한 보다 상세한 기초자료의 구축이 필요하고 복구 우선순위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재난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제공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로시설뿐만 아니라 철도, 항만, 공항 등 모든 국가기간교통시설을 대상으로 한 유고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 국토혁신을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계획 수립 연구: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The Plan of Transport Infrastructure for Establishing Innovative National Land: For the Revision of the 4th Comprehensive National Territorial Plan

정일호, 김재영, 조남건, 김경석, 이상건, 정진규, 고용석

■ 배경 및 목적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의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현재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이 2000년 1월부터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된 이후 지난 5년간 주요한 한국사회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은 급속히 변화하였으며 이를 국토계획에 반영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주요 경제적·사회적 여건변화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중심으로 한 국토공간의 지역 간 점근성 재편이 이루어질 예정이고, 둘째,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의 권역별 특화발전 및 혁신적·내생적 지역산업발전 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하다. 셋째, 고속철도의 개통에 따른 국토 공간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다. 넷째, 동북아 중심국가로서의 위상에 맞는 물류체계의 개편이 요구되며, 마지막으로 고령화 및 주5일 근무제 등 사회 환경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기조 및 주변여건변화를 반영한 SOC 물류부문의 국토계획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SOC 물류 부문에서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여건변화 등을 전망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토종합 수정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추진과제의 제시를 그 목적으로 한다.

■ 내용요약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계획에서는 기존 국토이용의 기본방향을 '21세기 통합국토의 실현'에서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급성장하는 중국과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일본을 연결하는 국토의 지정학적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정계획에서는 동서남해안을 연결하는 연안 개발축(ㄴ형)과 수도권, 부산권 등 내륙지역 7곳 및 제주도로 구성된 '7+1형' 개발 축 활용을 제안하고, 개발 축을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육성하는 내용으로 계획되어 있다. 또한 수정계획에서는 국토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우선 '7+1형' 다핵 분산형 국토구조 형성은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지역발전의 전략거점 개발을 통해서 수도권 집중구조를 지방 분산형 국토구조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둘째, 지역혁신체계, 혁신클러스터, 전략산업육성 추진으로 지역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주도형 지역발전을 이룬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병행하여 지역역량 강화와 지역중심의 발전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수정계획의 계획기조에 바탕을 둔 다핵 분산형 국토 공간 구성을 통한 국토균형발전 목표를 전략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계획 내용을 제시한다.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은 국가 교통망 및 정보통신망의 확충과 정비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다핵 분산형 국토 공간 형성지원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고속도로, 고속철도, 국제공항과 항만 및 정보통신망 등 교통 및 정보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동북아 관문역할을 수행토록 한다. 전국 어디서나 30분 내에 기간교통망에 접근할 수 있는 간선망을 구축하여 전국을 일일생활권으로 묶고 물류비용을 지속적으로 절감토록 계획내용을 제시하였다.

고속철도와 7×9의 격자형 고속도로망을 중심으로 지역 간 국가간선교통망을 구축하고 동시에 지방 거점 대도시를 중심으로 고속광역교통망체계를 확충하여 지방대도시 중심의 경제 및 생산 활동의 효율성을 높여 균형발전을 지원하도록 한다. 특히, 대도시권의 수송수단에서 광역철도, 경전철 등의 분담비율을 높이고 수송수단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대도시권에 대한 체계적인 교통수요 관리로 통행수요 저감 및 분산을 유도하고 교통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계획하였다.

이와 함께 안전과 환경친화성이 높은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편의성을 개선한다. 이미 확보된 세계적 IT 기반을 더욱 확

충하여 시공자재의 국토정보망을 구축함으로써 신속하고 편리한 교통 및 물류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생활환경의 개선을 도모토록 하였다.

■ 주요결과와 평가

다핵 분산형 국토 공간형성 및 육성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네트워크형 인프라의 적기, 적소 공급과 운영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고속도로, 고속철도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30분 내에 기간교통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국토를 동서로 잇는 9개 간선도로와 남북으로 잇는 7개 간선도로를 갖춰 '7×9'의 도로망을 구축한다. 국토종합계획의 기본골격이 제시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인 지역개발계획의 정비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각종 개발사업들 간의 연계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 예산낭비를 줄이면서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토개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기간: 2004. 6. 1~2005. 9. 30
 서지사항: 177면, 국토연차 2005-5

>> 대도시권 교통개선을 위한 재택근무 활성화방안 연구

Alternatives of Telecommuting Facilitation for Metropolit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정진규, 김현식

■ 배경 및 목적

2005년 2월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서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교통수요 및 환경영향 저감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통행저감을 위하여 교통,

토지이용 측면의 대안과 함께 정보화 시대에 적용 가능한 대안의 발굴도 요구되고 있다. 아직 일반화되지는 않았지만 출·퇴근 통행을 위한 자동차 통행수요를 원천적으로 저감하기 위하여 재택근무(telecommuting)와

같은 근무형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실제로 이를 시행하는 기관이나 직원이 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한 직원·회사, 사회적 측면의 요인을 분석하고, 재택근무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 내용 요약

본 연구에서의 재택근무 범위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일하는 형태'인 재택근무(home-based telecommuting)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 주변 센터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일하는 형태'인 재택근무센터(telework center) 이용으로 제한하였다. 공간계획 측면에서의 재택근무 선행연구는 정보화로 인한 통행수요 변화에 대한 효과 분석이 대부분이다. 토지이용, 도시공간구조 및 환경 측면의 영향분석, 또한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한 요인분석 및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재택근무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었으며, 급속히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공공기관 및 IT계열 대기업을 중심으로 재택근무가 시행되고 있다. 유럽 국가의 경우는 미국보다 활발히 시행되고 있으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는 재택근무가 활성화되어 있지만, 전통적인 직장중심의 문화로 미국이나 유럽에 비하여 활발하지는 못한 편이다. 국내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1990년대 초반부터 여러 기관에서 의욕적으로 시범사업을 도입하였으나 회사의 관심 부족과 관련 규정 및 정부차원의 지원이 미흡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현재는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 대부분 시행을 중단한 상태다.

재택근무를 가장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특허청의 재택근무 직원 및 벤처기업의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재택근무를 시행하게 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직원들의 경우 재택근무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 인간관계의 문제점, 업무집중의 어려움 등을 우려하고 있지만 근무시간의 융통성, 출·퇴근으로 인한 비용 및 스트레스 감소 등으로 전반적으로는 재택근무 시행에 긍정적이다. 회사의 경우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 절약, 인건비 및 사무실 유지비용의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으나 초기비용, 보안, 관리·감독 등을 우려하여 시행하려는 의지가 직원들 만큼 높지 않다. 또한 재택근무를 경험한 직원 및 회사의 재택근무 확대 희망이 미경험 직원 및 회사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의 부족 및 본 연구규모의 한계로 현황 및 활성화 요인 분석 등 기초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분석된 활성화 요인을 토대로 시범사업의 확대, 인센티브 부여, 재택근무센터 설치 등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향후 이러한 기본방향을 실천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연구 및 정책이 발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범사업의 시행과 병행하여 이에 따른 효과분석 및 홍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한 기초연구 및 데이터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대형 공공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Large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김성일, 유재운, 김민철, 이승훈

■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1999년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대책 이후 공사비 절감 등 공공건설사업의 효율화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정부 재정의 효율화를 위한 예산제도의 개혁이 진행되는 한편으로 공공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환경 등 이해관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 내지는 중단되는 등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데 과거와는 달리 많은 환경적 제약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여 공공건설사업의 절차적, 내용적 측면에서 효율적 추진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내용요약

구체적으로 각 장별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논의의 출발로서 대형공공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의 의미와 공공투자의 비효율성에 대해 기술하였다. 우선, 대형공공건설사업의 개념을 파악하여 연구대상이 되는 대형공공건설사업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아울러 '추진'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사업단계별 범위를 설정하고, 본 연구의 주요 핵심어가 되는 '효율적'이라는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이어 대형공공건설사업의 공공재적 특성을 부각하고 이것이 비효율을 초래하는 요인과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형공공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규정짓고 있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대형공공건설사업의 추진실태 및 문제점을 1) 사업구상 및 사업결정의 합리성 측면 2) 참여 및 이해관계 갈등 측

면 3) 규제와 사업주체 간의 상호작용 측면 4) 재정과 예산 및 사업관리 측면을 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이어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의 주요 측면별 실태 및 문제점 분석의 결과와 선행 연구결과 및 면담조사를 반영하여 대형공공건설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최종 영향모형을 구축하였다. 분석결과 '투명성'과 '사업계획의 합리성'이 매개변수로서 효율적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독립변수로서 계획투입의 적정성, 의견수렴·참여, 재정·예산, 이해관계·갈등 등의 요인은 이상의 두 가지 매개변수를 통해 동시에 효율적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을 대상으로 대형공공건설사업의 추진체계 및 제도 운용 실태를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외국의 사업추진체계 및 제도운용 실태 분석의 주요 내용은 크게 1) 대형공공건설사업의 추진체계 2) 대형공공건설사업의 추진과정상의 분쟁 및 갈등관리 3) 사업집행 이후의 사업평가 단계의 제도현황 및 운영 실태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6장에서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형공공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대형공공건설사업 계획의 합리화 및 사업결정체계의 개선 2)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참여 및 갈등관리 메커니즘의 확립 3) 안정적인 예산의 확보와 예산지출방식의 전환 4) 사업관리능력의 향상 및 효율적 사업관리시스템의 적용 5) 통합적 사업추진절차 및 공공사업 효율화 지침의 마련 6) 사후평가를 위한 평가체계의 구축과 모

03

니터링의 강화 등이다.

■ 주요결과와 평가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사업계획과 집행과정을 포함하는 사업추진을 어떻게 효율화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대형 공공공사의 효율적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과도하게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세세하게 사업추진과정에서 적용되는 제도에 대한 실태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대형 공공건설 사업을 기반 시설사업에 한정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분석하여, 이러한 요인을 구성하는 중요한 제도적·정책적 사항을 중심으로 현재의 제도 운용 및 정책추진방향 등을 감안하여 추진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대형 공공건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부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대형 공공건설 사업의 추진이 단순히 집행에 국한하지 않고, 사업구상 및 계획의 내용·절차적 합리성의 문제까지 연계하여 파악한 점에서 연구의 효율성을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보다 많은 문제제기와 세부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과제기간: 2005. 1. 1~2005. 12. 31
서지사항: 234면, 국토연 2005-36

>> 대형 공공공사 입찰방법 선정기준 개발 연구

A Study on Development of Delivery Method Selection Criteria for Public Construction Project

현창택, 김성일

■ 배경 및 목적

정부에서는 건설사업의 복잡화, 다양화, 대형화의 건설 외부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설계시공분리방식 외에 설계시공일괄방식, 대안입찰방식, 건설사업관리방식(Construction Management) 등의 다양한 발주방식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 발주된 프로젝트에서 발주방식별 장점 등이 효과적으로 발휘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최근에는 일부 발주방식 적용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 특히 주요한 원인은 프로젝트의 발주방식을 선정할 때, 사업의 특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적절한 발주방식을 선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발주방식 현황과 관련 법령, 그리고 발주방식 심의기준을 살펴보고, 나아가 다양한 발주방식이 사용되고 있는 해외의 발주방식 선정기준에 대한 기존의 문헌 연구 및 국가별·주요기관별 발주방식 선정기준에 대하여 분석하여, 선진국의 발주방식 선정기준 및 고려사항을 도출하였다.

■ 내용요약

본 연구는 제1장 서론, 제2장 국내 대형공사의 발주방식 적용현황 및 문제점, 제3장 해외발주방식 선정의 기준사례분석, 제4장에서는 대형공사 발주방식 선정기준개발 방안, 마지막으로 제6장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떠한 사업을 수행하든지 발주자의 최종목적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성하는 것이지만, 성공을 평가하는 기준은 발주자들마다 다를 수 있다. 즉, 사업의 성공을 평가하는 척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에 연구된 문헌분석을 통하여 발주방식 선정시, 발주자가 고려하는 사항 및 프로젝트의 성공요인을 분석하였다. 해외의 발주방식 선정기준과 발주자 고려 사항 및 프로젝트 성공요인을 종합하여 발주방식 선정을 위한 발주방식 선정의 개념적 체계를 구축하였고, 발주방식 선정기준 개발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발주방식 선정기준의 개발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젝트의 기획단계에서 발주자는 사업 성공의 척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러한 척도들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각 프로젝트의 목적, 특징, 요구사항, 프로젝트 제약사항 등을 명확하게 정의하여야 한다.

둘째, 프로젝트의 요구조건 등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성공요인을 설정한다. 시간과 정보의 제약 때문에 모든 성공요인을 만족시키는 것보다 당해 프로젝트의 특성 등을 가장 잘 반영하는 대표적인 인자를 선정하는 것보다 현실적이다.

셋째, 선정된 성공요인을 바탕으로,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로 구분되는 일반적인 발주방식 선정기준을 도출한다. 이러한 일반적인 선정기준들은 발주자에 따라 각 기준들 사이에 상관관계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선정기준을 다루기보다는 당해 프로젝트에 적절한 발주방식 선정기준을 도출해야 한다.

한편, 위에서 제시한 개발방향을 근거로 국내의 대형공사 발주방식 선정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단계적 적

용방안을 검토하였다. 현행의 대형공사입찰방법 심의 기준에 의해 발주방식을 선정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집행기본계획서'의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 주요결과와 평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발주방식 선정기준의 개념적 체계를 실제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연구들이 후속연구로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첫째, 비용, 공기, 품질, 기술개발 등의 발주방식별 프로젝트의 성능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이러한 발주방식별 성능 측정을 바탕으로 발주방식 선정의 기본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발주방식 선정시 고려할 수 있는 일반적인 요소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선정기준을 개발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선정기준을 실용화하여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checklist)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프로젝트 발주방식의 선정기준을 통하여 적합한 발주방식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선정기준에 대한 주관적 경험과 판단을 활용해야 한다. 각 프로젝트 선정기준별 상대적 중요성이 다르기 때문에 주관적 경험과 판단을 활용하여 선정기준의 요소별 상대적인 중요도인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궁극적으로 프로젝트 특성 및 목적, 외부 인자를 고려한 발주방식 선정 프로세스의 모델링 및 전산화 작업이 필요하다. 웹기반 전산화를 통한 모델이 구축되면 발주방식 선정시 활용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다.

이러한 발주방식 선정에 관한 연구와 더불어, 각 발주방식별 낙찰자 선정방법, 공사비 지불방식 등의 발주방식 개선을 위한 요소과제들의 연구가 이루어지면, 국내 건설산업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도로부문 재원운용 효율화 방안

Strategies for Efficient Working on Road Funds

이춘용

■ 배경 및 목적

도로부문 재원은 교통세 즉, 목적세로 구성된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충당되어 왔다. 특별회계에 대한 일반회계로의 전환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도로부문 재원 규모는 지금보다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종전과 같은 도로부문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로투자 전략과 재원운용 방안은 국가 기간도로망을 비롯한 국가관련 계획을 적기에 확충하기 위해 전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정된 재원 하에서 국가가 추진할 도로부문 재원운용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내용요약

도로부문 재원운용 실태를 분석·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국가계획들이 상호 간 계획 연계성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국가기간도로망(고속국도와 일반국도) 계획과 대도시권광역교통망계획 간 계획 연계성이 낮으며 계획내용이 상이하다.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임에도 사업시기 등 계획 간 연계가 낮다. 둘째, 국가기간교통시설 적기 확충이라는 목적세 도입 목적에 부합하는 집중적인 투자가 미흡하였다. 타 특별회계의 전입, 도로계정 내에서 단구간으로 개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투자가 분산되었다. 다양한 도로사업은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간도로망의 중점적 정비에 제약이 되기도 하였다. 일반국도,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지원지방

도 등은 간선도로에 해당하지만 재정지원 비율이 서로 다르고, 동일한 간선도로 기능을 수행할 경우 지원 또는 보조 비율의 조정 등을 통하여 시급한 건설이 필요하였다. 셋째, 도로건설의 목표 설정이 구체적이지 못하였다. 교통세를 도입할 당시 교통세 운용기간 중에 달성할 목표와 지표설정은 없었다. 간선도로의 양·질적 부족으로 교통 혼잡과 물류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금의 도로소통이 충분한지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넷째, 재원이 필요로 하는 곳에 적기에 확충되는 등 국민들의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 제공 측면과 국민의 동의와 이해를 얻어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이 미흡하였다.

외국은 1950년대 후반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효율적인 역할 분담체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간선도로망을 확충하여 왔으며, 지금은 기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도로의 지능화(지능형교통체계)를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가 지역 간 도로를 주로 관리하고 있으나 외국은 도시지역 간선도로를 국가 간선네트워크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거 개별적으로 부문별로 수립되던 계획을 동일한 목표와 정책방향(일상생활, 안전, 환경, 활력) 아래서 통합하여 수립·추진하고 있고, 계획기간 중 달성할 목표와 지표를 국가와 지방이 상호 연계하여 설정하고 있다. 국민들은 일상생활 가운데 도로의 안전성 향상과 환경영향 개선, 기존 도로시설의 개량 및 정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도로부문 재원운용 효율화방안의 기본방향은 목적 세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재원운용 효율성 강화,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서비스를 중시, 국민 편의 증진으로 설정하였다. 재원운용 효율화 방안은 기본방향과 연계하여 계획단계에서 국가계획의 연계 강화를 위한 통합계획의 수립 추진, 운용체계에서 투자효율성 향상을 위한 재원운용 체계의 개선, 운용단계에서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신속한 사업추진 체계정립 그리고 추가 소요재원 사전 대비 차원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배분 강화를 설정하였다.

도로부문 재원운용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통합된 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관련 계획의 목표와 계획기간의 일치 등 계획 간 정합성을 강화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와 지방이 상호 협력하여 통합된 국가간도로망계획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재원운용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원운용 체계의 개선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국가기간 간선 네트워크 완비를 우선하고 재정지원 체계의 개편과 분산된 재원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또한 비용 절감 및 도로용지 사전확보 등 비용 최소화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재원운용 과정상에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신속한 사업추진체계를 정립하여야 한다. 현지 의견을 우선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교통혼잡 완화 및 간선 네트워크 완성을 위한 집중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 배분 강화가 필요하다. 기존 도로시설의 안전성 강화, 환경영향 저감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소요의 대비가 필요하다.

연구의 기대효과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강구하여 국가와 지방에서 활용이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국가와 지방은 국가기간도로망 등 관련 도로사업 확충과정에서 정책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각종 관련 계획 간 정합성 강화는 도로투자 사업의 효율성을 보다 향상시키게 될 것이다. 국민과 도로이용

자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질 향상으로 국민의 편의성을 크게 증진시킬 수 있다.

>> 연계성을 고려한 수송물류결절점 평가기법 연구

Evaluation for the Logistic Nodes with Connectivity

임영태, 이영인

■ 배경 및 목적

현재 우리나라 물류전략의 기본방향은 거점별 물류 시스템 구축이라는 전제 하에 시설공급 위주로 되어있으나, 향후 동북아 물류중심지를 위한 각 물류거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규정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물류거점 혹은 수송물류 결절점 자체에 대한 객관적 평가방법은 없는 실정이며, 특히, 물류부문에서 주요 관심사인 수단 간 연계까지 고려한 평가방법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객관적 기준을 적용하여 물류거점 및 주요 수송물류 결절점에 대한 평가를 한 후 이에 따라 시설공급계획 및 운영전략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정량적 요소와 정성적 요소를 통합하여 평가를 할 수 있는 계층 분석적 의사결정방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이용하여 주요 수송물류 결절점을 평가하였으며 평가모형을 3개 지역에 적용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내용요약

본 연구에서는 AHP를 이용하여 연계성을 고려한 수송물류 결절점 평가를 위해 전문가 설문과 함께 인천, 광양, 대구 등의 지역에 모형을 적용해봄으로써 평가방법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였다. 수송물류 결절점의 평가를 위해 정량적 구성요소 및 정성적 구성요소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AHP방법론을 이용하

였다.

연구의 결과를 보면 물류 결절점 평가항목 중 가중치가 높게 부여된 항목은 다양한 수단 간 연결성(0.098), 산업단지 및 배후도시 연결성(0.081), 결절점 내 타 수단 환적 용이성(0.069) 등의 순으로 물리적 측면이 비 물리적 측면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사례지역을 인천, 광양, 대구로 선정하여 결절점을 평가해 본 결과 모든 평가항목에서 안정적인 점수를 보인 인천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그 다음이 광양, 대구 순서로 나타났다.

■ 주요결과와 평가

본 연구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국가물류체계를 국제물류(통과물류 및 가공물류) 및 국내물류라는 2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기 수립된 물류계획의 보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기 수립된 국가물류기본계획에서 정의된 물류 결절점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향후 계획의 보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계획과정에서 수송물류 결절점에 대한 평가가 추가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 물류 결절점의 문제점인 수단 간 연계성에 관한 문제를 계획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계획과정에 좀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이 되도록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또한 현재 복합화물 터미널·유통단지·집배송 단지 등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류시설의 기능 및 지원체계 등도 중복되어 있어 통합적 시각에서 물류거점시설에

대한 점검 및 법제도의 정비도 필요한 실정인데 이는 물류 결절점 기능정의를 위한 방안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물류 결절점 평가를 기초로 하여 물류 결절점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현재 ‘국가 물류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세부계획지표가 제시되어 있는데, 세부계획지표에는 물동량, 물류시설규모, 철도의 지역 간 수송 분담률, 해운의 지역 간 수송 분담률, 컨테이너 환적물동량, GDP대비 물류비, 표준 파렛트 보급률, 물류업무의 전산화, 물류 바코드이용, 제3자 물류 적용비중, 물류EDI 이용, 입출항 서류 수 간소화, 물류공동화, 화물자동차 공차거리율 등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물류계획 시 중요 항목을 선정하고 각 항목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현재의 물류 결절점에 대한 보완방안을 제시한다면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국가물류체계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본 연구에서 사례지역으로 선정한 인천, 광양, 대구 결절점의 경우, 각 평가항목의 점수를 비교하여 물류 결절점에 대한 위계를 파악할 수 있으며, 각 결절점의 기능 및 역할을 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항목(시설)에 대해 알 수 있어 추가적 보완방안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이는 전체적으로 국가물류체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AHP방법을 적용하여 국가수송물류체계상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류 결절점에 대한 평가기법을 개발하는 시도를 하였지만 시간적 제약 및 계량적 자료구축의 애로점에 기인하여 다음과 같은 한계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AHP설문의 표본으로 이용한 20명의 적은 표본수와 사례지역으로 다룬 3개 수송물류 결절점에 대한 평가결과로는 연구결과 및 방법론의 일반화가 어려운 점이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약점 중 하나는 20명의 설문대상자 중 물류관련 업체에 속하는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이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일반적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해 폭넓고 심도 있는 연구가 후속과제로 따라야 할 것이다.

둘째, 비록 본 연구에서는 물류 결절점에 대한 평가 기법에 초점을 둔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시간 및 자료의 제약으로 인하여 수송물류 결절점 평가에 있어서 계량적 자료를 폭넓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세부 항목의 가중치 및 우선순위나 3곳의 물류 결절점에 모형을 적용하여 도출된 평가점수 등에 대한 수치는 일반화하거나 실제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연구과제에서는 충분한 과제기간을 두고 연구를 추진하여 충분한 계량적 자료를 바탕으로 결절점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AHP설문과 관련된 사항으로 각 위계별 평가 항목의 중복문제에 대한 극복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물류 결절점 기능평가부분에서 물리적 측면과 비물리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하부 평가항목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일부 항목에서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문제가 AHP분석기법상에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설문구조 자체를 재수정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모든 수단을 각각 별개 수단으로 구분하여 결절점을 평가하는 모형을 구축하지 못하고 통합된 모형을 구축하였기 때문에 각 수단별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각 결절점의 지리적·입지적 요인에 의한 특정 수단의 우수한 편중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론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본 연구의 한계는 본 연구의 극복과제이면서 동시에 향후 연구과제로서 향후 연구에서 보다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

>> 통행수요 추정의 신뢰수준 제고 방안 연구: 구간 통행수요 모형 개발을 중심으로

Enhancement of Reliability for Traffic Demand Estimation: Focusing on Interval Estimation Model for Traffic Demand

정일호, 오성호

■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통행수요 추정과정에서 이용되는 다양한 입력 자료의 불확실성을 수요추정과정에 반영하여 장래 통행수요 예측시 신뢰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구간추정방법을 통해 수요분석의 가변성이 미치는 영향을 4단계로 파악하고, 도로 관측교통량의 시간에 따른 교통량 분포를 파악하여 구간 OD(Origin Destination) 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 내용요약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연구목적, 연구의 범위, 연구방법이 제시되었다. 연구의 배경에서는 경제적 편익 산출은 물론 민자사업의 수익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결정변수인 교통수요예측값이 단순히 점추정(point estimation)으로 제시됨에 따라, 수요추정시 이용되는 각종 사회경제지표나 기준연도 OD자료의 불확실성을 담고 있지 못하는 한계가 언급되었다. 또한 수요추정모형 자체의 결점으로 발생하는 장래 통행수요예측치의 오차에 대한 판단 근거가 없어 신뢰성 평가방안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통행수요의 구간추정(interval estimation)예측법이 대두됨을 제시하였다.

도로 건설 전의 통행수요추정치와 도로 건설 후의 현시 교통량을 비교분석하였다. 2005년 현재 운영 중인 4개 민자고속도로의 현시 교통량을 예측교통량과 비교하여 보면 현시교통량이 예측교통량의 22%~63%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 중인 고속도로구간에 대해서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과소추정이 대두되었으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대부분 과대추정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고속철도의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경부선의 경우 52.4%, 호남선은 3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도로교통분야뿐만 아니라, 철도교통수요예측도 과대추정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통행수요 추정방법과 관측교통량을 이용한 수요추정 방법에 대해 검토하였다. 대표적 4단계 수요추정 과정인 통행발생, 통행배분, 수단선택 및 통행배정단계에 대해 각 단계별로 주요 방법론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통행발생모형으로 증감률법과 원단위로 구분될 수 있는 과거추세연장법과 회귀분석법에 대해 그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회귀분석은 제4장에서 자세하게 나오므로 비중있게 다루지는 않았음을 명기하였다.

통행분포는 통행발생단계에서 산출된 통행발생 및 유입량에 대해 각 존별로 관계를 형성시켜주는 단계로서, 성장인자모형(균일·평균성장률법, 프라타법, 디트로이트법), 중력모형(Gravity model), 엔트로피모형(Entropy model), 간섭기회모형(Intervening opportunity model) 등의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교통수단선택은 통행발생과 통행분포단계를 거쳐서 나온 OD 테이블값을 각 수단별로 배분하는 단계로 개별선택모형(비집계모형)인 프로빗(Probit)모형과 로짓(Logit)모형에 대해 제시하였다.

통행배분은 도로의 구간교통량 및 교차로 회전교통량 예측, 그리고 기종점간 통행비용을 추정하기 위한

것이다. 통행배분모형에는 정태적 모형, 확률모형, 동태적 모형이 있으며 각 모형별 유형 및 장단점을 제시하였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요예측법, 즉 4단계 모형 중 그 첫 번째 단계인 통행발생단계에서 구간 통행발생량을 예측하여 마지막 단계인 통행배정단계에서 구간 통행량을 예측하는 모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였으며, 대전시를 통한 사례분석 결과값을 제시하였다.

관측교통량을 통한 OD 보정과정을 통해 구간 통행값을 추정하는 모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관측교통량이 년/월/주/시간대별로 변화함을 착안하여, 관측교통량을 이용한 OD 자료구축과정에서는 입력자료인 관측교통량의 변동을 분석하고 교통량의 변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주요결과와 평가

구간 추정모형의 구체적인 결과물과 본 연구의 결과가 교통수요예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본 연구에서 회귀분석을 이용한 구간 통행수요추정법을 통해 수요분석시 입력 자료의 불확실성이 가져오는 영향을 파악하였으며, 신뢰구간에 의한 결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수요추정의 가변성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또한 수요분석의 가변성에 따른 링크교통량의 탄력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교통수요 분석시 분석방법의 가변성 및 탄력성을 반영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2) 수시 및 수탁연구

>> 2004년 국가 ITS 기술표준화 연구

National ITS Standardization Program Phase VI

이상건, 정선영, 임관수

■ 배경 및 목적

정부는 1998년부터 ITS 사업의 중복투자 및 시스템의 비효율적 구축을 방지하고 통합적인 국가 ITS 구현을 위해 표준 개발 및 제정, 표준관련 법·제도 정비 등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ITS관련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미국, 일본, 유럽 등 ITS 선진국들이 자국 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어, 지속적인 ITS 표준 연구를 통해 ITS 시스템의 연동성을 확보하고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ITS 사업의 범국가적 통합구축을 위한 표준화 사업을 지속·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 국제표준화 활동에 체계적으로 참여·대응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종 ITS 서비스의 상호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5차 연도 표준화 과제에 대한 표준(안)을 개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내용요약

본 연구에서 수행한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절차 지향적으로 개발된 국가 ITS 아키텍처를 객체지향형 아키텍처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003년 국가 ITS 기술표준안 개발 연구'에서 국내외 아키텍처 개발 현황 검토를 통해 객체지향형 아키텍처를 개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ITS 서비스시스템 중 버스정보시스템(BIS)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객체지향형 아키텍처 개발 방안을 적용하여 객체지향형으로 전환하였다. 버스정보시스템

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유스케이스를 도출하였으며, 클래스 패키지를 정의하고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작성하였다.

둘째, ISO와 APEC회원국의 ITS관련 표준정보 수집 및 ITS표준 사용 현황을 조사하여 APEC Report를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는 ITS 국가표준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각 국가에 성공적인 표준화 및 표준 적용을 위한 전략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2005년도 ITS 기술기준 제정을 위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다. 2005년에는 자동요금징수시스템(ETCS)의 응용인터페이스 기술기준(안) 및 센터-제공 단말 간의 교통정보교환을 위한 기술기준(안)에 대한 제정요청서가 접수되었으며, 2004년에 적합성평가를 실시한 대중교통(버스)정보교환 기술기준(안)의 적합성 평가가 완료되어 모두 세 건에 대한 기술기준 심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ITS기술표준위원회 심의를 통해 자동요금징수시스템(ETCS)의 응용인터페이스 기술기준(안) 및 대중교통(버스)정보교환 기술기준(안)을 기술기준으로 제정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제안하였다.

넷째, 한국 NTCIP 구상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미국의 FEA 모델을 검토하고 UML을 사용한 FEA의 실제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한국 교통정보망 구축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연구기간: 2004. 12. 23~2005. 11. 22
서지사항: 375면
발주기관: 건설교통부 교통정보기획팀

>> 건설공사 부실벌점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Penalty Information System for Inadequate Construction Work

김재영, 문혁, 권혁진

■ 배경 및 목적

부실벌점제도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를 근거로 설계 등 용역, 감리 및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부실벌점의 관리는 부실벌점측정 대상에 따라 9개 협회로 분산관리하고 있어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측정기관에서는 공문 등의 물리적 서류를 이용하여 각 협회로 개별 통보하고 부실벌점을 활용하는 발주기관에서도 공문 등의 방법으로 각 협회에 조회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방식은 공문서의 직접적 전달에 따른 시·공간적 제약이나 분실의 우려와 관리를 위한 인력 및 비용에서 비효율적이며 특히, 다수의 관리주체와 물리적 문서의 관리체계에 의한 부실벌점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1개의 기관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이 제기되었다.

■ 내용요약

본 연구에서는 부실벌점 측정대상별(건설업자, 주택건설업자, 감리업자, 설계 등 용역업자 및 해당 기술자 등)로 9개 협회에서 개별 관리하고 있는 부실벌점정보를 부실벌점통합관리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하나의 기관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 정보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인터넷을 이용하

여 수요자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부실벌점통합관리시스템의 세부구성은 측정기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직접 입력할 수 있는 입력시스템, 발주기관에서 건설공사의 입찰 및 PQ시 부실벌점을 조회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과 정부기관에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현황·통계시스템과 건설산업데이터베이스 및 각 9개 협회에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연계시스템으로 구성된다.

>> 건설교통분야 SOC스톡 현황분석과 향후 추진방향설정 및 지역별 배분방안에 관한 기초 연구

A Primary Study on the SOC Stock Level and Regional Allocation of Infrastructure Investment

안흥기, 정일호, 김민철, 최지선, 윤성민

■ 배경 및 목적

SOC 분야에 대한 상대적인 예산비중 감소추세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간 형평적인 SOC배분의 요구 증대에 따라 SOC스톡 현황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토대로 체계적인 SOC투자계획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 내용요약

본 연구는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건설교통분야 SOC(도로, 철도, 댐, 치수 등) 투자 및 스톡을 추정한다. 2장에서는 SOC투자가 GDP, 고용, 잠재성장률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SOC스톡 수준을 국제수준과 비교와 평가한다. 3장에서는 지역별(권역별), 부문별 SOC 스톡수준(물량 및 금액)의 추정하고, 지역별(권역별) SOC 투자의 배분과 지역경제와의 관계를 경제관련 지표 등에 의하여 검토·분석한다. 제4장은 결론부분으로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투자의 효율성과 지역간 형평성 제고를 조화할 수 있는 재원배분에 관한 바람직한 대안마련 등 SOC 투자정책의 기본방향 및 정책운영과정상의 유의점을 제시한다.

연구기간: 2005. 2. 8~2007. 1. 27
발주기관: 건설교통부

>> 건설산업구조개편에 따른 건설보증기관의 발전방안 연구

Reform Strategies of the Construction Surety Body for Construction Industry Restructuring

김재영, 권혁진, 문혁

■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개방화·다원화되고 있는 건설보증시장의 환경과 여건변화를 감안한 건설보증기관의 역할 강화방안과 건설관련 공제조합이 건설보증기관

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건설보증제도와 건설보증기관 등 건설보증과 관련된 분야를 포괄하여 수행되었으며, 문헌조사

와 면담 및 실태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고 협의회와 토론회 개최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 결과가 주로 특정 보증기관이나 보증제도 및 상품관련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반면, 본 연구는 정책의 중심이 시장중심으로 이행됨에 따른 건설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건설보증의 역할강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 내용요약

본 연구는 제1장 서론, 제2장 국내 건설보증기관의 운용현황 및 실태, 제3장 건설보증시장의 여건변화 전망, 제4장 건설보증의 실태와 문제점, 제5장 건설보증기관의 역할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등 6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추진배경 및 목적과 방법론,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제2장에

서는 국내의 보증시장 전반에 대한 구조를 살펴보고 과점시장으로 알려진 건설보증시장의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건설산업 변화의 흐름과 보증관련 정책의 변화를 검토하고 건설보증시장의 미래를 전망하고자 하였다. 제4장에서는 최근 건설보증과 관련하여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사항들을 파악하여 건설보증제도 및 보증시장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공제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건설보증기관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주요 연구내용을 요약하고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방안을 다시 한번 요약·강조하였다.

과제기간: 2005. 6. 1~2006. 5. 31
발주기관: 건설교통부

>> 건설산업DB구축사업

The Construction Industry Database Project

김재영, 문혁, 권혁진, 박동호, 강형주, 백인곤, 고지훈, 이희구

건설산업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건설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1999년부터 2004년까지 건설산업DB를 구축하고 2005년부터 유지보수 및 운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건설산업DB는 건설업체 및 건설공사수행 정보를 종합관리하는 종합정보시스템으로서, 현재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net), 정부인트라넷(GOV),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 건

설사업관리능력평가·공시시스템(PCM),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 등 6개의 시스템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연구기간: 2005. 1. 13~2005. 12. 31
발주기관: 건설교통부

>> 검지기별 구간소통정보 산출 및 성능평가(II)**The Evaluation of Link & Corridor Travel Information from Different Type of Detectors(II)**

이상건, 정선영, 임관수

■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도로유형은 크게 지방부와 도시부의 연속류와 단속류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도로유형별로 도로·교통 조건에 차이가 있어 각각의 도로·교통 특성에 적합한 구간소통정보 산출방안이 필요하다. 정확한 구간소통정보 산출을 위해서는 대상 구간의 도로·교통 특성을 반영한 정확한 교통정보 수집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도로·교통 특성에 적합한 교통정보 수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각 도로유형별로 도로·교통 특성을 반영하여 어떠한 검지기체계가 적합한가를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반적인 시스템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따라서 정확한 교통정보 수집을 통해 적절한 구간소통정보를 산출하여 도로 이용자 편익을 증진시키고 전반적인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도로·교통 특성을 반영하여 도로유형별로 적합한 검지기체계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방부 단속류 도로를 대상으로 구간소통정보 산출을 위한 검지기 체계를 분석·평가하는 시뮬레이터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 내용요약

본 연구에서는 첫째, 구간소통정보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본 연구에서 고려할 영향요소를 설정하였다. 그 결과 구간소통정보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교통류특성, 기하구조, 신호, 간섭정도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구간소통정보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크게 교통 공학적 요소, 도로 기하구조적 요소, 검지체계 요소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교통공학적 요소에는 교통량, 밀도, 제한속도 등과 같이 교통류 특성과 관련한 요소가 있고, 도로 기하구조적 요소는 도로용량, 도로 길이, 구배 등 네트워크의 물리적 특성과 관련한 요소가 있으며, 검지체계 요소는 검지기 유형 및 설치체계와 관련한 요소로서 Loop, DSRC, GPS 등의 유형과 각 유형별 설치간격 및 보급률 등을 영향요소로 설정하였다.

둘째, 이러한 구간소통정보 산출을 위한 영향요소를 반영하여 검지기체계를 평가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하여, 차선 수, 신호현시체계, 교통량 등 교통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영향요인을 설정하고, 다양한 영향요인을 반영하여 검지기체계를 평가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였으며, 현장검증을 통해 시뮬레이터를 보정 및 보완하였다.

셋째, 다양한 검지기체계에 대한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평가하고 도로유형별로 적합한 최적 검지체계를 도출하였으며, 도로유형별 최적 검지체계를 제시해주는 최적검지체계 구축 지침(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기간: 2004. 10. 29~2005. 8. 28
 서지사항: 405면
 발주기관: 건설교통부 교통정보기획팀

>> 고속도로 교통정보 제공에 따른 이용자 편의 연구(1차)

Modeling for User Benefit of Transportation Information on the Highway

이상건, 정선영

■ 배경 및 목적

고속도로 연장은 최근까지 계속적으로 증가되어 왔으나 교통량의 증가 및 첨두시 교통량 폭주로 인하여 출·퇴근, 주말 및 휴일에는 고속도로 지·정체 현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고속도로 혼잡의 증가는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 생산성을 감소시키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동시간 지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혼잡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한편, 고속도로 이용자는 혼잡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고속도로의 차량운행 상황을 사전에 알고 목적지까지의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교통정보를 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에 대한 욕구가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증대되는 이용자의 정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한국도로공사는 FTMS설비를 구축하고 VMS, 인터넷, ARS 및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동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제공되는 정보의 효용 또는 가치에 대해서는 그간 별다른 연구가 이루어진 바 없이 정성적으로만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 교통정보 제공을 위한 투자의 효용성 및 적정 투자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웠다.

본 연구는 고속도로 정보제공에 대한 효과분석을 위해 고속도로 이용자의 교통정보에 대한 행태를 분석하고 이를 계량화하여 교통정보 제공에 따른 편익을 산출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고속도로 교통정보 제공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내용요약

본 연구는 1차연도 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주로 수행되었다.

첫째, 국내의 교통정보제공 효과분석과 관련한 연구를 검토하였다. 국외의 경우 교통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와 함께 해외저널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를 검토하였으며, 국내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통정보시스템과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둘째, 교통정보제공에 따른 운전자 편의분석을 위한 현장 모의실험의 일부로 운전자 행태분석을 위하여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를 통해 교통정보의 이용여부와 고속도로 교통정보를 제공받는 주요 매체 및 매체별 만족도를 분석하였으며, 궁극적으로 고속도로 교통정보 제공에 따른 시스템에 대한 운전자 행태도출을 목적으로 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인 교통정보 제공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 분석모델 개발 및 실용화를 위한 향후 연구 방향을 정립하고 이용자 편익을 고려한 교통정보 제공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반사항 검토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기간: 2005. 7. 23~2005. 12. 19
 서지사항: 119면
 발주기관: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기술원

>> 고속도로 사업효과 조사 연구

Expressway Impact Analysis

김호정, 안흥기, 정선영, 김혜련, 박상준

■ 배경 및 목적

1970년부터 약 35년 동안 총 2,923km 건설로 급속한 성장을 이룬 고속도로 등 도로 건설은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입지 지원 등 국가경제 성장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고속도로는 여객과 화물수송 측면에서 철도에 비해 비교우위를 확보함으로써 고속도로 중심의 수송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고규격의 도로건설로 자연환경 훼손, 대기오염 증가 등 환경영향으로 인해 도로 이외의 철도 등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국토면적당 도로연장, 인구당 도로연장을 외국과 비교할 때 OECD 30개 국가 중 상위권에 해당하고 있어 실제 도로규모는 충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도로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국가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지역개발과 산업입지 변화, 수송효율 증대 등 사회·경제적 영향 정도를 계량화한 연구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의 고속도로의 역할과 가치를 검토하기 위해 기 건설된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조사, 국민경제 기여도 평가 등 고속도로 건설의 당위성에 대한 계량화된 자료를 제시하여 향후 고속도로 건설 및 운영방향을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내용요약

2004년 말 현재 개통·운영 중인 노선은 24개 노선 2,922.95km이며, 이 가운데 민자고속도로로 운영 중인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천안-논산고속도로를 제외한

23개 노선 2,804.4km를 본 과업 대상노선으로 선정하였다. 대상노선에 대해 차로 현황과 교통현황을 검토하였다.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를 대상으로 하는 「고속도로사업효과조사 연구」(1995), 「도로투자효과분석 및 고속도로 중기투자계획 수립 연구」(2000), 「고속도로 노선별 사업효과 분석」(1999) 등의 선행연구를 대상으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평가항목 설정 및 방법론에 대한 고찰을 수행하였고, 외국에서는 도로건설에 따른 사업효과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직접효과는 차량운행비용절감, 시간가치비용절감, 교통사고절감 및 환경비용절감 편익 등 4개 항목으로 설정하였고, 방법론은 일반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서 활용하고 있는 항목별 모형을 적용할 예정이다. 간접효과는 효과의 범위(국가전체, 지역, 특정범위 등), 효과의 시기(건설단계와 건설이후의 단계), 효과의 유형(인구증가, 고용증가, 소득증대, 조세수입증가, 관광객 증가, 교통접근성 제고, 지가상승, 기업이전, 문화 및 사회가치 변화 등 매우 다양)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며, 효과의 범위는 본 연구에서 설정하는 특정범위(직접영향권+간접영향권 설정)로 하고, 효과의 유형 설정에 있어서는 기존 연구의 다양한 평가항목 중복문제(유사효과를 각기 다른 측면에서 파악)를 극복하면서 상대적으로 이해와 평가가 용이한 지표개발을 목표로 하여 수행할 예정이다.

연구기간: 2005. 12. 20~2006. 8. 23
발주기관: 한국도로공사

>>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관련 기본조사

A Basic Study on the Station Area Development of HSR

조남건, 진시현

■ 배경 및 목적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는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통행자의 특성조사 및 정차역 도시의 경제적·사회적 영향조사가 전제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역세권관련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고속철도 역세권의 개발방향을 도모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고속철도 탑승조사를 실시하여 여객통행특성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였다. 전반적으로 고속철도 이용객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그 변화가 크지 않다. 고속철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1차(2004. 11. 11~14)와 2차(2005. 1. 27~30) 설문조사의 결과는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예상보다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쇼핑목적 통행은 매우 적어 개통 당시 우려되었던 ‘빨대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고속철도를 이용한 문화생활의 혜택도 수도권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 도시로도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내용요약

현재 시점에서 볼 때, 고속철도는 인구가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며, 경제적 영향도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차역 도시로의 이전 의사가 있는 기업도 조사대상 업체 중 2%에 불과하였다. 천안아산이나 대전지역의 하숙 원룸업의 경우도 재실률이나 월세변동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고속철도 개통의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천안아산

지역의 경우 고속철도보다는 2005년 1월 20일에 개통된 수도권 전철 서울~천안 구간 개통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철도를 연계한 관광 상품의 경우 전체 수송실적의 0.3%에 그치고 있어 정차역 인접 관광지로의 편리한 연계시스템과 다양한 상품개발 및 홍보를 통한 관광수요 증대가 필요하다. 2004. 4~2005. 1의 10개월간 정기권을 이용하는 통행시간은 대전을 포함하여 1시간 이내가 대부분이며, 이용비율은 전체의 2.4%(경부선 2.6%, 호남선 1.3%)에 불과하다.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은 역공간의 부가가치 제고, 고속철도의 이용 증진, 도시의 이미지 개선, 토지이용의 활성화, 연계교통의 정비, 지역개발의 거점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고속철도 이용수요 증대가 우선되어야 하며 역을 중심으로 한 유동인구 집객을 위해 역세권 내 다양한 지원시설(업무, 컨벤션, 문화 전시, 상업시설 등)의 입지가 요구된다.

고속철도 역은 다양한 대중교통수단 및 승용차의 환승이 가능하여 역사 접근이 편리해야 하고, 인접한 시외지역 및 관광지 등을 연계할 수 있는 광역적인 교통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속철도 수혜권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나 프랑스 등 해외사례를 통해서 볼 때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이 저절로 이루어지거나 모두 성공한 것이 아니었다. 정차역 이용수요와 정차도시 및 인접지역의 이용인구, 관련 기관 및 시민 등의 적극적인 자재와 재원 등이 있어야 역세권 개발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 주요결과와 평가

대도시의 경우 역세권을 개발하여도 충분한 시장성이 있는 반면 중소도시의 경우 개발에 따른 수익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정치도시의 시장과 자원을 고려하여 개발가능성을 진단한 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고속철도는 빠른 교통수단이지만 저절로 정치도시에 발전을 가

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시장성이 있는 도시에서 고속철도의 역 입지를 활용하여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할 때 역세권 개발은 타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연구기간: 2004. 10. 28~2005. 4. 27
 서지사항: 본 보고서 296면, 요약 보고서 70면
 발주기관: 한국토지공사 신국토사업단

>> 국가ITS 사업의 상호연동 기반구축을 위한 기술표준 적용방안

Application Guidance of Standardized Technology for Mutual Linkage Base Construction in ITS Constructions

오성호, 조지현

■ 배경 및 목적

현재 정부는 다양한 ITS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들 사업 간 호환성과 상호 운용성 확보를 통한 연동기반 마련이 시급한 실정에 있다. 특히, ITS사업의 적용범위가 광역화되고 정보 활용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한 추진 주체 간의 정보교환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됨에 따라 각종 교통정보센터 간의 호환과 상호연계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 2004년 고속국도, 국도 및 지방도, 2005년 대전광역시 등 28개시의 시·군도에 대한 표준 노드/링크DB를 구축하고, 구축된 전자지도상에서 교통정보를 보다 더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공공시설 입지정보DB 구축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또한 '대중교통정보 기술기준'의 실무적용 방안의 마련을 위해 대중교통정보 연계를 지원하는 표준 대중교통정거장DB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 표준 노드/링크 연계·편집 프로그램에 공공시설 입지정보 및 표준 대중교통정거장DB 관리기능을

추가하고 시범도시를 선정하여 시범DB를 구축한다.

■ 내용요약

본 연구에서는 먼저 시설물 입지정보 구축 현황을 검토하고 공공시설의 범위를 설정하여 입지정보 구축 대상 공공시설물을 분류하여 그에 대한 구축 방법을 지침을 통해 제시한다. 또한 대중교통정거장 부문에서는 국내 주요 자치단체의 대중교통정거장 구축현황을 검토하고 표준 대중교통정거장ID를 수립하고 DB 구축방안을 지침을 통해 제시한다. 이러한 공공시설 입지정보 및 표준 대중교통정거장DB 구축 지침을 통해 광역BIS 대상 및 2005년 표준 노드/링크DB 구축 지역인 과천시를 대상으로 공공시설 입지정보 및 표준 대중교통정거장DB를 구축한다.

연구기간: 2005. 10. 10~2006. 8. 7
 발주기관: 건설교통부 교통정보기획팀

>>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설엔지니어링 핵심기술개발 연구: 설계내실화방안

Development Research for The Core Technology Improv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Construction Engineering

김재영, 문혁, 김수경

■ 배경 및 목적

설계내실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 활동 중 비중이 큰 설계용역에 대한 발주청의 관리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방안으로 발주청의 설계용역관리 업무를 보완하는 기능인 설계 감리제도의 활성화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설계용역관리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설계변경실태와 설계변경요인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서 발주청에 의한 설계용역관리상의 한계를 도출하였고 다음에는 그의 개선방안으로 설계 감리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설계 감리 대상공사와 업무범위 그리고 대가 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설정을 위하여 실태와 전문가 등의 의견 등을 조사·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설계 감리의 근간이 되는 대상공사, 업무범위, 대가 기준 등을 도출하였고 설계 감리지침과 설계VE요령 등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내용요약

본 연구에서는 설계변경 요인과 그의 효과 즉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감효과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수행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설계변경 사례를 조사·분석하였다. 통계적 기법

을 적용하여 건설공사 준공까지의 설계변경 횟수, 예상되는 공사비 증가율을 추정하고 설계변경요인별 빈도수를 분석하는 한편, 이와 연계하여 설계변경요인별 효과를 파악하는 데 활용하였다.

사례대상 건설공사의 경우 예상되는 평균 공기는 약 6년이며 현재 평균 진행공정은 79.2%다. 연평균 설계변경 차수는 평균 0.8차이고 공사 1건당 평균 설계변경 횟수¹⁾는 4.5회였다. 건설공사 공종 및 설계변경 내용에 따라서 설계변경 1건당 공사비 변동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평균적으로 약 15억 원이 증가하고 공사 1건당 약 92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평균 진행공정이 79.2%인 상황에서는 10.3%가 증가하였으며 향후 건설공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약 14.3%가 설계변경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례대상공사 전체로 보면 479건 건설공사를 완료하기까지 설계변경으로 건설공사비가 약 4조 4,359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건설공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설계내실화를 기하여야 한다. 그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설계 감리제도를 도입하여 설계용역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전적으로 설계VE를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기획단계에서부터 공종, 시설물, 공사비, 공기, 교통 및 환경, 민원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체계가 충분히 활용되어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1) 공사 1건당 설계변경횟수는 공종별과 설계변경 차수 당 설계변경 건수 등을 감안하여 추정한 예측치다.

03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획단계에 실시한 타당성 조사 등에 대한 검토가 설계과정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건설현장조사 사항에 대한 반영과 전차 계획 등의 반영여부를 설계용역단계에서 감독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확립되도록 하였다. 즉 보다 실질적으로 설계용역성과와 설계용역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설계VE 결과 등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둘째, 설계내실화를 위하여 설계 감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발주처의 설계용역 감독업무를 대행하는 설계 감리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정리하였다. 설계 감리제도와 유사한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설계의 경제성 검토업무를 수행하는 설계VE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설계 감리 업무에 설계 성과물의 검토 및 설계VE업무가 독립적으로 운용되면서 상호연계성을 갖도록 하였다.

셋째, 설계 감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상공사를 조정하고 설계 감리 업무범위, 대가 산정기준 및 책임범위 등을 규정한 설계 감리 업무수행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설계 감리제도 운용체계를 정립하여 실

질적인 업무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방안으로 중앙정부차원에서 설계 감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설계 감리업무수행지침(안)'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세부시행요령(안)'을 마련하였다.

넷째, 설계 감리제도를 원활하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설계 감리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고 적절한 설계 성과검토 비용과 설계의 경제성 검토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설계 감리업무의 범위와 내용 등을 고려한 설계 감리대가를 정리하고 새롭게 설정하였다.

그리고 끝으로 설계변경과 관련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개 대상에 포함시켜 설계변경 자료의 공개 의무화를 유도함으로써 설계변경사항의 투명성 확보와 실효성 있는 설계변경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설계 감리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연구기간: 2004. 5. 28~2005. 3. 23
 서지사항: 206면
 발주기관: 건설교통부

>> 균형발전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Balanced Development Impact Assessment

조남건, 이응우, 권오성(한국행정연구원)

■ 배경 및 목적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설치, 국가균형발전법 제정,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기업도시 건설, 지역혁신체계 구축, 신활력지역 지정과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균형발전정책의 기대효과가 전

국토에 고루 파급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배분에 있어서도 기존에 강조되던 경제적 효율성 외에 지역 간 형평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국가재정사업의 투자결정시 국가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입지, 규모, 사업추진방식을 결정하는 ‘균형발전 영향평가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균형발전 영향평가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제도의 이론적 근거와 함께, 평가항목, 평가방법, 평가주체 등 도입방안을 강구함에 있다. 균형발전영향평가 제도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도입 취지가 있다. 동 제도를 통해 국가재정사업이 균형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할 것인지를 지역별로, 사업의 특성별로 평가함으로써, 사업의 입지선정, 계속사업의 구조조정, 사업의 결정 등에 활용하고, 궁극적으로 수도권 과밀 억제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적용대상은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모두가 포함되며, 체크리스트에 의하여 균형발전의 기여여부를 평가한다.

■ 내용요약

수도권 사업에 대한 체크리스트 평가항목은 우선적으로 사업성격, 국가경쟁력, 재정부담, 절차 등의 측면에서 수도권 입지사유와 인구, 경제력, 사회적 비용 등 수도권 집중영향으로 구성되었다. 즉, 수도권 사업은 수도권에 해당 사업이 입지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수도권 입지사유)을 거치고, 해당 사업이 수도권의 입지이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사업으로 인해 수도권의 집중영향의 유무를 판정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비수도권 사업의 평가항목은 인구, 경제력, 사회적 비용 등에 있어서 수도권 집중완화 효과와 비수도권의 지역경제, 삶의 질, 지역혁신역량 등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포함하였다.

평가항목의 평가방법으로는 원단위법, 균형발전지수, 가중치를 고려한 체크리스트 등이 가능하다. 균형

발전 영향평가제도의 도입 및 시행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객관성과 과학성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며, 특히 평가척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균형발전 평가원단위가 산출되어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원단위 또는 균형발전지수의 설정은 향후 지속적인 연구와 여론수렴 과정이 필요하다.

균형발전영향평가는 재정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의 적정성을 국가균형발전 기여측면에서 검토하여 조정하는 것이므로 기획예산처와 사전협의를 하고, 각 부처에서 예산요구시 균형발전영향평가의 체크리스트에 의해 평가한 후 평가결과를 제출토록 되어 있다. 기획예산처에서는 제출된 평가표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예산편성시 반영하게 된다.

현재 재정사업의 평가내용은 해당부처의 예산담당관들이 맡고 있으며, 균형발전 영향평가 지침에 의거하여 평가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매뉴얼이 작성되지 않아 평가자가 임의로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사업의 평가내용이 단순하고, 근거자료의 제출이 부실하며, 평가결과의 판단근거가 빈약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 영향여부를 판단하는 일이 불확실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균형발전영향평가의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과학적인 수행을 위해 ‘균형발전영향평가센터’(가칭)를 설립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 기업도시 기반시설 국고지원 기준 연구

Study on the National Subsidy Criteria for the Infrastructure for the Enterprise City Development

유재윤, 정진규, 김훈상

■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민간의 투자촉진과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제정·공포(법률 제7310호, 2004. 12. 31)됨에 따라 이에 의거한 기업도시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구역지정의 제안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의 투명하고 공정한 환수를 위한 객관적 기준의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내용요약

본 연구는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과업의 배경과 목적, 범위, 추진체계와 과업수행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제2장에서는 기업도시 타당성 검토기준을 다루었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도시 개발의 필요성과 입지선정의 기본원칙, 외국의 기업도시 개발사례와 시사점을 통해 우리에게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타당성 검토 및 평가항목을 구체화하고 전문가 조사를 통하여 이들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설정하였다. 제3장은 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기준을 다루고 있는데, 개발이익의 개념과 원칙, 개발이익 관련 제도 및 법규를 검토하였으며, 사례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살펴본 후 구체적인 산정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개발이익의 차등적 환수방안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기업도시 사업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타당성 검토의 가이드라인과 개발이익 산정기

준을 담았다. 개발구역 지정의 타당성 검토·평가 가이드라인과 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기준이며, 마지막으로 부록에는 연구과정에서 개최된 회의내용을 수록하였다.

>> 민간투자사업 중간평가와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nterim Evaluation and the Strategies for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the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유재윤, 안흥기, 김호정, 권혁진, 최지선

■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민간투자제도 도입 10년이 지난 상황에서 그동안의 민자제도의 변천과 제도 개선사항, 이미 완공된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냉정하게 중간점검·평가하고,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제도개선사항을 도출하며, 향후 예상되는 민자사업 변화환경 속에서 바람직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 내용요약

본 연구는 제1장 과업의 개요, 제2장 SOC 민간투자 관련 제도 변천, 제3장 민간투자사업 추진성과 분석, 제4장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비교분석, 제5장 민간투자제도 개선의 효과 및 영향분석, 제6장 결론 및 민간투자사업의 발전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민간투자제도의 도입 및 변천과정,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하고 외국 민간투자제도를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주요 기대효과라 할 수 있는 SOC 투자재원 확충효과, 재정절감 효과, 조기공급 효과, 정부리스크의 이전효과 등에 대하여 그 성과를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재정사업과 민간투자 사업을 효율성과 재정지출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5장에서는 그동안 추진되었던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와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연구의 한계와 주요결과를 서술하고, 향후 민간투자사업의 추

진 방향을 기본방향과 부문별 세부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평가하고, 장기적 발전방향을 모색함으로써 SOC 시설에 대한 국가적 필요성과 한정된 재정상황 하에서 더욱 큰 역할이 기대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적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기간: 2004. 12. 24~2005. 12. 8
 서지사항: 256면
 발주기관: 건설교통부

>> 부천시 교통관련 기초조사자료 및 ITS(소통부문) 시행효과 제고방안 연구

The Basic Survey of the Traffic Flow in Bucheon City and
the Study of the Methods Raising the Effect of the ITS Project

김경석, 이경아

■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2001년부터 격년제로 수집되는 부천시 교통기초자료의 2005년도 자료 확보 및 교통패턴 파악, 2006년에 예정된 ITS 사업의 시행효과 제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2005년도 교통현황조사 및 분석, 국내외 ITS사업 효과분석 사례 검토, 2003년 자료를 토대로 수립된 「부천시 ITS 기본계획」(2004)을 2005년 교통상황과 비교하여 신호부문 설계내용 검토를 통한 2006년 부천시 ITS사업의 시행효과 제고방안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천시의 교통패턴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교차로 112개, 가로구간 180개, 시외유출입 23개소, 기하구조 및 교통시설 운영현황 등을 약 1개월에 걸쳐 조사하였으며, 조사시간은 조사지점의 특성에 따라 첨두시간 조사(10시간) 및 전일조사(24시간)로 구분하여 시행하였다.

■ 내용요약

2001년부터 격년제로 수집된 부천시 교통기초자료 조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2005년도 자료와 2003년도의 자료 비교를 통해 부천시의 교통패턴 변화를 파악하였다. 2003년도에 비해 2005년도의 부천시 교통상황은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오히려 교통량은 줄고 속도는 향상되어 교통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부천시에서는 2003년 이후 특별한 개선대책을 시행하지 않았고, 2003년의 부천시는 상동택

지개발지구의 입주와 주변지 개발, 범박지구 개발 등으로 인해 특이한 교통상황을 보이고 있어 향후 교통기초자료의 추가적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05년 현재에도 지하철 7호선 공사와 여울지구 택지개발 등 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어 2005년의 교통상황이 안정된 교통패턴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주요결과와 평가

교통기초자료 분석결과 소통에로구간으로 분석된 지점은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원인을 유형별로 파악하여 ITS가 필요한 지점과 TSM측면의 개선이 필요한 지점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소통부문과 관련하여 부천시 ITS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간선도로교통신호제어시스템과 2005년도 교통패턴을 비교하여 주요 교차로(CI) 및 신호그룹(SA)의 수정을 통한 ITS 사업 시행효과 제고방안 및 예상되는 소통부문 개선효과를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연구기간: 2005. 12. 16~2005. 12. 25
발주기관: 부천시

>> 신도시 개발 등이 건자재 및 건설인력 수요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Supply Strategies of Construction Materials and Labor for the New Town Development

김재영, 안흥기, 권혁진

■ 배경 및 목적

2007년부터 추진될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신도시 개발로 인해 주택 200만 호 건설 당시와 같은 건설자재 및 건설인력 수급 불안정이 초래되고 물가상승 등 거시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건설에 대한 인력 기피현상과 더불어, 신도시 건설이 본격화될 시기(1907~2020)에는 우리나라가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건설인력 수급의 어려움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며, 환경문제 등으로 인한 골재 채취난이나 시멘트 원자재 확보난 등으로 일부 건설자재의 수급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차원에서 적절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배경 아래 건설경제는 물론 거시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신도시 개발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경제정책 차원에서의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 내용요약

먼저, 주택 200만 호 건설(1988년~1992년) 추진사례 검토를 통해 주택 200만 호 건설이 우리 경제와 건설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시사점을 분석하고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감안한 중장기 건설투자 전망을 통해 신도시 개발이 거시경제와 건설자재 및 인력수급에 미치는 효과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였다.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건설자재 공급능력은 주택 200만 호 건설시기를 겪으며, 비약적인 증가를 이루었으며, 시멘트, 골재, 철근 등 주요 건자재의 공급능력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되어 신도시 건설을 위한 건자재의 총괄적인 수급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 간 요인, 계절적 요인, 품종 간 요인, 원자재 조달여건 요인, 환경규제 강화 등의 요인으로 인한 수급불안 요인이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건설자재와 관련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뿐만 아니라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의 본격적인 건설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공급구조가 취약한 비수도권 특히 호남권과 충남권, 영남권을 중심으로 건설자재 및 건설인력 수급 안정화 방안을 강구하고 시멘트, 철근 등 건설자재는 지역별 유통체계를 개선하되 환경영향과 주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호남권과 충청권 그리고 영남권에 골재(특히 모래) 등의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건설인력과 관련해서는 신도시 개발이 정점에 이르러 될 2012년의 건설인력수요 약 200만 명의 10%인 약 20만 명의 건설인력 부족에 대비하여 2007년부터 건설기능인력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연구기간: 2005. 9. 5~2005. 11. 3
서지사항: 160면
발주기관: 건설교통부

>> 왕궁특수지역 환경개선사업 및 왕궁축산폐수 처리시설 보강공사 민간제안사업 제3자 공고(안) 및 기획예산처 심의자료 작성

Improving Environment Project of the Wang-Gung Special Area, Reinforcement of the Wang-Gung Stock Waste Water Disposal Facilities, Private Proposal Project of the Third Party Public Notice 'a Proposal' and the Ministry of Planning and Budget Consideration Data Preparation

윤하중

■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익산시의 환경개선사업으로 현재의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개량 및 증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민간투자사업의 형태 중 민간제안사업의 형태로 동양건설에서 2004년에 익산시에 제출하여 당시 국토연구원의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사업의 전반적인 구도와 사업추진의 적정성을 검토한 바 추진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최초제안자로 채택되어 추진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사회기반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9조에 의거하여 왕궁특수지역 생활환경개선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보강공사에 대한 민간제안서가 접수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의 내용, 사업시행조건 및 사업시행자 지정방법 등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령 제17928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제7항의 규정(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736호 부칙 제2조에 근거)에 의한 제3자 제안공고를(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에 같음) 하며, 아울러 제3자 사업제안서 작성 및 최초제안자의 사업제안서 변경에 필요한 제반사항과 익산시의 투자방침 및 지원사항 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내용요약

본 연구는 민자사업으로의 추진을 위한 제3자와의 경쟁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포함한 공고안의 작성임으로 다음의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용어의 정의

로서 제3자 공고 안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확한 의미의 전달과 향후 평가 및 협상이 진행될 경우에 용어의 해석으로 인한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제3자 공고 안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 둘째, 최초제안자의 주요내용으로 사업의 개요, 사업의 추진방식, 최초제안자 요구사항,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점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셋째, 사업제안 및 사업시행조건으로 제안자의 자격, 사업 제안 방법, 투자 및 운영조건, 설계 및 시공기준, 주요 사업시행조건 변경, 익산시의 지원과 권한 위임, 사업시행자 지정 또는 취소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넷째, 제안서 제출 및 평가부분으로 제안서 작성 기준,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제안서 평가 기준 및 평가요소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일정 및 비용부담부분으로 제3자 제안 공고, 제안서 작성요령 안내, 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한 질의·답변 등에 관한 일정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또한, 사업 제안서를 작성할 경우 평가의 일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안)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연구기간: 2005. 4. 26~2005. 6. 6
서지사항: 100면
발주기관: 익산시

>> 인천 남항·북항 배후도로 지원신청서 검토 용역

The Examination of the Support-Proposal about Rear Roads of the South and North Harbor in Incheon

김경석, 안흥기, 서민호

■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인천 남항, 북항 항만배후도로건설 지원신청서에 첨부된 사전검토보고서를 검토하고, 검토된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 남항과 북항의 배후도로 건설지원 대상사업의 여부를 밝힘과 동시에 국고보조금 규모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내용요약

본 연구에서는 2005년 6월 13일에 제정된 '항만배후도로 건설지원지침(해양수산부 예규 제23호)'를 기준으로 인천광역시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항만배후도로 건설 지원신청서'에 첨부된 '인천 남·북항 항만배후도로사업 사전검토보고서'를 검토하였다

검토항목은 항만배후도로의 경제성 분석 및 항만차량비율, 항만개발 및 항만배후도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부분이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 인천 남·북항의 현황 및 교통량을 조사하였다.

인천 남항 배후도로는 14개 구간, 1개 지하교차로를 포함하여 총연장 1만 360m로 2005년 현재 6개 구간 5,270m가 공사 중에 있으며, 이 중 과업대상인 '쌍3-6', '대1-3', '대1-10', '쌍1-1'의 4개 구간과 응암 지하차도는 향후 컨테이너 2선석 및 잡화부두 2선석 확충 및 배후단지 개발계획과 맞물려 항만배후도로 건설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인천 북항 배후도로는 12개 구간, 1개 지하교차로를

포함하여 총연장 1만 8,040m로 인천광역시가 5개 구간 7,100m,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6개 구간 8,890m를 2008년까지 건설할 예정이다. 과업대상인 서부 순환로 1개구간과 연결 지하차도는 북항 배후단지 개발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도로개설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항목은 항만배후도로 건설지원 자격, 재원조달방안, 정부편의비율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항만배후도로 건설지원 자격 검토를 실시한 결과, 신설 또는 확장 예정인 항만배후도로가 인천광역시에 위치하고 있고, 사업 대상 구간의 항만차량비율이 25% 이상이었으며, 해당 항만배후도로의 경제성(B/C) 분석 결과 1 이상을 충족하여 건설지원 신청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조달방안을 검토한 결과 사전검토보고서의 경우 신청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최종 국고 보조금 변동치를 수렴한 재원조달계획의 수정이 요구되었다. 마지막으로 정부편의비율을 검토하기 위해 KDI MRIO 모형(Multi-Regional Input-Output Model, 다지역 산업연과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사전검토보고서에 제시된 비율과 부분적으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 수정이 요구되었다.

위와 같은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산정한 결과 인천 남항의 정부보조비율은 44.22%로 나타나 사전검토보고서에 제시된 45.8%보다 1.56% 하락하였고, 인천 북항의 경우 정부보조비율이 45.25%로 나타나 사전검토보고서에 제시된 44.19%보다 1.06% 상승하였다.

■ 주요결과와 평가

본 연구에서 검토한 인천 남항, 북항 항만배후도로 건설 지원신청 사전검토보고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항만배후도로 지원 사업 검토의 최초 사례로, 향후 동북아 물류기능 강화를 위해 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항만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항만배후도로 건설의 국고보조 적격 심사 및 적정보조비율 산정기준을 시행사업을 대상으로 검토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다만 검토 기준이 되었던 '항만배후도로 건설지원지침(해양수산부 예규 제23호)'이 지원조건을 검토하는 항목에서 유권해석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갖고 있었

고, 항만차량비를 산정과 관련된 항만차량 교통수요 분석기준이 좀 더 명확히 정립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항만배후도로에 대한 정부지원은 국가적 물류 거점 확보와 인근 지역 교통인프라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정책으로 판단되며, 향후 문제점으로 지적된 일부 지원지침 개선을 통해 항만배후도로 건설에 대한 정부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토대가 요구된다 하겠다.

연구기간: 2005. 10. 7~2005. 12. 6
 서지사항: 138면
 발주기관: 해양수산부

>> 인천경제자유구역 교통기본계획 수립 및 신교통시스템 도입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Incheon FEZ(Free Economic Zone) Transportation Master Planning and New Transportation System Feasibility Study

김경석, 임영태, 오성호, 김종학, 김기용, 이성렬

■ 배경 및 목적

인천 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 청라지구를 포함한 인천자유경제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21세기 국가경제 선도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다양한 개발계획 중 교통부문은 기존 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교통혼잡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친화적인 첨단도시 건설을 도모할 수 있는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현을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신교통시스템을 도입하여 물류 및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생활환경 및 기업환경의 개선을 도

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경제자유구역 3개 지구를 대상으로 하여 교통체계 및 운영관리에 대한 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신교통 시스템 및 노선대안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재무적 타당성을 평가하여 최적노선 및 적정 신교통 시스템을 선정하고 연계교통체계,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신교통시스템 도입 타당성 조사연구를 수행하였다.

■ 내용 요약

본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한 교통기본계

획수립 내용을 다루었고 두 번째에서는 경전철, BRT와 같은 신교통시스템 도입타당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먼저, 교통기본계획은 몇 개의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연구가 진행되었다. 먼저, 교통현황 분석에서는 인천시의 도시·교통현황을 살펴본 후에 수단·목적별 통행특성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 장래 도시교통여건 전망 부분에서는 장래 교통수요분석 과정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통행발생량 및 수단별 분담률을 산정하여 가로공간 및 신교통시스템의 통행량을 추정하였다. 다음으로 부분별 개선방안에서는 교통기본계획의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광역교통체계, 지구내 가로망 체계 및 대중교통체계의 기본 틀을 설정하였다. 그 밖의 내용으로는 대중교통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환승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고 기존 시가지의 심각한 주차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차시설 및 운영체계 구축방안을 수립하였다. 이와 함께 연구과업에서는 보행 및 자전거 교통체계 구축을 통해 비차량 이용자의 친환경 보행권을 강화하였다. 또한, 신설될 교통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교통정보제공을 위해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방안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신교통 도입타당성 조사에서는 먼저, 동경, 싱가포르, 런던 등의 신교통 도입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신교통 도입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도입할 신교통시스템의 유형을 선정하기 위해 BRT 시스템, 경전철 시스템의 특성을 파악하고 도입예정 시스템의 각 지구별 노선대안 작업을 수행하였다. 교통기본계획에서 예측된 장래 교통수요를 바탕으로 도입할 신교통시스템의 노선별 이용자수를 예측하고 이를 시스템 선정기준 자료로 활용하였다. 시스템 선정조건은 노선특성, 교통수요, 운행·환경성 측면 등 다양한 조건들을 검토하여 시스템 후보를 선정하였다. 또한, 계획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각 지구별 신교통시스템의 노선, 정거장, 차량 기지와 같은 구체적인 건설계획을 수립하였다. 수립된 건설계획을

바탕으로 지구별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결과와 평가

본 연구에서 수립한 교통기본계획 내용은 단계적 개발계획과 교통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구성하였으며 장기적 관점에서는 마스터플랜으로 종합적인 계획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계획 수립 시 단계별 도시개발방안과 같은 장래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3개 지구(송도, 영종, 청라) 간 유기적인 광역교통체계 구축(2020년)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다.

신교통시스템 도입타당성 조사에서는 지구별 특성과 통행패턴을 고려하여 노선대안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차량선정과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경제성 분석(B/C)결과 송도지구 0.98, 영종지구 0.03, 청라지구 0.87로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인 분석에 의존하여 경제성을 분석한 한계가 있으나 국제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효과와 투자 및 거주자 유치효과 등을 고려할 때 신교통 도입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재정사업 자율평가 체계구축 연구

A Study for Construction of Self-Evaluating System on Government-Budget Projects in MOCT

김성일, 류재영, 최수, 박태선, 김민철, 이승훈, 홍정열, 박채운

■ 배경 및 목적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가 2005년에 도입됨에 따라 건교부 차원에서 재정사업 자율평가체계의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자율평가에 부합되는 성과지표의 발굴 및 개선과 더불어, 기존의 자율평가체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자율평가 지침서를 개발하여 건교부 재정사업의 자율평가체계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내용요약

본 연구의 구성은 우선 제1장에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제시하였고, 제2장에서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개요를 설명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재정사업자율평가의 시행현황 및 문제점, 제4장에서는 재정사업자율평가체계의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결론을 맺고 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운영 실태 분석을 통하여 자율평가에 대한 인식의 부족, 평가서 작성을 위한 지원체제의 미흡, 평가체제 및 평가지침의 문제, 자율평가 결과검토 및 조정상의 문제가 있었으며, 성과지표의 적용상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성과지표의 선정, 목표와 지표 간의 인과관계의 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재정사업자율평가 제도 운영의 개선방안으로

평가주체의 인식제고 및 지원체제정비, 평가수행체제의 정비, 평가지침의 보완, 자율평가 검토기준의 마련 등을 제시하였고, 실제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지침을 개발하여 제시함과 동시에 외국의 사례분석을 통한 지표선정기준을 설정하여 새로운 지표를 발굴하거나 보완하였으며, 이러한 성과지표의 활용성 증진을 위한 방향도 함께 제시하였다.

건설교통부 재정사업을 주로 SOC 사업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으며, 단위사업(프로젝트)을 대상으로 결과지표를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사업군(프로그램) 단위의 성과평가체계의 구축과 적용을 위한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과제기간: 2005. 8. 17~2005. 12. 31
 서지사항: 374면
 발주기관: 건설교통부

>> 전국 무역항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수립 용역(수요측정 및 경제성분야)

The Establishment of a Master Plan for Logistic Supporting Complexes(Distriparks)
Adjacent to Trade Ports in Korea

류재영, 임영태, 이정윤, 홍정열

■ 배경 및 목적

항만배후단지는 글로벌 경제통합이 강화되는 국제 무역 환경에서 기업의 공급사슬망 관리(Supply Chain Management)를 지원할 수 있는 유용한 시설이며, 다국적 기업의 유치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공간이다.

과거 전통적인 항만은 점차 종합물류서비스 공간으로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 되고 있으며,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로 부상하려는 우리나라 역시 항만 기능과 연계된 국제적인 종합물류단지를 적극 개발 중이다.

본 연구는 항만법을 근거로 최근 국내외 물류환경 변화를 반영한 항만 배후단지 수정(修整)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항만배후단지의 물동량 및 수요 면적을 추정하고 단지 개발의 경제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내용요약

본 연구에서는 항만배후단지 개발 여건 분석 및 필요성을 검토하고, 기존 항만배후단지 유형구분 기준을 재검토하여 항만배후단지의 서비스 대상별 범위별 기능별 유형 등 구분 기준을 세분화한다.

항만배후단지 수요분석은 기존 배후단지 수요 예측 방법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배후단지 유형을 고려한 차별적인 물동량 분석 모형을 수립하여 항만배후단지 유형별 도입기능 설정 및 개발규모를 산정한다.

항만배후단지 개발의 경제성 검토는 단계별 투자비에 근거한 경제성 및 수익성과 배후단지 개발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분석함과 동시에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추진여부 및 투자주체를 판단한다.

연구기간: 2005. 12. 29~2006. 10. 20
발주기관: 해양수산부

>> 전국단위 표준 노드/링크DB 연계구축 사업관리

Management for Construction of Standardized Node/Link for ITS Information Exchange

이상건, 오성호, 강희찬, 조지현, 한진영

■ 배경 및 목적

국민들의 경제활동이 점점 광역화 및 다양화되면서 국지적인 지역 교통정보는 물론 전국단위 교통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교통정보는 도시단위별 다양한 형식으로 수집되고 있어 인접 도시와의 교통정보 호환 및 상호교환이 어려워 단일화된 표준 전자지도 체계가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건설교통부에서는 2004년 단일화 된 노드/링크ID 체계를 제시하고, 고속국도, 국도 및 지방도에 대하여 표준 노드/링크DB를 구축하였다. 위 사업의 완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교통정보의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사업 간 정보교환의 호환성과 상호 연계성을 완성을 목적으로 대전시 등 12개 시의 시군도급 도로에 표준 노드/링크DB를 구축하였다. 또한 이러한 표준 노드/링크DB와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할 수 있는 연계시스템을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와 관련한 사업결과물에 대한 검수를 포함한 사업전반에 대한 사업관리를 실시하였다.

■ 내용요약

본 연구에서는 표준 노드/링크DB 구축사업에 대하여 사업대상 자치단체별로 구축되는 DB의 연계성 및 사업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를 수행하였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표준 노드/링크 구축 지침에 관한 기술적 지침이 수록된 해설서를 발간하고 사업의 일관성 및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표준 노드/링크 구축 사업대상인 12개시에 대

해 사업 공동추진 및 업무협력 협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업무협력 협정을 바탕으로 공동 발주를 추진하고 기술 및 가격평가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결과물에 대한 검수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사업에서는 대전광역시 등 표준 노드/링크DB 구축 대상 12개시의 행정구역 내 시군도 중 도로폭 원 10m 이상의 도로 및 10m 미만의 시군도 중 교통정보교환의 필요성이 있는 도로 및 민간이 운영하는 교통시설에 대하여 DB를 구축하였다.

표준 노드/링크DB 구축 순서는 '사전조사 → 현지조사 → 표준 노드/링크DB 입력'의 3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사전조사는 조사대상 확정 도면과 해당 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새주소 사업자료 등의 자료 및 국가교통 DB를 통해 DB 구축 대상 물량을 선정하고, 교통정보 교환 필요성과 추가 구축 필요분에 대하여 해당 자치단체 담당자와 협의를 한 후 최종 DB 구축 대상 물량을 산정하는 단계이며, 현지조사단계에서는 앞서 산정된 구축대상 도로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참고로 하여 최종 결과물인 표준 노드/링크DB를 구축하였다.

표준 노드/링크DB 입력은 사전조사 및 현지조사 수행결과를 기초로 입력하여 본 사업으로 통해 구축된 링크연장은 총 6,317km(12개 시)다.

구축된 표준 노드/링크DB와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갱신할 수 있는 시스템 체계를 구축을 목적으로 하드웨어 부문에서 사업 대상 자치단체에 표준 노드/링크 연계·편집 및 교통정보 연계시스템 운영서버를 설치하

였다. 또한 건설교통부와 자치단체 간 실시간 연동 및 효율적인 운영환경의 구축을 위하여 GIS Tool 1식과 VPN Client 및 ASN,1을 설치하고 통신연계프로그램, 매칭테이블 관리프로그램, 가공프로그램, 백업프로그램이 설치되었으며, DB구축 및 시스템구축의 전반적인 수행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검수를 실시하였다.

연구기간: 2005. 4. 25~2006. 2. 14
 서지사항: 각 257면(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고양시, 과천시, 성남시, 안양시, 원주시, 충주시, 전주시, 군산시, 제주시), 251면(수원시)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고양시, 과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원주시, 충주시, 전주시, 군산시, 제주시

>> 주차환경개선기본계획 수립 및 주차수급실태조사 연구

A Study of Establishment of a Fundamental Plan of Parking Environment and the Parking Supply-Demand Realities Research

윤하중, 박제진

■ 배경 및 목적

1990년대 후반 이후 안양시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주차시설의 운영효율 극대화 및 주차시설 확대에 노력해 왔으나, 급증하는 주차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자동차 보유대수의 급증에 따른 자동차 등록정보와 주차시설 정보와의 연계성 체계 확립이 미흡하고, 현상상황에 근거한 주차정책 수립, 주차장 공급 결정, 주차장 운영·관리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주차장법 개정(법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 2)에 따라 정기적인 주차수급 실태조사 및 주차수요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주차장 확보수준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노외주차장 우선 공급 등을 추진할 제도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양시의 블록별 주차시설현황, 불법주차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공영주차장 우선공급 등 주차장건설 기본계획 수립과 더불어 안양시 주차수급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주차장 관리계획 수립 등 안양시 주차장관련 조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내용요약

본 연구에서는 안양시의 주차현황조사 및 분석을 통한 주차관련 문제를 파악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주차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래 예상되는 주차수요를 추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주차관련 중·장기 개선대안을 제시하고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구를 수행한다.

첫째, 주차현황 조사 분석에서는 주차여건조사, 주차시설조사, 주차수요조사, 시민 요구도 조사, 주차수급실태조사, 현황도 제작(DB화)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한다. 주차여건조사는 주차장 진출입구 위치 및 지장물 설치현황과 불법 지정차금지표지 등 각종 교통안전표지 설치현황, 그리고 도로별 불법 지정차금지구간 지정현황 등에 관련된 조사를 시행하는 것이고, 주차시설조사는 주차장의 위치, 규모, 민영/공영, 유료/무료

03

등 전반적인 시설현황 등을 조사한 것이며, 주차수요조사는 노상, 노외,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이용실태, 주차장의 타 용도 전환여부 파악, 그리고 주·야간 시간대 주차수요 파악 등을 조사한다.

또한 최소 표본율을 고려하여 시민들의 만족도 및 요구사항을 표본 조사하는 시민요구도 조사와 동별 블록별 주차수급 실태분석 및 과부족 파악, 그리고 주차공급 가능규모 파악 등의 주차수급분석과 목표연도별 블록별 주차수요 예측 및 주차과부족 파악 등의 주차수급 실태분석을 실시하고, 주차시설 및 이용현황 조사결과를 최종적으로 전산자료화 하여 현황도를 제작하도록 한다.

둘째, 주차환경개선기본계획에서는 국내외의 주차환경개선 사례 연구와 주차관련 상위계획 및 안양시관련 계획을 검토하고, 주차시설 확충대책이나 주차운영·관리대책, 관련 제도 정비방안 등의 제시를 통해 주차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주차환경정비지구 지정기준을 수립하고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주차환경정비지구 지정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이외에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연차별·단계별 사업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등의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집행계획을 고려하여 사업비 확보방안 수립 등의 재정확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 수정 보완을 위한 연구

Re-establishment of National ITS Masterplan

이상건, 이경아, 김민영 외 9인

■ 배경 및 목적

1990년대 지능형교통체계가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제시되면서, 국가차원에서 지능형교통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지능형교통체계는 교통뿐만 아니라 정보·전자·통신 분야의 기술이 적용된 시스템으로 서비스 제공 분야가 광범위하고, 시스템구축과 운영에 있어서도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초기의 지능형교통체계 도입을 추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기획단은 지능형교통체계의 추진의 효과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단위의 기본계획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범부처적으로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1997년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교통체계효율화법의 제정으로 지능형교통체계 추진의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외환위기로 인해 지능형교통체계 추진환경이 변화하여 기본계획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기 수행된 사업추진 및 연구개발의 결과를 반영한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1'이 수립되었다. 이는 현재까지 지능형교통체계 추진의 기본 틀로 기능하고 있다.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1'에서 설정한 1단계 계획기간이 2005년 종료됨에 따라 현재까지의 지능형교통체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교통 환경 및 기술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향후의 지능형교통체계 추진전략과 추진계획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의 수정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가차원에서 지능형교통체계 추진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지능형교통체계 서비스 제공과 기반조성을 위한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의 수정 보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내용요약

본 연구는 총괄, 서비스추진계획, 기반조성계획 세 부문으로 나누어지는데,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ITS Korea가 함께 세부 과제별로 수행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에서는 서비스 추진계획의 교통관리 최적화, 전자 지불, 교통정보유통활성화, 여행자정보 고급화, 대중교통, 화물운송 효율화, 차량, 도로 첨단화 중 전자지불과 화물운송 효율화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기반조성계획의 아키텍처/표준, 연구개발, 기술지원, 교육/훈련, 사회적 인식제고, 추진환경 개선 중 아키텍처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우선 전자지불처리 서비스 분야를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 서비스에 대한 이해, 추진현황, 환경 분석, 목표 및 추진전략, 추진체계, 소요재원 및 기대효과, 성공적인 서비스 구현의 기반 등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화물운송효율화 분야에 대해서도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 서비스에 대한 이해, 추진현황, 환경 및 내부역량 분석, 성공적인 서비스 구현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성공적인 서비스 구현의 기반 등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반조성 계획의 한 분야인 아키텍처에 대해서는 아키텍처의 정의 및 위상, 추진현황, 국외 현황, 추진현황 평가 및 문제점 분석, 서비스별 아키텍처 문제점 검토 및 개선안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 지방분권화와 지역균형발전에 대비한 일반국도 노선재정비 방안 연구

A Study on National Road Readjustment for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and Decentralization

김호정, 이춘용, 김혜련

■ 배경 및 목적

1971년 8월, 58개 노선 8,146.2km의 일반국도 노선을 지정한 이래, 9차에 거친 개정을 통하여 일반국도 노선을 조정하였고 가장 최근에는 2001년 8월 노선지정령 개정을 통하여 총 56개 노선(북한 26개 노선 미포함) 1만 4,246km가 지정되었다.

최근 지방분권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정목표 아래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등 여건변화를 고려하고 지방화시대에 대비하여 현재 일반국도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일반국도의 지자체 이관문제를 검토하여 왔으나, 지자체에 이관 대상을 선정하기에 앞서 국토 공간구조 개편과 국가균형발전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일반국도 등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여 국가 산업경제활동과 국민의 일상생활에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재정비 방안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즉 간선기능이 강한 국도는 국가가 지정관리하고, 간선기능이 약한 국도는 지자체로 이관 관리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가도로(National Road)인 간선도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도시 주변의 교통 혼잡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방도 등의 고규격화에 따른 교통량의 변화로 인하여 각 지자체에서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노선조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토공간구조 개편과 지방분권화 등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정목표에 부응할 수 있는 지방화시대의 일반국도 등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고 정립된 기준을 토대로 간선기능이 강한 국도는 국가가 지정관리하고, 간선기능이 약한 국도는 지자체로 이관·관리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대도시 주변의 교통 혼잡 증가와 일부 지방도 등의 고규격화에 따른 교통량 변화 등으로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로 노선조정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 내용요약

고속국도,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등 각 급도로의 지정은 대통령령으로 노선의 기·종점 및 주요경과지 등을 지정하고 있다. 특히 일반국도는 도로법 제13조에서 '중요도시, 지정항만, 중요 비행장, 국가산업단지,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 지정하고 있다.

외국의 국도 지정요건을 검토한 결과 선진국은 대부분 고속국도 중심의 간선도로망 계획의 연계·보완노선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도로의 기능별 분류에 의한 구간선도로를 국가가 중점적으로 계획·건설하고, 일본은 지역균형발전 지원, 섬 등 오지연결, 국도노선의 균형배치 등을 위한 세분화된 노선지정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국도 노선재정비 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 지방분권 5개년 종합계획(2004~2008)에서 설정한 대내외적 여건변화, 국토공간구조의 변화 등 장래 발전방향을 검토하였다.

일반국도 등 노선정비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현재 일반국도 노선지정기준의 문제점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도로 기능별 위계를 고려한 노선지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둘째, 제4차 국토종합계획 등 국토 균형발전 지원 등 장래 여건변화 대처에 미흡하였으며, 셋째, 도로교통수요 증가와 균등한 간선도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자체별로 지속적으로 국도 승격을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국도의 국가 중점관리 방향을 설정하였다. 먼저 국토간선도로망(7×9)을 국가 중점관리구간의 기본 틀로 설정하고 국토간선도로망 구축 이전까지 일반국도가 간선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전국 어디서나 균등한 국토간선도로망의 배치간격을 유지하며 교통혼잡구간에 간선기능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일반국도의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대상구간 또는 노선판별이 가능하도록 세부평가항목을 설정하여 지방분권 시나리오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중점관리 구간의 세부 검토항목은 국토간선도로망(7×9) 해당구간, 중요도시, 지정항만, 중요공항 등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유발시설을 연계하는 구간, 국토간선도로망 연계·보완 기능 담당구간, 국토의 균등한 접근성 제공 등으로 설정하여 국가가 중점적으로 관리할 구간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지자체가 국도 또는 국지도로 승격 요청한 총 126개 구간 5,260km에 대해 국가 중점관리구간 선정 기능분석 항목을 적용하되 3개 검토대안으로 검토하였다.

도로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심통과 국도에 대한 관리방안을 검토하였다. 현재 도심통과 국도에 대해서는 계획, 건설·관리가 이원화되어 읍·면 지역 국도와 동지역 국도 간 체계적 노선 연결이 미흡하고 도로변 접근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간선기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부 간선도로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일반국도의 체계적인 간선망 구축을 위해 도시순환도로에 대한 국가의 역

할 강화, 도시별 특성을 고려한 시관내국도 관리방안을 마련, 시관내국도 전체를 국가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방안 등으로 검토하였다.

2004년 9월 아시안하이웨이 정부 간 협정서에 의거, 우리나라는 AH1과 AH6 2개 노선이 통과하는 것으로 협정체결 후 5년 내에 도로 표지판에 노선번호를 추가하도록 되어 있다. 도로표지판 설치를 위해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를 통과하는 구간에 대한 현지답사를 통해 자동차전용도로 수준의 도로를 선정하여 아시안하이웨이관련 회의에서 주요 경유지를 제시하였다.

>> 타당성조사 등의 비계량적 항목의 계량화기법 개발 연구

A Study on the Quantitative Method of Immeasurable Items such as Feasibility Analysis

김재영, 박태선, 안흥기, 변태근, 공금록

■ 배경 및 목적

정부의 한정된 예산을 경제성이 높은 사업에 우선투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를 위해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경제성분석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성 분석은 B/C분석을 토대로 하는 지나치게 계량적인 방법이어서 계량화가 어려운 항목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B/C분석의 방법론적 한계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많은 사회적 논란이 발생되고 있어 보다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타당성 조사기법이 안고 있는 한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편익항목 중 계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편익추정에서 누락된 항목을 도출하고 이를 계량화하는 기법을 제시하고 있다.

■ 내용요약

본 연구에서는 도로 사업을 중심으로 편익항목들을 계량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현재 국내외에서 개발되어 적용하고 있는 가치평가 방법들의 내용과 장·단점의 검토와 우리나라와 해외의 타당성 분석 현황을 검토하여 여러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여기에서는 특히 이미 사업이 완료된 도로 사업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가 적용된 사례를 사업 전·후로 비교 분석하여 타당성 조사의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시사

점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검토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사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용의 증감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용변화를 감안하여 새로운 편익항목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개인, 지역, 국가라는 편익수혜 주체별 편익항목 분류체계를 제시하였다. 또한, 국내외 사례분석 결과를 토대로 신규 편익항목을 발굴하고 전체적인 편익항목을 합리적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항목구분 기준을 마련하여 비계량항목들을 도출하고, 이를 계량화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둘째, 편익항목 중 화폐적 가치로 계량화가 불가능한 항목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비계량항목 중 화폐단위로 계량화가 불가능한 항목은 지수화하고 이를 편익추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화폐적으로 계량화된 편익과 지수화된 편익을 통합한 경제성 지수를 제시하였다.

■ 주요결과와 평가

본 연구에서의 주요 연구개발성과는 크게 두 가지로 경제성분석에서 추가되어야 할 편익항목을 발굴하였다는 점과 경제성분석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대안으로 경제성지수 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 있다.

우선 기존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조사의 비용과 편익항목, 선진국에서 경제성 분석시 이용되고 있는 비용편익항목 및 평가방법을 모두 조사하여 향후 타당성조사 시 비용편익분석에 추가되어야 할 비용 및 편익항목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추가적인 비용 및 편익항목 중 계량화가 가능한 항목과 계량화가 불가

능한 항목을 선별하였다. 그리고 계량화가 가능한 항목 중에서 화폐가치화가 가능한 항목과 그렇지 못한 항목을 다시 구분하였다. 이 경우 계량화가 가능하지만 화폐가치화가 가능하지 않은 항목은 지수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화폐가치화가 가능한 항목으로 1) 터미널 이용객의 대기 지체편익과 2) 기존도로의 유지관리비 절감편익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계량화가 불가능하거나 계량화가 가능하지만 화폐가치화가 불가능함으로써 제외되는 비용편익 분석에 의한 경제성분석 결과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불완전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비용편익분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제성 지수를 활용한 경제성 분석 방안을 제안하였다. 즉 전문가 조사 등을 통해 불

완전한 부분을 수치화하여 B/C 결과를 보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제시된 방안이 실제 타당성 조사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된 각각의 파라미터에 대한 검증과 함께 구체적인 수치에 대한 조사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연구기간: 2004. 7. 20~2005. 7. 19
 서지사항: 96면, R&D/04기반구축A23
 발주기관: 건설교통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 표준 노드/링크 체계 구축사업

Construction of Standardized Node/Link for ITS Information Exchange

김경석, 오성호, 이성렬, 강희찬, 조지현

■ 배경 및 목적

현재 우리나라 교통망(노드/링크)ID(Identification) 체계는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사업별, 사업 주체 및 자치단체별로 각각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어, 유사 사업 간 호환성이 떨어지고 교통정보의 상호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통정보 관련 사업의 인프라를 구축한 후 후발 유사사업에서 이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체의 범위를 넘어선 광역정보는 상호 제공되지 못하는 등 교통정보의 활용성과 호환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이는 유사 사업 간 중복투자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교통수단과 통신의

발달로 광역 교통정보에 대한 필요성이 커진 시민들에게 광역 교통정보 제공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에서는 2004년 단일화된 노드/링크ID 체계를 제시하고 고속국도, 국도 및 지방도에 대하여 표준 노드/링크DB를 구축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정보의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사업 간 정보교환의 호환성과 상호 연계성을 위하여 고속국도, 국도 및 지방도에 이어 전국의 시군도급 도로에 표준화된 노드/링크ID를 부여하고, 이러한 표준 노드/링크DB와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할 수 있

03

는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내용요약

본 연구에서는 표준 노드/링크DB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인천광역시 등 16개시의 특·광역시도 및 시·군·도에 대하여 중앙선이 있는 폭원 10m 이상의 도로 및 일방통행 2차로 이상의 도로 및 IC/JC와 10m 미만의 시·군·도라 할지라도 교통정보 교환을 필요로 하는 도로인 경우 이를 포함하여 표준 노드/링크DB를 구축하였다. 먼저 사업 대상 지역인 16개 시 자치단체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행정구역 내 관할 도로 중 표준 노드/링크DB 구축 대상 도로를 확정하였다.

표준 노드/링크DB 구축 순서는 '사전조사·현지조사·표준 노드/링크DB 입력'의 3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사전조사는 문헌조사와 주요지점 조사를 통해 DB 구축 대상 물량을 선정하고, 교통정보 교환 필요성과 추가 구축 필요분에 대하여 해당 자치단체 담당자와 협의를 한 후 최종 DB 구축 대상 물량을 산정하는 단계이며, 현지조사는 사전조사 단계에서 선정된 구축 대상 구간 및 지점에 대하여 선형조사와 속성조사를 수행하는 단계다. 마지막으로 현지조사 내용을 기초로 DB를 입력하는 단계가 표준 노드/링크DB 입력 단계다.

본 연구의 사업으로 인하여 16개시에 대해 구축된 링크 수는 총 4만 4,744개이며, 구축된 링크연장은 1만 735km, 구축된 노드 수는 1만 5,078개다.

이렇게 구축한 표준 노드/링크DB와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갱신할 수 있는 시스템 체계를 구축을 목적으로 하드웨어 부문에서는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시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고, 표준 노드/링크DB와 자치단체 교통정보 교환 시 소요되는 메모리 및 DB 저장 공간 등 시스템 운영에 소요되는 정확한 하드웨어 용량산정을 통해 최적의 교통정보 및 표준 노드/링크 관리 서버를 도입하였다. 또한 소프트웨어 부문에서는 개별 자치단체의 기구 측 노드/링크와의 정보연계를 위

해 매칭테이블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본교통정보 교환기술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ASN.1 기반의 교통정보 송수신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건설교통부 건설교통종합정보센터와 자치단체 교통정보 센터 간 교통정보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 하남-화도(국도45호) 교통량 재검토

Traffic Volume Review between Hanam and Hwado(National Road No.45)

윤하중, 박형일

■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현재 운용 중인 일반국도 45호선 하남시계-남양주시 화도읍 구간에 대하여 확장(신설포함)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업으로서 과업대상 노선은 약 20km 연장의 왕복 2차로 도로로 이용교통량에 비해 도로 폭이 좁아 상습정체가 발생되고 있는 구간이다. 본 과업대상구간에 대한 건설시기 및 타당성 등에 대해 2004년 감사원에서는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와의 중복투자 문제점을 지적하여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으며,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본 과업대상구간을 이용하는 일평균교통량이 2만 7,000대임을 들어 조속한 사업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과업은 일반국도 45호선 하남시계-남양주시 화도읍구간(21.5km)에 대한 왕복 4차로(기존 왕복 2차로) 확장포장(신설포함)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더불어 본 사업이 시행될 경우, 민간투자 사업으로 진행 중인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2008년 완공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내용요약

본 연구는 국도확장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교통량을 검토하고, 사업시행이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에 미치는 영향 및 관련 내용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장조사와 문헌조사를

통한 과업대상노선 및 인근도로망의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교통수요예측과정을 통하여 관련 노선의 장래 목표연도별 통행량을 예측하였다. 또한,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와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과업노선 시행으로 인한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의 통행량 변화를 검토하였으며, 이로 인한 정무우발체무를 산정하기 위하여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IC 간 O/D를 산출 후 협약재무모델에 적용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통행수입변화를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과업대상노선의 건설로 인한 직접적 편익을 산출하여 경제적 타당성분석(B/C, NPV, IRR)을 실시하였으며, 경제적 타당성분석 결과 및 앞선 결과자료들을 검토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시행시기에 대한 종합적 결론을 제시한다.

>> 한반도 도로네트워크 구축방안(1단계) 연구

The Implementation Strategies of an Arterial Road Network on the Korean Peninsular (I stage)

김경석, 오성호, 서민호

■ 배경 및 목적

남북한은 '8·15 남북공동선언' 이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개성공단 개발 및 금강산 육로관광 사업 추진, 단절된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 및 도로 연결 등 남북한 간 교류와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 남한이 북한의 제2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가속화되고 있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 교통인프라 연결이 급선무이며, 높은 물류비의 절감을 위한 남북 육상교통로의 확충이 절실하다. 2005년 말 개통된 경의선과 동해선은 남북 육상교통인프라 연결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남북교류 활성화에 따른 연결도로망 구축, 중장기적으로는 남북통일에 대비한 한반도 간선도로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속적인 남북 육상교통인프라 연결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남북관계 여건변화 및 장래 동북아 물류흐름 전망을 바탕으로, 향후 남북교류 활성화에 따라 급증하게 될 교통수요의 원활한 처리방안 수립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기 시행중인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에 따른 남북한 접경지역 연결도로망 확충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장래 남북한 경제공동체 및 동북아 경제협력 활성화에 따라 요구될 한반도 간선도로네트워크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이들 도로망 건설에 필요한 소요재원 판단 및 재원조달방안 제시,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예산·제도 등을 검토하여 향후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형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간선도로망 구축방안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크게 한반도 장기 간선도로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한 I단계 연구와 중·러 연계도로망 확충과 조직·예산·제도 등을 검토하는 II단계 연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완료된 연구는 I단계 1차 연도 연구이다.

■ 내용요약

본 연구에서는 현재 북한의 사회·경제 현황을 행정구역, 인구, 국민총생산, 도시특성 및 도시화율에 기초하여 분석하고, 북한을 황해, 평남, 평북, 자강, 함북, 함남, 강원권역으로 분류하여 각 권역별로 노동, 토지이용, 지하자원 및 관광자원, 산업특성, 사회간접자본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북한은 남한의 1970년대와 유사한 산업특성을 보이고 있었으며 생산지와 소비지를 근접시키는 지방분산 정책을 기초로 기계공업과 군수산업은 내륙지향적, 중공업 및 경공업은 지역중심적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북한의 교통인프라 현황 및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도로, 철도, 항만 및 공항, 남북한 교류현황을 분석한 결과, 북한은 주철종도(主鐵從道)의 체계 하에 30km 이내의 단거리 운송은 도로 중심, 중장거리 운송은 철도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04년 기준으로 북한의 도로는 고속도로와 6등급 도로로 구분되고, 도로총연장은 2만 5,387km, 고속도로연장은 724km이며, 고속도로는 4차선, 1급 이하 도로는 대부분 2차선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북한

의 주요 간선도로망은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서해안에 집중되어 있으며, 서해 축, 동해 축, 동서연결 축, 북부내륙 축, 동서국경축의 5개축이 H형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도로는 포장률이 8% 내외로 분석되며, 고속도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구간에서 시속 50km 이상의 운행이 불가능할 만큼 도로선형 및 관리상태가 열악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열악한 북한의 도로망을 확충하고 향후 한반도가 동북아 물류거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교통인프라 확충 방안 수립을 위해 동북아 교통인프라 및 물류여건을 도로, 철도, 항공, 해운 및 물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동북아 지역 내 교통네트워크는 각 나라별 지리적 특성, 산업특성, 통행 특성에 따른 수송 모드별 최적의 형태를 조합하여 이용하는 방안 수립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철도의 경우 장거리의 비교적 많은 물량을 저렴한 가격으로 운반할 수 있어 유럽 및 러시아 내륙, 중앙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물류 운송에 적합하며, 항공의 경우 중국시장 수요급증과 동북아 국가 간 환승승객의 증대, 공항의 허브기능 강화에 따른 세계적 입지가 강화되고 있는 현 추세에서 한·중·일 항공 자유화 노력이 절실하다고 평가되었다. 해운의 경우 동북아 지역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장래에도 가장 높은 수송분담률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화경제권 형성에 따른 막대한 중국 물동량 선점이 관건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도로의 경우 철도, 해운, 항공과 연계된 물류거점별 복합수송체계 구축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주변 여건 및 현황 분석에 기초하여 한반도 장기 간선도로네트워크 구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 통일 모형을 검토하고 북한 간선도로망에 대한 중장기적 교통수요를 추정하였다. 급진적과 점진적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통일 모형을 검토한 결과, 현재의 남북한 교류협력 과정에 부합되는 점진적 통일 모형이 타당한 결론을 얻었고, 통일 단계는 정부가 제시한 교류초기, 교류활성화기, 교류본격화기로 구분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각 단계별 교통수요 추정은 World Bank와 모아벤자데가 저개발도상국 인프라 수요 추정을 위해 사용한 1인당 GNI와 국토계수당도로 연장을 변수로 하는 '수요탄력성법'을 적용하였다. 산출된 교통수요 추정치는 현재 북한 내부 및 동북아 통과 교통수요 추정치와 연동되어 분석이 진행 중이다.

■ 주요결과와 평가

본 연구에서 분석한 북한 교통인프라 현황과 동북아 교통 및 물류여건 분석은 한반도 장기 간선도로네트워크 계획을 수립하는 데 주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최신의 자료를 구득하여 기존 연구결과를 보완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남북한 교류협력에 따른 육상 교통망 연결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중장기적 간선도로망 계획을 수립하여 그 기준을 정립한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이라는 연구주제의 특성상 남한과 비교하여 분석되는 자료가 매우 기초적인 수준이고, 정보가 없거나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자료가 대부분이어서 정확한 분석이 어려운 점은 본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3차연도까지 예정되어 있고 현재 1차연도의 연구가 완료된 시점에서 향후 북한관련 자료의 구득 및 분석의 질을 높이고, 북한 교통수요추정과 간선도로네트워크 구축계획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1차적인 과제라 생각되며, 향후 중·러 지역까지 포괄하여 종합적인 복합수송체계를 마련하고 조직·제도 등의 분석을 통해 정책적 비전 또한 제시할 수 있는 한반도 도로네트워크 계획 수립이 본 연구의 궁극적 과제라 하겠다.

연구기간: 2005. 5. 10~2005. 12. 5
 서지사항: 422면
 발주기관: 한국도로공사

>>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조사연구 보완용역

A Feasibility Study and Master Plan of Honam High-Speed Railway Construction

정일호, 정진규, 임영태, 김종학, 김태영, 손성경, 박형일

■ 배경 및 목적

호남고속철도건설 사업은 교통측면에서 경부고속철도와 함께 우리나라 2개의 주요 교통축을 연결하는 국가기간교통시설 사업이면서 한편으로 지역개발 측면에서 호남권의 성장잠재력 극대화는 물론 기업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 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및 호남지역 혁신체계 구축 활성화를 전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국책사업이다. 이 같은 호남고속철도건설 사업은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도 이미 포함되어 있어 건설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정받은 사업이다. 그러나 경부고속철도에서 호남지역으로 분기되는 분기역 결정이 지역 간 갈등으로 인해 지난 10여 년 넘게 결정되지 못하여 호남고속철도건설 기본계획이 아직도 수립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수립의 걸림돌이 되어온 분기역 결정에 대한 지역 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분기역을 결정하는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이용수요 및 경제적, 재무적 타당성을 재검증해 보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한 호남고속철도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 내용요약

본 연구에서는 기 검토된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안의 노선 및 정차장 계획과 사업추진방안을 투자의 효율성 확보측면에서 먼저 재검토한 후 경부고속철도 예측수요 대비 시현수요 감소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등

의 여건변화 요인을 반영한 수요 재분석과 그에 따른 경제성, 재무성 등 사업성을 재평가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우선 분기역 선정을 위하여 행정중심도시 파급영향을 반영한 수요 및 사업성 재검토를 시행하였다. 특히, 수요분석 시행시 전차 용역검토와 달리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전국인구 추계치 자료를 이용한 통행수요의 보정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경부고속철도 이용자를 대상으로 통행실태를 조사하여 보다 현실적인 수단선택모형을 구축하였다. 또한 향후 건설될 도로 및 철도시설을 분석네트워크에 반영하여 예상되는 도로와 호남고속철도간의 상호 수요 경쟁관계를 반영한 분석모형의 운용으로 수요예측의 현실성을 제고하였다. 수요분석결과 서울(수서)-오송 구간은 2045년에도 선로용량에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신선건설을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구간은 충청지역과 호남지역을 통과하는 오송-목포구간이다. 각 구간별로 신선건설 구간 및 정차역의 조합 구성된 대안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수요와 사업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대안에서 경제성과 재무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수서-향남을 신설하고, 향남-분기역은 경부고속철도를 공유하며, 분기역-목포 구간을 신설하는 경우 총사업비는 신선건설시 분기역 대안별로 차이는 있으나 약 11조 7,312억 원에서 12조 7,507억 원 정도로 나타났다. 사업비 및 수요에 따른 경제성, 재무성 분석결과 분기역 대안에 상관없이 모두 경제성과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

로 평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분기역 결정을 위해 기존 효율성 위주의 분기역 평가방식과는 다르게 접근하였다. 즉 분기역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수용성 확보를 목표로 분기역 평가추진위원회와 분기역평가기준설정 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차례 논의와 토의과정을 거쳐 분기역 평가시행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하고 각 지자체와 학회의 추천인사로 구성된 분기역 평가단이 평가를 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세심한 분기역 평가 과정을 거쳐 평가를 시행한 결과 충청북도 오송이 분기역으로 선정되었다.

■ 주요결과와 평가

호남고속철도의 최적노선은 수도권역의 수서-향남노선을 배제하고 오송-목포구간을 순차적으로 건설하되 건설기간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하였다. 순차적 건설 방안은 1단계로 오송-광주구간을 2015년에 완공하고 2단계로 광주-목포구간을 2017년 완공하는 것이다. 비록 수요 및 사업성 측면만 보면 건설타당성이 낮게 평가되나 호남지역 발전 유도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호남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사업기대 효과를 검토한 결과 건설단계에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로서 생산유발효과가 20.7조 원, 임금유발효과 4.2조 원 및 고용유발효과로 17.2만 명이 예상되었다. 또한 운영단계에서는 중간투입 변화에 따른 생산유발효과가 480억 원/년, 최종수요 변화에 따른 생산유발효과가 290억 원/년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이 같은 점들을 감안하여 호남고속철도를 총 사업비를 최소화하고 투자효율이 높은 방안으로 사업추진토록 하여 오송-광주구간의 조기 개통으로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열차 투입의 운영효율 제고기능 및 서울-목포구간 통행시간을 단축(2시간 58분 → 1시간 54분, 1시간 4분 단축, 중간역 포함)효과와의 조기 가시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노선: 오송~익산~광주~목포(230.9km)
- 사업기간: 2006~2017년
- 사업비: 105,717억 원(차량비 7,535억 원 포함)
- 건설방안: 오송~목포간 순차건설
- 주요시설: 오송, 남공주, 익산, 정읍, 광주(송정리), 목포(임성리)역, 광주차량기지
- 열차운영계획: 최고속도 300km/hr, 차량투입계획 (총 350량, 1편성 10량)
- 운행시간: 오송~목포 69분(서울~목포 352km, 114분)
- 장래 이용수요: 2016년 4.8만 인/일, 2045년 6.1만 인/일
- 사업성 분석: B/C(0.39), R/C(0.88, 정부보조율 85%)

연구기간: 2005. 8. 12~2005. 12. 31
 서지사항: 1,278면
 발주기관: 건설교통부 국책사업기획단

>> ITS 분야별 업무절차 및 직무표준 설정에 관한 연구

Development of Standard Manual for Public ITS Business

이상건, 김민영 외 2인

■ 배경 및 목적

지능형교통체계(ITS)는 교통뿐만 아니라 정보 전자 통신 분야의 기술이 적용된 시스템으로 서비스 제공분야가 광범위 하고,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있어서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지능형교통체계의 추진은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내용으로 하므로 수행 기관에 따라 업무의 내용과 수행방법에 대한 이해수준이 다른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교통부는 지능형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ITS 기본업무요령'을 제정 고시한 바 있으나, 그 내용이 업무수행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제시하는 데 머무르고 있는 수준이다. 따라서 ITS 업무에 관한 기본 원칙과 절차에 대해 보다 상세화 하고, 관련 기준 및 방법의 정립 등 실무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업무절차 및 직무표준의 설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TS 사업 추진의 효율성, 연계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건설교통부에서 제정 고시한 'ITS 기본업무요령'을 기반으로 하여 교통시설 관리청 및 사업 시행자, 성능평가기관, 표준화 업무 관련 기관 등의 소관 업무에 대한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각 분야별 업무절차 및 직무표준을 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내용요약

본 연구는 계획, 사업, 표준화, 운영관리, 성능평가,

전문위원회, 효과분석에 대한 내용을 국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ITS KOREA가 세부 분야별로 연구진을 구성하여 수행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국토연구원은 표준화 부문과 효과분석 중 전자 지불 분야를 맡아 연구 수행 중이다.

본 연구의 한 부분인 표준화 부문은 첫째, ITS표준의 목적과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는데, ITS표준의 호환성과 연동성에 대한 정의 및 ITS를 구성하는 시스템, 연계정보, 시스템 서비스 운영방법, 기능시험 절차 등의 대상에 대한 정의를 사용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를 두어 설명하였다. 둘째, 표준화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표준화전담기관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 규정하였는데, 표준화전담기관의 지정배경 및 추진 경위, 역할 등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표준화전담기관의 역할인 정기수요조사 및 수시조사에 대한 상세 절차, 국제표준 동향 파악을 위한 국제표준화 활동 전문가 지원, 국제 표준화 정보 수집 분석, 국제표준화에 대한 국내대응 전략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셋째, 표준화전담기관의 중요 역할 중 하나인 표준화계획에 대한 수립과 운용에 있어서도 표준화계획 수립의 개요 및 표준화계획 수립 시 핵심 사항, 표준화 계획 평가 시 포함 항목 등에 대해서도 체크 리스트를 작성하여 실제로 업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 넷째, ITS표준의 개발 및 제정에 대해서도 단체표준과 기술기준으로 나누어 각 표준 제정 시 주요 절차 및 핵심사항 등을 제시하였고, 단체표준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업무를 수행하는 ITS 표준준회, 운영위원회,

기술위원회, 실무팀의 주요 임무, 구성 및 회의관련 사항, 기술기준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ITS기술표준위원회의 주요 임무, 구성 및 회의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도 각각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정된 ITS표준에 대한 적용을 권고하는 항목에 있어서도 민간 사업자에 대한 권고 방안, 공공 부문 사업자에 대한 기술기준 적용 방안 및 사업자 선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각각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서식 등을 부록으로 수록하여 ITS표준화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

표준화 부분 외에 효과분석 중 전자 지불 분야에 대해서는 유료도로 및 혼잡통행료 자동징수, 대중교통요금 전자 지불, 주차요금 전자 지불 등 3가지 분야로 나

누어 기대효과 및 효과척도 등을 제시하였다.

전체 전자 지불 분야의 공통적인 효과척도는 시스템 운영효율성, 처리용량증대, 요금징수업무 효율성, 불친절 및 민원감소, 시스템 만족도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였고, 유료도로 및 혼잡통행료 자동징수의 효과척도로는 평균통과시간 절감, 평균대기행렬대수 감소, 대중교통요금 전자지불은 탑승시간감소, 주차요금 전자지불은 주차장 진출입 시간 감소를 각각 제시하였고 이에 따른 조사방법 및 분석방법에 관하여 제시하였다.

연구기간: 2005. 9. 21~2006. 9. 20
발주기관: 건설교통부 교통정보기획팀

>> UTI 국가표준 및 교통정보 연계를 위한 기술기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echnical Regulation for Nation-Wide Unification of Transit Information

오성호, 이상건, 이성렬, 강희찬

■ 배경 및 목적

현재 자치단체 ITS(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및 광역 BIS(Bus Information System : 버스정보제공체계) 구축사업 등 다양한 ITS관련 사업이 범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기존의 ITS사업은 도로교통 정보수집/제공과 대중교통 수단 중 버스 운행 정보에 집중되어 있어 타 대중교통 수단(철도/지하철/항공 등)의 정보수집 및 다수 수단 간 정보연계가 미흡하다.

이에 건설교통부에서는 2005년 12월 수단 간 통합

대중교통 정보체계 구축을 위해 UTI시스템 구축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국토연구원에서는 UTI와 관련된 표준 사항인 노선/수단 ID 및 DB 구축과 실시간 대중교통 정보교환을 위한 표준화 항목을 도출하고 이와 관련된 ITS 및 UTI 표준화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ITS 표준화 중장기 발전방향 및 단기 세부 실행계획을 세우려 한다.

■ 내용요약

UTI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UTI관련 시스템

03

의 표준 적용이 필수이며, 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ITS의 표준 항목 중 UTI와 관련된 항목들을 분석하여 UTI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하고, ITS 표준 측면에서는 UTI시스템 구축사업 등 ITS 관련 사업 및 항목의 도출과 끊임없는 발전에 대처할 수 있는 능동적 ITS 국가표준 발전방향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ITS 관련 산학연 전문가에게 원고청탁을 통해 위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구했으며, 제출된 의견들을 정리하여 ITS 전문가 회의에 붙임으로써 도출된 의견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수정하여 UTI의 발전을 고려한 ITS 표준 발전 전략을 도출한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UTI 시스템 구축사업의 추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정의되어야 하는 표준 항목인 노선/수단ID 체계를 포함하는 노선/수단 표준 DB에 관한 기술 기준(안)을 작성한다.

그밖에 UTI시스템과 관련된 DB구축을 위한 표준 ID와 DB 제시 외에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통합 대중교통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중교통 정보교환의 형식을 정의하는 실시간 대중교통 정보교환을 위한 표준화 항목을 제시한다.

■ 주요결과와 평가

표준화 추진체계의 전면적 정비, 중장기 표준화 계획의 수립, 표준화전담기관의 역량강화, ITS 표준적용의 유도, 민간표준화 활성화 지원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ITS 표준화의 발전 방향을 잡고 있으며 2006년도 ITS 표준화 시행과제로는 표준 실태 파악을 통한 ITS 연계구축을 위한 국가 표준화 추진전략 로드맵 작성, 민간표준 수요 파악과 국가 표준 및 국제 표준의 홍보 등을 통한 민간 표준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ITS 표준의 적용을 확대하여 ITS 표준 적용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ITS 표준적용지원 시스템 구축, ITS 표준을 적용한 대상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시험·검증할

수 있는 ITS 표준적용검증체계 구축·운영방안 수립 등을 도출하여 검증하고 있다.

대중교통 운영기관별로 사용하고 있는 노선 ID 구성 체계 검토와 함께 ITS 기술표준 및 단체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련 내용을 참조하여 출발권역 코드와 도착권역 코드, 수단코드와 노선 일련번호를 포함하는 표준 노선 ID를 제시하였으며, 대중교통 노선의 정보교환을 위해 필요한 기종점 정거장, 운행경로, 첫차시간과 막차시간 등의 항목들이 포함되는 표준 노선 DB를 제시하였다.

또한 차고지 권역코드, 수단 차량코드, 차량 일련번호 등을 포함하는 대중교통 표준 차량 ID를 제시하였으며, 대중교통 수단의 DB에 포함되어야 하는 차량 운행횟수, 차량 운행순서, 운행거리 등을 포함하는 대중교통 표준 차량 DB를 제시하여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을 거쳐 표준으로 제정할 예정이다.

또한 UTI 시스템의 실시간 정보교환을 위해 차량위치정보와 대중교통 탑승객을 위한 도착예정정보, 운행의 변화가 필요할 경우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운행지시 정보, 대중교통 운영 상태에 대한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운행관리정보, 안전운행과 운행문제 발생 시 해결을 위한 긴급상황정보, 대중교통 예약 현황 및 요금 등을 안내하는 차량 예약 정보 등의 실시간 대중교통 정보교환을 위한 표준화 항목을 제시하였다.

3) 기타활동

제14차 한일건설경제워크숍

■ 일 시 : 2005. 11. 15~11. 17

■ 장 소 : 도쿄 Toranomom Pastoral

■ 참석자

국토연구원(KRIHS) : 이규방(국토연구원 전 원장), 유재운(연구위원), 권혁진(책임연구원), 김민철(책임연구원)

일본건설경제연구소(RICE) : Hisashi Mori(Senior Executive Director), Takayasu Matuura(Executive Director), Kazuo Yamane(Executive Director), Kazushige Ishida(Executive Director), Atsushi Suzuki(Executive Fellow), Tosikuni Kudo(Researcher), Itaru Murota(Researcher), Kazuo Sumita(Researcher), Ahn Sang Kyung(Professor), Chun Sang Jin(Researcher)

한국건설산업연구원(CERIK) : 윤영선(선임연구위원), 이배훈(홍보팀장), 김우영(부연구위원)

■ 주요내용(3분과로 나누어 진행)

- 최근의 건설경기 동향
- 방재와 건설경제
- 건설산업 정보화

The 11th Asia Construct Conference

■ 일 시 : 2005. 9. 16~2005. 9. 17

■ 장 소 : 인도네시아 발리 InterContinental 호텔

■ 참석자 : 이규방(국토연구원 전 원장), 유재운(연구위원), 안흥기(책임연구원)

■ 주요내용 : 국가별 country report 발표 및 토론

- Doing Business in Indonesia :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Construction
- Infrastructure Developments Strategies
- Financing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jects
- Redevelopment of Aceh & Nias
- The Economics of Infrastructure Development : Identifying Needs and Attracting Investment
- Implementing a Regulatory Framework to Promote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 Financial Investment Strategy to Support Asian Economic Growth
- Financial Investment Strategy to Strategy to Support Asian Economic Growth
- Prospect & Potential of Asian Cooperation's in Constuction

03

「효율적인 광역교통정책을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

- **과제명** : 효율적인 광역교통정책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 **일 시** : 2005. 1. 20 14:00
- **장 소** : 국토연구원 강당
- **참석자** : 약 100인
 - 중앙정부 관련 부처 공무원
 - 광역시·도 지자체 관련 공무원
 - 사업시행자 및 전문가
- **주요내용**
 - 광역교통 제도개선을 위한 대광법·령 개정(안) 발표
 - 토론자 토론 및 토의

사업설명회

- **과제명** : 전국단위 표준 노드/링크DB 연계구축 사업관리, 표준 노드/링크 구축사업
- **일 시** : 2005. 8. 16, 10:00(건설교통부) / 2005. 9. 2, 10: 30(정보통신부)
- **장 소** : 국토연구원 강당
- **참석자** : 약 20개 업체(50인)
- **주요내용**
 - 입찰공고 내용과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설명
 - 사업 내용과 사업자 선정 과정 등

착수보고회

- **과제명** : 전국단위 표준 노드/링크DB 연계구축 사업관리, 표준 노드/링크 구축사업
- **일 시** : 2005. 10. 13~14
- **장 소** : 제주도 서귀포시 풍림콘도
- **참석자** : 75인
 - 국토연구원: 6인
 - 각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30인(광주광역시 등 28개 자치단체)
 - 관계기관: 10인(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한국전산원 등)
 - 자문위원단: 3인

- 참여업체: 26인(KT컨소시엄, 대우정보컨소시엄)

■ **주요내용**

- 전체사업 개요 설명
- 사업별 추진 현황 및 계획
- 대상지역의 사전 구축 물량을 도면 등을 제시하여 자치단체 담당자들과 논의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 **과제명** :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조사연구 보완용역

■ **일 시** : 2005. 12. 22, 14:00~18:00

■ **장 소** : 국토연구원 강당

■ **참석자** : 약 150인

- 건설교통부 담당 공무원
- 고속철도관련 전문가(교수 및 연구원)
- 관련 지역 주민

■ **주요내용**

- 호남고속철도 추진경위 및 과업수행내용
- 수요·사업성 재검토 및 분기역 선정
-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 종합결론 및 향후 추진계획

최종보고회 및 시연회

■ **과제명** : 표준 노드/링크 구축사업

■ **일 시** : 2005. 12. 28, 14:00

■ **장 소** : 국토연구원 강당

■ **참석자** : 약 150인

- 2차 사업 대상 자치단체 담당자 및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한국전산원, 국토연구원 관계자, 2차 사업수행자 등 150여 명

■ **주요내용**

- 사업의 개요
- 사업의 과정 및 결과
- 표준 노드/링크 구축과정, 교통정보연계 시연

2005년도 인프라21 세미나

■ 1차 세미나 : 교통정보 교환을 위한 도로 노드-링크 ID 표준 DB 개발

일 시 : 2005. 1. 6, 10:00~12:00

장 소 : 국토연구원 8층 회의실

강 사 : 심민구 과장(KT ITS 사업부)

내 용 : 도로 노드-링크 ID 표준 DB 개발 배경 및 개발 과정을 설명함. 주요 내용으로는 노드-링크 ID 표준 DB 개발 시 주요 검토항목, 노드-링크 ID 구성 유형, 표준 DB 구축 범위, ID 체계 표준, 표준 ID 부여 방법, DB 구축 방법, 활용방안, 향후 유지관리 방안 등이 소개됨

■ 2차 세미나 : 국가 ITS 연구개발 사업 추진 현황

일 시 : 2005. 1. 11, 10:00~12:00

장 소 : 국토연구원 8층 회의실

강 사 : 정선영(연구원)

내 용 : 국가 ITS 연구개발 사업 추진 경위 및 분야별 역할분담 현황, 연구개발 분야별 내용, 추진 전략, 추진계획 및 추진체계 등을 설명하고, 향후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토론이 있었음

■ 3차 세미나 : 국내 ITS 사업 현황

일 시 : 2005. 1. 11 10:00~12:00

장 소 : 국토연구원 8층 회의실

강 사 : 이경아(연구원)

내 용 : 국내에서 추진되어 온 ITS 사업 현황, 관계 기관 간 역할 분담 현황, 국내 주요 도시의 ITS 사업 추진현황, 구축 주체별 ITS 추진 현황, 2005년 ITS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일본의 ITS 개발 단계와 비교하여 국내 ITS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토론이 있었음

■ 4차 세미나 : '2005 버스개혁 프로그램'

일 시 : 2005. 1. 14 10:00~12:00

장 소 : 국토연구원 3층 세미나실

강 사 : 박중현 과장(서울시 교통정보반)

내 용 : 서울시에서 추진한 버스개혁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함. 버스 노선체계 보완 내용, 노선계획, 배차관리 계획, 수도권 연계 체계 등에 대해 설명함. 또한, 국토연구원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공급자 입장에서 ITS 분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함

■ 5차 세미나 : 국가 지능형교통체계(ITS) 아키텍처

일 시 : 2005. 1. 17, 14:00~16:00

장 소 : 국토연구원 3층 소회의실

강 사 : 이시복(영산대학교 교수)

내 용 : 국가 ITS 아키텍처의 개념, 논리 아키텍처 및 물리 아키텍처 구상 내용 등을 소개하고, 국가 ITS 아키텍처 구현 방안에 대해 설명함. 향후 ITS 아키텍처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함

■ 6차 세미나 : 제주시 ITS 시스템 확장 구축사업

일 시 : 2005. 1. 18, 14:00~16:00

장 소 : 국토연구원 3층 소회의실

강 사 : 이재득 부장(SK C&C solution 사업팀)

내 용 : 제주시 ITS 시스템 확장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주요 시스템 구성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교통부문, 센터 시스템부문, 현장설비부문, 센터부문 등 부문별 구축 방향 및 결과에 대해 설명함. 또한 1차 사업 효과 분석 결과에 대해 설명함

■ 7차 세미나 : ITS 솔루션 및 구축 사례

일 시 : 2005. 1. 18, 14:00~16:00

장 소 : 국토연구원 3층 소회의실

강 사 : 이재득 부장(SK C&C solution 사업팀)

내 용 : ITS 주요 사업 분야 및 분야별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ITS solution의 특징, 사업 분야별로 필요한 ITS solution 등을 소개함. 또한, 이러한 solution을 적용하여 구축한 남산 터널관리 시스템, 내부순환로 교통관리 시스템, 제주시 첨단교통모델도시 시스템 등 ITS 구축 사례를 소개함

■ 8차 세미나 : An integrated approach to transport modelling : a European experience

일 시 : 2005. 2. 17, 10:00~12:00

장 소 : 국토연구원 강당

강 사 : PIERPAOLO MUDU(WHO 로마지사 연구원)

내 용 : 교통이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또는 위험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항목들을 통합하여 접근할 수 있는 방법론을 소개하고, 이 방법론을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3개 도시에 적용한 결과를 설명함. 또한 이러한 통합적인 접근 방법론의 장점 및 단점에 대해 논의함

03

■ 9차 세미나 : 교통량 예측을 위한 공간 통계학의 응용

일 시 : 2005. 5. 30, 15:00~17:00

장 소 : 국토연구원 3층 소회의실

강 사 : 허태영(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박사)

내 용 : 공간통계학을 이용한 관측된 교통량(AADT) 자료의 불확실성에 관한 연구의 방법론 및 결과를 소개하고 크리깅 기법을 이용한 관측되지 않은 지점의 교통량 예측에 관한 연구의 방법론 및 결과를 소개함. 또한, 각 연구 결과에 대한 자유토론이 있었음

■ 10차 세미나 : 우리나라 POI 구축현황 및 향후추진방향

일 시 : 2005. 11. 29, 16:00~18:00

장 소 : 국토연구원 2층 회의실

강 사 : 박상운(만도맵앤소프트 실장)

내 용 : POI 개념 및 분류기준을 소개하고 POI 취득방법, 취득지침, POI DB 구축 방법에 대해 설명함. 또한 국내외 POI 구축 업체 현황을 소개하고 자유 토론 시간을 가짐

〈2005년 인프라 21 세미나 개최실적〉

일시	강사	제목
2005. 1. 6	심민구 과장 (KT ITS 사업부)	교통정보 교환을 위한 도로 노드-링크 ID 표준DB 개발
2005. 1. 11	정선영 연구원 (국토연구원 SOC·건설경제연구실) 이경아 연구원 (국토연구원 SOC·건설경제연구실)	국가 ITS 연구개발 사업 추진 현황 국내 ITS 사업 현황
2005. 1. 14	박종현 과장 (서울시 교통정보반)	'2005 버스개혁 프로그램'
2005. 1. 17	이시복 교수 (영산대학교)	국가 지능형교통체계 (ITS) 아키텍처 (Architecture)
2005. 1. 18	이재득 부장 (SKC&C solution 사업팀)	제주시 ITS 시스템 확장 구축사업 ITS 솔루션 및 구축 사례
2005. 2. 17	PIERPAOLOMUDU (WHO 로마지사 연구원)	An integrated approach to transport modelling: a European experience
2005. 5. 30	허태영 박사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교통량 예측을 위한 공간 통계학 (Spatial Statistics)의 응용
2005. 11. 29	박상운 실장 (만도맵앤소프트)	우리나라 POI 구축현황 및 향후추진방향

건설산업연구회

■ 목 적

- 건설산업에 대한 종전의 부문중심, 이슈중심의 논의 방식을 지양하고 종합적인 관점과 근본원칙에 입각하여 문제에 접근
- 연구 및 정책과제 도출 및 의견수렴, 공유·확산을 목적으로 원의 전문가 초청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 구 성 : SOC·건설경제연구실, 외부전문가

■ 장 소 : 국토연구원

■ 주요 활동 내용

1차 워크숍

일 시 : 2005. 6. 8

발표자 : 김의준(서울대학교 교수)

내 용 : CGE모형의 구축과 응용사례

2차 워크숍

일 시 : 2005. 9. 23

발표자 : 김의준(서울대학교 교수)

내 용 : CGE모형의 구축과정

3차 워크숍

일 시 : 2005. 10. 21

발표자 : 김의준(서울대학교 교수)·안홍기(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내 용 : CGE를 위한 구조 설계

4차 워크숍

일 시 : 2005. 11. 16

발표자 : 안홍기(책임연구원)

내 용 : CGE를 위한 기초자료

5차 워크숍

일 시 : 2005. 12. 17

발표자 : 김의준(서울대학교 교수)·안홍기(책임연구원)

내 용 : GAMS 프로그래밍과 조작

04

c h a p t e r

토지·주택

1) 기본 · 정책연구

>> 2005년 부동산 시장 및 정책동향

Real-estate Market and Policy Trends in 2005

김근용, 손경환, 최수, 강미나, 박천규, 엄근용

■ 배경 및 목적

부동산시장과 자본시장의 관계가 훨씬 밀접해지면서 부동산시장은 이자율 등 자본시장 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국제 자본시장과 연계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 및 정책의 동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부동산대책의 기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부동산시장 동향을 상시점검하고, 이를 둘러싼 각종 부동산관련 대책과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향후 부동산시장을 전망하고 국민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는 원칙에 충실한 부동산대책 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내용요약

이 연구에서는 거시경제의 큰 틀 안에서 경제성장률, 물가, 소비, 금융시장 등을 고찰하여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공신력 있고 가용한 부동산 가격 및 거래자료, 자체 시장조사 및 설문조사 자료 등을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각종 부동산관련 대책과 규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였다. 이를 토대로 일반경제 및 부동산시장 분석, 계량분석, 그리고 전문가 설문조사 등 다각적으로 향후 부동산시장을 전망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사전대응적인 정책을 제시하였다.

제1장에서 한국은행, KDI 등에서 발간한 자료와 각

종 통계자료를 토대로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의 동향과 전망을 분석하였다. 2005년에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인 세계경제는 2006년도에도 4% 정도의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국내경제도 2005년의 민간소비 회복을 바탕으로 2006년에는 5% 내외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제2장에서 주간별로 파악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및 정책 동향'과 각종 통계 및 관련 자료를 토대로 최근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PIR, LTV 등 주택관련 주요지표를 살펴보았다. 또한 2004년 하반기 동안에 실시된 부동산정책을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가격동향을 살펴보면, 전국의 토지가격은 2003년에 3.43%, 2004년에는 3.86% 상승하였으며, 2005년 11월 현재 4.56% 상승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충남이 7.27%로 가장 높게 상승하였고, 그 다음으로 서울 6.10%, 대전 5.99%, 경기도 5.33% 등 충남지역과 수도권의 지가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아파트는 전국 5.9%, 서울 9.1%로 2004년에 비해서는 높게 상승하였으나,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연간 상승률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거래동향을 살펴보면, 기업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많은 개발로 인하여 과거 2001년과 2002년의 30% 수준의 토지거래량을 보이고 있다. 비도시지역의 토지거래량도 8·31대책 이전까지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8·31대책 이후 감소를 보이고 있다. 2005년 주택관련 주요지표를 살펴보면, 2005년 PIR은 5.6으로 2004년 5.5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LTV도 36.9%에서 38.2%로 1.3%p 증가하였다. PTI는 17.6%로 2004년보다 1.6%p 상

승하였으며, DTI도 2.3%p 상승하였다.

2005년 주요 부동산정책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및 검증시스템 구축과 8·31 부동산대책 개혁방안 등을 들 수 있다. 8·31 부동산대책에 대해 살펴보면,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기반시설부담금제도와 개발부담금제 등을 통한 개발이익환수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2010년까지 주택 연간 30만 호, 5년간 150만 호 건설, 2010년까지 택지 연간 300만 평 추가계획 등 토지 및 주택 공급계획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금융정책, 투기수요억제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였다.

제3장에서는 모형분석, 전문가 조사, 그리고 시장 및 정책 변화를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2004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을 전망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2005년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대책, 금리상승 등을 감안할 때 향후 부동산 가격은 안정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전세가격의 경우 임대수요 증가, 경제회복 기대 등으로 점진적인 상승국면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 설문 조사에서 서울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비율이 40%를 상회하여 부동산시장에 대한 기대심리는 아직도 남아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8·31 부동산대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한편, 시중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 주요결과와 평가

향후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대책이 완화될 것이라는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8·31 부동산대책의 후속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행정복합도시·기업도시 등 개발계획에 따른 기대심리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세제 및 개발이익환수방안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

임대주택을 포함한 장기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 주택공영개발을 통한 저렴한 주택공급,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부동산종합정보망 및 부동산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의 조속한 정착으로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을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시장의 불안요인 중 하나인 시중유동자금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부동산시장을 건전하게 발전 및 육성시킬 수 있도록 리츠, 부동산펀드 등 부동산간접투자상품의 활성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연구는 부동산 시장 및 정책의 동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부동산대책의 기틀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부동산시장 동향뿐 아니라, 국내외경제 동향, 자본시장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관측하고 전망함으로써 정책의 인식시차를 최소화하고, 부동산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선제적인 정책을 준비함으로써 정책의 실행시차를 최소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산지관리제도의 개선방향

Policy Directions for the Efficient Mangement of Forestland

채미옥, 엄형민, 송하승

■ 배경 및 목적

산지는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주로 영림녹화사업 대상지 및 임업생산 차원에서 관리해 왔다. 때문에 전반적인 국토관리의 틀 내에서의 산지이용과 보전은 도외시되었다. 최근 들어 산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수요가 변화하고 있다. 도시개발 수요 및 여가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산림의 자연환경 보전 및 맑은 물 공급기능과 생물종의 다양성 등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에 대한 국제적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산지관리제도는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증가하고 있는 산지개발 및 이용 수요와 보전 필요성을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림만이 아니라, 국토차원으로서의 산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기초로, 계획적 국토관리 차원에서 산지이용 및 보전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산지전용 수요 및 보전 필요성에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적 관리 차원에서 효율적인 산지관리체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산지관리제도의 주 대상인 산지의 개념과 산지보전 체계를 검토하여, 산지구분체계 및 구분기준, 산지전용 허가제도,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행위제한, 산지개발기준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 내용요약

우리나라의 산지이용구분은 조선시대의 금산과 봉

산제도에서 비롯되었다. 1969년 절대임지와 상대임지, 1985년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 1997년 산지이용체계 재편과 2003년 산지관리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제·개정되어 왔다.

대부분 산지는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산지를 크게 개발이 가능한 산지와 보전해야 할 산지로 구분하는 산지구분체계와 산지전용 허가 및 협의제도에 의해 관리하고 있다. 그 밖에 산지의 관리·운용은 전체 국토 차원의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 지역 차원의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산지보전제도, 산지보전과 개발제도, 산지개발제도로 구분할 수 있는 70여 개의 개별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산지관리제도는 산지와 산지보전 개념의 문제, 산지 중심의 산지 구분 체계, 친환경적인 산지개발기준 및 계획적 산지관리기준 등에서 문제점이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산지와 산지보전 개념의 문제에서는 산지와 산지개념이 미분화되어 있고, 산지보전개념과 산지보전체계가 제한적이어서 체계적인 산지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산지 중심의 산지 구분 체계로 인하여,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인접한 농지와 산지 간에 보전과 개발이 상충적으로 나타난다. 이와 더불어 산지구분기준도 경사도, 입목도에 기초하여 구분함으로써, 공간계획적 구분체계가 결여되어 있다. 산업, 관광 등 70여 개의 개별법에 의해 분산 관리 되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산지관리가 어렵고, 이러한 개별법에서의 개발 규정은 산지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평지를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어서 지형, 생태,

경관 등 산지의 고유한 특성이 무시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의 산지관련 제도에서는 친환경적인 산지개발기준 및 계획적 산지관리기준이 미흡한 실정이다.

현행 우리나라 산지관리의 문제점을 국토관리차원에서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지관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개선방향은 첫째, 보전대상 산지는 철저히 보전하되, 개발대상 산지는 친환경적으로 이용·개발할 수 있도록 포괄적, 적극적 개념의 산지보전 개념을 정립하고, 둘째, 산지 중심의 산지관리제도에서 산지 주변 용도와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산지관리에 공간계획 개념을 도입하고, 셋째, 생태 및 자연환경보전, 관광휴양 및 도시개발, 임업생산의 경영기반 확충 등과 같은 다양한 산지 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산지 구분기준을 정비하고, 넷째, 산림의 기능과 이용목적에 맞게 산지구분체계를 정비하여 친환경적 산지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다섯째, 자발적 산림조성 및 산림보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산지보전에 따른 부담과 산지개발에 따른 혜택의 형평성 있는 분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선방안으로는 산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산지구분체계를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공간계획적으로 정비하는 방안과 산지구분기준을 새로이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 소극적인 산지보전이 아닌 적극적 산지보전 시각에 입각하여 산지전용허가제도의 개편 및 친환경적 산지개발기준 등을 제시한다.

■ 주요결과와 평가

이 연구는 첫째, 산지와 산림의 개념을 분리하여 정의함으로써 필지 단위의 산지관리를 지역 단위의 포괄적 관리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둘째, 종합적인 산지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산지구분기준과 산지구분요소를 공간 계획적 측면, 생태적 특성 및 산림의 기능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셋째, 개발논리와 보전논리의 갈등구조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일반

도시개발과 구분되는 산지개발의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산지전용허가제도를 산지개발허가제도로 개편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친환경적 시설기준과 개발기준을 마련하고, 보너스 부여제도를 통하여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는 개발방법을 유도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공생관계 구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자발적 산림조성 및 보전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산지보전 부담 및 개발이익의 분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산지를 관리하는 제도는 임업생산, 산림녹화, 산불예방행정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때문에, 국토자원으로서의 산지관리는 간과되어 왔다. 그러나 이 연구는 최초로 국토관리 차원에서 산지관리문제를 조명하였다. 산지관리제도의 출발점이 되는 산지와 산지보전의 기본적인 개념, 산지구분체계 및 개발기준 등을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하여 재정립하였다. 또한 두 개의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국토이용계획도, 산지이용구분도, 생태자연도 등을 구축하여 산지의 현황과 전용된 산지의 특성 등을 분석하고, 이 연구에서 제시한 대안의 현실적 적용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검토·제시한 기본개념과 산지구분기준 및 산지구분체계, 산지개발기준 등은 종합적인 관점과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한 것으로, 향후 산지관리제도의 기본 틀을 새롭게 구축하는 데 기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국민경제 안정을 위한 주택산업 발전방향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Housing Industry for Stability of National Economy

손경환, 지대식, 김민철, 박천규

■ 배경 및 목적

주택산업은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산업이며, 경기변동에 따라 업체 수에 많은 변화를 보이는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경기가 호황일 때는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주택업체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가 경기가 침체될 경우 많은 업체들의 부도로 주택시장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를 불안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이 연구는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택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주택산업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주택산업을 둘러싼 여건의 변화가 주택업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산업내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민경제와 주택산업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주택산업의 발전방향을 검토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내용요약

이 연구에서의 주택산업은 ‘국민의 주거생활 차원에서 광의의 개념을 사용하되, 주된 연구의 대상은 공급측면과 관계가 깊은 주택업체로 정했다.

주택산업은 시장집중도나 진입장벽은 타산업과 비교해 낮지만, 상위업체의 시장지배력은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외환위기 이후 주택산업구조는 택지구입에서 분양까지를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택지개발과 기획의 능력을 갖춘 시행사, 고품질의 주택생산기술을 갖고 있는 시공사, 판매를 위한

마케팅 능력을 갖춘 분양대행사 등이 각각 세분화, 전문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택사업의 리스크 구조는 사업의 진행단계에 따라 토지취득에서 공사착공단계, 준공까지의 단계, 준공 이후 단계로 나눌 수 있다. 향후 후분양제로 전환되면 주택건설사업의 리스크 분산이 주요과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한편, 주택산업의 성장요인을 노동 및 자본기여도,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를 통하여 파악한 결과, 지난 수십년 동안 노동기여도는 늘어난 반면 자본기여도는 줄고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산업이 자본화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주택과 같은 사회자본의 투자는 사회적 기반을 형성하는 기능을 가진다. 사회자본투자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크게 플로우효과(직접효과)와 스톡효과(간접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플로우효과는 투자에 따른 재화의 수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며, 스톡효과는 투자가 형성된 사회자본의 활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영향이다.

주택투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플로우효과와 스톡효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투자 증가는 통화 공급과 달리 실물부문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물가상승의 부작용이 높지 않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주택투자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면 일정시점 이후부터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둘째, 주택투자는 노동생산성을 꾸준히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국민경제의 생산성을 증가시킨다. 셋째, 주택투자는 단기적으로 민간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다주며 장기적으로는 국민경제

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킨다. 넷째,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이란 측면에서 '일정액투자'가 '격년주기투자'보다 우수하다. 이는 재량에 의한 통화공급보다는 준칙을 따라서 공급하는 것이 좋다는 경제정책의 일반 이론과도 부합한다. 다섯째, 주택자본의 한계생산성은 비주택자본에 비해 높다. 이는 경제의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한계생산성이 높은 주택자본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주택재고나 주거수준이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 낮은 편이라는 점도, 국민경제 차원에서 꾸준한 주택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어느 정도 뒷받침해준다.

■ 주요결과와 평가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정책건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주택시장의 내외부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환경변화에 대한 주택산업의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환경변화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국민경제의 안정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둘째, 국민경제의 안정 성장을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주택투자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상황에 따라 중소기업의 진출입이 빈번한 것은 주택투자의 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인의 하나로 지적된다. 공공부문의 주택공급은 주택경기에 관계없이 일정한 수준의 주택투자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한다.

셋째, 주택자본의 스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주택공급만이 아니라 주거생활공간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주택산업의 역할이 전환되어야 한다. 이는 다양한 주거수요에 정확하게 부응하는 한편, 주택의 기능을 제고하는 건축방식 도입, 첨단산업과 주택산업의 결합 등을 통해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주택산업에 요구되는 새로운 위상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개발업체의 역할 확보, 블루오션시장의 개척, 사업영역의 전문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주택산업에서는 시행사, 분양대행사 등이 등장하면서 사업영역의 분담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근본적인 구조조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사업영역도 뚜렷하게 나누어지지 못하고 대다수가 경쟁이 치열한 아파트건설시장에 집중되고 있다.

다섯째, 주택사업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으로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rporate: SPC) 사업방식의 활성화, 금융시장을 통한 리스크 분산 같은 전략이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여섯째, 주택산업의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주거생활 향상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및 제도측면의 개선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주택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며, 세계 및 금융차원의 간접적인 시장조절수단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주택금융시장의 다양한 기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주택산업 자체의 문제는 물론 국민경제라는 거시적인 차원도 감안하면서 주택산업의 당면과제를 정리하고 발전방향을 검토하였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에서 제시한 주택산업의 발전방향은 거시경제정책의 운영은 물론 주거복지의 향상이라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주택투자의 적정성 유지, 주거생활공간 창출 등의 접근방식은 국민경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주택산업의 리스크 축소, 개발업체의 역할 확보 같은 전략의 제안은 주택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향상 및 부동산시장 안정기반 구축 연구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A Study on Policy Implications for Housing Welfare and Stability of Real-estate Market
: For the Revision of the 4th Comprehensive National Territorial Plan

순경환, 배순석, 윤주현, 김근용, 김혜승, 강미나, 박천규 외

■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주택 및 부동산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국민들이 적절한 주거생활을 누리면서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통합 실현”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공급과 관리의 조화를 통하여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둘째, 사회적 약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 셋째, 우리동네 중심의 주거공동체 문화를 형성한다. 넷째, 부동산시장의 안정기반 구축 및 선진화를 추진한다.

■ 내용요약

주택 및 주거복지 분야의 전망 및 대응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성장을 둔화와 노령인구의 증가로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이다. 둘째, 가구구성의 변화는 주택의 규모, 내부구조, 시설 수준 및 주거환경 등의 변화를 요구한다. 셋째, 취약계층의 복지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될 것이다.

부동산시장 분야의 전망 및 대응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부동산 정보의 축적과 공개는 시장의 안정기반 구축과 투명한 거래질서 마련을 위한 핵심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둘째, 모기지시장의 형성, 후분양제의 시행으로 부동산관련 금융이 활성화될 것이다. 셋째,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한 확고한 정책의 기초 하에서 각종 수단이 수립되고 시행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 및 대응과제를 토대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주택정책이 종합적 발전의 관점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정책수립 과정이 되려면 주택거버넌스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거실태에 대한 자료수집 및 데이터 축적을 위해 정기적으로 주거실태조사를 시행하는 한편, ‘국민주거수준의 제고’라는 주택정책의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거복지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주택수요는 2009년 연 44만 호를 정점으로 하향추세를 보여 2020년에는 35만 호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전반기(2001~2010) 동안에는 국민임대주택 등을 포함해 연평균 5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주택보급률이 선진국 수준을 달성한 이후인 후반기(2011~2020)에는 인구증가율 감소와 주거상향 욕구 등을 감안하여 연평균 4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 기간 동안 공동주택의 비중을 점차 하향조정하면서 중저밀도의 친환경적인 주거단지 조성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노후 주거지의 개선을 통해 주민의 주거 향상과 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개발전략을 도입하는 정책을 장기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요의 다양화에 부응하여 주거유형 및 주거단지를 다양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장애인편의주택, 노인주택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주택을 공급한다. 그리고 커뮤니티 단위의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주민공유공간 및 개방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 및 노인계층의 주거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공공주택정책의 집중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국민

임대주택 100만 호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150만 호 공급목표를 차질없이 추진한다. 공공임대주택 정책대상 가구가 과중한 임대료 부담없이 주거를 상향이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체계화한다. 그리고 저소득층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형태의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권 단위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노인주거정책은 단기, 중·장기로 목표를 차별화하여 단계별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인주택 공급정책의 준비를 위해서 노인주택 건축기준을 강화하고 일반주택에도 적용가능한 보편적인 설계(universal design) 기준을 마련한다.

부동산시장의 안정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먼저 부동산정보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정보망의 연계성 확보, 정보의 조직화 및 표준화, 정보의 공유화, 정보활용 및 관리 강화 등의 조치가 따라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실거래가격 DB가 확보되면, 이를 바탕으로 대량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거래가격과 거래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시장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관련 제도의 개선측면에서는 부동산시장과 금융·세제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차원의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경제 차원에서 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부동산시장의 동향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시장동향 모니터링, 가격예고지표를 마련하여야 한다. 포괄적인 종합정책 차원에서 이들 예측수단은 부동산시장뿐 아니라 경제정책의 목표, 금리 변동 같은 금융시장 상황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 주요결과와 평가

주택금융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부동산시장의 투명화와 선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소비자의 자금수요를 지원하고, 가계나 금융기관의 부실화 방지를 위해 모기

지 보험제도를 도입한다. 둘째, 선분양체제 하에서 혼재되어 있던 소비자 및 공급자 금융시장을 전문화와 분업화를 통해 구분한다. 셋째, 장기 모기지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부동산금융시장의 하부구조를 체계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 서울시 강남주택시장의 구조분석 연구

A Study on the Structure of Gangnam Housing Market in Seoul

윤주현, 강미나

■ 배경 및 목적

1990년대 이후의 대량공급으로 주택보급률이 2002년 말에 100%를 넘어섬으로써 주택재고의 절대부족문제가 크게 완화되었으나 2005년 말 현재 서울 등 대도시지역의 주택시장불안은 여전하다. 서울 특히 강남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은 주변지역 및 여타지역으로 확산되어 전체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해칠 우려로 정부는 강남주택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2년 이후 주택가격이 급등세를 보이자 2003년 10월 29일 정부대책이 발표되었고, 이의 후속조치가 미흡하여 2004년 이후 강남지역의 주택가격이 다시 급등세를 나타내자 2005년 8월 31일 투기억제 및 거래투명화, 주택과세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8·31 부동산대책이 발표되었다. 또한 강남지역에 대한 관심은 정부뿐만 아니라 연구자들도 높은 관심을 보여 강남주택시장에 대한 현상을 분석하는 논문들도 발표되었다. 그동안 주택정책은 지역적 특성이나 하부구조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대중적으로 접근하여 정책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소위 시장주의자들의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지역적인 주택시장의 작동구조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주요 이슈는 '과연 강남주택시장이 일반시장과 차별화된 특성을 보이고 있는가, 일반시장과 동일한 선상에서 주택정책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문제다. 또한 많은 사람들 및 정부가

우려하는 대로 강남에서의 주택가격 움직임이 여타지역의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므로 강남시장에서의 주택가격 상승 기미가 보이면 곧바로 정책대응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물음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주택시장, 특히 강남주택시장의 실체와 작동구조를 파악하고, 강남주택시장의 특성이 비강남주택시장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강남주택시장의 움직임이 여타 주택시장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규명함으로써 부동산시장 안정정책 수립의 근간을 지원하고자 한다.

■ 내용 요약

본 연구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의 중심권으로 인식되고 있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3개구를 강남권이라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강남권은 비강남권에 비해 주거편의 및 삶의 질을 높여주는 주변 문화공간, 병원, 도로, 백화점, 체육시설 등 주거환경여건이 우수에 있으며, 거주가구의 소득 및 자산보유 수준 또한 높게 나타났다.

강남지역은 1970년대 서울의 급격한 인구증가와 정부고속도로 건설, 한국전쟁 재발 등에 대비하여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서울도심인구 분산책과 강북지역 개발억제책 등에 의해 강남지역으로 인구가동을 유인하였으며, 빠른 주택공급을 위하여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급속도로 개발되어졌다. 이러한 강남개발 배경은 현재의 강남지역이 있기까지 과거 정부의 정책적 지원 효과가 누적되어 현재에 이르렀다는 점을 시사

하고 있다.

게임이론에 의한 강남주택시장 분석결과에 의하면, 상대적인 기대가 높게 형성되어 수요가 높음에 따라 주택가격의 불안정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 의사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정보의 장벽이 커서 탐색비용이 너무 높다고 하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가격과 주택 조건 등에 대한 정보의 접근도와 투명성을 높여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방지하도록 한다. 독점 및 담합 등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를 방지하는 것도 주택가격 안정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사용자비용으로 본 강남주택시장은 전국, 서울, 비강남권을 비교하였을 때 주택가격 하락기에는 유사한 값을 보이나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큰 폭으로 음(-)의 값을 보여 강남권에 주택을 사는 것이 사용자비용이 적게 드는 차원을 넘어서 사용자 이득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 평균값이나 규모별 추이에서도 그 값은 음(-)의 값을 보여 강남아파트 구매가 매력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자산선택이론분석은 자산이 6억 원 또는 10억 원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 하에 분석하였을 때 강남아파트만을 구입하거나 또는 강남아파트 구입 후 남은 여유자산을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강남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방안이라는 사실을 제시한다.

강남주택가격 변동이 주변지역으로 파급되는가에 대하여 그랜저-십스 인과관계 분석과 충격반응분석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강남권은 서울, 비강남, 5대 신도시, 전국 아파트 가격과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통계적으로 강남권 아파트 가격 변동이 이루어지면 점차적으로 서울, 비강남, 5대 신도시, 전국 아파트 가격도 변동이 이루어졌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VAR 모형에 대한 충격반응분석 결과를 보면

강남 아파트 매매지수에 1 표준편차 크기의 충격이 발생한 경우 서울 주택가격 변화율은 1분기에 0.019, 2분기에 0.011, 4분기에 0.005, 8분기에 0.000으로 점차 줄어든다. 그리고 전국 주택가격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전국 주택가격 변화율은 1분기에 0.014 상승을 가져오다 점차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크기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강남 아파트가격의 변화에 대해 통계적으로 서울주택가격변화율과 전국 주택가격 변화율이 초기에는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영향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 주요결과와 평가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7가지 향후 정책접근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직접적인 시장개입은 한계가 있으므로 주택정책적 접근은 개인의 시장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간접수단 활용이 바람직하다. 주택가격의 근본적 변동은 거시경제의 영향이 크므로 거시정책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강남지역 주택시장 문제를 서민주거안정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주거복지정책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주택가격의 급등이 서민의 내집 마련 및 임대료 상승을 야기하기 때문에 주택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적용시키기에는 상당히 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셋째, 재산세 부담을 강화하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을 낮추어야 한다. 보유세를 강화함으로써 막연한 가격상승을 기대하면서 무조건적인 주택구입투자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거래로부터 얻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것 역시 재산세 부담강화와 마찬가지로 주택수요자의 투자행태를 변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는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을 낮춤으로써 강남지역 주택시장의 안정뿐만 아니라 여타지역의 주택가격 불안완화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넷째, 고소득계층의 주거선택 폭을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 외국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고소득층의 주거선택의 폭이 매우 제한적이고 또한 외국인전용주거단지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시장구조 내에서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주거수요를 만족할 수 있도록 하되, 발생하는 자본이득이나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환수제도를 확보하고 적정수준의 사용자비용이 부담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다섯째, 장기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무분별한 재건축사업으로 도시용량을 초과하는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행태를 묵과한다면 강남지역은 난개발로 인하여 대외적 경쟁력 및 지역적 우월성이 낮아질 수 있다. 또한 향후 신도시를 개발하는 경우 과거 5개 신도시처럼 주거지개발 중심의 신도시개발보다는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자생적이고 독자적인 문화와 특성을 갖춘 도시개발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기존인구의 주거이동이 자발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여섯째, 여타 지역의 주거환경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분석에서 강남지역의 주거환경이 여타지역보다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환경의 우월은 지자체의 재정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기초적인 주거환경부문은 중앙정부에서 도시서비스 차원에서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강북지역이나 여타 도시의 도시서비스 제고를 위한 시설확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기존주택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수요자는 지역정보에서 열위에 있다. 이에 따라 판매자 및 중개업소의 이익이 상대적으로 높게 반영되는 시장행태가 나타날 소지가 많다. 기존주택 보유자 간, 기존주택 보유자와 인근중개업소 간의 담합을 금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유휴농지의 효율적 활용·관리방안 연구

Institutional Improvements for the Utilization and Management of Idle Agricultural Land

최혁재, 지대식, 최수, 김승중

■ 배경 및 목적

WTO 농업협상의 진전에 따라 농산물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방되면, 국내 농산물의 가격경쟁력 저하는 피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경쟁력을 잃은 농가는 경작면적을 대폭 축소하거나 아예 영농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결과 유휴농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휴농지가 방치되면 국토의 황폐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를 농업 외의 용도로 전용하려는 개발압력이 팽배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농업생산 측면뿐만 아니라, 국토이용관리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유휴농지가 무계획적으로 소규모 분산 개발되어 종국적으로 농촌지역의 난개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이 연구는 국토 전체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차원에서 유휴농지를 어떻게 활용·관리할 것인가 하는 데 연구의 착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유휴농지를 정주·산업·관광휴양·환경보전 등의 다원적 용도로 활용하는 동시에, 이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토 전체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내용요약

유휴농지는 '농업경영을 유지할 만큼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 중 우량농지가 아닌 농지'로 정의할 수 있다. 현행 법령상의 표현으로 나타내면, 농지법상의 유휴

농지 중에서 농업진흥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유휴농지의 규모나 분포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에서 실시한 '준농림지역내 농지실태조사'(2001) 결과를 분석하면 대략 19만ha 정도로 추정된다.

현재 유휴농지 활용·관리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유휴농지의 활용 측면에서는 유휴농지 분포와 개발수요가 공간적으로 괴리되고 있고, 각종 농촌지역개발사업에 토지이용계획이 결여되어 유휴농지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유휴농지 개발에 지역주민의 참여가 부족한 점을 들 수 있다. 또 한계농지의 경우에는 한계농지 조사가 미흡하고, 한계농지정비사업과 개별 한계농지개발사업의 구분이 불분명하며,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면적기준이 불합리하고, 업무처리절차 및 지침의 미흡 등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유휴농지의 관리 측면에서는 유휴농지 관리를 위한 국토계획체계의 계획기능이 미흡한 점과 소규모 개발에 대한 계획적 관리기능이 취약한 점을 들 수 있다.

농지의 다원적 기능은 크게 농업생산·농촌지역 개발·관광휴양·국토환경 보전의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분류에 따라 유휴농지 활용의 대표적인 용도를 농업생산 기능으로는 친환경농업, 농촌지역개발 기능으로는 전원주택·노인복지시설·농산물가공공장, 관광휴양 기능으로는 농촌관광, 국토환경보전 기능으로는 경관보전 및 산림복원으로 선정하여 실제 활용사례를 분석하였다.

04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었다. 첫째, 유희농지는 그 성격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둘째, 유희농지를 개발하더라도 농촌다움(rurality)을 유지하여야 한다. 셋째, 유희농지 활용이 지역주민에 경제적 편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유희농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유희농지의 다원적 활용 및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유희농지의 다원적 활용을 위해서는 첫째, 유희농지에 관한 전면적인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둘째, 유희농지 개발로 인한 편익이 농촌주민에게 돌아가도록 소규모 사업에는 외부자본의 진입을 규제하며, 대규모 사업은 유희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현물 출자하여 지방자치단체·농업기반공사·외지 민간개발업자 등과 합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셋째, 한계농지정비 사업은 대·중규모 사업을, 개별 한계농지개발 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전담하도록 두 사업의 사업규모를 조정하는 등 한계농지개발제도를 전체적인 체계를 정비한다.

그리고 유희농지의 계획적 관리방안으로는 먼저 국토 공간 전체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해 농지관련계획과 농촌정비계획을 통합하여 일원화하고 이를 국토계획체계에 연계시키도록 한다. 아울러 소규모로 분산되는 농지전용을 집단적으로 유도하고, 이를 종합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지에 대한 용도구분을 개편한다.

■ 주요결과와 평가

이 연구에서는 유희농지의 효율적 활용·관리를 어렵게 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한편, 유희농지 활용에 관한 사례연구를 통해 향후 유희농지 활용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유희농지를 다원적으로 활용하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농산물시장 개방의 확대와 함께 앞으로

크게 늘어날 유희농지 문제를 제기한 연구다. 지금까지 유희농지의 활용·관리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에 관한 정책적 관심을 환기한 것만으로도 이 연구는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동안 일부 유희농지에 대해 이루어진 논의가 거의 농업적 이용에 관련된 것인데 비해, 이 연구는 유희농지의 다원적 활용을 제안하고 있는 점에서 기본적인 시각을 달리하고 있다. 특히 국토 전체의 이용관리 차원에서 유희농지의 계획적 관리방안을 제시한 것은 이 연구가 갖는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유희농지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한정된 국토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농촌지역에서 농업 외에는 적절한 용도를 찾지 못한 채 황폐화되는 토지자원을 정주·산업·관광휴양·환경보전 등의 여러 가지 용도로 재배분하는 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유희농지를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토 전체를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공간계획체계와 국토계획체계를 연계하는 동시에 농촌토지이용에 대한 용도구분을 개편함으로써 농촌지역을 계획적·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방안을 채택할 경우 유희농지가 무계획적으로 소규모 분산·개발되어 농촌지역에서 난개발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상과 같은 정책방안이 구체화되어 유희농지 개발이 추진되면 결과적으로 농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수익성이 떨어져 경작하지 못하는 유희농지를 개발함으로써 농가소득이 증대되는 동시에 농촌지역 개발이 촉진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주민 재정착 제고방안 연구

Rehousing Strategies for Residents i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배순석, 천현숙, 김승중

■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의 물리적 특성과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파악하고, 둘째 원주민의 부담능력, 사업으로 인한 비용과 편익, 주민들의 선호 등 다양한 측면을 분석하여 재정착을 결정짓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밝혀내고, 셋째,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대책 강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및 사업지구 자료 수집과 분석, 시행 중인 사업지구의 주민설문조사, 완료지구 미정착 주민 추적조사, 해외사례 검토 등이다. 연구의 범위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방식 중 공동주택방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한 지구들을 중심으로 조사·분석하였다.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64개 지구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현재 시행 중인 6구역(인천송림, 동산지구, 대전 대신, 봉산지구, 광주 방림지구) 450가구에 대한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2005년 5월로 사업이 완료된 안양 구시장지구의 총 보상대상 가구 732가구 중 327가구의 현 주소를 파악하여 구시장 지구로의 재정착여부를 확인하고 재정착하지 않은 이유를 파악하였다.

외국사례조사는 영국과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원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조사하여 본 연구의 개선방안 도출에 참고하였다.

■ 내용요약

재정착률은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첫째는 보상대상 가구 중 분양계약을 한 가구의 비율(계약기준 재정착률)이다. 두 번째는 보상대상 가구 중 분양계약 후 전매한 가구를 제외한 미전매 가구의 비율로 나타난 재정착률(미전매기준 재정착률)이다. 마지막으로 전체 보상대상 가구 중 사업완료 후 새로 건립된 공동주택에 입주한 가구의 비율로 나타난 재정착률(거주기준 재정착률)이다.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한 구역의 ‘계약기준 재정착률’(입주연도가 2000~2005년 10월)을 분석해 보면 전체 평균 재정착률은 53%이며, 가장 낮은 곳은 부산용호지구로 5%이었으며 가장 높은 곳은 안양임곡지구로 100%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의 계약기준 재정착률 평균이 61%로 비수도권 45%에 비해 16% 정도 높게 나타난다.

‘미전매기준 재정착률’을 안양시의 3개 구역을 사례로 분석해 보면, 안양 구룡지구의 경우 총 입주대상자 276가구 중 252가구가 분양을 하였으며, 이 중 다시 110가구는 전매하여 총 142가구만이 주택을 보유하였다. 분양계약을 기준으로 하면 재정착률은 91%에 이르지만, 전매를 제외한 미전매기준 재정착률은 51%로 훨씬 낮다. 이처럼 분양계약은 하더라도 이후에 전매를 통한 프리미엄의 실현 또는 부담능력의 부족 등의 이유로 전매하는 경우가 많다.

‘거주기준 재정착률’은 안양 구시장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안양 구시장지구의 보상대상가구인 총 725가구 중 327가구(45%)의 2005년 10월 현재 주소

지 자료를 획득하여 분석하였는데 미전매기준 재정착률은 57%인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327가구의 현 주소지를 분석해 본 결과 거주기준 재정착률은 30%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소지가 확인된 총 327가구 중 147가구는 인근 및 기타 구역으로 이주하였으며 24%에 해당하는 78가구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안양 구 시장지구에 거주 사실이 없는 가구들이다.

■ 주요결과와 평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의 원주민 재정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주택공급 방식, 공공지원 체계, 주민참여 및 거버넌스 그리고 사업방식 및 절차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주택공급방식과 관련하여서는 ‘철저한 사전 수요조사에 의한 맞춤형 주택공급’, ‘국민임대주택 공급의 대폭 확대’, ‘고령 노인가구들을 위한 특별 주거대책 마련’, ‘재정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혁신적 주택공급방식 도입’, ‘투기적 수요에 의한 주택공급규모 왜곡 억제방안 마련’을 대책으로 제시하였다.

철저한 사전 수요조사가 필요한 것은 원주민들의 부담능력, 사회적, 신체적 능력에 적합한 유형과 규모의 주택 공급이 원주민들의 재정착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민임대주택 공급확대는 재정착률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에는 경제력 수준이 매우 낮은 노인가구가 많고, 가옥주 중에서도 국민임대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에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며, 철거민들의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령 노인가구들을 위해서 국민임대주택뿐 아니라 소형분양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되 스튜디오식 원룸주택과 침실한개주택(IBDK) 등을 수요에 따라 충분히 공급하고, 공동TV실, 공동 오락공간 등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배리어프리형 형태로 주택을 건축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다. 영국의 사례를 벤치마

킹하여 주택의 공동소유제 도입을 건의하였다. 그리고 투기적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재정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분양계약 후 2년 이내에 전매하는 경우에는 특별분양가와 일반분양가의 차액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안했다.

공공지원체제와 관련하여서는 ‘구역 내 영세자영업자의 생계대책 지원’, ‘이주대책의 개선’, ‘복지제도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는 영세 상인이 많아 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 후 상가의 분양권을 부여한다고 해도 분양받을 경제적 능력이 없을 경우가 있다. 특히 소유권 없이 영업만 하던 가구들의 경우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의 상가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주체가 보유하면서 원주민 영세 상인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원주민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직업훈련, 일자리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저소득 원주민들의 재정착을 돕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사업방식 및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사업절차상 불확실성 해소’, ‘사업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의 제도화’를 제안하였으며, 거버넌스와 주택참여와 관련하여서는 ‘사업추진 및 시행 시점에서의 주민 참여 확대의 제도화’ 및 ‘구역별 주민지원 담당관제 도입’을 개선 대책으로 제시하였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개략적인 보상금액의 조기 통보와 분양가의 조기 확정이 필요하다. 주민들 입장에서의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주는 노력은 원주민들의 현지정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거버넌스와 주민참여와 관련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별로 보다 철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소수의견도 최대한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화가 필요하다. 또한 영국의 책임공무원제(Lead Officer)제도를 벤치마킹하고

구역별 전담 공무원제를 도입하여 행정서비스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정구역 담당 공무원이 지정되면 그는 주민들과 참여기관 간에 의사소통을 책임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며, 지자체 내의 다른 연관부서의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주민들이 외부민간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주민들을 위한 전담공무원의 역할은 사업초기에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개별적인 면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어 보상, 임시거처 마련 그리고 분양계약 및 입주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주민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재정착할 여건이 되지 못하는 철거민들을 위해 인근지역의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입주, 또는 민간임대주택의 알선, 다가구매입임대주택으로의 입주 등 여러 방법을 모색하여 지원해야 한다.

>> 주택소비자보호를 위한 주택품질보증체계 구축방안

Issues and Policies of the Housing Warranty System for Consumer Protection

배순석, 천현숙, 김승중

■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주택소비자 보호차원에서 기존의 주택품질보증관련 제도를 평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기존 하자보수책임제도의 개선대책의 제시와 더불어 주택소비자를 보다 포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주택품질보증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 소비자보호와 주택품질보증에 관한 이론과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고,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택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구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외국의 주택품질보증제도에 관한 제도를 검토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내용요약

주택품질보증체계의 문제점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 주택품질보증 관련법들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일반법으로는 소비자보호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민법을 검토하였고, 개별법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주택법 등을 검토하였다.

이어 소비자 피해실태를 대한주택보증의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보증사고 통계를 기초로 한 공중별 하자발생건수는 지붕 및 방수, 창호 공사 등이 가장 많았고 위생설비공사, 조정, 마감 공사 등의 공중에서도 하자발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하자발생 원인은 시공상 잘못이 30% 이상으로 가장 높았으나 설계 잘못이나 자재 불량, 감리부실 등도 나타나고 있어서 하자발

생의 복합적 특성을 보여준다.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주택품질보증 제도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법체계상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최근 주택법과 집합건물법은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집합건물법에서 일률적으로 10년으로 정하고 있었던 것을 주택법의 시설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주택법상 하자보수책임이 성격상 다름에도 불구하고 집합건물법이 준용하고 있는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배제하는 법 개정은 계약법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그외에 하자판정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현재 공중별로 하자보수기간이 정해져 있으나 하자다발 공중에 대해서는 보수책임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 하자보수관련 자료를 입주자, 관리주체, 사업주체가 모두 체계적으로 관리, 보관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주택품질 보증관련 보증보험이 발달하지 않아 대한주택보증이나 서울보증 등 한두 개 회사가 주택보증시장을 과점하고 있어서 있는 것도 문제점이다.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는 신규 분양주택 중심으로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는 행정적으로 관리가 용이한 신규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품질보증체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의 주택품질보증체계는 법적 규제에만 의존한 소극적 품질보증으로서 민간사업체에 의한 자발적 품질보증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보호에 한계가 있다.

■ 주요결과와 평가

주택품질보증체계를 정부와 민간의 상대적인 역할 분담에 따라 국가주도형, 민간주도형, 혼합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주택품질보증체계를 발전시켜 가기 위해 비교적 강력한 법정품질보증체계를 유지하면서 민간에 의한 자율적인 품질보증체계를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혼합형을 건의하였다.

법정 품질보증제도에 있어서는 하자관련 법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최근에 개정된 하자담보책임과 관련된 주택법 및 집합건물법의 개정사항을 재검토하여 소비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공이 운영하는 주택하자판정 기구를 설치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하자판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해 법적 공신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현재 법에 정해져있는 하자보수책임기간에 대한 기간 조정도 필요하다. 특히 하자다발 공종인 지붕, 창호, 방수, 마감 등의 공종은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자판정과 관련하여 점검방법과 판정 기준 등을 수립하고 하자보수 표준시방서와 표준품셈을 마련하여 하자발생초기에 하자보수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주택상품의 특성상 여러 전문공정에 의해 도급시공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하자 책임은 사업주체가 지도록 되어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주택업자와 하도급업체 간에 보수책임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주택품질보증보험제도도 활성화해야 한다. 우선 주택보증의 하자보수보증료를 정상화해야 한다. 현재 하자보증보험상품은 시공비의 3% 보증으로만 한정되어 있지만 초과분에 대한 보험 상품 도입과 소비자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보험 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약정에 의한 주택품질보증 활성화방안은 개별사업자와 소비자 간 약정에 의한 방법과 품질보증기구를 통한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주택산업 특성을 감안할 때 주택품질보증기구를 설립하여 소비

자와 사업자 간 중간 매개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택품질보증기구 제일의 목적은 주택사업자의 주택소비자에 대한 하자보수책임을 주택사업자를 대신하여 재정적으로 보증하는 것이다. 이 품질보증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그 기능과 역할을 다음과 같이 상정할 수 있다. 1) 주택사업자의 품질보증기구 등록 2) 주택시공품질 관리 3) 단기 하자보수 이행보증 4) 증장기 하자보수 보험 5) 증재기능 등이다.

보증보험의 범위는 시공비의 3%, 5%, 10% 등으로 다양화하여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사비에 대한 보증금의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할 경우 주택업체 입장에서 비용이 증가하고 주택분양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 그러나 타사와의 분양경쟁에서는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비용과 편익 사이에서 품질보증 수준은 기업이 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보증대상 역시 공종별 공사에 대한 하자보증뿐 아니라 소비자가 중요시하는 일부 주택성능에 대한 품질보증상품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는 공동주택 중심으로 품질보증제도가 이루어져 있으나 향후에는 단독주택 및 리모델링주택에 대한 보증상품도 판매되어야 한다. 하자판정과 관련해서는 주택품질보증기구와 별도로 하자판정기구를 설립하고 그 판정결과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택사업자들의 품질보증기구 가입을 의무화하되 다양한 금융기관이나 보증보험기관으로부터 이행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품질보증기구를 통한 품질보증체계를 구축하더라도 특정 보증기구(회사)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일반 보증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들도 주택품질보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금융 역할강화 방안

A Role of Housing Finance for Stabilizing Housing Market

강미나, 윤주현

■ 배경 및 목적

과거 2002년부터 불황기 시작한 주택시장의 변동은 주로 저금리와 부동산가 때문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의 연계가 긴밀해짐에 따라 주택시장의 안정 측면에서도 주택금융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주택시장과 주택금융시장의 관계를 분석하여 금융정책변수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상호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미시적으로 주택금융시장의 구성요소인 주택자금수요와 공급행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주거안정을 제고하면서 동시에 주택부문이 국가경제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주택금융 공급측면에서는 주택시장의 불안을 야기시키지 않도록 금융공급의 역할과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또한 주택금융 수요측면에서도 주택시장의 불안을 야기시키지 않고 주거안정을 높일 수 있도록 주택금융의 역할과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택시장과 주택금융시장의 관계를 분석하고 기존의 주택금융정책을 검토하여 금융정책변수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상호관계를 분석한다. 또한 미시적으로 주택금융시장의 구성요소인 주택자금수요와 공급행태를 분석한다. 이를 통하여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주택부문이 국가경제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

다. 아울러 주택금융정책을 통하여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자금대출의 실수요자에게 안정적인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 내용요약

주택금융 수요자의 수요행태는 소득계층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점차로 대출조건이 장기,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고정금리조건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주택금융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이 기반이 되어야 하겠고 또한 주택금융이 주택시장의 불안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투기적 수요와 실수요를 선별하여 실수요자에게 주택금융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소득계층별로 중소득계층에게는 LTV를 완화하는 방법과 실제 금융이용비용을 줄여줄 수 있도록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정책이 고려될 수 있겠다. 저소득계층에게는 일정 정도의 LTV로 주거안정을 위한 자금공급도 필요하지만 상환능력을 벗어난 대출은 또 다른 주거불안을 야기시키게 되므로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계층별로 차별화된 정책사용을 통하여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주택금융공급측면에서의 문제점은 단기대출상품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있으나 다행히 장기모기지론의 출시를 계기로 은행들도 장기대출상품을 출시하기 시작하면서 단기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수요자측면에서도 선택의 폭이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출시스템에서 LTV를 충분히 낮게 설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대출자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자금인지, 대출자의 신용도와 상환능력이 어떤지에 대한 심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점차 주택금융시장의 기능이 분화되면서 시장이 세분화될 것으로 예견된다. 향후 주택대출 심사의 기준을 대출자의 신용에 근거하여 대출자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가 선행되고 신용정보의 축적과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민간금융기관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주택자금 차입자의 대출이용 가능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현재의 주택보증기금의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주택대출보험제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주택자금이 계층 간, 지역 간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공공금융과 민간금융이 역할을 분담하여 저소득층은 정부재정 또는 기금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한다.

은행의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은행대출의 부실화와 은행의 부실화로 연결된 사례를 미국의 S&L과 일본의 주전은행을 중심으로 부실화의 배경과 정책대응,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사례들을 통하여 담보비율이 담보가격의 하락시 완충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하고, 개인별 한도를 두어서 담보를 근거로 대출하고 또 다시 이를 담보로 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험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금융기관의 리스크 정도에 따라 예금자 보험료를 차등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주요결과와 평가

점차적으로 주택시장과 주택금융시장의 상호 연계가 긴밀해지고 그 영향의 정도와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므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택시장과 주택금융시장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중·장기적으로 시중자금이 자본시장으로 흘

러갈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자본시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택시장과 주택금융시장의 모니터링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이 기반이 되어야 하겠고 또한 주택금융이 주택시장의 불안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투기적 수요와 실수요를 선별하여 실수요자에게 주택금융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공급측면에서 주택금융공급의 효율화를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심사기준을 선진화하여 대출자의 신용정보와 상환능력 등에 기초한 주택금융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주택금융을 공급하는 기관이 외부충격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지방분권시대의 주택거버넌스체계 정립방안 연구

Housing Governance System in the Era of Local Autonomy

천현숙, 진정수, 김승중

■ 배경 및 목적

최근 들어 복지와 참여가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지금까지의 양적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참여와 분배를 중시하는 패러다임으로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과 운영의 변화방향을 염두에 두고 주택거버넌스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택정책은 국가적 차원과 지방 차원의 정책이 균형있게 연결되어야 하며 주택거버넌스 역시 내셔널 거버넌스와 로컬 거버넌스가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주택거버넌스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주택정책의 행위주체별 수평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내용요약

국민의 주거권보장을 위한 주택정책은 합리적이고 공평한 주택공급 및 배분, 안전한 주택관리, 안정적 주택시장 질서 유지, 실질적 주거복지의 실현,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정책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여러 주체가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중심의 하향식 정책수립과 집행체계를 극복하고 지역이 중심되어 정책을 수립하고 중앙이 이를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주택거버넌스의 정당성은 참여

의 민주성과 상호의존성, 주거복지전달의 효율성에서 찾을 수 있다. 주택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면서 민간부문, 지방정부, NGO 등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주택거버넌스 개념은 ‘국가(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포함)단위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조정장치’로 정의한다. 거버넌스의 주체는 공공과 민간으로 대별되며 민간은 다시 커뮤니티와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거버넌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시민의 자발적 협력관계에 토대한 민주주의 확립이 전제되어야 하고 둘째, 거버넌스하의 정책과정은 정책결정이 행정 내부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계획에서 결정까지의 과정에 공개적인 주민들의 의견개진과 수렴 과정을 거친다.

현황분석을 위해 전국의 시·도 중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시·군에서는 안양시, 유성구, 완주군 등 1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택정책 수행과정은 4단계(기획입안,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주택정책 운영과정을 분석하였다. 중앙, 광역, 기초자치단체별로 주택업무를 비교해보면 중앙정부는 기획과 집행업무가 혼재되어 있는 반면 광역과 기초는 주로 집행업무에 집중되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 주택관련 NGO 활동 역시 중앙에서 활동하는 단체와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 간에 전문성과 영향력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거버넌스 도입 필요성과 인식, 공공과 민간, 중앙과 지방 간 역할분담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공무

원, 전문가, NGO종사자, 공사, 건설업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현재 주택 정책 수립, 집행과정에 지역주민의 의사반영은 22%에 불과하지만 향후 지역주민 참여에 대한 의견은 81.1%로 매우 높았다. 공공과 민간의 향후 역할분담에 있어서는 민간보다는 공공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았고 민간에서는 전문가집단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주택거버넌스 정립을 위해서는 여러 참여주체의 균형 있는 성장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결과와 평가

주택거버넌스 도입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선 행되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중앙정부의 권한위임 확대와 민간참여 시스템 구축은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중앙의 권한 확대와 광역, 기초자치단체간 다층적 협력 체계가 구축될 때 거버넌스 체계가 가능하다. 정부를 포함하여 민간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수평적 네트워크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행위주체 간 상호 협동적 정책수행을 위해 공무원, 민간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한다. 현재 건설교통부와 보건복지부의 주택관련 업무를 통합하고 특별위원회 업무도 일부 포함하는 주택청을 설립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중앙집권적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정부협의 회를 구성하여 중앙과 지방간에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중앙과 지방 간에 주거 서비스 협약제도의 운영도 검토할 수 있다. 중앙정부와 광역정부 간에 지역별 주거서비스 목표에 대한 합의를 하고 일정 기간 내에 이를 달성하면 사전에 합의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이는 특히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책임을 중앙정부만이 아닌 중앙과 광역이 분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 행정 분권화를 위해 주택 관련 법령의 정비 및 제도 확충이 필요하다. 지방정부의 역량구축을 위해서는 조직의 정비와 인력확보가 선

행되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령이 정비되어야 한다.

주택거버넌스 추진조직은 공공부문 주도형과 민간 파트너십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부문 주도형의 경우 기초단체의 역량을 감안할 때 광역주도형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민간파트너십의 경우 공익적 성격의 NGO 형성정도에 따라 실현가능성이 결정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NGO가 활성화되어 있는 중앙에서 동 모형이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주택정책 전반을 대상으로 하여 거버넌스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현 상태를 진단하고 평가하는 작업과 거버넌스의 기본적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 지방정부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주거복지와 주거환경정비 분야에서 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광역정부를 중심으로 주거환경정비나 주거복지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의 선정부터 해결의 전 과정에 대한 거버넌스 모형을 시범적으로 구축해볼 필요가 있다.

>> 지역간·계층간 주거서비스 격차 완화방안 연구(I): 주거서비스 지표의 개발 및 측정

A Study on Housing Service Disparity among Regions and Classes(I): Development of Housing Service Indicators

윤주현, 김근용, 박천규

■ 배경 및 목적

2004년 말 현재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102.2%에 달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주택부족 문제는 크게 완화된 것으로 인식되나, 지역별로는 상당한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 간·계층 간 주거서비스 격차에 대한 실태 분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주택정책은 지역 간 주택재고 격차나 계층 간 주거서비스 향유의 편차를 고려하지 못하고 총량 위주로 수립되고 있다.

이 연구는 지역 간·계층 간 주거서비스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지역별·계층별 주거특성 및 주거서비스 격차를 파악하고, 각 지역 또는 계층의 특성에 부합하는 주거정책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주거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내용요약

주거서비스(housing service)는 가구(household)라는 소비자가 주거행위(housing) 과정에서 주택(house)이라는 물리적인 매개체를 선택함으로써 제공 받을 수 있는 모든 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다. 주거서비스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는 양적 지표, 질적 지표, 주거비부담 지표, 주거안정성 지표, 주거형평성 지표로 구성하였다.

주택보급률은 1990년 72.4%에서 2000년에 96.2%로 크게 증가하였고, 2004년 말 현재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102.2%에 달한다. 주택보급률의 급격한 증가는 1980년대 후반부터 지속된 주택의 대량공급에 기인한

다. 자가 점유율은 1990년 49.9%에서 1995년 53.3%, 2000년 54.2%로 소폭 증가하였다. 서울은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반면, 지방군부 지역은 77%가 자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주거가 안정되어 있다. 저소득층 내에서는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자가 점유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자기 집을 보유하고 있는 극빈층이 많음을 알 수 있다. 1인당 주거면적을 보면 도시지역은 전국평균을 하회하여 주거밀도가 높은 반면, 지방 군부는 서울에 비해 약 1.5배 넓게 살고 있다.

지방의 주택 노후도가 심하며, 특히 농촌지역이 포함되는 군부지역의 건축경과연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3인 이상 가구 중 단칸방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소득이 증가하고 주택 대량공급 정책으로 가구의 주거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주택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전국적으로 내열·방화, 내부마감재, 습기, 배관 등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높고, 군부지역은 구조 및 성능에 대한 불만이 높다. 주거환경은 주택상태에 비해서 만족도가 낮았다.

주택구입능력(PIR)은 서울이 7.7배로 매우 높은 수준인 반면, 지방은 대도시 3.8배, 중소도시 2.6배, 군부 2.9배로 수도권에 비해 주택구입 부담이 낮다. 최저소득층은 6.7배로 적정기준 4.0배에 비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저소득층의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21.4%로 월 소득의 20%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으며, 노년층은 소득감소로 월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 등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다.

평균 거주기간은 대도시일수록 짧다. 도시지역에 자가가가구가 많이 분포하고 있고, 가구원 수 및 소득의 변동에 따라 주거이동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최저소득층의 거주기간은 중·고소득층에 비해서 길다. 강제이동 비율은 서울과 중소도시가 높게 나타났으며, 지방 군부는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낮다. 저소득층의 강제이동 비율이 가장 높다.

주거면적, 주택자산, 가구 월 소득, PIR, RIR에 대한 지니계수를 계산해 보면 가구 1인당 주거면적을 제외한 다른 변수들의 불균등도가 0.4를 초과하여 주거서비스의 분포는 매우 불균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주택자산과 PIR은 지니계수가 0.56과 0.51로 매우 높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불균등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소득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 주요결과와 평가

주거서비스 지표군별 정책과제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주거소비량 측면에서 대도시 지역은 신규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임차시장의 안정으로 주거비부담을 완화하도록 해야 한다. 주거소비의 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대도시 지역은 국민임대주택 공급 및 뉴타운 개발 등 주택공급 정책 유지와 함께 주거환경제고를 위하여 주택 공급시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주거비 부담측면에서 대도시 지역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한 정책기반을 구축하고 국민임대주택 공급비중을 증대할 필요가 있고, 저소득가구와 노령가구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및 주거보조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상환조건을 차별화해야 할 것이다. 주거 안정성 측면에서 대도시 지역에서는 저소득층과 노령가구의 주거 안정성이 특히 취약하므로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우선되어야 한다. 주거형평성에 있어서는 주택자산 불평등도의 완화를 위해 보유세 및 양도

소득세 강화 정책을 유지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측정을 위한 구조·성능·환경기준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임대료 안정을 관리하고, 지역적 차원에서 주거조밀도 해소, 주택구입능력 및 가격안정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 연구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여 후속연구가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주거, 주택 및 거주, 주거서비스, 주거복지 등 혼용하여 사용되었던 용어들을 엄밀하게 구분하여 주거서비스의 개념을 정립하였으며, 주거서비스와 주거복지와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향후 관련 연구가 보다 체계적인 틀 안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다. 둘째, 주거서비스 측정지표를 개발하여 지역별로 또는 국제적으로 주거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객관화하였다. 셋째, 지역별·계층별 세부 주거수준을 파악하여 주거복지 정책을 구체화할 수 있는 실증자료를 제공하였다. 기존 연구에 비해 지역 및 계층을 보다 세분화하여 입체적으로 주거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주거복지정책의 의사결정과정에도 보다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넷째, 전국을 포괄하는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기적인 주거실태조사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주택법에서 정기적인 주거실태조사를 포함함으로써 주택관련 통계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전국수준의 주거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만한 기초자료가 없는 상태이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에서 건설교통부와 함께 수행한 대규모의 설문조사는 표본설계 및 조사항목 설정 등 여러 측면에서 향후 정기적인 주거실태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기본 틀로서 참고될 수 있을 것이다.

>> 한·중 토지정책연구(V): 지속가능한 개발과 토지정책

Comparative Study on Land Policies of Korea and China(V): Sustainable Development and Land Policies

정희남

■ 배경 및 목적

국토연구원과 중국 절강대학교 동남토지관리학원과 체결한 5년간의 장기연구협약서(2003~2007)에 따라 양 연구기관은 토지시장 및 토지정책과 관련하여 매년 한 개의 주제를 정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공동연구하기로 하였다. 공동연구 3년차인 금년에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토지정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공동 연구를 수행하였고, 연구 성과는 2005년 10월에 중국 항주에서 개최된 공동워크숍을 통해 서로 교환하였다. 본 연구보고서는 그동안의 연구성과물인 6편의 논문을 편집한 것이다.

■ 내용요약

제1장은 한국의 자연환경보전지역 관리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지난 40여 년간 한국은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춘 국토개발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경제규모는 세계 11위로 성장하였지만, 환경지속성지수(ESDI)는 세계 142개 국가 중 122위에 머물 정도로 낙후되어 자연생태계 훼손 등 다양한 환경오염 문제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국가환경보전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관리를 위한 과제와 전략을 추진해 오고 있다. 본 논문은 국토 자연환경보전체계,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 현황, 생태자연도 구축현황, 자연환경보전지역 관리를 둘러싼 문제점 등을 개괄한 후, 지속가능한 자연환경보전지역 관리를 위한 과제와 제언을 도출하고 있다.

제2장은 중국 서부지구의 생태환경 건설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동부 연해지역에 비해 서부 지역은 성장하지 못하여 지역 간 경제수준 격차가 심각해지게 되었을 뿐 아니라, 서부지역의 생태환경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최근 서부지구의 생태환경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장강과 황하 상류지역의 삼림식피 파괴와 수토유실(水土流失), 그리고 그로 인하여 초래되는 수자원 감소와 토지 사막화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서부대개발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중국의 서부지구에 대한 지역개발정책의 연혁과 '서부대개발' 정책의 채택 및 추진배경, 서부지구 생태환경 파괴현황과 문제, 그리고 대응전략으로서 생태환경건설정책 추진 현황과 성과 등을 고찰하고 있다.

제3장은 한국의 농촌토지 이용관리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최근 한국 농촌은 여러가지 어려움, 예컨대 대내적으로 열악한 정주여건과 도농 소득격차로 농촌인구가 감소하면서 고령화되고, 대외적으로는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경쟁력을 잃은 농지가 유향화 되면서 국토의 황폐화와 농촌지역의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이 논문은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농촌토지에 대한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먼저 농촌토지이용계획과 농촌 정비계획을 통합하여 농촌과 농지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농촌공간계획체계를 정립하고, 소규모로 분산되는 농지전용을 종합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농촌토지이용 수요를 계획체계 안으로 끌어들이 필요
가 있으며, 도시내부 및 주변지역의 농지를 전용하여
도시용지를 공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도시계획에 따
라 경관 및 환경보전을 위한 공원·녹지 및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4장은 중국의 경지보호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
다. 중국경제사회의 빠른 발전과 인구의 신속한 증가로
경지면적이 크게 감소할 뿐 아니라 토양퇴화 및 생태계
평형의 파괴를 야기하여, 경지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
호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이 논문은 중국의 경지
보호 현황으로부터 출발하여, 경지보호의 필요성과 어
려움을 분석하고, 경지보호에서 취득한 성과를 긍정적
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경지보호 과정에서 일고 있는 현
실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끝으로, 14개 조항에 이르는
경지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호정책을 제시하여, 미래
경지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호에 대하여 일정한 지도
작용을 하고자 한다.

제5장은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한국의 토지적
성평가제도의 적용에 대한 연구다. 토지적성평가제도
는 2002년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과
보전의 갈등관계를 친환경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도
입되었다. 이 논문은 남해군을 중심으로 토지적성평가
제도의 적용방법과 절차 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토
지적성평가제도는 토지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토지이용계획의 합리성과 지역적합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토지적성평
가제도는 지역실정에 좀 더 적합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 선정의 융통성을 보완하고, 토지적성
평가 결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토지적성평가
기초로 한 계획수립방법 및 기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져야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 논문은, 중국을 사례로 도시 내 녹색서비스
수준평가에 대한 연구다. 도시 주민의 도시녹색공간이
제공하는 녹색서비스 향유수준은 각종 인자의 종합적

인 영향을 받는다. 이론상으로는 일단의 공공녹지는 도
시범위의 어떠한 공간에도 일정한 영향력을 미친다. 실
제로는 녹지 자체가 제공하는 녹색량의 차이, 교통상의
접근성 정도, 입장료 가격, 녹지 자신의 공간특징과 주
위환경 등 모두가 각 공간이 자신이 제공하는 녹색서비
스 향유수준을 제약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러
한 영향은 기본적으로 해당 녹색공간과의 거리와 반비
례한다. 즉 거리가 멀어질수록 향유수준은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공간단위가 향유하는 녹지의 녹색서비스도
더욱 적어진다. 이러한 기본 이론에 근거하여, 본 연구
는 공간분석기술을 이용하여, 상하이시 107개 공원녹
지가 제공하는 녹색서비스를 각 근린주구단위(街坊單
元)에 분배하고, 그 후에 각 근린단위에 대한 누적을 통
하여 전체 근린단위의 도시녹색서비스 향유수준 총량
에 대한 하나의 공간평가를 구하였다. 결과는 각 근린
단위가 이러한 녹색서비스 향유수준과 공간차이 특징
및 인당 평균 향유수준의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도시녹색공간의 합리배치, 녹색공간이 제공하는 녹색
서비스의 유효분배 등을 위하여 일종의 새로운 방법과
개념을 제공하고, 연구결과는 도시의 생태환경평가, 부
동산평가 및 도시계획 등에 대하여 일정한 참고가치가
있다.

2) 수시 및 수탁연구

>> 고도지역 지구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용역

Study on the Preservation of Historic Cities

채미옥, 양하백, 김진범, 안인향, 송하승, 이난경

2004년 3월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古都)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문화재 보존에 따른 제한되는 사유권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도(古都)보존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고도지역의 역사문화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고도보존계획,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환경지구 지정 기준을 강구한다. 아울러 지구지정에 따른 법적 지원 사항 및 제도적 보완 사항을 검토한다.

연구기간: 2005. 12. 20~2006. 12. 15
발주기관: 문화재청

>> 공공기관 종전부지 활용방안 연구

Managing and Planning the Site of Transferring Public Institutions to Local Areas

손경환, 조판기, 박천규, 엄근용, 성은영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수도권에 남게 되는 종전부지에 대한 활용 원칙과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현재 종전부지의 효율적 처리방안이 이전재원조달을 위한 자체 매각이라는 기본방향만 확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종전부지 처리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98개 기관의 종전부지(약 296만 평)가 30개 지자체에 걸쳐 있고 소유구조, 입지특성, 용도지역 등이 다양하여 도시공간구조를 고려한 깊이 있는 연구

가 필요함에 따라 도시공간구조, 사회·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하는 동시에 이해당사자간 충분한 협의가 선행된 종전부지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기간: 2005. 12. 9~2007. 6. 8
발주기관: 건설교통부

>>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 실현방안 연구

A Policy Study on Implementing the Construction Plan of One Million Units of National Public Rental Housing

진정수, 최수, 정희남, 김근용, 배순석, 사공호상, 황태일, 윤지선, 노희순

■ 배경 및 목적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2004년 1월 주택종합계획과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는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택지개발 및 건설절차를 간소화하였고(03. 12. 31), 국민임대주택건설지원단을 발족·운영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지역별 수요 파악, 택지소요량과 개발가능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는 각종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국민임대주택의 지역별 적정배분 및 공급 방안, 국민임대주택 건설용지 확보방안, 소요자원 조달방안 등 장·단기적인 법·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내용요약

본 연구에서는 첫째, 국민임대주택의 필요성과 건설계획을 검토하고, 국민임대주택의 공급효과와 이에 대한 국민의식을 분석하였다. 둘째, 국민임대주택의 소요량과 수요량을 추정하였으며, 지역별 배분기준과 방법을 설정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지역별 배분방안을 마련하였다. 셋째, 선진외국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설사례를 분석하였다. 외국사례에서는 미국, 일본, 영국에 있어서 공공임대주택정책과 사회적 혼합에 대해서 집중 검토하였다. 넷째,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개발가능지와 택지소요량, 지역별 택지과부족 현상을 분석

하였다. 이를 토대로 택지확보 방안도 제시하였다. 다섯째,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을 위한 소요자원을 추정하였고 그 확보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끝으로, 효율적 국민임대주택건설을 위한 제도개선사항에 대해 단기적 방안과 장기적 방안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대량의 국민임대주택을 10년 동안 건설·공급하는 계획의 성공 여부는 필요로 하는 가구에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되느냐, 그리고 택지와 소요자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서 사업이 차질 없이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지자체, 주공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주요 개선 사항 또는 정책적 건의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유효수요에 따라 지역별 배분량 조정, 2) 연간 목표량은 탄력적 설정, 3) 택지 확보를 위한 기본 원칙과 전략 수립, 4) 택지 확보를 위한 광역협의체 구성, 5) 지방에서 국민임대주택의 규모 확대, 6) 국민임대주택 단지의 개발규모 확대, 7)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조정, 8) 추가적인 소요자원 확보 방안 강구, 9)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사회적 혼합을 위한 보완책 강구, 10)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끝으로 중장기적인 방안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및 정체성 재정립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연구기간: 2004. 7. 8~2005. 5. 8
서지사항: 466면
발주기관: 대한주택공사

>>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비 산출체계 구축방안연구

A Study on Construction Cost of Public Rented Housing

강미나, 배순석, 신성해, 허영기, 조훈희

정부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2003~2012)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비 산출 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소요되는 국민임대주택 건설비용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결정하고 100만 호 건설에 사용될 사업비를 추정하고자 한다.

연구기간: 2005. 9. 8~2006. 2. 7
발주기관: 건설교통부

**>> 임대사례조사 및 투자수익률 추계사업의 평가 및 발전방안
:공공의 사업추진 여부 필요성 검토 및 발전방안 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to Deliver Quality Property Information in the Office Building Market

손경환, 박천규, 윤지선

임대사례조사 및 투자수익률 추계사업은 외환위기 이후 국내 부동산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증대된 부동산 시장정보 수요를 충족시키고 부동산시장 선진화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최근 공공주도의 임대 사례조사 사업의 당위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존재하고, 투자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이 사업의 전반적인 성과 및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공공부문에 의한 사업추진의 필요성 여부 및 향후 발전방안 등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기간: 2005. 9. 5~2006. 3. 3
발주기관: 건설교통부

>> 정기적 주거실태조사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

A Pre-study on the National Housing Survey

윤주현, 김근용, 안인향, 노희순

주택법에 의거하여 2006년부터 시행될 주거실태조사를 시행하기 위한 사전연구로서,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통계자료를 효율적,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주거실태조사체계를 확립함과 아울러 2006년도 제1차 조사를 위한 설문지 작성 및 표본추출방법 등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주거실태조사체계 확립을 위하여 국내외 주택관련 통계생산체계를 검토하였고, 설문지 작성을 위하여

통계수요조사 및 시범조사를 실시하고, 연구협의회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연구기간: 2004. 11. 30~2006. 12. 29
발주기관: 한국토지공사

>> 주택수요조사연구

A Study on Housing Demand Survey

윤주현, 김근용, 안인향, 노희순

■ 배경 및 목적

부동산시장 여건변화에 따라 국민들의 다양한 주거수요를 파악해야 하는 등 주택 및 주거관련 통계조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주택의 질적 상태를 나타내는 통계가 전혀 없으며, 주택법에서도 정기적인 주거실태조사를 포함함으로써 주택관련 통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조사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에 따라 이 연구는 활용도 높은 주택수요관련 통계자료를 생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택종합계

획(2003~2012) 실행을 위한 다양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주택종합계획상의 연간주택공급량 산정기준이 되는 주택수요량을 추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내용요약

이 연구는 주택수요조사의 목적 및 활용도를 규명하고 계층별, 지역별로 주거실태 및 주택상태 파악, 다양한 주거수요 파악, 정부개입을 위한 시장규모 파악 등을 연구내용으로 하였다. 주거정책의 수행을 위한 기준

04

통계조사의 한계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단기 주택수요 전망, 설문조사를 이용한 직접 추계, 수요함수 추정을 통한 전망, 증장기 수요량 추정, 주택수요량 추정을 위한 방법론을 모색하였다.

주택수요조사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의 주요내용으로는 가구 일반사항, 가구의 경제력, 주거실태 및 주택상태, 주택구입 또는 주거이동 계획, 국민의 주거만족도 및 주택선호도 등을 위주로 파악하였다. 설문조사결과의 분석을 통해 지역별·계층별 주택수요량 추정, 단기주택수요량 추정, 증장기 주택수요량 추정, 주택건설수요량 등을 추정하였고 이에 대한 정책 활용방안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규모, 분포, 빈도를 추정하고 미달가구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주택수요량 추정에는 이미 시현된 주거소비에서 변동이 없는 경우는 배제하고 향후 추가적으로 주거소비를 변동하거나 주거이동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다. 거시변수를 활용한 주택수요 추정과 단기 수요량 전망,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한 단기 수요량 추정을 통해 2년 이내 구체적인 주거이동계획이나 주택투자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 중 부담능력을 파악하여 연간 유효수요를 추정하였다.

향후 가구증가 및 주택 멸실을 고려하여 2012년 목표 주택보급률을 달성하기 위한 물량을 주택수요량으로 보고 산출한 결과 수도권 지역의 주택수요는 2005~2012년 중 연간 29만 호 내외로 전망되었으며, 가구증가에 의한 연간 주택수요는 14만 6천~15만 5천으로, 멸실요인에 의한 연간 주택수요는 5만 6천~7만 2천 호로 전망되었고 주택종합계획(2003~2012)상의 2012년 수도권 목표주택보급률 112.4%를 달성하기 위한 보급률 제고 소요는 연간 6만 8천~8만 8천 호다.

향후 8년간 수도권에서는 약 234만 4천 호의 주택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05년 주거실태 및 주택수요조사 자료를 정책에 활용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규모를 추정하고, 미달가구의 특성을 분석한 후 건설교통부 고시 주택종합계획의 정책차별화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개입의 규모를 추정해 보았다.

과업기간: 2004. 12. 31~2005. 12. 31
서지사항: 167면
발주기관: 건설교통부

>> 토지관련 부담금제 개선방안 연구

Policy Schemes for Introducing Development Impact Fees to Korea

정희남, 최수, 조성찬

■ 배경 및 목적

효율적·형평적인 도시용지 공급을 위하여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그동안 다양한 형태의 부담금제를 도입하였지만 실효성이 크게 미흡하였다. 정부는 2005년 8월 31일 발표한 부동산종합대책에서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방안을 발표하였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2월 30일 임시국회에서 제정되었다.

이 연구는 계획적 개발과 도시용지 공급확대에 필요한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법령의 입법을 지원하는데 연구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기반시설 관련 각종 부담금제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기반시설 관련 부담금제도의 현황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며, 주요국의 기반시설관련 부담금제를 비교연구한 뒤, 기반시설부담금제의 도입방안을 마련하였다.

■ 내용요약

기반시설은 비경합성, 비배제성 및 위치고정성 등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어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주체, 무임승차, 난개발 및 개발이익의 사유화 등의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전통적인 토지개발 규제수단은 용도지역제와 택지분할규제였으며, 이들 토지개발 규제수단의 구체적인 실현수단은 개발허가제와 기반시설 설치의무제였다. 1970년대 이후 서구에서는 이들 규제수단의 한계를 인식하고 개발영향부담금제(Development

Impact Fees)를 운영해 왔다.

우리나라도 1960년대부터 다른 나라와 유사한 기반시설 관련제도를 운영해 왔다. 즉,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기반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기반시설관련 부담금제를 운영해왔다. 2000~2004년 동안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부지조성공사가 발주된 전국 57개 택지개발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사례조사를 한 결과, 도로 공원 등 7개 필수기반시설의 부담률은 면적기준으로 45.4%, 표준공사비는 m^2 당 5만 7천 원이었다. 그 반면에 기반시설 관련 부담금은 31개에 달하지만, 징수실적은 아주 미미하였다. 외국의 경우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기반시설은 지방공공재이기 때문에 대부분 지방세와 채권으로 설치비용을 조달하되, 기반시설 재원 확보 또는 도시성장관리를 위해 기반시설 관련 부담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이 연구는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반시설 부담금은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개발행위자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기반시설 편익과 설치비용의 공평한 분담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입목적이 있다. 징수한 부담금은 기반시설 설치에만 사용하도록 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제고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도운영은 형평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부담구역을 광역화하는 한편, 부담대상도 원칙적으로 모든 개발(건축)행위로 확대하되, 관련제도와 연계성을

강화하여 이중부담 가능성을 해소하고 소유자 전체 부담은 크게 늘지 않으면서 정책 실효성은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부담금 부과내용과 부담수준 등을 사전에 명확하게 제시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마련된 제도 도입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과대상 기반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등 7개 기반시설 및 이 시설의 기능발휘에 필요한 부대시설과 편익시설로 한정하였다. 징수된 부담금은 국가와 지자체 간에 30:70으로 배분하도록 하였다. 징수한 부담금은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로 한정하였다.

부담금 부과대상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행위에 대해 부과되되, 재건축은 늘어난 용적률에 대해서만 부과하도록 하였다. 다만, 기반시설부담금의 이중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각종 면제, 감면, 공제제도를 보완하였다.

기반시설부담금의 산정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대통령령의 규정에 따라 건교부장관이 매년 고시)과 용지비용(당해 시군구 개별공시지가의 평균가격)을 합산한 원단위 금액에 200㎡를 초과하는 건축연면적과 부담률(20%)을 곱하여 산정하되, 각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25% 범위 안에서 지자체 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담금의 부과주체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되, 부과징수권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를 하는 자(건축법상 건축주)로 하였다. 부담금은 건축허가시점에서 부과하고 부과일로부터 2월 이내에 납부하되, 납부연기 신청 등이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납부연기 및 2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반시설부담금제가 조기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제도 간의 연계성

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각종 공제제도로 이중부담 문제는 해소되었지만, 관련부담금제의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부동산시장 및 건설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기초하여 표준공사비 및 용지비를 정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고, 부처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개발행위허가제도와 기반시설부담금제도를 연계시킴으로써 계획적 개발과 도시용지 공급 확대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도 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통적 수단인 조세와 채권발행을 통해 기반시설 투자재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기반시설부담금제도와 별도로 개발사업지구 안에서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및 기부채납 수단은 지속되어야 한다.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운영지침 또는 편람(manual)을 제작 및 공급하여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조기 정착을 지원할 필요도 있다. 기반시설부담금제 운영의 모니터링, 운영과정상 문제점 확인, 부작용 해소 대안 마련 등을 위하여 전문인력과 전담조직도 필요하다.

>> 토지이용규제 정보화 추진방안 연구(I): 토지이용 규제내용의 정보화

A Study on Promoting the Informatization of Land Use Regulations(I)

정희남, 서관호, 박동길, 김영철

■ 배경 및 목적

2004년 10월 현재 지정·운영되고 있는 지역지구는 14개 부처가 관장하는 121개 법률에 의해 324개가 있다. 그동안 소관부처별로 유사목적의 지역지구 남발로 혼란을 초래하고, 토지이용·개발·관리 시 검토대상 법률과 협의대상 부처가 과다하며, 규제내용과 절차의 불투명 및 법률별 토지이용 행위규제 내용의 다양성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정부는 지역지구제 당초 취지는 살리되 불합리한 문제점은 개선하도록 일련의 토지이용규제 합리화작업을 추진해 왔다. 토지구제 합리화 개선방안의 정책목표는 토지구제 패러다임을 관리자 중심에서 이용자(국민) 중심으로 전환하고, 토지구제를 수반하는 지역지구를 대상으로 단순화·투명화·전산화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를 위해 2004년 11월 24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안)을 입법 예고 하였다.

이 연구는 모든 토지의 행위규제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도록 행위규제 내용의 정보화 추진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행위규제를 수반하는 지역지구의 규제현황을 분석하고, 토지이용 행위규제의 분류 및 유형화를 도모한 뒤, 토지이용 행위규제의 코드화 방안과 토지이용 행위규제의 정보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 내용요약

각종 지역지구 중 토지이용 행위규제를 수반하는 지

역지구는 67개 법률에 의해 지정되는 258개가 있다. 이를 11개 부처가 관리하고 있다.

행위규제 유형화를 위한 행위규제 분류는 건축물, 공작물, 시설물, 토지형질변경, 토지분할, 토석채취, 물건적치, 개발사업, 농림축산, 환경, 기타행위 등 11개 분야로 대분류 하였다. 이중 건축물과 공작물은 건축법 제3조의 4의 건축물 종류에 의해 규정하고 있는 분류 원칙을 따랐다.

토지이용 행위규제의 코드화는 67개 법률에 의한 258개 지역지구에 대한 코드화, 2,000여 개의 행위규제 내용에 대한 코드화, 허가, 금지 등 30여 개의 규제 유형에 대한 코드화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토지이용 행위규제의 정보화는 먼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개발에서는 공간정보(GIS)와 법률정보(추론시스템)를 기반으로 하되 제공하는 정보 수준의 확대 및 심화에 상응하는 유연성 및 확장성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하고, 토지이용규제 서비스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추가되는 서비스로 토지종합정보망과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KLIS, 건축행정정보시스템, 법제처 등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방안 또한 제시되어야 할 것임을 제시하였다.

연구기간: 2004. 10. 29~2005. 8. 28
 서지사항: 419면
 발주기관: 건설교통부

>> 토지적성평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용역

Policy Directions for the Advancement of the Land Suitability Assessment System

채미옥, 송하승, 박미영, 이난경

선계획·후개발에 입각한 국토이용체계의 개편과정에서 토지적성평가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기초정보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주로 관리지역의 세분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고, 이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및 운영미숙 등으로 제도 도입의 기본취지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계획의 정보기반으로서 토지적성평가 제도의 발전방향과 적성평가의 적정성 제고방안, 관리지

역 이외 지역에 적합한 적성평가방법, 토지적성평가 정보의 활용성 제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기간: 2005. 3. 30~2006. 3. 29
발주기관: 한국토지공사

>>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관리방안연구

Management Schemes for Fringe Area Around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최혁재, 채미옥, 김승중, 박미영, 정지호, 박채운, 서동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주변지역에서 난개발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주변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행복도시 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주변지역의 난개발방지방안 및 주민지원사업계획 등을 수립함으로써 현재 시가지조정구역에 준하여 잠정 관리상태에 있는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관리에 대한 적정성을 도모하고,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방

향을 수립·제시함과 동시에 향후 당해지역에 수립될 도시관리계획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연구기간: 2005. 9. 6~2006. 12. 31
발주기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 기타활동

토지적성평가와 관리지역 세분방법 세미나

- 일 시 : 2005. 9. 7, 14:00
- 장 소 : 국토연구원 강당
- 참석자
발표자 : 채미옥(선임연구위원), 송하승(연구원), 이용범(한국토지공사 박사), 오용준(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전문위원)
토론자 : 최봉문(목원대학교 교수), 이희연(서울대학교 교수), 엄정희(건설교통부 사무관), 유진성(KG엔지니어링 부사장)
- 주요내용
 - 토지적성평가제도의 적정성 제고방안
 - 토지적성평가를 기초로 한 관리지역 세분방안 제시
 - 토지적성평가DB의 활용도 제고 방안-도시기본계획과 토지적성평가제도의 연계성 제고 방안 제시

'지속 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토지적성평가 적용에 관한 연구', 중·한 토지정책연토회

- 일 시 : 2005. 10. 12
- 장 소 : 중국 절강대학교
- 참석자
발표자 및 토론자 : 채미옥(선임연구위원), 정희남(연구위원), 최혁재·김선희(연구위원), 오차방 원장·박인성·오희철 교수(중국 절강대학교 동남토지학원) 등
- 주요내용
 - 친환경적 국토관리를 위한 토지적성평가제도 내용과 운용현황

통계청 가구표본설계 사례 전문가 특강

- 일 시 : 2005. 12. 12, 14:30~16:00
- 장 소 : 3층 소회의실
- 강 사 : 윤연옥 과장(통계청)
- 주요내용
 - 통계청의 센서스 및 가구조사의 표본설계(표본규모결정, 표본추출방법)
 - 통계청 승인과 설문조사시의 유의사항

“효율적 산지보전 및 이용을 위한 산지관리제도의 개선방향”, 효율적 산지보전 및 이용을 위한 산지관리제도 개선방향 세미나

■ 일 시 : 2005. 12. 14

■ 장 소 : 국토연구원 강당

■ 참석자

발표자 : 채미옥(선임연구위원)

토론자 : 김창석(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박기남(산림청 과장), 장용동(헤럴드경제 부장), 안용태 (지엠아이골프디자인 사장) 등

■ 주요내용

- 산지관리제도의 문제점
- 산지관리전용허가제도의 개선방안, 친환경적 산지개발기준 등 산지관리제도 개선방안 제시

주거서비스 수준과 주거지표에 관한 국제세미나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ousing Service and Housing Indicators)

■ 일 시 : 2005. 12. 9, 13:30

■ 장 소 : 국토연구원 강당

■ 참석자

발표자 : 윤주현(선임연구위원), 박환용(경원대학교 교수), 김선웅(University of Wisconsin 교수), 이용만(한성대학교 교수), 조영하(Oxford Brooks University 박사), Jeroen P. Traudes(Amsterdam School of Real Estate), Norimichi Goishi(Tokyo Institute for Municipal Research), 전홍규(일본주거복지대학 박사)

토론자 : 박현주(주택도시연구원 원장), 김경환(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남희용(한국주택협회 실장), 손경환(토지·주택연구실장), 윤인숙(한국토지공사 수석연구원)

■ 발표주제

- Housing Service in Korea and Housing Policy Implications
- Housing Welfare Indicators for the Quality of Life in Korea
- Housing Service and Housing Indicators in the U.S.A.
- Dwellings and the Dutch: a Dynamic Duo?
- Housing Service in England: Appropriate and Affordable?
- On the Housing Service in Japan

05

c h a p t e r

GIS

1) 기본 · 정책연구

>> 개발가능지의 합리적 선정을 위한 토지형상기준 도입방안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Land Form Standards for the Rational Choice of Available Lands for Development

김정훈, 조춘만

■ 배경 및 목적

개발가능한 토지공급을 위해 토지의 규모와 형태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토지 규모의 경우 정책 결정으로 개발인구와 용적률 등이 정해지면 GIS분석 등으로 원하는 면적의 개발가능지를 쉽게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토지 형태의 경우 어떠한 형상이 최적인지를 결정하는 작업은 주변여건 및 제반 관계자의 입장에 따라 그 일반화가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가능지 분석 결과에 개발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부정형 형상들이 포함됨에 따라 이런 형상을 개발가능지에서 제척하는 데 작업자의 주관에 배제하고 체계적이고 계량적인 기준으로 제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 내용요약

구체적으로 첫째, 토지형상기준으로서 토지형상지표(Land Form Index: LFI)와 최소경계원지표(Related Circumscribing Circle Index: RCCI)를 정의하였다. 둘째, 기 개발된 택지개발지구 사례를 조사하여 토지형상지표와 최소경계원지표의 기준을 도출하였다. 셋째, 도출된 기준을 실제사례지역에 적용해보고 토지형상기준보다 낮은 형상들은 정형화과정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관리지역 세분화나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 등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수도권 택지개발(예정)지구 총 250개를 대상으로 토지형상기준을 도출하였다.

이를 근거로 경기도 남부 10개 시(안양, 군포, 의왕, 안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에 개발가능지 분석결과를 토지형상기준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적용 형상을 분류하였다. 또한 남해군과 화성시의 토지적성평가를 수행한 지역과 이미 완료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에 토지형상기준을 적용하여 활용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연구의 주요내용에 대한 연구의 방법은 먼저 국내외 개발가능지 분석관련 연구 및 사례를 문헌과 인터넷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둘째, 연구협의회를 통해 택지개발, 토지적성평가, 도시계획 등의 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였다. 셋째, 협동연구를 통해 개발가능지 정형화 방안에 대한 실증분석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주요결과와 평가

기존의 방식대로 GIS의 중첩분석을 통해 얻어진 개발가능지는 개발에 부적절한 소규모 형상, 점적으로 흩어져 있는 아메바 형상, 길쭉한 형상, 개미허리 형상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상을 한 일단의 토지들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부정형의 형상들을 제척하는 데 작업자의 주관에 아닌 자동화 알고리즘 개발을 통한 토지형상화 작업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계량적인 토지형상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개발비용의 최소화, 효율적인 개발수행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기존의 개발가능지 분석의 한계로 지적되어 온 부정형 형상 처리작업에 있어서의 작업자의 주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형상의 기준 정의에 있어서 토지형상지표(LFI)와 최소경계원지표(RCCI)를 도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계량적인 기준으로 부정형 형상들을 제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겠다.

또한 토지형상기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여 그 활용성을 높였다. 특히 도시관리계획상 관리지역 세분화시 토지형상의 활용방안과 개발제한구역 부분해제시 활용방안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LFI와 RCCI를 이용하여 낱장 지적도를 연속지적도로 만들 때 나타나는 불부합 문제로 야기되는 길쭉한 선형필지들을 도출하여 제거할 수 있으며 불일치한 필지들을 도출하여 지적 재정리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 남북교류증진을 위한 북한지리정보 구축방안연구

Assembling North Korea's Geographic Information to Promote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사공호상, 이상준, 김미정, 서기환

■ 배경 및 목적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부터 남북한은 경제, 사회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과거 물자를 주고받고, 사람이 왕래하던 수준에서 도로와 철도를 연결하고, 공단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등 물리적 개발을 수반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들어 남북한 간 경제협력 증진과 통일에 대비한 각종 정책과 계획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실효성 있는 기초자료가 절실히 부족한 실정이다. UN 등을 통해서 발표되는 일부 통계자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료는 추정 또는 추산 수준이며, 물리적인 개발에 필요한 지리정보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북한에 관한 정보의 부재는 남북한 간 교류협력을 확대하는데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실무적인 협상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또한 통일을 대비해서 수립하고 있는 각종 정책과 계획 그리고 연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북한지리정보 구축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인공위성영상자료를 이용하여 북한지리정보 구축방법을 정립하고, 북한지리정보 구축전략과 추진체계, 소요예산 등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 내용요약

남북한 간 교류협력이 증가하면서 북한지리정보 수

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비해, 활용 가능한 북한지리정보는 제작연도를 알 수 없는 1/50,000 축척의 종이지도와 책자 그리고 미국, 프랑스 등 국가에서 판매하고 있는 인공위성영상자료가 전부다.

뿐만 아니라, 지리정보를 구축하는 관점에서 북한지역은 다음과 같은 제약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항공 사진을 촬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인공위성 영상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둘째, 현지측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성영상을 기하보정할 때 필요한 지상기준점을 측정할 수 없다. 셋째, 현장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형지물의 속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북한지역의 지리정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상의 세 가지 제약점을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러한 제약을 인정하고 위성영상 획득 및 처리, 레이어 설계, 지리정보 추출, 구조화 편집 등 일련의 지리정보 구축과정을 직접 수행하여 문제점과 과제를 도출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북한지리정보를 실험 구축하였다.

사레지역은 북한의 개성시와 남북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성공단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302.5km²를 선정하였다. 본 실험연구에서는 SPOT-5 위성영상과 IKONOS 위성영상을 각각 사용하였다. 두 영상을 사용한 것은 획득이 용이하고 안정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영상의 특성과 기하보정 방법이 서로 달라 연구결과를 서로 비교·검토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실험연구는 사레지역 선정, 위성영상 획득 및 품질검사, 기하보정 및 입체영상 제작, 지리정

보 레이어 설계, 지리정보 추출, 정위치 편집, 구조화 편집, 위치정확도 검증 순으로 수행하였다.

SPOT-5 위성영상의 경우 일제 강점기 때 제작한 북한 삼각점을 지상기준점으로 사용하였다. 전문도화사가 위성영상을 입체시하여 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는 삼각점 30개를 찾아서 수차례의 번들조정을 통해 위치좌표를 측정하였다. 이에 비해 IKONOS 위성영상은 위치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레지역의 위성영상과 중복해서 촬영한 인접지역 영상을 Space Triangulation 기법으로 위성궤도정보(Rational Polynomial Coefficient)를 생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기하보정을 실시하였다.

기하보정을 실시한 후 결과에 대한 위치정확도를 검증하였다. 북한 사레지역에서 직접 검사점을 획득할 수 없으므로, 남한의 사레지역을 선정하여 북한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하보정을 실시하고 수치지형도 1/1,000(도시지역)과 1/5,000(비도시지역)에서 검사점 49점을 사용하여 위치정확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0년 이상의 도화경력이 있는 전문도화사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Socet Set S/W와 VrOne 도화모듈을 사용하여 지리정보를 추출하였다. 향후 북한지리정보 추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 레이어별로 지리정보 추출방법과 기준 그리고 예산산정을 위한 품셈을 작성하였다.

수치도화를 통해 지리정보를 구축한 후 정위치 편집과 구조화 편집을 실시하였다. 정위치편집은 인공위성 영상자료를 A0크기로 출력하여 수치도화결과와 비교하면서 수정하였다. 구조화 편집은 점형자료와 선형자료는 간단히 웨이프(Shape) 형태로 변환하였고, 면형자료는 위상구조를 갖는 커버리지(Coverage) 형태로 변환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북한지리정보를 이용하면, 손쉽게 토지이용도를 제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지구의 SOC 현황과 토지이용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잠재력 분석을 통하여 개발가능지를 분석할 수 있으

며, 토지이용계획도 수립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정책, 계획,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 주요결과와 평가

본 연구는 남북한 간 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북한지역의 지리정보 구축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연구를 통해서 얻은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적인 면에서 SPOT-5 위성영상과 IKONOS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1/25,000 북한지리정보를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SPOT-5 위성영상의 2.5m 공간해상도는 센서에서 직접 획득되지 않고 5m 위성영상을 가공하여 생산한 것이어서 지형지물을 묘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기본지리정보 수준의 레이어를 추출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리고 수치지형도처럼 대축적으로부터 일반화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1/25,000 축척으로 지리정보를 생산한 것도 큰 성과다. 이 과정에서도 화사와 연구진 간에 적지 않은 논쟁이 있었지만 수치지도와 지리정보 레이어의 차이를 이해하면서 원만하게 추진되었다. 또한, 연구의 결과로 SPOT-5 위성영상을 이용한 1/25,000의 북한지리정보 구축지침(안)과 북한지리정보 구축품셈(안)을 제시하여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정책적인 측면에서 북한지리정보 구축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제기하고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실험연구를 통하여 북한지리정보 구축을 위한 추진체계, 지리정보의 양과 소요예산, 소요기간, 활용 등 정책적 판단요소를 제공하였다.

>> 방재국토 구축을 위한 GIS 활용방안연구(I): 방재GIS 데이터의 통합 활용방안

GIS Application Methods for National Territorial Disaster Prevention(I)

박종택, 이종렬, 정문섭, 박태선, 심우배

■ 배경 및 목적

재난은 사전에 그 발생가능성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고, 한 가지 재난이 여러 가지 피해를 동시에 유발하는 것이 특징이다. 더구나 일단 재난이 발생되면, 그 피해범위는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발생되기 때문에 재난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여 복구한다는 목표를 아래 방재국토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방재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안전관리정보체계 구축 등 방재관련 정보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리정보 기반의 방재업무 추진이 미흡한 실정으로 재난의 예측단계에서 대응 및 복구단계에 지리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재국토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방재분야에 GIS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1차연도에는 업무적 공통성과 GIS의 활용성이 높은 주요 재난을 대상으로 방재GIS 데이터를 통합·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차연도에는 GIS 및 첨단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지능형 도시방재정보체계 구축모형을 제시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첨단도시정보화 구축에 필요한 방재정보화 고도화 추진에 기여할 예정이다.

■ 내용요약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재난을 자연 재해, 인적 재난, 사회적 재난으로 대별하고 있다. 이러한 재

난은 크게 예방·대비단계, 대응단계, 복구단계로 구분하여 대처하고 있다. 국가에서는 재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제반환경과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방재국토로 정의하고 방재국토를 구축함에 있어 GIS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것을 방재GIS라는 용어로 정의하였다. 방재GIS는 재난의 이력에서부터 위험도 분석, 피해규모 파악, 대피·구호·구조 등 방재단계별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첨단기술의 발달로 인해 그 활용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방재GIS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 관련 조직, 방재정보시스템, 방재DB 구축 및 활용 등 네 가지 측면 등을 고찰하였다. 첫째, 방재 및 GIS관련 법규로는 7~8가지가 있다. 이들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GIS 데이터의 구축이 필수적이지만 방재GIS 데이터 구축을 강제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또한, 기 구축된 방재지도나 방재정보시스템도 일반에게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방재관련 조직으로는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와 소방방재청, 산림청 등 관련 기관, 시도·시군구가 있다. 그러나 재난별 시설별로 관리주체가 다르고, 기관 간의 연계성이나 전문성이 낮은 실정이다. 셋째, 방재정보시스템도 재난관리 주체별로 다양하게 구축되고 있으나 정보전달체계에 중점을 두고 있어 재해발생 가능성이나 예방관련 데이터의 활용은 미흡한 실정이다. 넷째, 방재DB 구축 및 활용에 있어서도 방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GIS 데이터의 구축이나 활용은 착수단계에 머물러 있다. 넷

제, 방재GIS 데이터의 통합 활용을 위하여 방재GIS 데이터 활용실태를 분석하였다. 방재업무도 상당 부분 중복되는 것이 많고, GIS의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업무들도 많기 때문에 GIS데이터의 통합적 활용성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홍수, 지진, 폭설, 해일 등 4개의 자연재해와 화재, 산불 등 2개의 인적 재난은 업무적 공통성과 GIS의 활용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방재업무의 공통성과 GIS 활용가능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방재GIS 데이터의 활용성을 분석하였다. 우선, GIS를 활용할 수 있는 업무들을 중심으로 방재GIS 활용에 필요한 데이터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때, 재난의 공간적 범위를 기준으로 광역적 정보와 국지적 정보, 재난의 발생 상태를 기준으로 정적 정보와 동적 정보로 구분하여 재난 발생단계별로 필요한 데이터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재난 관리단계별로 방재GIS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정보 항목(data layer)들을 선정하고, 각 정보항목들의 생산 여부, 관리기관, 취득방법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방재GIS의 기본정보를 공통적인 속성정보와 도형정보로 구분하였으며, 도형정보는 수치지형도, 주제도, 수치지적도, 방재GIS주제도, 기본지리정보, 방재상황정보 등으로 세분하였다.

방재GIS 데이터의 통합 활용방안에서는 다양한 방재GIS 데이터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제시하였다. 우선, 통합관리의 개념과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기본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을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단기적으로는 방재GIS와 관련된 기본적인 속성정보와 도형정보들을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공통성이 큰 정보들을 중심으로 각 기관별로 표준화해 나아가고, 개별 정보들은 재난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축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중기적으로는 방재GIS의 기반을 우선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방재GIS의 기반으로는 방재데이터의 유통

체계, 방재GIS관련 기술의 개발, 방재GIS의 데이터 표준 마련, 관련 법 제도의 정비 보완, 방재GIS관련 협력 체계, 방재GIS 기법개발 등을 들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재난별 방재GIS 시스템을 구축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들을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이라는 복합 방재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체계적으로 고도화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주요결과와 평가

이 연구는 방재분야에서 필요한 GIS활용방안을 다루었으며 특히 GIS기반의 방재국토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시도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방재국토 구축을 위한 GIS의 활용분야 및 활용기법뿐만 아니라 GIS데이터가 어디에서 어떻게 생산·관리되고 있으며, 상이한 기관에서 생산된 GIS데이터를 개별 방재주체가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유통 및 표준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방안을 다루었다. 또한 방재국토 구축이란 측면에서 다양한 분야의 재난에 대하여 각기 다른 방재 주체가 GIS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및 모델을 제안하고 있어 개별분야의 방재GIS 정보화 대책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의 방재기본계획 또는 방재정보화 추진계획에서 GIS활용을 위한 기본 틀로서 활용될 수 있다.

현재 추진 중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GIS기반의 방재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그동안 종합적 차원의 방재GIS 구축방안에 대한 세부사항이 검토되지 못한 채 추진되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재GIS 구축방안을 기초로 하여 현재 소방과 일부 홍수방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GIS는 보다 다양한 방재분야로 그 활용 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방재국토의 기반이 공고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평가된다.

>> 시공간통합 국토시물레이션모형 개발 연구(I): 국토정책시물레이션모형 개발방법론

Integrated Spatio-temporal Simulation Model for National Territorial Policy(I):
Focused on the Model Building Methodology

최병남, 김영표, 임은선, 한선희, 김동한

■ 배경 및 목적

국토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담은 유적지며, 미래를 그려가는 청사진이다. 국토공간은 개발과 제한이라는 잣대를 저울질하며, 바람직한 모습을 만들기 위해 미래지향적이며 지속가능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국토정책 일환으로 수행되는 대규모 사업들은 대부분 공간을 둘러싼 개발과 보존의 양면성을 가지기 때문에 정책의 구상과 계획단계에서부터 정부와 이해 관계자, 전문가가 모두 참여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이러한 갈등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토정책의 수립과정에서는 정책의 파급효과와 공간구조의 변화를 예측하는 과학적 방법론이 도입되지 못하였다. 대부분 계량모형에 의존하여 경제·사회·환경 등 비공간적 측면에서 시물레이션하였으나, 국토정책의 동태성과 복잡성, 공간과의 연계성 등을 통합하여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기존에 적용되었던 계량분석 위주의 정태적이고 단편적인 시물레이션 방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동태적이면서 공간의 복잡성을 포함한 시공간통합 시물레이션 모형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연구는 2년에 걸친 다년도 과제로 1차 연도(2005)의 목적은 시공간통합 국토정책시물레이션 모형 개발을 위한 개발방법론을 정립하는 것이다.

■ 내용요약

국토공간의 구조는 쉽게 고치거나 변경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토정책을 수립하는 단계

에서 향후 정책의 시행에 대한 파급효과와 공간에 어떻게 투영될 것인지를 사전에 검토해야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 연구는 국토정책이 포함하고 있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시물레이션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여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 데 의의를 가진다.

이 연구에서는 공간정책에 의한 시공간적 국토변화를 예측하여 위하여 시스템다이나믹스(SD)기법과 GIS 기법을 연계하는 방법론을 모색하였다. SD는 연구하고자 하는 특정변수가 인과관계에 의해 시간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동태적으로 변화해 나가는가에 기본적인 관심을 두고 있다. 일회적인 사건이나 모델 파라미터의 정확한 측정보다는 산업체 고용의 증감, 도시의 변형과 쇠퇴, 의료보험 비용의 상승 등과 같은 연구대상 변수가 시간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관심을 둔다. 또한 공간현상을 나타내는 각종 공간정보에 대한 시물레이션은 GIS의 공간분석기법을 이용한다. GIS기반 공간분석기법은 공간데이터베이스 내에 들어있는 공간정보와 속성정보를 이용하여 현실세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가치 높은 정보를 생성한다. 또한 공간패턴이나 공간현상에 내재되어 있는 일반성과 법칙 등을 발견하는 과학적인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SD와 GIS를 접목하여 국토정책을 시물레이션 하는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국토정책의 대상을 구분하였다. 국토정책은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함께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표 하에 정책의 대상·기간·공간범위·효과·정책수단 등에 따라서 거시적 또는 미시적 정책으로 특징을 구분할 수 있다. 거시적 국토정책의 대상은 전국적 또는 여러 지역을 포함하며 지역상호 간 관계설정을 중시하는 지역 간 정책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정책의 적용기간이 장기적이며 광역적 또는 전국적인 공간범위를 가진다. 거시적 정책에서는 정책수행에 따른 전국적인 또는 지역 간 형평성을 목표로 각종 공간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파급효과를 측정하는 모형이 필요하다. 미시적 국토정책의 대상은 특정한 지역내부의 문제해결을 지중하는 지역 내 정책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정책의 적용기간이 비교적 단기적이며 소지역 또는 생활권의 공간범위를 가진다. 미시적 정책에서는 정책수행에 따른 지역 내 효율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각종 공간제어방식 변화에 따른 국지적인 공간변화를 예측하는 모형이 필요하다.

시물레이션 모형은 적용대상에 따라 SD와 GIS가 연계되는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SD와 GIS의 연계방법은 결합 정도에 따라서 약결합(loosely-coupled), 강결합(tightly-coupled), 완전통합(fully-integrated)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결합방식은 모형의 구조와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거시모형에서는 전국적 파급효과 측정이 주된 관심대상으로 넓은 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파급효과를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공간단위가 비교적 크고,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들은 통계조사에 의해서 대부분 입수될 수 있다. 때문에 SD와 GIS를 약결합하여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적합하다. 거시모형에서는 SD모형을 통해 국토의 각 하부시스템의 변화 상태를 예측하고, GIS 모형을 통해 국토모습이 어떤 경향으로 변모하는지를 시물레이션 할 수 있다. 미시모형에서는 소지역의 토지이용변화 예측이 주요 관심의 대상이며, 좁은 지역을 대상으로 중단기적으로 공간변화를 예측하기 때문에 공간단위가 작고 통계조사에 의해 제공되는 자료에 한계가 많다. 이럴 경우

시·군·구 또는 읍·면·동으로 입수된 자료를 더 세분하여 공간단위에 할당해야 하는 복잡한 작업이 필요하게 되며, GIS의 공간분석기법을 활용하면 공간단위를 세분화하고 자료를 배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SD와 GIS를 강결합하여 공간변화를 예측하는 것이 용이하다.

■ 주요결과와 평가

이 연구에서는 국토정책을 시공간통합 관점에서 시물레이션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접근방법론을 정립하였다. 국토정책 대상의 정의, 국토정책이 적용되는 공간범위와 분석단위의 크기, 사용되는 변수의 특성에 따라 시공간통합 방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국토정책을 시물레이션 하는 방법은 크게 거시모형과 미시모형으로 구분하여 모형의 개념적 틀을 정립하였고 사례연구를 통해 모형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제시하였다. 사례적용은 도시의 토지이용확산과 주거환경계획관련 문제를 대상으로 간단한 시물레이션 모형을 구축하여 적용하였다.

모형을 거시적으로 또는 미시적으로 접근하여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모형의 구조다. 모형 안에는 국토정책의 파급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이를 그대로 구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또한 모형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모형이라도 데이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데이터가 정확하게 투입되어야 시물레이션 결과도 신뢰할 수 있다. 그러나 활용 가능한 데이터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 연구자는 데이터의 한계와 오류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이는 모형을 정확하게 구현하기 위한 또 다른 노력이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한편으로는 어떤 모형이든 그것이 실제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문제의 특성에 맞게 보완되고 피드백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경직되어 있는 모형은 그만큼 활

용성이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국토정책의 사안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가능하도록 컴포넌트식의 모형집합을 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향후에는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되는 모형이 국토정책 의사결정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모형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기간: 2005. 1. 1~2005. 12. 31
서지사항: 177면, 국토연 2005-46

>> 時空自在의 세상을 향한 사이버국토 창조방안(II): 時空自在도시 구현방안

Strategies for Creating Cyber National Territory toward the Ubiquitous World(II):
Strategies for Building Ubiquitous City

최병남, 김영표, 김동한, 임은선, 한선희

■ 배경 및 목적

현재의 정보통신기술은 時空自在세상을 추구하고 발전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도래할 時空自在세상을 대비하여 지금보다 더 살기 좋고 편리하며 안전한 새로운 모습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는 1차연도(2004) 연구인 「時空自在의 세상을 향한 사이버국토 창조방안(I): 사이버국토 구축전략과 추진방안」에 이은 2차 연구로서 時空自在 도시 구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주요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時空自在 도시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정립하여 時空自在 도시 구현을 위한 접근방법을 제시한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時空自在 도시에 대한 개념은 주장하는 전문가나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다. 이 연구에서는 관련 사례를 검토하여 종합적인 차원에서 時空自在 도시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정립한다. 둘째, 時空自在 도시 관련 실험연구, 구상 및 계획, 추진사례 등을 검토하여 현재 時空自在 도시 건설이 어느 단계까지 구현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조금 더 구체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時空自在 도시에서 구현될 서비스를 중심으로 실험구축을 병행한다. 셋째, 時空自在 도시의 구현을 위한 추진방안을 제시한다. 기존 도시와 신도시를 구별하여 時空自在 도시의 구현 방향을 제시하고, 時空自在 도시 구현을 위한 기술전략과 제도 정비방안을 모색한다.

■ 내용요약

최근 정보통신기술 패러다임은 時空自在 컴퓨팅을 지향하여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센서, 전자식별자(RFID), 정보가전기기 등이 다양한 분야에서 상용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時空自在 컴퓨팅의 발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최소화한 時空自在 세상의 출현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時空自在 기술의 발달은 기존 도시 공간에 대한 개념을 재해석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도시계획의 흐름도 변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時空自在 도시는 기존의 도시공간에 최첨단 정보기술이 적용되어, 기존의 도시공간이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사이버화·지능화·네트워크화를 통해, 사람과 사

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사이에 시공간을 넘어서 자유자재로 정보를 교류하고, 서로 보완·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공간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 연구는 時空自在 도시를 구현하는 정보통신 기술적 관점에서 도시의 지능화, 도시의 사이버화, 도시의 네트워크화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도시의 지능화란 현실도시를 구성하는 객체들의 실시간 상태 정보를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사이에 통신을 하고 스스로 지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요 장소와 시설물에 전자 칩이나 센서를 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의 사이버화란 지상과 지하를 포함한 도시전체의 다양한 구성요소를 현실도시와 유사하게 입체적으로 디지털화하여 컴퓨터 속에 저장·관리하고 논리적·물리적으로 연계·통합하여 정보를 처리 및 서비스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도시의 네트워크화란 사이버화 된 도시와 지능화된 도시의 논리적 물리적 연계통합을 통하여 時空自在 도시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정보시스템을 연결하는 다양한 유형의 유무선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時空自在 도시 구축모델 및 구현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실험적으로 時空自在 환경에서 도시의 사이버화·지능화·네트워크화를 적용해 보는 실험구축을 하였다. 실험구축의 사례지역은 1차 연도 사례지역이었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 지역이며, 주변의 가로수, 가로등, 교통표지판 등의 도시시설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구축을 통해 時空自在 도시가 지향하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사이에 의사나 정보를 효율적으로 송수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며, 사람과 사물이 정보를 공유하는 환경을 일부 구현하였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2005년 현재 적용 가능한 기술과 연구기간의 제약 등의 한계에 따라 時空自在 환경의 일부만을 구현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노정하였다.

도시는 변화하고 성장하는 동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단편적 차원에서 개념화하기란 쉽지 않다. 時空自在 도시도 마찬가지이나, 이 연구에서는 時空自在

在 기술을 적용할 대상을 구분하여 도시의 구성요소를 사람, 자연, 재화, 시설, 활동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각종 첨단정보기술을 도시공간에 도입·적용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그 대상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도시공간에 거주하는 주민을 의미하며, 자연은 토지, 수자원, 대기, 동식물 등으로 이루어지며, 재화는 의복, 제품 등과 같은 이동성 있는 소비재, 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등과 같은 기반시설과 주택, 학교, 병원 등과 같은 이용시설로 이루어진다. 활동은 거주, 생산, 여가, 교통으로 구성되며, 사람은 도시공간에서 거주하고 활동하는 모든 도시민을 의미한다. 時空自在 도시에서는 각 구성요소의 특성에 따라 사이버화, 지능화, 네트워크화를 위해 각각 다른 기술들이 적용되며, 새로운 도시공간창출을 위한 역할도 다르다.

時空自在 도시는 기존 도시와는 다른 개념을 기반으로 조성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공간의 구성요소인 사람, 재화, 시설, 자연, 활동의 세부 구성요소를 지능화, 사이버화, 네트워크화 하는 데 기존의 법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도시계획체계를 고려한 時空自在형 정보화계획체계를 제안하였다. 도시를 時空自在화하기 위해 계획적 관점과 기술적 관점을 모두 고려한 새로운 정보화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사회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재정비하는 것과 함께 관련되어 있는 기존의 정보화사업들과의 연계방안도 모색하였다.

■ 주요결과와 평가

곧 다가올 時空自在 세상에 요구되는 새로운 도시의 비전은 時空自在 도시의 모습이며, 이를 실제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관점에서 현실도시의 지능화와 사이버화, 네트워크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는 도시를 구성할 대상을 사람, 재화, 시설, 자연, 활동으로 구분하여 적용할 기술과 구현방안을 제시하였다. 신도시

05

를 건설하거나 기존도시를 재정비하는 체계를 분석한 결과, 도시건설의 기본이 되는 기존의 도시계획체계는 정보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계획체제로 재정비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도시의 경우, 이미 설치된 도시시설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점진적 時空自在화를, 신도시의 경우 도시기본구상단계부터 전면적인 時空自在화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연구를 통해 정립된 時空自在 도시의 개념 및 구성요소는 향후 국가 차원에서 대비해야 할 時空自在 도시 구현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제공할 것이며, 時空自在 도시 구현방안과 기술전략, 도시계획체계 정비방안은 다가오는 時空自在 시대에 필요한 국가정책의 초석이 될 것이다. 우리 정부의 당면 과제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소도시를 육성하고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새로운 정보화도시를 계획할 때, 이 연구에서 제시된 時空自在 도시 구현방안이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계획 수립, 지속가능한 도시 관리 등 관련제도를 정비하는 데 기본 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현재 u-City건설이라는 이름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자칫 디지털 난개발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전략과 국가적 지침 마련을 위한 토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지식정보화시대의 디지털통합국토 구상 연구: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Strategies for Digital Networked Territory toward Ubiquitous World:
For the Revision of the 4th Comprehensive National Territorial Plan

정문섭, 김정훈, 한선희

■ 배경 및 목적

국토정보화 추진계획은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국토정보서비스의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국토정보화 추진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부문별 정보화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국토계획 부문 간 연계가 취약한 상태다. 아울러 국토정보의 기반이 미비하며, 국토정보의 활용도가 미흡하다. 이러한 문제점은 국토계획 부문 간의 불균형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국토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에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을 통해 현실국토의 단순하고 개별적인 국토정보화의 추진이 아닌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국토정보화의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첨단정보통신기술 및 국토정보화 수요변화에 부응하여 제4차 국토종합계획 중 국토정보화부문에 대한 수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먼저 기존의 국토정보화 추진목표인 '디지털국토'를 보다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디지털통합국토' 구축으로 목표를 조정하였다. '디지털통합국토'란 현실국토를 전산화하고, 국토를 지능화하며, 사이버국토를 구축하여 공공부문의 행정생산성을 혁신하고, 기업부문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민간부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디지털복지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통합국토 구현을 위해 수행하는 현실국토의 전산화, 국토의 지능화 및 사이버국토 구축을 통해 효율적으로 국토공간을 관리하고, 국민편익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내용요약

국토정보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 그리고 남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영해를 대상으로 한 물리적 특성, 제반시설물, 관련 정책 및 제도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하며, 사이버국토상의 논리적 국토공간 정보까지를 포함한다. 현재 행정정보화, 환경정보화, 산업정보화 등 다양한 국토정보화 관련 사업이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의 중앙부처에서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국토관련 정보화사업은 토지, 주택건축, SOC, 수자원, 환경, 농림, 해양수산, 지하국토 등의 분야에서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토정보화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됨에도 불구하고 폭넓은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첫째, 국토정보 추진기반이 취약하다. 즉 국토공간정보 구축에 필요한 종합적인 법제도적인 장치,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등 국토공간 정보유통체계, 관련 기술개발의 추진 등이 초기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디지털국토 구축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둘째, 부문별 정보화격차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정보화사업 현황조사에 따르면 주택·건축, 농림, 지하국토 등의 부문은 부문 내 개별사업 간의 연계가 미흡한 실정이고 특정사업의 경우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 셋째, 국토정보 부문 간 연계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국토정보 부문 간 연계성 부족은 부문별 추진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공통부문 또는 관련 부문이 동시에 발전되는 공진화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 넷째, 국토정보의 활용도가 미진하다. 공식적

으로 1995년 국가GIS사업 추진 이후로 국가기본도, 주제도 등 다양한 국토공간정보가 구축되었으나 국가 및 도시차원의 일부업무의 전산화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디지털통합국토’란 현실국토의 전산화와 지능화를 추진하고, 사이버국토를 창조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공자재의 국토 및 도시와 가정을 구축하는 것이다. 디지털통합국토를 구현하기 위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혁신을 촉진하는 국토정보화 기반강화, 국토관리와 국민편익을 위한 디지털국토 구축, 디지털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時空自在型 국토 구현 등을 골자로 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두 번째로, 국토관리와 국민편익을 위한 디지털국토를 구축하기 위해 현실국토의 전산화와 국토의 지능화를 통한 국토관리 혁신을 도모하고, 새로운 국토를 창조하는 사이버국토 구축 등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먼저 현실국토의 전산화를 이룩하기 위해 토지, 주택 건축, SOC, 수자원, 환경, 농림, 해양수산, 지하국토 등 8대 부문의 국토정보를 구축하고, 북한 및 영해의 국토정보를 구축한다. 또한 국토의 지능화를 위해 주요 지형지물에 전자식별자를 부여하고, 지형지물정보들 간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국토환경과 도시공간을 구성하는 주요 사물의 지능화를 추진한다. 현실국토의 주요 장소와 시설물에 전자식별자를 부착함으로써 현실국토를 구성하는 객체들의 위치, 고도, 관리기관, 실시간 상태 정보를 센서 및 통신기술을 통해 현실국토의 관리 및 계획에 필요한 살아 있는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사이버국토를 구축하기 위한 모든 디지털활동과 콘텐츠를 수용하는 사이버국토 구축기반을 조성하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이버국토 및 도시를 구축하며, 동북아의 상생적 발전을 추구하는 사이버 동북아를 구축한다.

세 번째로 디지털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時空自在 국

토를 구현하기 위해 국토정보화 사업의 연계 통합, 국토정보의 활용고도화, 時空自在 국토의 구축 등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먼저 다양한 기관 및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국토정보화사업을 연계 통합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대하고, 국토정보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토정보화사업의 연계 통합을 추진한다.

■ 주요결과와 평가

이 연구의 특징은 첫째,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현실국토와 가상 국토에 대한 정보화 추진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디지털통합국토 구현을 위해 국토정보화 기반강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보통신 기반 확충, 관련 법제도 정비, 국토정보화 기술 및 산업육성에 대한 추진계획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현실국토의 전산화, 국토의 지능화, 사이버국토 구축을 통해 효율적으로 국토공간을 관리하고, 국민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틀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첫째, 디지털통합국토의 내용적 범위가 너무 넓어 깊이 있는 현실국토, 지능국토, 사이버국토와 관련된 세부추진계획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둘째, 첨단정보기술의 실질적인 활용이 없어 U-국토, U-도시, U-홈 등의 실질적인 모형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향후 추진과제는 디지털통합국토 구성요소에 대한 세부추진계획과 모형개발이 필요하다. 즉 현실국토의 전산화를 위하여 보다 효율적인 국토정보 생산과 유통을 통한 국토정보 활용고도화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국토의 지능화와 가상공간화 작업은 총괄적인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통하여 국가차원, 도시차원 등 사이버공간 창조에 공공과 민간의 참여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 등에 관한 후속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2) 수시 및 수탁연구

>> 2004년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ing 2004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Clearing House

신동빈, 김미정, 김동한, 정진석, 박시영

■ 배경 및 목적

제2차 국가GIS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연차별로 추진 중인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구축사업을 통해 다양한 지리정보를 효율적으로 접근·획득·활용할 수 있는 전국적인 규모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까지 수행된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는 지리정보의 공공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지리정보유통의 물리적 확산과 제도적 기반을 구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그러나 향후 국가지리정보유통망이 공공 및 민간 지리정보의 유통, 유관 시스템 간의 연계 등 통합적인 유통시스템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운영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구축·운영된 국내 지리정보유통 현황 및 환경을 종합적으로 조사 및 분석하여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의 부문별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해결 방안을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내용요약

각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권 「지리정보유통체계 구축·운영방안 연구」에서는 지리정보유통의 여건변화 및 운영현황 분석을 통해 국가지리정보유통망을 지리정보통합포털로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파악하여 2005년도에 수행될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구축 및 운영계획을 제시하였다.

제2권 「지리정보유통 관련제도 개선방안 연구」에서는 지리정보의 활용도 증가로 관련제도 개선이 요구됨

에 따라 지리정보 메타데이터 표준개선안, 지리정보유통망 운영 세부지침 및 지리정보 품질기준 등을 수립하여 지리정보유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산하였다.

제3권 「지리정보유통 통합포털 구축방안 연구」에서는 기 구축된 국가지리정보유통망을 기반으로 각종 지리정보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GIS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지리정보통합포털 구축방안을 수립하였다. 이를 통해 분산시스템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전제로 하여 중장기적으로 확장 가능한 시스템 아키텍처와 웹 포털 기능의 기본모형을 설계하고, 지리정보통합포털 홍보를 위한 지리정보유통 웹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기간: 2004. 6. 3~2005. 3. 31
서지사항: 591면, 4권
발주기관: 간성교통부

>> 2005년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장기 발전방안 연구

Development Strategies for 2005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Clearing House

신동빈, 김동한, 정진석, 박시영

■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그동안 추진된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구축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고도화된 지리정보활용 환경 구축을 위한 장기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정책적·기술적·법제도적 측면을 반영하여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장기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을 구상하고자 한다.

■ 내용요약

연구의 주요내용은 첫째,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운영결과 세부분석을 통해 콘텐츠, 기능, 관리의 측면에서 사용자 만족도를 조사하고 도출된 결과를 기반으로 지리정보유통망 평가를 수행하였다. 둘째, 공공과 민간 부문의 지리정보유통현황 및 수요자 분석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지리정보유통망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였다. 셋째, 다양한 지리정보가 효율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도입이 필요한 기술적 요소를 도출하고 도입 방안을 수립하였다. 넷째, 지리정보유통망 운영현황, 평가, 수요분석 및 예측, 기술요소 분석 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국가지리정보유통망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로드맵을 도출하였다.

>> 2005년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 기반연구

A Study on Lan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2005

김미정, 이종열, 김동한, 이민파, 채명기, 권창범

■ 배경 및 목적

토지관련 민원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토지 행정업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합리적인 토지 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행 중인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반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1998년 시범사업부터 현재까지 합리적인 사업추진방안, 응용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관련 기술개발, 토지정보의 유통 및 활용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기반연구가 실시되었다.

■ 내용요약

2005년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 기반연구에서는 현재까지 구축된 토지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건교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토지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연구를 주로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5년에는 토지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부동산시장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방안 연구와 토지정보 활용성 제고를 위한 3차원 위성영상정보 구축방안을 연구하였다.

첫째, 토지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부동산시장 상시 모니터링체계 구축방안 연구에서는 토지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시의적절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를 위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의 한계와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토지종합정보망 등 관련 시스템에서 필요한 분석항목을

도출하고, 공간 및 통계기법과 시계열적 분석이 혼합된 공간분석방법을 도출하여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안된 구축방안을 통하여 실제로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시스템을 구현하고 이를 운영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토지정보 활용성 제고를 위한 3차원 위성영상정보 구축방안에서는 토지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공간정책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위성영상정보 특히, 3차원 위성영상정보의 활용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토지데이터베이스의 기반이 되는 필지단위별 분석을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의 위성영상 자료관리 개념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하여 위성영상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개 필지의 현재 토지이용 상태를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를 활용하여 토지이용 관련정보 제공, 지형지물 변화탐지, 필지별 지적관리, 건축물관리, 공시지가관련 기능 및 의사결정 지원기능을 가진 시범시스템을 구축하여 토지데이터베이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기간: 2005. 4. 12~2005. 12. 31
서지사항: 550면
발주기관: 건설교통부

>> 고해상도 인공위성 영상을 이용한 객체지향적 토지이용/피복분류방법 연구

Development of Object-oriented Land Use/Cover Classification Method in High Spatial Resolution Satellite Images

이종열, 박종택, 황승미, 김보영

■ 배경 및 목적

2005년 말로 예정된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2호의 발사 이후에는 다양한 공간정보 활용 분야에서 실질적인 위성화상 정보의 적용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고해상도라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원격탐사 분야 중 가장 활용범위가 많고 활용효과가 큰 지상의 각 분야에서 요구되는 특성화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활용기술 개발도 병행하여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토관리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기반기술 및 활용기술 개발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토지행정에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국토의 토지이용/피복 현황을 분석할 수 있는 생산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는 국토의 관리 및 관련 계획에서 중요한 정보인 국토의 토지이용/피복 현황을 고해상도 영상자료로부터 추출하여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필지별 등 토지행정에서 사용이 가능한 단위로 토지이용/피복 현황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 정보는 난개발, 토지적성평가, 불법적 토지형질 변경, 공시지가조사 결과 검증 및 도시 확산 등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데 필요한 기본정보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내용요약

본 연구는 고해상도의 인공위성 아리랑 2호의 수집자료 분석에 적합한 영상분석방법의 개발에 연구를 집중하였다. 첫 단계에서는 1미터 Panchromatic 영상과

4미터 Multispectral 영상을 융합하여 1미터 Pan-sharpened 영상을 개발하는 방법, 1미터 고해상도에서 판별 가능한 물체의 경계를 정확하게 강화하고 추출하는 방법과 고해상도 영상분석에 중요하게 사용될 물체단위의 분석에 대비한 초기단계로서 세그먼트 단위의 분석을 위한 GIS의 영상분할단위 개념 도입으로 세그먼트 간 위상관계 설정 방법 등의 개발이 이루어졌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물체를 인식하기 위한 영상분할단위 영역통합 방법이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되었으며, 동일물체가 서로 다른 사면을 가지고 있을 경우 HSDC 방법을 이용하여 동일물체의 서로 다른 사면의 분광특성정보정방법, 영상 내 물체의 경계를 래스터데이터에서 벡터의 개념으로 다룸으로써 영상분석의 혁신적인 방법 도입, 물체경계를 단순한 직선이 아니라 길이, 방향, 굴곡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개발 등이 수행되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러한 방법들을 종합하여 객체지향적 영상분석방법을 기반으로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토지행정에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영상분할단위 및 필지별 토지이용/피복 현황 생산방법, 이를 GIS와 연계하여 국토 관리 및 이용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생산 방법, 이를 바탕으로 필지별 및 지역의 토지이용/피복 현황도를 작성하는 방법과 이 결과를 토지행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활용시스템을 제시하였다.

연구기간: 2004. 11. 18~2005. 9. 17
서지사항: 237면
발주기관: 과학기술부

>> 국가GIS 전문인력 양성사업(GIS온라인교육 및 콘텐츠 개발)

National Project for GIS Education

사공호상, 한선희, 박진형

본 연구는 국가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중등학교 GIS 교과과정을 효과적으로 교육하고, 생활GIS 확산 등을 위하여 국가차원의 GIS 교육체계를 구축·실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아울러 인터넷을 이용한 GIS온라인교육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효과적으로 GIS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천후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주요내용은 GIS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GIS 교과목 중등학교 교사, GIS 산업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GIS 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온라인 GIS 교육 시스템(www.e-gis.or.kr)을 운영하면서 동영상 강좌 등 GIS 교육용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다.

연구기간: 2005. 6.~2006. 3. 2
발주기관: 건설교통부 국토정보기획팀

>> 국토관련 정보체계의 연계·활용방안 연구

National Territorial Planning Information System Development Strategy

이종열, 박종택, 민숙주

본 연구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와 국토계획 및 정책 수립의 지원을 위하여 국토기본법에서 규정한 국토정보체계의 구축·활용·유지관리 방안을 강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나아가 기존의 다양한 국토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고 활용함으로써 국토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내용은 국토기본법의 각종 국토계획에 필요한 국토정보와 국토정보체계의 개념을 정립하고 정

의된 국토정보의 정보화 현황과 국토정보 여건변화 및 수요를 조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토정보체계의 기본구상을 제시하는 것, 그리고 기본 구상 하에서 실제 국토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법 등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기간: 2005. 9. 5~2006. 6. 3
발주기관: 국토지리정보원

>>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계획 수립연구

Establishing Plan for 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

사공호상, 민숙주

■ 배경 및 목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업무는 계획의 수립, 결정·고시, 각종 개발사업 계획수립, 인허가 사항에 대한 검토 등 다양할 뿐 아니라 매우 복잡하다. 업무가 복잡한 만큼 토지이용, 교통, 인구, 주택 등 각 분야의 자료가 생성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어려워 자료가 중복 구축되는 등 예산 낭비가 초래되어 왔다. 또한 대부분의 업무가 수작업으로 처리되어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대국민서비스의 질이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8조에서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법 시행령 제131조에서는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및 축진을 위해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연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기본정책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내용요약

본 연구에서는 첫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대한 개념의 정의와 국토정보체계의 위상, 범위 등 제시, 둘째, 국내 정보화사업 및 GIS 사업의 추진현황과 기술동향 조사·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셋째, 국토이용정보체계 관련 업무 분석, 자료 분석, 정보화 수요조사 등을 통한 정보화 대상도출, 넷째, 국토이용정보체계 관

련 법제도 분석, 다섯째,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의 기초와 국토이용정보체계 추진전략, 구축방안 및 실천적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 시점에서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의 주요 목표를 업무전산화로 설정하였으며, 계획수립 및 의사결정 지원 기능은 국토이용정보체계의 발전방안으로 제시하였다.

향후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성공적 구축과 운영을 위한 정책건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토이용정보체계 업무범위와 특성에 적합한 국토이용정보체계의 명칭변경이 필요하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국토이용정보체계 근거조항이 삭제되었으며, 새로이 관련 조항 신설 시 명칭변경, 둘째, 전국단위의 표준DB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지침 및 표준 제공, 셋째, 국토정보체계 유관시스템 및 유관부서 연계를 위한 제도정비, 넷째, 지자체 정보화수준 및 업무담당자의 수행능력을 고려한 점진적 기능 고도화 등이다.

연구기간: 2004. 12. 24~2005. 11. 23
 서지사항: 233면
 발주기관: 한국토지공사, 건설교통부

>> 수도권 개발수요 및 가용지 분석을 통한 효율적 토지수급방안 연구

Study on Effective Land Supply through the Analysis on the Development Demand in the Capital Region and Developable Land

사공호상, 김정훈, 채명기, 서기환, 박진형, 천혜영

■ 배경 및 목적

참여정부는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함께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방침을 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수도권의 발전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동안 일관되게 추진되어 온 수도권 억제시책에서 수도권의 잠재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적 관리수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발전방안이 잘 조화될 수 있는 계획 및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정확한 토지소요량 판단, 토지이용현황, 가용지자원 등 충실한 기초자료를 근거로 정책대안들을 발굴해야 한다.

이 연구는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도권의 개발가능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수도권의 토지개발소요량 판단, 토지이용현황, 도시적 용도의 개발가능지 조사·분석을 통해 토지수급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내용요약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의 도시적 용도의 토지소요량을 판단하고, 토지이용 및 토지이용규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개발가능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도시적 용도

의 토지소요량과 개발가능지 면적 및 분포현황을 토대로 수도권의 토지수급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토지수급 불균형 해소방안과 가용지 공급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의 출발점이 되는 수도권의 도시적 용도의 토지소요량은 정책이나 계획적 요소의 강도에 따라 다양하게 추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경우를 전제로 최대의 수요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정책대안을 검토하고 연구를 전개하였다.

본 연구는 거시적인 가용지 분석으로서, 수도권의 규제를 위한 구체적인 행위규제 내용을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가 법정계획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단지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연구를 기반으로 수도권관련 공간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는 보다 구체적인 법정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근거로 수립되는 기초조사 및 토지적성평가 자료와 연계하고, 각 시·군의 도시관리계획을 반영하면 수도권의 시군별 상세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이다.

연구기간: 2004. 4. 26~2005. 4. 26
서지사항: 290면
발주기관: 한국토지공사

>> 웹환경 도로기반시설물 범용시스템 개발지침 연구

A Study on Guidelines for Developing Web Based Common use System for Roads and Underground Facilities Database

김정훈, 서기환, 한재일

■ 배경 및 목적

지하시설물도 전산화사업에서부터 출발한 시설물관리 범용시스템은 도로기반시설물 관리업무 중 도로, 상·하수도 시설물을 대상으로 유사업무 중복을 배제하는 표준 시스템을 제시하여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도입하였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전산환경의 변화는 정보시스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와, 기존 C/S환경 응용시스템을 웹환경 기반으로 대체하여 신속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제3차 국가 GIS기본계획에서도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웹 기술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IT기술 발전 속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 요구사항과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을 수용하는 정부차원의 웹 환경 도로기반시설물 범용시스템 개발지침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정보통신 기술 환경 변화를 고려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사항과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을 수용하는 웹 환경 도로기반시설물 범용시스템 개발지침을 위해 프레임워크와 개발표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내용요약

본 연구에서는 웹 환경 도로기반시설물 범용시스템 개발 프레임워크와 개발표준을 제시하고 비용, 시간 절

감효과를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웹 환경 도로기반시설물 범용시스템이 지방자치단체의 도로기반시설물 관리 업무에 범용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유연한 아키텍처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웹 환경 도로기반시설물 범용시스템의 개방적 구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적 기능요구사항에 대한 추가개발 및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의 확장 가능성을 제공한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웹 환경 도로기반시설물 범용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5개 업무 프로토타입(도로점용관리, 도로굴착관리, 급수공사관리, 누수민원관리, 위치기반 민원관리)의 시험적 구현을 통해, 기존 범용프로그램 기본설계서의 추가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기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제기된 요구사항에 대한 공통 데이터 모델을 추가하여 웹 환경 도로기반시설물 범용시스템 기본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설계서에 기반 하여 GIS 소프트웨어별로 공통적인 기능을 충족시키는 복수의 응용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각 개발된 응용프로그램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도로기반시설물 관리업무에 범용으로 활용하는 데 적합한지를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연구기간: 2004. 12. 7~2005. 10. 2
 서지사항: 187면
 발주기관: 건설교통부

>> 제2차 국가GIS사업 백서

A Study on a White Paper of the 2nd NGIS Project

김정훈, 한선희, 이영주, 김보영

본 연구는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구축 기본계획(2000년)에 의거해 추진되어온 제2차 국가GIS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의 추진과정 및 실적을 발간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사업을 통해 제2차 국가GIS사업의 추진목표, 추진경과, 추진내용 및 실적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여 국가GIS사업 추진결과의 활용성을 높이고 향후 제3차 국가GIS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국가GIS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GIS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국가GIS사업 기록의 역사적 의의를 부여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기간: 2005. 8. 18~2006. 6. 17
발주기관: 건설교통부 국토정보기획팀

>> 제3차 국가GIS 기본계획 수립 연구

A Study on the 3rd National GIS Master Plan

최병남, 사공호상, 이종열, 정문섭 외

■ 배경 및 목적

선진국에서는 1970년부터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GIS)을 새로운 사회간접자본으로 판단하고 국가발전전략사업의 하나로 추진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21세기 고도의 정보사회에서는 국가차원의 지리정보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1995년부터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GIS를 도입하고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가공간정보 기반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구축하기 위하여 1995년 5월에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국가GIS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연구는 2006년부터 향후 5년 동안 추진하게 될 국가GIS구축사업의 근간이 되는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지금까지 추진해 온 국가GIS구축사업을 부문별로 평가하고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둘째, 향후 국가GIS의 발전을 전망하고 여건의 변화를 분석하여 수요를 조망하며 셋째, 제3차 국가GIS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추진전략을 설정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3차 국가GIS구축사업을 위한 각 부문별 목표와 중점추진 내용을 모색하였다.

■ 내용요약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은 급변하는 정보기술의 발전과 지리정보 활용여건의 변화에 부응하는 국가지리

정보체계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지리정보체계의 실적을 평가하여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간 지리정보 구축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상호 연계를 통한 국가지리정보 활용가치를 극대화하는 종합계획이다.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의 비전은 다가오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유비쿼터스 국토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GIS기반의 전자정부 구현, GIS를 통한 삶의 질 향상, GIS를 이용한 뉴비즈니스 창출을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 기간 동안 달성해야 할 3대 목표로 설정하였다.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GIS기반의 확대 및 내실화를 추진하고, 국가GIS 활용가치를 극대화하며, 수요자 중심의 국가공간정보 구축하는 한편, 국가GIS구축사업은 국가정보화사업과의 협력적 추진해야 한다.

제3차 국가GIS구축사업에서 추진해야 할 중점사업으로는 기본지리정보를 중심으로 한 지리정보 구축의 확대 및 내실화, 연계·통합을 통한 GIS활용 극대화, GIS 핵심기술 개발, 국가GIS 표준체계 정립, GIS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GIS산업 및 인력 육성과 GIS 홍보강화 및 평가·조정체계의 내실화 등이다.

연구기간: 2004. 10. 14~2005. 8. 13
 서지사항: 437면
 발주기관: 건설교통부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A Study on Land Use Registration Information System

최병남, 김미정, 민숙주, 채명기

전자정부 구현 및 온라인 민원서비스가 구현되면서 점차 국민의 토지관련 행정수요가 양적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증가 및 다양화되고 있다. 또한 토지이용, 거래, 평가 등과 관련된 법률의 규제내용 및 해석이 어려우며, 한 필지에 대해 복잡하게 토지이용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내용을 쉽게 알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민원인에게 관련 내용을 서비스하고 해당 업무 담당자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

에 대한 정보를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정보시스템의 기본구상, 전략 및 법률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및 시스템 개발방안을 제시하고,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제도 정비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기간: 2005. 6. 8~2006. 4. 12
발주기관: 건설교통부

**>> 행정중심복합도시 국제공모관리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
(전략연구과제: 미래형 삶의 질 향유를 위한 첨단정보도시 구현방안)**

Strategies for Realizing the Ubiquitous Computing City

최병남, 사공호상, 김정훈, 한선희, 김동한

본 연구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세계 최초 유비쿼터스 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기술 중심이 아니라 자연과 사람, 기술의 조화 속에서 사람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첫째, 도시 전체에 초고속 광대역 통신망을 완비하여 원하는 정보는 5분 내에 해결 가능한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둘째,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24시간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시민이 직접 행정 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전자행정을 구현

하며, 셋째, 도시시설물에 센서를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상황정보를 관리함으로써 즉각적인 상황파악 및 조치가 가능한 환경을 구현하고 시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통합정보센터를 구축하고, 넷째,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IT기반 도시로 건설하고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정보문화 사업을 창출하는 것이다.

연구기간: 2005. 5. 27~2006. 9. 20
발주기관: 건설교통부

3) 기타활동

제10차 GIS국제세미나

- 일 시 : 2005. 11. 14~11. 15
- 장 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 주 최 : 국토연구원
- 참석자
 - 국 내 : 이기준(부산대학교 교수), 김재원(한국전산원), 강영욱(서울시정개발연구원), 최병남(국토연구원 GIS연구센터장), 어명소(건설교통부), 김은형(경원대학교 교수), 배해영(인하대학교 교수), 윤성배(건설교통부), 유기운(서울대학교 교수), 김형복(한국토지공사), 김경옥(한국전자통신연구원)
 - 국 외 : David Maguire(ESRI, 미국), Alexander Zipf(University of Applied Science Mainz, 독일), Douglas Flewelling(SUNY Buffalo, 미국), Alan Stevens(FGDC, 미국), Horomichi Fukui(Keio University, 일본)
- 주요내용
 - 유비쿼터스 기술과 GIS의 접목
 - 유비쿼터스 시대를 대비한 GIS통합방안
 - 국가GIS정책의 회고와 추진방향

GIS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워크숍

- 일 시 : 2005. 12. 16~17
- 장 소 :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
- 참석자
 - 원 내 : 사공호상(연구위원), 한선희(책임연구원), 박진형(연구원)
 - 원 외 : 김경수·최명근(건설교통부), 전철민(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홍상기(안양대학교 교수), 김계현(인하대학교 교수), 이병규(한국생산성본부), 오종우(한국지리정보산업협동조합), 김창환(강원대학교 교수), 성춘자(남서울대학교 교수), 심정민(전주공업대학 교수), 김석중(대구과학대학교 교수), 유환희(경상대학교 교수), 서용철(부경대학교 교수), 최용복(제주대학교 교수)
- 주요내용
 - 2005년도 GIS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실적(국토연구원)
 - GIS교육거점대학의 교육실적, 성과, 개선방안(12개 거점대학)
 - GIS 전문인력 양성사업 발전방안에 관한 종합토론

전문가 특강 > KT의 U-City 추진사례 및 분석

- **과제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국제공모 관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전략과제)
- **일 시** : 2005. 9. 23
- **장 소** : 국토연구원 중회의실
- **참석자**
원 내 : 최병남(GIS연구센터장) · 사공호상 · 김정훈(연구위원), 한선희 · 임은선 · 이영주 · 신정엽 · 이미숙(책임 연구원), 한재일 · 김보영(연구원)
원 외 : 한현배(KT U-City 추진본부)
- **주요내용**
 - KT의 U-City 추진현황
 - U-City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U-City 추진상의 한계

전문가 특강 > 파주 운정지구 U-City 구축사업

- **과제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국제공모 관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전략과제)
- **일 시** : 2005. 11. 2
- **장 소** : 국토연구원 중회의실
- **참석자**
원 내 : 최병남(GIS연구센터장) · 사공호상 · 김정훈(연구위원), 한선희 · 임은선 · 이영주 · 신정엽 · 이미숙(책임 연구원), 김동한 · 한재일 · 김보영(연구원)
원 외 : 최영환(KT U-City 추진본부)
- **주요내용**
 - 파주 운정지구 첨단정보화도시(U-City) 구축사업의 개요
 - 파주 운정지구 첨단정보화도시(U-City) 구축사업의 ISP 수립을 위한 제안 내용

세미나 > 제1차 「U-행복도시 포럼」 세미나

- **과제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국제공모 관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전략과제)
- **일 시** : 2005. 10. 26
- **장 소** : 국토연구원 강당
- **참석자**
 - 원 내** : 최병남(GIS연구센터장) · 사공호상 · 김정훈(연구위원), 한선희 · 임은선 · 이영주 · 신정엽 · 이미숙(책임연구원), 김동한 · 한재일 · 김보영(연구원)
 - 원 외** : 고경철(삼성 SDS), 류중석(중앙대학교 교수), 김은형(경원대학교 교수), 주상돈(전자신문사), 최영환(KT), 최봉문(목원대학교 교수), 최창규(수원대학교 교수)
- **주요내용**
 - U-행복도시 정보서비스 로드맵
 - 첨단정보도시 구현을 위한 도시계획 분야의 과제

세미나 > 제2차 「U-행복도시 포럼」 세미나

- **과제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국제공모 관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전략과제)
- **일 시** : 2005. 11. 17.
- **장 소** : 국토연구원 강당
- **참석자**
 - 원 내** : 최병남(GIS연구센터장) · 사공호상 · 김정훈(연구위원), 한선희 · 임은선 · 신정엽 · 이미숙(책임연구원), 김동한 · 한재일 · 김보영(연구원)
 - 원 외** : 이용규(중앙대학교 교수), 김은형(경원대학교 교수), 주상돈(전자신문사), 문용갑(가톨릭대학교 교수), 권현영(정부혁신위원회)
- **주요내용**
 - 현행 제도도의 첨단기술 수용가능성: U-행복도시를 중심으로

세미나 > 제3차 「U-행복도시 포럼」 세미나

- **과제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국제공모 관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전략과제)
- **일 시** : 2005. 12. 16
- **장 소** : 국토연구원 중회의실
- **참석자**
 - 원 내** : 최병남(GIS연구센터장) · 사공호상 · 김정훈(연구위원), 한선희 · 임은선 · 신정엽 · 이미숙(책임연구원), 김동한 · 한재일 · 김보영(연구원)
 - 원 외** : 최남희(충주대학교 교수), 전호인(경원대학교 교수), 김은형(경원대학교 교수), 고경철(삼성SDS), 김종태(솔리테오시스템즈)
- **주요내용**
 - U-행복도시 구현을 위한 연구과제 도출
 - U-행복도시 구축을 위한 U-IT기술 표준화 동향 및 컨버전스 방안

제7차 GIS2005대회

- **과제명** :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 수립연구
- **일 시** : 2005. 5. 20
- **장 소** : 건설회관
- **주 최** : 국토연구원
- **참석자**
 - 원 내** : 최병남(GIS연구센터장), 사공호상 · 김정훈(연구위원), 서기환 · 김연준(연구원)
 - 원 외** : 강영옥(서울시정개발연구원), 권기욱(서울특별시), 남형근(대구광역시), 오강탁(한국전산원), 오종우(한국지리정보산업협동조합), 유중근(행정자치부), 유기운(서울대학교 교수), 홍상기(안양대학교 교수)
- **주요내용**
 - 유비쿼터스 세상을 향한 지자체 GIS통합방안
 - U-City구축을 위한 GIS통합 사례
 - GIS관련 신기술발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기술워크숍

- **과제명**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 **일 시** : 2005. 7. 22~23
- **장 소** : 국토연구원
- **참석자**
 - 원 내 : 정희남(연구위원), 김미정·민숙주(책임연구원), 서관호(연구원)
 - 원 외 : 이원식 외 4인(건설교통부), 하을옥 외 4인(한국토지공사), 황규문 외 6인(SK C&C), 이권한(대한주택공사)
- **주요내용**
 - 시스템 연계범위 및 방안
 - 시스템 구성방안
 - 토지이용규제정보 표준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워크숍

- **과제명**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 **일 시** : 2005. 12. 8~9
- **장 소** : 국토연구원
- **참석자**
 - 원 내 : 정희남(연구위원), 김미정·민숙주(책임연구원), 서관호(연구원)
 - 원 외 : 오기현 외 4인(건설교통부), 김형태 외 2인(한국토지공사), 황규문 외 6인(SK C&C), 이권한(대한주택공사), 16개 광역시도 담당자
- **주요내용**
 -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민원서비스 내용
 - 토지구제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방안
 - 토지구제정보시스템 시연

독서발표회

- **제 목** : 식스시그마 성공의 조건(딕 스미스·제리 블레이크슬리·리처드 쿤스)
- **일 시** : 2005. 3. 11
- **발 표** : 박시영(국토연구원 연구원)
- **참석자** : GIS연구센터 직원 및 원내직원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계획 수립연구」 공청회

■ 일 시 : 2005. 11. 17

■ 장 소 : 국토연구원 강당

■ 참석자

원 내 : 진영환(부원장), 사공호상(연구위원), 민숙주(책임연구원)

원 외 : 김병수(건설교통부 도시정책팀 팀장), 양장현(건설교통부 도시정책팀 사무관), 김용옥(건설교통부 국토정보기획팀 사무관), 이정식(안양대학교 교수), 강영옥(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백운수(홍익기술단 부사장), 이승일(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조덕호(대구대학교 교수), 최봉문(목원대학교 교수), 한선희(서울시 도시계획정보팀장), 지자체 도시계획담당자, 관련 학계, 산업체 등

■ 주요내용

-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정의
-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계획 기초
- 국토이용정보체계 부문별 구축방안
- 국토이용정보체계 추진방안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 수립연구 공청회

■ 일 시 : 2005. 8. 30

■ 장 소 : 국토연구원 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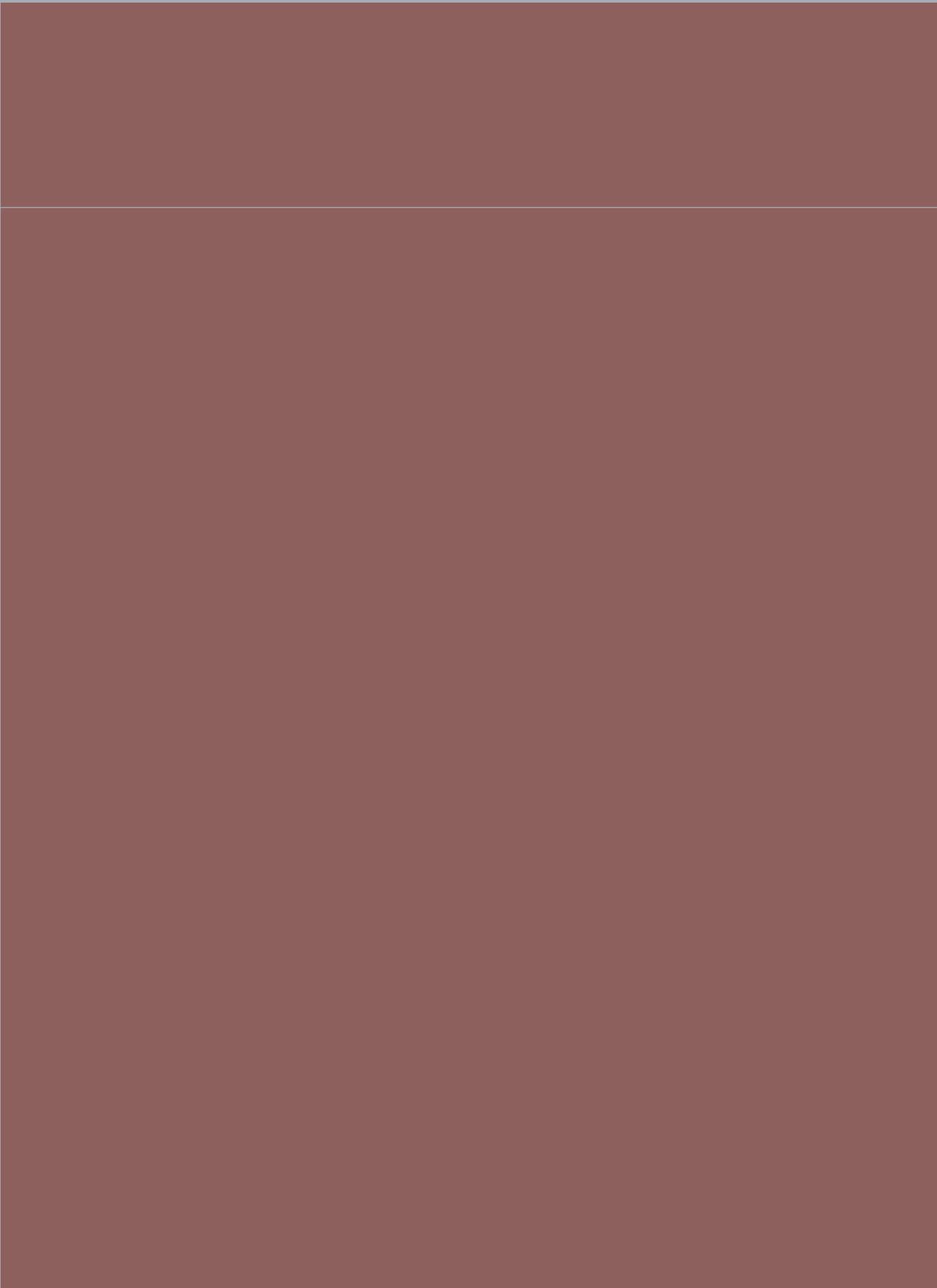
■ 참석자

원 내 : 최병남(GIS연구센터장), 사공호상·이종열·정문섭(연구위원), 박종택·김정훈·한선희·김미정·임은선·이영주(책임연구원), 김동한(연구원)

원 외 : 최원규(건설교통부 NGIS팀장), 오창훈(기획예산처 사무관), 김병국(인하대학교 교수), 오종우(한국지리정보산업협동조합 연구소장), 박흥기(경원대학교 교수), 박종현(ERRI 텔레매틱스 팀장), 구지희(건설기술연구원 GIS/LBS센터장), 유명준(대전광역시 정보화담당관), 강재화(해양수산부 서기관), 송경희(정보통신부 지식정보산업팀 서기관), 박상삼(산업자원부 연구관), 이상화(행정자치부 사무관)

■ 주요내용

-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의 계획기초
-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 부문별 추진방안



III

연구 및 지원부서 소개

1. 국토계획·환경연구실	293
2. 지역·도시연구실	299
3. SOC·건설경제연구실	307
4. 토지·주택연구실	313
5. GIS연구센터	319
6. 도시혁신지원센터	323
7. 연구지원부서	327

President & Vice-President

최병선 원장

도시 및 지역개발학 박사, Munique University of Technology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민간위원장, 행정자치부 접경지역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고문, 경원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로는 「도시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1999), 「주택·도시·공공성」(2000) 등이 있다.



박양호 부원장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국토 및 지역계획 분야 전문가로서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 건설교통부장관 자문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국토계획·환경연구실장 등을 역임하였고 건설교통부 수도권정책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통합국토를 향한 지역 간 공동발전방안 연구(I)(II)」(2003, 2004), 「제4차 국토종합계획 연구」(1999),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연구」(1991) 등 다수가 있다.

01

c h a p t e r

국토계획 · 환경연구실

1) 연구실 소개

국토계획·환경연구실은 우리 국토 전체의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토의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종합적인 비전과 전략수립, 정책개발, 제도개선 등에 대한 연구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을 수립한 데 이어, 제3차(1992~2001)와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및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개발과 환경의 통합적 발전개념에 기초하여 친환경적인 국토발전 및 국토자원의 자연친화적인 활용방안에 관련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우리 국토의 지경학적 이점을 중시하여 통일시대와 동북아시아에 대비한 한반도 발전구상과 남북한 및 동북아의 교류기반 강화를 위한 전략 발굴과 정책개발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국토계획·환경연구실은 독자적인 국토정책 개발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실의 연구에 대한 지침 제공 및 연구 성과의 종합을 통해 국토발전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국토종합계획 수립 및 국토정책 개발

-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국토균형 발전대책
- 국토정주체계 구축 및 낙후지역 발전대책
- 지방분권과 분산정책
-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및 수정
- 국토관련 기초조사
- 국토계획 및 정책추진실적의 종합평가

■ 동북아·북한연구

- 북한의 국토개발 기초연구
- 통일대비 부문별 국토정책
- 남북한 교류·협력기반 강화
- 동북아 협력 증진을 위한 국토기반 조성

■ 환경보전·관리

- 지속가능한 국토발전 전략
- 환경분쟁의 조정 및 해소
- 국토 자연자원의 친환경적인 이용
- 산지·구릉지, 연안지역의 이용과 보전
- 보전지역의 관리

■ 관광자원개발

- 국토의 관광자원의 발굴 및 친환경적 개발
- 동북아의 관광거점 개발
- 관광벨트의 개발

■ 수자원관리 및 방재

- 맑은 물의 지속가능한 공급
- 수질환경개선대책
- 유역의 통합적 관리
- 재해에 강한 국토기반 구축
-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토관리대책

2) 연구진 소개

서태성 연구위원

공학 석사, 연세대학교

현재 국토계획·환경연구실장을 맡고 있고, 주로 국토 및 지역계획, 지역개발정책, 관광개발계획 등의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연구」(2004), 「신행정수도 후보지선정 및 평가관리 연구」(2004),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2002), 「남해안 국제관광벨트 개발계획 연구」(1999),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계획 수립연구」(1998) 등 다수가 있다.

김원배 선임연구위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University of Wisconsin at Madison

동북아 및 북한 지역개발 분야 전문가로서 하와이 동서문화센터 연구위원, 하와이대학교 부교수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동북아연구팀장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한일 해협권 통합지역경제 기반구축을 위한 전략」(2005), 「동북아 협동적 지역개발의 사례분석과 이론모색」(2002), 「21세기 한반도 경영전략: 지경학적 접근」(1999), 「Culture and the City in East Asia」(1997), 「Asian NIES and the Global Economy」(1995) 등이 있다.

윤양수 선임연구위원

환경 및 자원관리 석사, Ohio State University

국토계획 및 관광개발 분야 전문가로서 한국환경정책학회 회장, 국토계획·환경연구실장 및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주요 연구로는 「서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 수립 연구」(2005), 「대전-통영 고속도로 주변 지역의 효과적 개발방안 연구」(2004),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계획 수립 연구」(2003), 「지역개발 측면에서 본 문화관광사업 실태와 대책」(2001),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 수립연구」(1999), 「제4차 국토계획 수립」(1999) 등이 있다.

양하백 선임연구위원

조경학 석사, 서울대학교

지역계획, 자원 및 환경계획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요 연구로는 「제주도 중산간지역 종합조사」(1997), 「국토이용계획을 위한 GIS활용방안 연구」(1997),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을 위한 환경평가」(1999) 등이 있다.

최영국 연구위원

조경학 박사, Agricultural University of Norway

자연환경관리, 생태관광 및 경관계획 분야의 전문가로서 환경부 중앙환경보전전문위원과 산림청 산림정책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로는 「생태관광 활성화방안 연구」(2005), 「생태적 도시개발을 위한 물 순환 체계 확보방안 연구」(2005),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경관기본계획」(2005), 「신행정수도 입지선정 평가기준작성 연구」(2003), 「백두대간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2002),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의 연계방안 연구」(2002) 등이 있다.

김선희 연구위원

공학 박사, 서울시립대학교

환경분야 전문가로서 현재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정책평가위원회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로는 「국책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사회합의형성시스템 구축방안 연구」(2005), 「국토개발사업의 환경가치평가 기준설정 및 적용방안 연구」(2004), 「자원절약적 국토발전방안연구」(2003) 등이 있다.

이상준 연구위원

공학 박사, Technical University of Berlin

도시개발 및 북한 국토·도시 분야 전문가로 주요 연구로는 「남북인프라협력사업의 통합적 추진방안 연구」(2005), 「동북아 협력시대의 북한 경제특구 활용전략」(2004), 「북한의 개혁·개방과 산업인프라 개발의 새로운 과제」(2003) 등이 있다.

김영봉 연구위원

경영학 석사, 서강대학교

북한 및 군사시설 분야 전문가로서 미시간주립대학 국제전문가 초청과정을 수료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정책전문위원, 통일교육위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주요 연구로는 「북한강유역의 남북한 평화적 이용방안」(2005), 「평화벨트 구축을 위한 서해 남북접경지역 이용방안」(2004), 「경의·동해선 연결과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방안」(2003),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실태와 관리방안」(1999),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전략지역 활용방안」(1998) 등이 있다.

이용우 연구위원

지리학 박사, University of Bonn

지역계획 및 국토환경 분야 전문가로서, 주요 연구로는 「서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2005),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2005), 「국토·교통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 시행방안 연구」(2005), 「지역의 특성화 발전을 위한 산업별 수위도시 육성방안」(2004),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계획 수립 연구」(2003),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지표 설정에 관한 연구」(2003) 등 다수가 있다.

김종원 연구위원

자원경제학 박사, West Virginia University at Morgantown

환경 및 수자원 분야 전문가로서, 현재 감사원 건설물류분야 자문위원, 건설교통부 전략환경평가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로는 「유역통합관리를 위한 재원확보방안 연구」(2005), 「하천 유역별 오염총량 관리제도의 도입에 따른 지역경제 및 토지이용전망과 정책과제」(2004), 「지속가능한 수자원개발을 위한 수자원정책개발(I, II, III): 물배분정책」(2001, 2002, 2003) 등이 있다.

이원섭 연구위원

지리학 박사, Michigan State University

국토계획 및 낙후지역정책 분야 전문가로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역개발 전문위원과 신활력지역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로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연구」(2005), 「통합국토를 향한 지역 간 공동발전방안 연구(I, II, III)」(2003, 2004, 2005) 등이 있다.

김천구 연구위원

현재 중국인민대학 환경학원 자원환경경제학 박사과정 중

김창현 연구위원

경제학 석사, 경상대학교

국토계획 분야 전문가로서 주요 연구로는 「유역통합관리를 위한 재원확보방안 연구」(2005), 「정주공간의 구조적 변화와 대응방향」(2003),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방안」(2002), 「공공시설부담금제의 도입에 관한 연구(I, II)」(1995, 1996) 등이 있다.

문정호 연구위원

계획학 박사,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단위 설정 연구」(2003),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I)」(2005) 등의 연구를 수행해 왔다. 현재 「참여정부 공공계획의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수립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류승한 연구위원

지리학 석사, 동국대학교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잠재력 분석 연구(II)」(2005), 「산업입지 제도개편 방안 연구」(2005), 「환경친화적 산업입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2004), 「Environment-Friendly Industrial Park Development Guidelines:

The Cases of Cikarang and Bitung in Indonesia」(2002)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윤해철 책임연구원

도시공학 박사, 한양대학교 / KIST

국토 및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로서 국무총리실 안전관리대책기획단 자문위원을 역임하고, 성남시 도시계획위원을 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로는 「국토조사 시행방안 연구」(2003), 「방재형 국토구축 전략연구」(2000), 「자연친화적 산지이용방안」(1997) 등이 있다.

이문원 책임연구원

도시공학 박사과정 수료, 서울시립대학교

해안이용 및 군사시설계획 분야 전문가로서 국토연구원 출판팀장을 역임하였으며, 주요 연구로는 「북한강 유역의 남북한 평화적 이용방안」(2005), 「춘천미군기지 이전부지 및 그 주변지역 활용방안 조사연구」(2005), 「평화벨트 구축을 위한 서해남북접경지역 이용방안」(2004), 「군사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시범지역 사례연구」(2004), 「남북한 평화정착을 위한 비무장지대 활용방안」(2004) 등이 있다.

양진홍 책임연구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과정 수료, 중앙대학교

국토계획 분야 전문가로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시·군)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주요 연구로는 「통합국토를 향한 지역 간 공동발전방안연구(II)」(2004), 「구미국가산업단지 지원기능 강화방안연구」(2004),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사업의 추진평가와 개선방안 연구」(2001) 등이 있다.

장철순 책임연구원

도시계획학 박사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개발 전문가로 산업입지 및 낙후지역 정책 등 지역계획 전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

으며, 2004년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 파견 근무하였다. 주요 연구로는 「산업입지제도개편 연구」(2005), 「지식기반산업의 군집형성요인에 관한 연구」(2005),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연구」(2003), 「지식기반산업의 입지정책연구」(2003), 「공업배치기본계획과 지역산업발전전략 수립 연구」(2002), 「산업입지공급계획수립을 위한 연구」(2002) 등이 있다.

박태선 책임연구원

수공 및 환경공학 박사, 한양대학교

하천 및 수자원 분야 전문가로서 수자원정책, 자연형하천, 공업용수도, 내륙주운, 간이상수도, 치수경제성분석, 댐 사후평가 등 수자원 전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수자원학회, 대한토목학회 등 관련 학회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홍수피해 특성분석 및 홍수피해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2005), 「자연형하천정비를 위한 하천환경특성 분석 연구」(2004), 「하천의 유지관리방안 연구」(2004), 「합리적 하천관리를 위한 하천등급 조정방안 연구」(2002) 등이 있다.

이승복 책임연구원

경영학 박사, 단국대학교

수자원 방재 분야 전문가로서 주요 연구로는 「대체수 자원 확보에 관한 연구」(2006), 「효율적인 빗물관리방안 연구」(2005), 「홍수피해 특성 분석 및 홍수피해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2005), 「하천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2004), 「국토개발사업의 환경가치평가 기준설정과 적용에 관한 연구」(2004) 등이 있다.

이순자 책임연구원

정치학 박사(환경정책 및 자원관리), Colorado State University

지역계획 및 국토환경정책 분야 전문가로서 주요 연구

01

로는 「평택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2005), 「수자원관리 및 국토방재기반 구축을 위한 국토계획 수립연구」(2005) 등이 있다.

조진철 책임연구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Oregon State University 동북아 및 북한분야 전문가로서 한국개발연구원 정책대학원 연구개발팀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주요 연구로는 「국책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사회합의형성시스템 구축방안 연구」(2005), 「북한강 유역의 남북한 평화적 이용방안」(2005), 「평화벨트 구축을 위한 서해 남북 접경지역 이용 방안」(2004), 「군사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시범지역 사례연구」(2004),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 방안 연구」(2004) 등이 있다.

정옥주 책임연구원

지리학 및 지역계획학 박사, University of Paris-IV-Sorbonne 국토계획과 도시문화정책 전문가로서 OECD의 Territorial Review Governance Division에서 consultant를 역임하였으며, 주요 연구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경관기본계획」(2005),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연구」(2005), 「통합국토를 향한 지역 간 공동발전방안 연구(II, III)」(2004, 2005) 등이 있다.

심우배 책임연구원

공학 박사, 홍익대학교 홍수 및 도시방재 분야 전문가로서 현재 소방방재청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중앙심의위원,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중앙심의위원, 환경부·기상청의 기후변화연구회 연구위원, 서울시 성북천 복원사업 자문위원, 한국방재학회 하천방재시스템분과위원, 한국수자원학회 수문기상분과위원,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유역통합관리를 위한 재원확보방안

연구」(2005), 「방재국토 구축을 위한 GIS활용방안 연구(I)」(2005), 「국토·교통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 시행방안 연구」(2005), 「수자원관리 및 국토방재기반구축」(2005), 「효율적인 빗물관리방안 연구」(2005) 등이 있다.

이성수 연구원

경제학 석사, 서강대학교 주로 동북아 및 북한지역개발을 연구하며 주요 연구로는 「한일 해협권 통합지역경제 기반구축을 위한 전략」(2005), 「남북인프라협력사업의 통합적 추진방안 연구」(2005), 「동북아 협력시대의 북한 경제특구 활용전략」(2004), 「평화벨트 구축을 위한 서해 남북접경지역 이용방안」(2004) 등이 있다.

박인권 연구원

도시계획학 석사, 서울대학교 주로 국토 및 지역계획, 지역경제개발 등의 분야를 연구하며 주요 연구로는 「통합국토를 향한 지역 간 공동발전방안 연구(I, II)」(2003, 2004), 「지역의 특성화발전을 위한 산업별 수위도시 육성방안 연구」(2004), 「정주공간의 구조적 변화와 대응방향」(2003) 등이 있다.

임상연 연구원

행정학 석사, 서울시립대학교 주로 국토계획 분야를 연구하며 주요 연구로는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I)」(2005),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2005), 「국토·교통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 시행방안 연구」(2005),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2004) 등이 있다.

02

c h a p t e r

지역·도시연구실

1) 연구실 소개

지역·도시연구실은 지방화·세계화시대에 지역과 도시가 핵심단위로 되는 경쟁력 있는 경제단위로 발전하고 삶의 터전으로서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지역 및 도시 단위의 계획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수행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단위의 주요 연구분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지역경제정책, 지역분석 및 계획수립, 수도권 및 산업입지 연구가 있으며, 이와 같은 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새로운 지역분석 방법론을 개발하고, 지역계획 및 산업정책과 관련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세계화에 따른 지역 간 경쟁시대의 전개와 지방자치가 성숙되는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연구기관, 지역전문가와의 협력 체제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시단위의 주요 연구분야로는 쾌적한 도시생활환경 조성 및 질서 있는 도시공간구조 정비를 위한 시범사례 연구 및 계획수립 제도의 정비,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시가지 정비사업, 도시경관·역사문화 경관 정비와 관련된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도시분석기법의 개발, 도시관련 제도 및 이론정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지역·도시연구실의 연구는 지역분석, 산업입지 및 지역혁신연구, 지역 및 도시경영연구, 도시정책 및 제도연구, 도시계획 및 관리연구 등 크게 다섯 분야로 나누어 수행되고 있으며, 분야별 세부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분석연구

- 지역경제 분석 및 예측을 위한 이론과 모형의 정립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제시 및 개발계획 수립
- 수도권정책 및 관련 계획 연구

■ 산업입지 및 지역혁신연구

- 지역경쟁력 강화 및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 정책 수립
- 지역혁신체제 구축 및 혁신클러스터 육성방안 연구
- 산업입지의 공급 및 정보체계 구축

■ 지역 및 도시경영연구

- 지방 행·재정 분석
- 지방정부 경영평가 및 전략계획 수립
- 지자체 간 협력 및 사회갈등 해소 방안 연구

■ 도시정책 및 제도연구

- 도시와 관련된 정책의 평가, 수립, 조정
- 도시계획·개발과 관련된 법규 및 제도 분석
- 정책수립과정에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제시

■ 도시계획 및 관리연구

-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연구
- 기성시가지와 역세권 정비방안 연구
- 신도시 개발계획 연구

2) 연구진 소개

박재길 선임연구위원

공학 박사, The University of Tokyo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추진방안 연구」(2005), 「도시계획결정과 사회적 정의에 관한 연구」(2004),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2003), 「도·농 통합형 정주기반 구축과 농촌의 계획적 정비」(2002)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 위원과 지역·도시 연구실장을 맡고 있다.

김현식 선임연구위원

도시계획학 박사, Princeton University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전략 수립연구」(2005), 「도시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2001), 「제주국제도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2000)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지역·도시연구실장을 역임하였고,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상우 선임연구위원

지역경제학 박사, University of Pennsylvania

「신행정수도 건설의 사회·경제적 파급영향분석 연구」(2003), 「지역 간 산업연관표 작성에 관한 연구」(2003), 「수도권 정비계획수립」(1994), 「행정중추기능의 분산」(1992)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지역분석실장을 역임하였고, 수도권정비 실무위원 및 통합영향평가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정철 선임연구위원

도시계획학 박사, Stanford University

「2025 수원도시기본계획수립 연구」(2006), 「지방 중소도시 활성화방안 연구」(2004),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수립 연구」(2004), 「도시미관 증진을 위한 가로간판 정비방안 연구」(2002), 「2020년 마산·창원·진해권 광역도시계획수립 연구」(2002)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건설교통부 사무관으로 근무한 바 있고, 21세기 국토포럼 사무국장을 역임하였으

며, 건설교통부 중앙건설기술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석희 선임연구위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University of

Pennsylvania

주요 수행연구는 「웅진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2005), 「도시수변공간의 이용특성분석 연구」(2002), 「관교신도시 개발구상 및 타당성 분석」(1999),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 개발연구」(1998), 「경부고속철도역 및 역세권개발 기본구상」(1997), 「대전시 도시재개발 기본계획」(1994), 「부산시 도시기본계획」(1992), 「일산 신도시개발사업 기본계획」(1991) 등이 있으며, 도시기본계획연구실장을 역임하였고, 대외적으로는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 서울시 건축위원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건설교통부 신도시 자문위원, 행정자치부 균형발전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염형민 선임연구위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석사, Waseda University

「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정책수단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2004), 「광역대중교통체계 기반의 포천신도시 개발전략연구」(2004), 「도시계획정보체계 시범사업 I, II」(2003~2004), 「파주 토지적성평가 학술용역」(2004)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고양시와 파주시 도시계획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동주 선임연구위원

지역경제학 박사, University of Pennsylvania

「과천지식정보타운(가칭) 개발전략 수립을 위한 사전검토연구」(2003),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자유지역조성방안 연구」(1998), 「유통단지 개발방안 연구」(1995)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현재 국제협력단장을 맡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파견근무 중이다.

02

강태수 연구위원

농학사, 서울시립대학교
「국가정보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계획 수립연구」(2003),
「21세기 도시재개발 활성화 방안」(1999), 「개발제한구
역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1993) 등의 과제를 수행
하였다.

이동우 연구위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University of Tsukuba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투자재원 확보방안 연
구」(2005),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 구축-제4차 국토중
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2005), 「자립
형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단위 설정연구」(2003) 등의 연
구를 수행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으로 활
동 중이다.

김상욱 연구위원

행정학 석사, 서울대학교
「대전-통영 고속도로 주변지역의 효과적 개발방안 연
구」(2004), 「지식기반산업 입지정책연구」(2003), 「산업
입지제도개편방안연구」(1998), 「산업입지정보망 구축
방안」(1998) 등 국토 및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산업입지
분야 연구를 수행해왔다.

민범식 연구위원

도시공학 박사, The University of Tokyo
「주거지역 개발밀도 설정방안에 관한연구」(2004), 「성
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개발수요분석연
구」(2003), 「기성시까지 정비기법에 관한 연구 : 주거지
역을 중심으로」(2002) 등 도시개발과 기성시까지 정비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김태환 연구위원

지리학 박사, University of Newcastle upon Tyne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잠재력 분석연구(II)」(2005),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잠재력 분석연구(I)」(2004),
「수도권 집중요인 분석 및 기능분산방안 연구」(2003),
「지역개발제도 개선방안 연구」(2000) 등의 연구를 수
행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
이다.

박형서 연구위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University of Liverpool
「공공시설 입지갈등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연구」
(2004),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개발
계획수립용역」(2004), 「제주도 첨단과학기술단지 개발
방안에 관한 연구」(2002), 「새만금 자유무역지구 개발
계획」(1995) 등의 연구를 수행해왔다.

김광익 연구위원

지리학 석사, 서울대학교
「지역통계생산을 위한 도시화지역 설정」(2004),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활성화 방안」(2001), 「대도시 산업구
조변화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2001), 「과밀부담금 실효
성 제고 방안 연구」(2001), 「수도권 공공기관의 효율적
인 지방이전 추진방안」(2005)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권영섭 연구위원

행정학 박사, 서울시립대학교
「지역특성화 발전을 위한 혁신클러스터 육성방안 연구」
(2005),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의 지역간 기능분담방
안 연구」(2004), 「지역별 지식기반산업과 지역혁신체제
구축방안」(2003), 「지식기반산업의 입지특성과 지역경
제활성화 연구」(2002), 「시범 테크노파크사업과 지역혁
신체제 구축」(2001), 「지역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잠재력 제고방안」(2000)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박은관 연구위원

환경조경학 석사, 서울대학교
「택지개발사업지구 자족기능 강화방안 연구」(2004),

「대구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연구」(2004),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 운용방안 연구」(2001), 「도시계획체계정립 및 계획수립기준 연구」(1993) 등 주로 도시계획 및 설계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해왔다.

이왕진 연구위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Texas A&M University
 「인구저성장시대의 도시관리정책 방향 연구」(2005),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추진방안 연구」(2005), 「행정중심복합도시 국제공공 관리」(2005), 「주거지역 개발밀도 설정방안 연구」(2004)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차미숙 연구위원

행정학 박사, 연세대학교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지역 내 추진체계 구축연구」(2004), 「지역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체계 구축 및 운용방안 연구」(2003), 「지역발전론」(2003),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의 유형별 입지특성과 지역연계연구」(2002), 「내포 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구상 및 지정타당성 조사연구」(2001), 「지역개발사업의 파급효과 분석기법 및 적용연구」(2001)를 수행하였다.

황성수 책임연구원

도시계획학 석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용진군 종합발전계획」(2005), 「경기서북부국제업무 신시가지개발 타당성분석 연구」(2006), 「도시수변공간간의 이용특성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2002), 「중부내륙광역권개발계획」(2006), 「김포신도시개발구상 및 주변지역 관리방안 연구」(2006), 「철도역세권 개발계획」(2006)등의 연구를 기수행 및 수행 중에 있다.

김의식 책임연구원

도시행정학 석사,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중소도시 활성화방안」(2004), 「레저행태 변화에 따른 여가공간 조성방안 연구」(2002), 「판교지구 개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1999), 경부고속철도역 및 역세권개발 기본구상」(1997) 등의 연구를 수행해왔다.

김성수 책임연구원

현재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Department of Urban and Regional Planning, Ph.D 과정 중

김상조 책임연구원

환경조경학 석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남해군 시범 군 기본계획 수립」(2004), 「도시기본계획 결정권한 이양에 따른 제도보완방향 연구」(2003), 「부천 중동신시가지 도시설계 지침 재정비에 관한 연구」(2000), 「신도시정책개선에 관한 연구」(1998)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영아 책임연구원

현재 University of Bristol, BK, Housing Policy Research, Ph. D 과정 중

박세훈 책임연구원

행정학 박사, 서울대학교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1)」(2005), 「신행정수도 후보지선정 및 평가관리 연구」(2004), 「지역의 특성화발전을 위한 산업별 수위도시 육성방안 연구」(2004) 등의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도시계획 및 지역개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조춘만 책임연구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Texas A&M University
 「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정책수단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2004), 「광역대중교통체계 기반의 포천 신도시 개발전략 연구」(200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2005), 「파주시 토지적성평가 시범연구」(2005), 「개발가능지의 합리적 선정을 위한 토지형상기준 도입방안」(2005) 등의 연구를 수행

02

하였다.

변필성 책임연구원

지리학 박사(도시계획 부전공), University of Arizona

「Spillovers and Local Growth Controls: An Alternative Perspective on Suburbanization」(2005), 「A Revisionist Model of Suburbanization and Sprawl: the Role of Political Fragmentation, Growth Control, and Spillovers」(2005), 「자립적 지역 발전을 위한 잠재력 분석연구(II)」(2005)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김명수 책임연구원

공학 박사, 서울대학교

「생태통로 설계 지침서」(2005), 「포항제철소 그린마스터 플랜」(2005), 「경기도립 환경교육센터 기본계획수립 연구」(2004), 「도시지역의 자연환경성 확보방안 연구」(2004), 「서울의 주요 하천변 경관개선 방안 연구」(2002)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강호제 책임연구원

도시정책학 박사, Cleveland State University

「지역특성화 발전을 위한 혁신클러스터 육성방안 연구」(2005)를 수행하였으며 2005년 서부지역학회 최고 논문상(Springer Award)을 수상하였다.

권영상 책임연구원

공학 박사, 서울대학교

「조선후기 한성부 도시공간의 구조-주요시설과 도로 체계를 중심으로」(2003), 「신도시개발에 의한 도시공간의 구조적 이분화에 관한 연구-안양시와 평촌신도시를 대상으로」(2002) 등을 수행하였다.

김형진 연구원

조경학 석사(도시설계전공),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주거지역 개발밀도 설정방안에 관한 연구」(2004), 「지방중소도시활성화방안 연구」(2004), 「지방대도시 도심의 기능활성화 및 쾌적성 제고방안연구」(2003), 「광주광역시 도심활성화 방안 연구」(2003) 등 도시설계 및 도시재생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김중은 연구원

공학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결정과정과 사회적 정의에 관한 연구」(2004),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2003), 「행정수도 이전의 효과분석 및 국내외 사례조사 연구」(2003)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파견 근무 중이다.

황승미 연구원

도시계획학 석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2005), 「자립적 지역 발전을 위한 잠재력 분석 연구(III)」(2005), 「환경친화적인 산업입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2004)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범현 연구원

도시계획학 석사, 서울대학교

「수도권 대규모 개발사업의 집합적 파급영향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2005),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개발수요 분석 연구」(2003)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박경현 연구원

지리학 석사, 서울대학교

「지역특성화 발전을 위한 혁신클러스터 육성방안 연구」(2005), 「인구저성장시대의 도시관리정책 방향 연구」

(2005), 「ICT산업의 지역 간 기능분담 방안 연구」(2004)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안용진 연구원

공학 석사(도시설계), 서울대학교

「도시개발제도 개선방안 연구」(2005), 「도시경관 관리제도 정비방안 연구」(2005), 「주거지역 개발밀도 설정방안에 관한 연구」(2004), 「파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2004)를 수행하였고, 국제협력사업으로 「이집트 토지개발정책 평가감시능력 강화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03

c h a p t e r

SOC · 건설경제연구실

1) 연구실 소개

SOC·건설경제연구실은 SOC투자 종합계획, 종합교통계획, 제1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연구, 21세기 정보화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ITS 구현을 위한 기초연구분야인 표준화와 '아키텍처'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물류 네트워크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네덜란드 등 물류선진국과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국제적 교류를 확대하고 선진시스템의 국내 도입에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건설경제 동향분석 및 전망, 건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 및 법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가 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건설산업 DB를 구축하고, 이를 건설행정업무와 접목시키기 위한 건설행정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 계간「건설경제(Construction Economics)」지를 발간하며, 일본의 건설경제연구소(Research Institute of Construction and Economy) 등 해외연구기관과 교류하고, 아시아 11개국이 참여하는「아시아 건설협의회(Asian Construction Conference)」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SOC투자 관련 연구

- SOC중장기사업 투자조정
- SOC사업 투자효과 분석 및 타당성 조사
- SOC투자지표 개발
- SOC스톡 추계

■ 종합교통계획관련 연구

- 교통수요예측
- 광역대도시권의 종합교통계획
- 항만 및 산업시설 배후 교통망체계
- 물류관련 연구

■ 교통시설계획관련 연구

- 전국 7×9 장기 간선도로망의 추진
- 도시 우회도로 계획 및 연계교통망 구축
- 지방부 도로의 간선기능 향상 방안
- 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종합기본계획

■ 교통운영 및 관리부문 연구

- 교통분야 지리정보시스템(GIS-T) 운영 및 유지관리의 효율화
- 교통수요관리
- ITS관련 연구

■ 건설산업정책 및 제도 연구

- 건설산업 및 생산구조 개선방안 연구
- 발주 및 입찰·계약제도 연구
- 건설공사보증제도 연구
- 건설산업 정보화관련 연구

■ 건설경기 예측관련 연구

- 건설동향 및 경기예측모형 구축
- 건설산업의 수급구조 연구
- 건설자재 수급 동향 연구
- 해외 건설관련 예측

2) 연구진 소개

정일호 연구위원

교통계획학 박사, University of Leeds

현재 SOC·건설경제연구실의 실장을 맡고 있으며, 기획예산처 성과관리자문단, 건설교통부 광역교통실무협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SOC투자 계획 및 평가, 교통계획 수립 및 평가, 교통체계분석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조사연구」(2005), 「SOC 공급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방안」(2004), 「교통 수요예측을 위한 기준 및 절차 지침연구」(2004), 「중장기 SOC투자전략에 관한 연구」(2003), 「장기 수도권 고속도로망 종합체계 조사연구」(2003), 「교통기술혁신이 국토공간에 미치는 영향 분석」(2002) 등 다수가 있다.

유재운 연구위원

도시 및 지역학 박사, Texas A&M University

현재 건설경제연구팀장을 맡고 있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경제, 도시개발, SOC 투자 등이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로는 「도시경쟁력 평가에 관한 연구」(1996), 「도시심재개발 활성화 방안」(1997), 「도시문화산업 육성방안 연구」(2000), 「도시개발비용의 구조분석 연구」(2001), 「도시 개발의 재정영향분석에 관한 연구」(2002) 등 다수가 있다.

김재영 선임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중앙대학교

건설경제분야 전문가로서 국토정보실장, 건설경제연구실장, SOC·건설경제연구실장, 건설교통부 선진화 기획단 위원, 부패방지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건설경기 동태분석, 건설산업의 경쟁력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건설경기 및 건설산업정책 및 제도분야이다. 주요 연구실적은 「건설경기의 구조적 진단과 효율적 대응방안」(2005), 「건설보증제도 개선방안 연구」(2004), 「SOC시설의 효율

적 정비 및 사후관리방안 연구(I, II)」(2003~2004), 「건설경기 종합지수 개발 연구」(2002), 「제2차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연구」(2002), 「건설경제구조변화를 고려한 건설경기 예측모형 개발연구」(2000), 「건설산업 지식정보시스템 구축방안」(1999), 「건설분야 부패방지 대책」(1999) 등 다수가 있다.

류재영 연구위원

도시 및 교통계획학 박사, 한양대학교

건설교통부장관 자문관(2001~2005)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교통계획 수립 및 평가, 토지이용-교통체계분석, 물류체계분석 등이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동북아 간선 교통망 조사」(2004), 「화물운송 등 물류산업 발전방안」(2001), 「제1차 유통단지종합개발계획」(1997), 「고속도로 연결개발 타당성조사」(1993), 「분당, 일산, 중동 신도시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기본계획」(1990), 「중부고속도로 타당성조사」(1985), 「경기지역 종합교통체계 조사」(1984), 「서울시 지하철 2·3·4호선 기본계획」(1979) 등 다수가 있다.

이춘용 연구위원

공학 석사, 한양대학교

도로·교통분야 전문가로서 중앙건설기술심사위원회 위원(교통부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도로계획 및 정책, 교통계획, 지역계획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도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수립 연구」(2004), 「일반국도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중장기계획 수립연구」(2003), 「수도권 및 지방 5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 수립연구」(2000, 2001), 「국도 기능분류 및 효율적 투자방안 연구」(1999), 「국도대체우회도로 기본계획 조사」(1997), 「도로정비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1997), 「입체도로제도 도입방안 연구」(1995) 등 다수가 있다.

이상건 연구위원

공학 박사, Virginia Tech

주요 연구분야는 ITS 표준화, ITS 기본계획, SOC 투자평가 등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국가 ITS 기술 표준화 1-6단계 연구(1998~2005), 「안양시 ITS, BIS 기본계획(2003), 「효율적인 광역교통개선에 관한 연구(2004), 「SOC 투자평가모형의 개발 1, 2, 3 단계(2000~2003), 「SOC투자평가모형을 활용한 지역파급 효과 실증분석 연구(2004) 등 다수가 있다.

김홍석 연구위원

공학 학사, 성균관대학교

현재 건설교통부 광역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에 파견근무 중이며, 주요 연구분야는 SOC 투자평가, 대중교통정책, 지속가능교통 정책 등이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철도역세권 개발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2003), 「고속도로 확장투자계획 수립 및 효과분석 연구(2002), 「서천보령 간 국도확장사업(2001), 「도로사업 투자분석기법 정립(1999) 등 다수가 있다.

윤허중 연구위원

공학 박사, 경원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교통계획, 민간투자사업으로서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교통수요예측을 위한 기준 및 절차 지침연구(2004), 「민간투자사업의 성능제한형 방식 도입에 관한 연구(2002), 「SOC 중장기 민간투자계획 수립연구(2002), 「민간투자사업의 운영관리비 산정에 관한 연구(2001), 「인프라시설의 타당성 개선방안 연구(2000) 등의 연구와 개발도상국의 인프라시설 타당성조사 및 다수의 민간투자사업 평가와 협상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사업추진팀장을 역임하였다.

김성일 연구위원

행정학 박사, 서울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로는 건설경제 및 건설산업정책, 조달정책 등이며, 주요 연구실적은 「대형공공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2005), 「공공공사 발주행정 분권화 방안 연구(2004), 「공공공사 클레임 실태분석과 개선방안(2003), 「공공공사 발주제도의 다양화 방안 연구(2002), 「최저가 낙찰제도의 정착방안 연구(2001) 등이 있다.

정진규 연구위원

도시학 박사, Portland State University

주요 연구분야는 교통 및 토지이용, 광역교통계획 및 정책, 정보화와 교통, 계획이론 등이다. 주요 연구실적은 「대도시권 교통개선을 위한 재택근무 활성화 방안 연구(2005), 「대도시권 SOC정책 결정체계에 관한 연구(2004), 「고속철도가 국토공간에 미치는 영향 연구(2003), 「자원절약적 국토공간구조에 관한 연구(2002) 등 다수가 있다.

김호정 책임연구원

공학 박사과정 수료, 홍익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교통계획과 도로계획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국가기간교통망의 유고대응전략연구(2005), 「민간투자사업 중간평가와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2005), 「국가지원지방도 5개년계획 수정계획 연구(2004), 「도로정비기본계획 재정비수립 연구(2004), 「일반국도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중장기계획수립연구(2003), 「도로투자효과분석 및 고속도로 중기투자계획 연구(2000), 「일반국도 등 노선지정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2000) 등 다수가 있다.

임영태 책임연구원

공학 박사, 서울시립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교통경제와 물류계획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연계성을 고려한 수송물류결절점 평가기법 연구(2005), 「도로와 환경 영향연구(2004), 「유통

단지개발 종합계획수립 연구(2001) 등 다수가 있다.

김동욱 책임연구원

현재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Transportation Engineering and Planning Division in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Ph.D 과정 중

권혁진 책임연구원

경제학 석사, 서강대학교
건설경제분야 전문가로서, 건설보증, 건설정책, SOC 투자 등의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지역별 사회간접자본(SOC) 스톡추계 연구(2003), 「공동도급 계약제도 개선방안 연구(2003), 「재정사업 과민자사업의 효율성 비교연구(2003), 「사회간접자본(SOC) 스톡추계 연구(2002), 「건설산업에서 금융기능 강화방안 연구(2002), 「건설보증시장의 구조와 효율화방안(2002) 등 다수가 있다.

이형찬 책임연구원

경제학 석사, 고려대학교
건설경제 분야 전문가로서 건설정책 및 제도를 주요 연구분야로 하고 있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공공공사 발주행정의 분권화 방안 연구(2004), 「건설교통부문 성과관리지침 개발 연구(2004), 「공공공사의 클레임 실태분석과 개선 방안(2003), 「대형공사 입찰제도 개선 방안 연구(2003), 「제2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연구(2002) 등 다수가 있다.

김민철 책임연구원

경제학 석사, 서강대학교
건설경제 분야 전문가로서 건설경기 및 제도를 주요 연구분야로 하고 있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SOC시설의 효율적 정비 및 사후관리 방안 연구(2003), 「건설기능인력수급안정화 대책 연구(2003), 「건설기술자 인정제도 개선방안(2003), 「고속도로 확장 투자계획

수립 및 효과분석 연구(200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수립 연구(2002) 등이 있다.

안홍기 책임연구원

도시경제학 박사, 서강대학교
건설경제 분야 전문가로서 주요 연구분야는 SOC, 건설경제, 지역경제 등이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한국의 사회간접자본투자의 지역경제효과분석(2002), 「통영~거제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2), 「차상신호(ATP)시스템 도입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2), 「MRIO모형구축과 SOC 투자의 지역경제파급효과(2001), 「공공투자지출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2001) 등 다수가 있다.

오성호 책임연구원

공학 박사, University of Wisconsin
주요 연구분야는 교통정보, 교통계획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표준 노드/링크 체계 구축사업(2005), 「고속도로 확장 투자 5개년 계획(2004), 「효율적인 광역교통정책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2004), 「첨단교통모델도시 건설사업 효과 분석(2004), 「제2차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 및 추진 계획(2003), 「장기 수도권 고속도로망 종합체계 조사 연구(2003) 등 다수가 있다.

고용석 책임연구원

공학 석사, 한양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SOC투자, 교통계획 수립 및 평가, 교통체계분석, ITS 등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서해안선 외 2개노선 고속도로 건설공사 사후평가 연구용역(2004), 「SOC투자평가모형을 활용한 지역파급효과 실증분석 연구(2004), 「안양시 버스정보시스템 기본계획 수립 연구(2003) 등 다수가 있다.

김종학 연구원

공학 석사, 홍익대학교

03

주요 연구분야는 SOC투자, 교통계획 수립 및 평가, 교통체계분석이며, 주요 연구실적은 「BRT와 혼잡통행료의 통합시행에 따른 교통환경 개선효과에 관한 연구」(2004),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국토공간 구조의 변화 전망 및 대응방안 연구」(2003), 「21세기 도로정비의 효율적인 추진체계 정립방안 연구」(2002), 「지방5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 수립연구」(2001),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조사」(2000) 등 다수가 있다.

정선영 연구원

공학 석사, 연세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교통계획 및 ITS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국가기간교통의 유고 대응전략 연구」(2005), 「검지기별 구간소통정보 산출 및 성능평가(II)」(2005), 「효율적인 광역교통정책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2004), 「2003년 국가 ITS 기술표준안 개발 연구」(2004), 「국가 ITS 기술 표준화 4단계 연구」(2003), 「가구통행 실태조사 및 보완조사」(2002) 등 다수가 있다.

04

c h a p t e r

토지·주택연구실

1) 연구실 소개

토지·주택연구실은 한정된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와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토지와 주택은 물리적 공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와 삶의 질, 부의 배분, 국토환경 보전 수준 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토지·주택 시장과 정책의 변화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90년대의 주택 대량공급, 외환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급속히 변화된 토지와 주택 시장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반한 정책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공급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이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세계화·정보화 등 나라 안팎의 여건변화가 가속화되면서 토지·주택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환경보전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다.

토지·주택정책은 이러한 여건 변화를 수용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여야 한다. 즉, 국민 주거생활의 향상,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인 안정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책이나 제도를 선진사회에 걸맞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토지·주택연구실은 토지와 주택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잡하고 다양한 움직임들을 분석·전망하고,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특히 소외 계층의 주택문제를 완화하고 바람직한 주거공동체 의식과 주거문화를 형성하면서, 도시정책과 연계되는 토지·주택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아울러 토지·주택시장과 정책에 대한 선진국의 이론과 경험을 분석하고, 한국형 이론개발을 위한 폭 넓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토지·주택정책 연구

- 토지·주택정책의 평가 및 개발
- 토지·주택금융 및 조세정책 연구
- 토지개발 및 주택건설 산업 등 관련 산업 정책 연구

- 토지이용정책 및 토지·주택계획 연구
- 선진국의 토지·주택정책 연구
- 주거복지 제고방안 연구

■ 토지·주택시장 연구

- 토지·주택시장 동향분석 및 전망
- 부동산증권화 시장의 동향분석모형 개발
- MBS·ABS 시장의 수익모형 개발
- 세계경제·거시경제·부동산정책과 시장 간의 관계 분석

■ 토지·주택 관련 법제 및 행정체계 연구

- 토지·주택 관련 법제의 정비 연구
- 토지·주택의 소유·임대차권 정비 연구
- 토지이용계획 및 주택건설 체계정비 연구
- 토지·주택의 행정체계 연구

■ 토지·주택 정보체계 및 경영관리

- 부동산 정보체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체계 구축
- 부동산 지적·등기제도의 통합관리 방안 구축
- 공시지가·주택가격 등 부동산시장 정보 관리
- 토지·주택의 수급 및 재고관리 체계 구축

2) 연구진 소개

손경환 선임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한양대학교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자문위원, 참여정부정책평가위원회 전문위원, 미국 일리노이대 초빙교수를 역임하였으며 주택학회 이사 및 토지·주택연구실 실장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주택정책 및 부동산시장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산업 발전방안 연구」(2005), 「부동산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반정보연구」(2004), 「부동산거래신고가격 적정성 평가모형 개발」(2004), 「주택종합계획(2003~2013) 수립연구」(2003),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전망체계 구축」(2003) 등이 있다.

배순석 선임연구위원

도시계획학 박사, University of Washington

규제개혁위원회 전문위원, 민주당 소득격차완화 특별위원회 위원, 지방공영개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한국주택학회 운영위원장 및 편집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주택정책 및 도시개발정책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주택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택품질보증체계 구축방안」(2005),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주민 재정착 제고방안 연구」(2005), 「시장소외계층을 위한 주택정책 수립연구」(2002),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택개보수 지원정책 연구」(2001) 등이 있다.

윤주현 선임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현재 한국주택학회 학술위원장,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심의위원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주택시장, 주택정책, 부동산금융 등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지역별 계층별 주거서비스격차 완화방안 연구(I): 주거서비스지표의 개발 및 평가」(2005), 「서울 강남주택시장 구조분석 연구」(2005), 「주택수요조사 연구」(2005), 「고령화 사회 노인주거의 현황과 정책과제」(2004), 「보

유세제개편에 따른 임대주택 조세지원 합리화방안」(2004),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개편방안」(2003), 「주택후분양제도의 조기정착 방안 연구」(2003), 「한국의 주택」(2002) 등이 있다.

채미옥 선임연구위원

공학 박사, 서울시립대학교

환경부 국토환경정보전자문위원, 해양수산부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 문화재청 고도보존실무위원, 중앙지적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토지정책, 부동산평가, 토지정보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산지관리제도의 개선방향」(2005), 「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정책수단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2004), 「토지적성평가제도의 개선방안 연구」(2003), 「토지이용규제제도과 환경규제제도의 연계성 확보방안」(2002),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연구」(2001) 등이 있다.

정희남 연구위원

정책학 박사, University of Hawaii

대통령비서실 경제구조조정기획단에서 활동한 바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 및 토지정책, 토지 및 부동산시장과 법제, 부동산금융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토지관련 부담금제 개선방안 연구」(2006), 「미래지향적 도시계획과 합리적 토지이용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2005), 「토지규제개혁 추진과제」(2004), 「공공택지 및 분양주택 공급제도 개선방안」(2004),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편방안」(2003), 「지역지구제의 행위규제 분석연구」(2003, 2002) 등이 있다.

진정수 연구위원

행정학 박사, 건국대학교

현 한국주택학회 이사이며, 행정자치부 지방공사 경영평가위원 및 연구원의 연구조정팀장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주택정책 및 지역개발이며, 주요 연구실

04

적으로는 「지방분권시대의 주택 거버넌스체계 정립방안 연구」(2005),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실현방안 연구」(2005), 「개발이익의 발생규모와 영향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1999),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1998), 「21세기 주택정책의 발전방향」(1997)를 수행하였으며, 「철원 평화시 건설 기본구상」(2004~2006) 등을 연구 중에 있다.

지대식 연구위원

행정학 석사, 서울대학교

현재 건설교통부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위원이며, 재정경제부 국유재산분과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부동산정책, 토지관리 및 도시 행·재정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국공유재산 관리체계의 효율화 방안 연구」(2004), 「부동산 관련 세제의 정비·개선방안 연구」(2003), 「토지부문 규제개혁방안 : 비전과 Action」(2002), 「고속도로 접도구역 지정범위 조정 및 매수청구제 도입방안 연구」(2002), 「개발사업으로 인한 도로개선비용 부담기준 작성」(2001) 등이 있다.

김근용 연구위원

경영공학 석사, 한국과학기술원

현재 한국주택학회 학술부위원장 겸 이사, 국무총리실 정책평가위원회 전문위원, 감사원 특별조사국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부동산 시장 및 정책, 부동산금융이며, 주택동향팀장을 역임했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배분체계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2004),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개편방안 연구」(2003), 「주택사업 유형별 지원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2002) 등이 있다.

김혜승 연구위원

주거학 박사, 경희대학교

「임대료보조제도 확대도입방안 연구」(2004), 「주거복지 지원 및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2004), 「주택후분

양제도의 초기정착방안 연구」(2003),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개편방안 연구」(2003), 「주택종합계획(2003~2012) 수립연구」(2003), 「부동산시장 구조모형 연구」(2002), 「시장소외계층을 위한 주택정책 수립연구」(2002), 「전월세 주택시장 조사연구」(2000, 2001, 2002),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임대료보조에 관한 연구」(2001), 「주택시장 경기동향 및 단기전망 연구」(2000), 「서민주거안정과 주거기준달성방안 연구」(1999), 「주택시장구조 변화와 신주택정책방향 연구」(1998) 등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최혁제 연구위원

행정학박사, 건국대학교

국무총리 물관리정책위원회 전문위원, 부패방지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낸 바 있으며, 경기도 광주시 도시계획위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토지정책 및 환경정책이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유휴농지의 효율적 활용·관리방안 연구」(2005), 「지속가능한 하구역 관리방안 연구」(2005), 「농지규제 완화에 따른 투기방지방안 연구」(2004), 「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정책수단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2004),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농지이용관리제도의 발전방향」(2003), 「농지제도 개선방안 연구」(2003) 등이 있다.

천현숙 연구위원

사회학 박사, 연세대학교

건설교통부 자체심사평가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주택학회 이사, 주거복지연대 정책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주거복지 및 임대주택정책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개편방안 연구」(2003),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방안 연구」(2002), 「수도권주택건설과 인구집중」(2001) 등이 있다.

최수 책임연구원

도시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서울시립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토지 및 주택정책, 토지 및 주택시장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토지관련 부담금제 개선방안 연구」(2005),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실현방안 연구」(2005),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위한기반정비 연구」(2004), 「부동산관련 세제의 정비·개선방안 연구」(2003), 「농지제도 개선방안 연구」(2003) 등이 있다.

조판기 책임연구원

행정학 석사,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행정자치부 자체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주택·도시정책이며, 특히 도시의 물적 기반이 형성되어 온 과정과 요인에 대한 관심이 많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공공택지 조성 및 공급제도 발전방안 연구」(2004), 「택지개발지구 자족성 강화방안 연구」(2004), 「도시개발의 재정영향분석 연구」(2002), 「서민주거안정과 주거기준 달성연구」(2002), 「도시경쟁력 비교분석 연구」(1998) 등이 있다.

강미나 책임연구원

경제학 박사,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주요 연구분야는 주택정책 및 부동산 시장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서울시 강남주택시장의 구조분석 연구」(2005),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금융역할강화방안」(2005),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향상 및 부동산시장 안정 기반 구축 연구」(2005), 「주택정책 전환에 따른 정책통계기반 구축」(2004), 「부동산시장 및 정책동향」(2004), 「고령화 사회 노인주거문제의 현황과 정책방안」(2004),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전망체계 구축연구」(2003) 등이 있다.

김승중 연구원

법학 박사과정 수료, 서울시립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토지법제와 토지정책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유희농지의 효율적 활용 관리방안 연구」(2005), 「부동산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반정비연구」(2004),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도 개편방안」(2003), 「토지의 공익과 사익의 조정에 관한 연구(II)」(2002) 등이 있다.

송하승 연구원

도시계획학 석사, 연세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계획 및 정책, 토지정책이며, 주요 연구로는 「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산지관리제도의 개선방향」(2005), 「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정책수단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연구(2004)」,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국토공간구조의 변화전망 및 대응방안 연구」(2003) 등이 있다.

박천규 연구원

경제학 석박사통합과정 중, 한양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주택정책과 부동산시장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한 주택산업 발전방향 연구」(2005), 「부동산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반정비연구」(2004),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연구」(2004) 등이 있다.

05

c h a p t e r

GIS연구센터

1) 연구실 소개

GIS연구센터는 새로운 정보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GIScience 지식교류 네트워크의 중심(GIS Hub)이 되고자 하며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신지식 창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아젠다 발굴 및 실사구시 방안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GIS 계획 및 정책 수립을 연구·지원하고, 계획 시행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누구나 GIS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게 하는 기반이 마련될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가 GIS 추진주체 사이의 효율적인 협력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GIS 활용전략 및 개발방법론을 연구 발전시켜 GIS 기반의 전자정부/전자지방정부 구현방안을 마련하고, GIS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마련하며, 나아가 사이버국토 건설, 유비쿼터스(時空自在) 세상을 창조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국가기초지리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산 및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정 수준의 품질유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공간정보를 활용하고 분석하는 방법론을 정립하여 합리적인 국토이용 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 국가GIS 계획·정책의 수립 / 모니터링 / 평가 연구

- 국가GIS 계획·정책 수립지원 연구
- 국가GIS 운영실태 조사 및 분석 연구
- 국가GIS 성과측정을 위한 평가체계 연구
- 국가GIS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방안 연구
- GIS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연구

■ GIS 기반의 유비쿼터스 세상 창조 연구

- GIS 활용전략 및 개발방법론 연구

- GIS 기반 전자정부 / 전자지방정부 구현방안 연구
- 국가GIS의 상호운용성 확보방안 연구
- GIS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 유비쿼터스(時空自在) 세상 창조 방안 연구

■ 공간정보 생산·분석 연구

- 국가기초지리정보 생산·품질관리 연구
- 공간정보 분석 방법론 연구
-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연구
- 국토이용 모니터링 방법론 연구
- 북한지리정보구축방안 연구

■ 주요행사

- GIS 국제세미나 개최(1996~)
- GIS KOREA 대회 개최
- GIS 관련 세미나 개최
- GIS 중앙교육센터 운용

2) 연구진 소개

최병남 연구위원

경영정보공학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현재 GIS연구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국가지리정보체계 추진위원회(총괄조정분과위원회) 위원, 사회간접자본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간사,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대외협력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GIS 및 MIS이다. 주요 연구실적으로 「시공자재의 세상을 향한 사이버국토 창조방안(III)」(2005), 「시공간통합 국토 시뮬레이션모형 개발 연구(I)」(2005),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GIS활용 방안 연구」(2004), 「토지종합정보망 구축 및 운영관리 연구」(1998~2004), 「국토이용모니터링체계 구축방안 연구」(2003), 제2차(2000) 및 제3차(2005) 「국가GIS기본계획 수립 연구」 등 다수가 있다.

정문섭 연구위원

지리정보공학 박사과정 수료, 인하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국토정보화 및 GIS정책이다. 국가정보화 예산심의위원회와 국가GIS추진위원회 지리정보·지적정보·기술개발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 「지식정보화시대의 디지털통합국토 구상 연구」(2005), 「국가GIS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2004), 「국토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추진전략 수립 연구」(2003), 「국가공간정보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계획 수립연구」(2003), 「국가GIS 평가방안 및 시행계획 수립 방안 연구」(2002), 「GIS를 이용한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추진전략 수립 연구」(2000) 등 다수가 있다.

사공호상 연구위원

도시계획학 박사, 서울시립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국가GIS정책, GIS&RS 응용이다. 한 국지리정보학회 상임이사, 안양대학교 대우교수로 활동 중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남북교류증진을 위한 북한지리정보 구축방안 연구」(2005), 「제3차 국가 GIS기본계획 수립 연구」(2004), 「국토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추진방안 연구」(2003), 「원격탐사와 GIS의 연계

활용방안 연구」(2002), 「GIS 온라인교육 도입방안 연구」(2002), 「인공위성영상자료를 이용한 국토자원분석 연구」(2000) 등 다수가 있다.

이종열 연구위원

지리학 박사, West Virginia University

주요 연구분야는 원격탐사, GIS, 도시 및 지역분석이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이용한 토지이용/피복분류방법 연구」(2003~2005), 「토지 정보 활용성제고를 위한 3차원 위성영상정보 구축연구」(2005), 「국토이용모니터링방안연구」(2003), 「리모트센싱을 이용한 필지별 토지이용현황 조사방법연구」(2002), 「지역 간 투입산출분석모형개발연구」(2001), 「공간계획을 위한 공통주제도 수치지도화 방안연구」(1996), 「수도권 공간구조 재편방안 연구」(1992), 「수도권 신도시건설 파급효과분석」(1990) 등 다수가 있다.

김정훈 연구위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University of Newcastle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계획, GIS와 U-City다. 안양대학교 겸임교수, 각급 지방자치단체 자문 및 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 「개발가능지의 합리적 선정을 위한 토지형상기준 도입방안」(2005), 「수도권 개발수요 및 가용지 분석을 통한 효율적 토지수급 방안 연구」(2005), 「시설물관리 범용시스템을 활용한 도시정보체계 구축방안 연구」(2004), 「도시계획정보체계 시범사업 II」(2003), 「도시계획정보체계 시범사업 I」(2002) 등 다수가 있다.

박종택 책임연구원

사회학 석사, 부산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국토정보 및 국가GIS정책이다. 주요 연구실적으로 「방재국토 구축을 위한 GIS 활용방안연구(I)」(2005), 「국가GIS중장기 정책방향 연구」(2004), 「2004년 국토조사사업연구」(2004), 「국토종합정보체

계 구축 및 추진전략 수립연구(2003), 「지리정보기반의 지역 간 격차분석연구(2002), 「GIS사업의 효과측정기법 및 적용연구(2001) 등 다수가 있다.

김대중 책임연구원

현재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GIS, Urban & Regional Analysis Division in Department of Geography, Ph. D 과정 중

한선희 책임연구원

전자계산학 학사, 동국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통계 및 GIS다. 주요 연구실적으로 「時空自在의 세상을 향한 사이버국토 창조방안(II)」(2005), 「제3차 국가GIS 기본계획 수립연구(2005), 「접근불능지역의 지리정보 구축방법(2004), 「지리정보의 정확도측정방법에 관한 연구(2002), 「디지털시대에 대비한 사이버국토 구축전략 연구(2001),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이용한 토지이용실태 분석연구(2001), 「GIS를 이용한 국가통계정보의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1999) 등 다수가 있다.

김미정 책임연구원

지리학 박사, 건국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토지정보화 및 GIS다. 건설교통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 운영관리(2000~2005), 「제2차 국가GIS기본계획 수립연구(2000), 「국토이용 모니터링 구축방안 연구(2003), 「국가지리정보 유통체계 활용촉진방안 연구(2003),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 수립연구(2005) 등 다수가 있다.

임은선 책임연구원

지리학 박사, 건국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공간분석 및 GIS다. 주요 연구실적으로 「시공간 국토시물레이션모형 개발 연구(I)」(2005),

「時空自在의 세상을 향한 사이버국토 창조방안(II)」(2005), 「제3차 국가GIS 기본계획 수립 연구(2005), 「한반도 산맥체계 재정립 연구: 산줄기 분석을 중심으로(2004), 「GIS기반 공간분석방법론 적용 연구(2004), 「국토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추진전략 수립연구(2003) 등 다수가 있다.

김동한 연구원

도시계획학 석사, Illinois State University

주요 연구분야는 국토정보화 및 GIS다. 주요 연구실적으로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GIS활용방안 연구(2004),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활용확대 방안 연구(2004), 「국토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추진전략 수립연구(2003),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활성화 방안 연구(2003), 「국가공간정보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계획 수립 연구(2002) 등 다수가 있다.

서기환 연구원

지리정보학 석사, 경북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공간분석 및 GIS다. 주요 연구실적으로 「남북교류증진을 위한 북한지리정보 구축방안 연구(2005),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 수립연구(2004), 「시설물관리 범용시스템을 활용한 도시정보체계 구축방안 연구(2004), 「국토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추진전략 수립연구(2003) 등 다수가 있다.

06

c h a p t e r

도시혁신지원센터

1) 연구실 소개

도시혁신지원센터(Center for Urban Innovation)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 및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도시의 혁신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설립되었다.

지역중심의 도시혁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문 및 교육지원, 국내의 주요도시 DB축적 등을 통한 디지털 라이브러리 운영, 시민단체 및 일반시민에 대한 학습기회 제공과 함께 도시혁신관련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자문 및 관련공무원 교육

- 지자체 중심의 도시혁신을 위한 지자체의 역량강화 및 시민참여 확대 지원
-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복도시 등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지원을 위한 자문 및 정보제공

■ 도시전자도서관 (UDL, Urban Digital Library) 구축

- 국내외 주요도시에 대한 DB구축
- 혁신도시, 생태도시, 관광도시 등 세계 주요명품도시 정보축적 및 인터넷서비스

■ 도시혁신관련 정책연구 수행

- 혁신도시 기본구상을 위한 방향설정 연구
-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정책 추진방안 연구
- 지방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사업 추진방안 연구

2) 연구진 소개

진영환 선임연구위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Cornell University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본계획」(2005), 「신행정수도 기본구상 및 입지기준」(2003), 「수도권 등 광역도시계획 수립」(2001), 「제4차 국토계획수립」(1999), 「개발제한구역 조정」(1998) 등의 연구를 수행했으며, 국토연구원 부원장, 기획조정실장, 국토계획연구실장, 지역·도시 연구실장을 지냈다.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정책평가위원회 위원, 건설부장관 자문관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지역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이동우 연구위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University of Tsukuba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투자재원 확보방안 연구」(2005),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 구축-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2005), 「자립형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단위 설정연구」(2003)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권영섭 연구위원

행정학 박사, 서울시립대학교

「지역특성화 발전을 위한 혁신 클러스터 육성방안 연구」(2005),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의 지역간 기능분담 방안 연구」(2004), 「지역별 지식기반산업과 지역혁신체제 구축방안」(2003), 「지식기반산업의 입지특성과 지역경제활성화 연구」(2002), 「시범 테크노파크사업과 지역혁신체제 구축」(2001), 「지역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잠재력 제고방안」(2000)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류승한 연구위원

지리학 석사, 동국대학교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잠재력 분석 연구(II)」(2005), 「산업입지 제도개편 방안 연구」(2005), 「환경친화적 산업입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2004), 「Environment-

Friendly Industrial Park Development Guidelines: The Cases of Cikarang and Bitung in Indonesia」(2002)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조판기 책임연구위원

행정학 석사,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행정자치부 자체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주택·도시정책이며, 특히 도시의 물적 기반이 형성되어 온 과정과 요인에 대한 관심이 많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공공택지 조성 및 공급제도 발전방안 연구」(2004), 「택지개발지구 자족성 강화방안 연구」(2004), 「도시개발의 재정영향분석 연구」(2002), 「서민주거안정과 주거기준 달성연구」(2002), 「도시경쟁력 비교분석 연구」(1998) 등이 있다.

정윤희 연구위원

도시공학 석사, 연세대학교

「도시계획결정과정과 사회적 정의에 관한 연구」(2004), 「지역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체제 구축 및 운용방안」(2003),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유형별 입지특성과 지역연계 연구」(2002)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07

c h a p t e r

연구지원부서

1) 지원부서 소개

연구지원부서는 연구혁신본부, 행정실, 대외협력팀, 정보자료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혁신본부는 연구 전반에 대한 장·단기 업무의 기획, 연구원의 예산편성 등을 주요업무로 하며, 내부혁신을 고취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행정

실은 연구와 관련된 사무행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외협력팀은 홍보 및 대외기관 간 협력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정보자료팀은 정보네트워크와 도서관, 출판물 기획·편집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2) 주요 연구진 소개

김영표 선임연구위원, 연구혁신본부장

도시계획학 박사, 경원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토지정책, 국토정보화, GIS, 공간분석 분야이다. 「우리산맥바로세우기포럼」 상임대표 등으로 활동 중이며, 주요 연구실적은 「시공간통합 국토정책시뮬레이션모형 개발연구」(2005), 「한반도 산맥체계 재정립 연구」(2004), 「時空自在의 세상을 향한 사이버국토 창조방안」(2004), 「GIS기반 공간분석방법론 개발연구」(2003), 「국토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추진전략 수립연구」(2003),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이용한 토지 이용실태 분석연구」(2001), 「국공유지 관리 및 효과적 활용방안」(1995), 「국토정보 전산화 기본구상」(1991), 「토지공개념 연구」(1989), 「지역간 투자파급효과 측정모형 개발」(1988), 「현행 개발이익환수제도와 개선방안 연구」(1983), 「대도시 적정규모에 관한 연구」(1980) 등 다수가 있다.

조남건 연구위원, 혁신전략팀장

공학 박사, 서울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SOC 투자평가, 고속철도 영향분석, 교통안전 정책 및 평가 등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관련 기본조사」(2005), 「창선삼

천포 대교 건설공사 사후평가연구」(2004), 「제2차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 및 추진계획 수립연구」(2004), 「서해안선 외 2개 노선 고속도로 건설공사 사후평가 연구」(2004),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국토공간구조의 변화전망 및 대응방안 연구」(2003), 「고속도로 확장투자계획 수립 및 효과분석 연구」(2002), 「국토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도로망체계 구축방향」(2002), 「지방5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 수립연구」(2001) 등 다수가 있다.

이수욱 연구위원, 연구조정팀장

문학 석사, 한양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건설 및 부동산 정책이며, 주요 연구실적은 「정부공사 발주제도의 다양화 방안 연구」(2002), 「건설사업관리제도 운용방안 연구」(2001), 「접도구역 지정제도 개선 연구」(2000), 「제4차 국토종합계획」(1999) 등 다수가 있다.

신동빈 책임연구원, 정보자료팀장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공학 박사, 연세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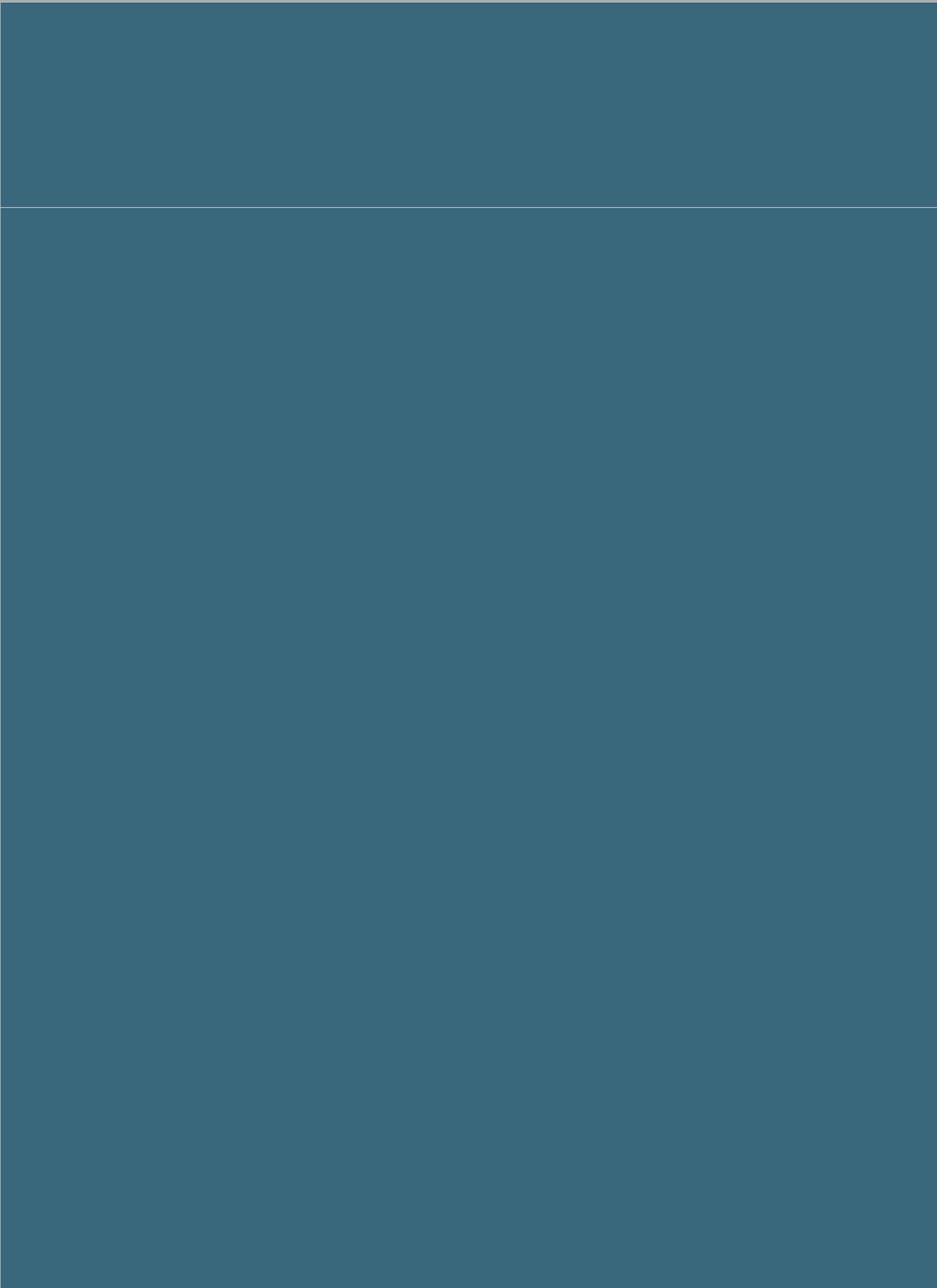
주요 연구분야는 국가GIS정책, 지리정보유통, GIS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분야이다.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와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의 이사로 활동 중이며, 주요 연구실적은 「2004년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개선방안 연구」(2005),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활성화 방안 연구」(2003),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사업 확대추진 방안 연구」(2003), 「기본지리정보구축 추진전략 수립 연구」(2002), 「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 감리사례 연구」(2002), 「제1차 국가GIS사업 백서 연구」(2002), 「도로와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시범사업 연구」(2002) 등 다수가 있다.

변세일 연구원

경제학 석사, 경북대학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혁신 클러스터 육성방안」(2003), 「지역별 지식기반산업 육성과 지역혁신체계구축방안」(2003), 「지역 간 산업연관표 작성연구(III)」(2003)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IV 연구지원사업

1. 국제협력사업	332
2.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개념 국제공모	333
3. 21세기 국토포럼	334
4. 제4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334
5. 제10회 전국 초등학교생 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335
6. 기획단행본 발간	335

1) 국제협력사업

■ 학술교류/ 세미나

우리나라의 국토관련 정책수립 및 국토개발에 기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각종 개발관련 연구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은 2005년 이집트와의 공동연구사업인 '이집트 토지개발정책 평가감시능력 강화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는 현재 급속한 인구증가 및 도시집중화를 겪고 있는 이집트로 하여금 계획적인 토지관리 체계를 구축,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 이용 및 보존을 위한 기술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기간은 2005년 6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총 16개월이다. 또한 2005년 한 해 동안, 한일 환동해권 세미나(3. 9~10, 일본 토야마현), 한중 토지정책 연구 국제워크숍(10. 11~14, 중국절강대학교), 제14차 한일 건설경제워크숍(11. 15~17, 일본 도쿄) 등 다수의 국제 세미나 및 워크숍을 통해 해외 연구기관들과의 글로벌 R&D 네트워크 구축, 정보교환 및 연구협력 등 국제적 연구패러다임 구축 노력을 기울였다.

■ 해외연수생초청 교육프로그램

국토연구원은 매년 2~3차례 해외연수생초청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도상국 공무원들과 한국의 국토 개발 경험 및 정책사례를 공유해오고 있다.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국토 및 지역개발 전략 수립에 기여하기 위한 동 연수사업은 2005년 한 해 동안 세 차례 실시되었다.

6월에 진행된 '한국-싱가포르 도시교통망 계획 및 디자인(2005. 6. 11~21)'은 특히,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목표로, 도시교통계획기법 등의 경험과 노하우를 아시아 개도국에 전수, 이들 국가들에서의 도시교통문제 해결방법 모색 기회 제공 및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캄보디아, 피지, 라오스, 몽고, 미얀마,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스리랑카, 베트남 등 총 9개국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한국의 경제발전과 도시 및 지역개발 정책을 주

요내용으로 14일간 진행된 8월 연수(2005. 8. 17~30)에서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이라크, 모로코, 미얀마, 네팔,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슬로바키아, 스리랑카 등 14개국 총 22명의 인원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에 대한 소개와, 국토개발, 도시개발, 주택공급경험 등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전후 복구사업이 절실한 이라크의 인도적 재건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히 마련된 11월의 '지역개발정책(2005. 11. 21~12. 4)에는 이라크 아르빌 쿠르드 지방자치정부 공무원 15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라크의 전후 복구 및 국토재건 지원을 목표로, 국토개발, 지역개발, SOC 정책, 주택정책 등 다양한 도시개발관련 강의와 현장견학 등의 교육이 실시되었다.



▲ '한국-싱가포르 도시교통망 계획 및 디자인' 교육



▲ 개발도상국 중견공무원 연수교육

2)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개념 국제공모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은 국토의 공간구조를 개편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는 국토공간계획 및 관리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세계적 모범도시로 건설하기 위하여 도시 이미지, 도시골격 등 도시개념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자 국제공모를 개최하였다.



출품작 심사

■ 공모일정

2005. 10. 18~2005. 10. 31 작품접수

2005. 11. 1~2005. 11. 10 사전심사 및 심사준비

2005. 11. 11~2005. 11. 14 작품심사

2005. 11. 13 국무총리 방문

2005. 11. 15 수상작 발표 및 기자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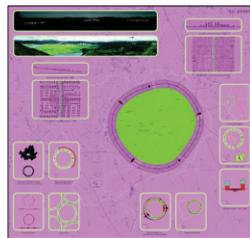
2005. 12. 19 시상식 및 수상작 발표회

2005. 12. 12 순회전시회 및 사이버전시회
([http:// vod.macc.go.kr:8088](http://vod.macc.go.kr:8088))

■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개념 국제공모 수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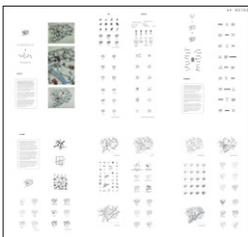
1. The City of the Thousand Cities
안드레스 페레아 오르테가 - 스페인



2. The Orbital Road
장피엘 뒤리그 - 스위스



3. Thirty Bridges City
송복섭 - 한국



4. Dichotomous City
김영준 - 한국



5. A Grammar for the City
피에르 아우렐리 - 이탈리아

3) 21세기 국토포럼

전국 국토관련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정보교환, 국토정책관련 연구의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합리적 대안마련을 위해 1,200여 명의 회원과 약 5,000명의 국토계획 관련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여 전문가 '인력 풀(pool)'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국토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상호 토론하는 장을 매년 마련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바람직한 균형발전을 위한 워크숍(6. 28~6. 29)' 개최를 통하여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에 대한 내용 등을 발표하고,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혁신도시와 국가균형발전, 기업도시 추진현황 및 발전방향, 신활력지역 활성화 등에 대해 주제발표와 토의를 하였다.

2005년도의 주요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다.

- 격주 지역뉴스 총 25호 발간
: 2005. 1. 12(251호)~2005. 12. 28(275호)
- 제16차 공동대표회의
: 2005. 12. 28
- 바람직한 균형발전을 위한 워크숍
: 2005. 6. 28~6. 29
- 지속가능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워크숍
: 2005. 10. 19

4) 제4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국토연구 우수논문상은 국토관련 연구의 질을 제고하고 연구의욕을 진작시키고자 마련한 제도로서, 한 해 동안 게재된 논문들 중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2005년도에도 엄격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각 분야별 선정위원을 위촉하여 우수논문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국토연구 게재논문 39편 모두를 수차례에 걸쳐 심사하여 3편의 우수논문을 선정하였다.



구분	연구자	논문제목
최우수상	정의철(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심종원(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박사과정)	아파트 전·월세 구성 비율 결정요인 분석
우수상	김의준(서울대학교 지역사회개발전공 부교수) 이호민(한국토지공사 연구원) 박승규(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수도권 제조업 집적경제 분석
	안종천(건국대학교 지리학과 강사)	상장기업 네트워크의 공간적 특성과 시장진출 과정

5) 제10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우리 국토의 주역이 될 어린이들에게 국토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국토사랑 글짓기대회가 제10회를 맞이하였다. 이번 대회에는 총 342개 초등학교, 1,734편의 작품이 응모하여, 3차에 걸친 엄격한 심사를 한 결과 대상 1편, 금상 2편, 은상 4편, 동상 50편, 우수상 303편이 개인상을 받았으며 지도교사상 3편, 단체상 3편 등도 수여되었다.



시상식 행사

- 주최: 국토연구원, 동아일보사, 어린이동아
- 협찬: 삼성물산(주) 건설부문, (주)한국공간정보통신
- 후원: 교육인적자원부, 국토지리학회
- 기간: 2005. 8. 25~9. 30
- 시상식: 2005. 10. 30, 국토연구원 강당

6) 기획단행본 발간

■ 공간이론 석학과의 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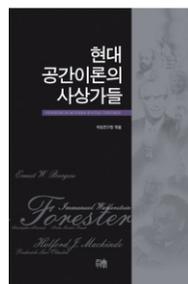
세계적인 공간연구자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학문적 배경과 연구주제에 따라 공간이론, 공간경제, 공간계획, 공간정책(도시·지역·환경), 공간정보 등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37인에 달하는 석학들의 최신 이론과 방법론을 집대성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크라उन판 / 740P / 양장

■ 현대 공간이론의 사상가들

2001년 발간되었던 「공간이론의 사상가들」의 후속편으로서 주요한 현대 공간이론 학자 38인을 지리·공간, 도시계획, 건축·설계, 정치경제, 도시생태, 사회·문화, 지역개발의 7개 분야로 분류하고 그들의 삶과 주요이론, 연구의 배경, 학문적 업적, 평가 등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신국판 / 650p / 양장

부록 I. 정기간행물 목차

1. 국토(279호~290호)	338
2. 국토연구(44권~47권)	347
3. 건설경제(43권~46권)	349
4. 국토정책Brief(78호~97호)	351

1. 국토(279호~290호)

■ 279호(2005. 1)

국토시론_ 국가균형발전의 효과적 추진	이규방
짧은 글 긴 생각_ 천재와 시스템	오귀환
특집_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추진현황과 전망	
1.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비전과 전략	김동주
2. 지방분권의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	김성배
3. 동북아시대 구상의 의미와 전망	이정협
4. 농산어촌 지역개발정책의 추진현황과 과제	송미령
5. 지속가능발전 시책추진 성과와 향후 방향	남재우
용어풀이 77_ 신활력지역	박인권
정책해설	
1. 건설 산업의 선진화 전략	전형필
2. 기업도시개발특별법 해설	김정렬
지역통신_ "2012 여수 세계박람회" 국가계획 확정 의	
이슈와 사람 4_ 국가의 백년대계 이끈다는 사명감 필요 - 분석남 경제사회연구회 이사장	박현주
세계의 도시 77_ 다양한 기능을 갖춘 미래도시를 꿈꾼다, 인도의 델리(Delhi)	배급주
가던 길 멈추고	김선규
@ - interview_ 앤드류 손리(Andrew Thornley) : 도시계획에 대한 정치사회학적 연구	손정원
해외리포트_ 오사카의 '방재마치즈쿠리'와 주민·NPO활동	임준홍
국토논단_ 일본의 경관법 제정과 그 의미	오민근
살기좋은 우리동네 44_ 나, 너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드는 살기 좋은 동네	김은희
기고_ 샤를 드골(Charles De Gaulle)과 그의 국토정책	Paul Claval · 정옥주
KRIHS FOCUS	
1. 하성덕 현대아산(주) 상무초청 특강 - 민간도시 개발의 추진방향과 과제	안용진
2. 평영교통제도개선을 위한 공개 세미나	정선영
KRIHS 보고서	
1. 층격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 : 「국토경관보호를 위한 경관층격 지표 개발 연구」	김기호
2. 현실적 부동산가격지수 찾기 위한 방법론적 모색 : 「부동산 시공간자료를 활용한 부동산가격지수 추정에 관한 연구」 노태욱	노태욱
간추린 소식_ 2004년 교통문화지수 조사 결과 발표 외	
독자와 함께_ 폐광지역의 현실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59_ 석축의 성전(聖殿) 남한산성	박영순

■ 280호(2005. 2)

국토시론_ 노인 주거문제와 대응책	정희수
짧은 글 긴 생각_ 유비쿼터스 시대의 국토를 생각한다	김용섭
특집_ 고령화사회와 대응과제	
1. 고령화사회의 노인인구와 노인가구의 변화와 전망	김정석
2. 고령화사회 노인주거실태와 주거의식	송하승
3. 외국의 노인주거정책	이인수
4. 고령화사회에 대응한 노인주거정책의 방향 및 과제	윤주현
5. 실비노인주택 보급방안	박신영
용어풀이 78_ 노인주거복지시설, 역모기지제도	송하승

지역통신_ 2005년 강원도 광역교통망 구축, 1조 3,417억 원 집중투자 외	
기획연재_ 해외신도시 교통시스템(1) 네덜란드 알미르(Almere) : 세계 제일의 자전거 동선시스템 운영	오성호
이슈와 사람 5_ 고령자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대책마련 힘들 터 -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김용의 위원장	윤주현
세계의 도시 78_ 시간이 누적되는 도시, 카트만두(Kathmandu)	이상유
가던 길 멈추고	김선규
@- interview_ 유르겐 피취 : 지식사회와 지속가능한 발전	김정곤
해외리포트	
1. 호주 대도시의 성공적 버스전용도로 구축사례	정진규
2. 일본 방재체제의 현황과 시사점	심우배
정책해설_ 새로운 주택공급제도의 주요내용	이명섭
KRIHS FOCUS	
1. 인프라 21 세미나 : 국가 ITS와 국토연구원의 위상과 역할	이경아
2. 버스교통 활성화와 교통환경개선에 관한 제언 - 「BRT와 혼잡통행료의 통합시행에 따른 교통환경개선효과에 관한 연구」	최희균
간추린 소식_ 국민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개정	
독자와 함께_ 환경을 배려한 개발정책이 필요하다	최윤석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60_ 남한강공과 산성리 마을	박영순
■ 281호(2005. 3)	
국토시론_ 기후변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곽결호
짧은 글 긴 생각_ 길과 아이	안준철
특집_ 기후변화와 국토관리	
1. 기후변화의 현황과 전망	권원태
2. 기후변화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각국의 대응전략	김정인
3. 기후변화가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배덕효
4.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와 도시방재	심우배
5. 기후변화에 대비한 국토관리	서태성
용어풀이 79_ 교토의정서(京都議定書, Kyoto Protocol)	심우배
정책해설_ 지역균형개발 제도 개편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김경욱
이슈와 사람 6_ 정부·기업·시민사회 간 공론의 장 활성화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고철환 위원장	김선희
세계의 도시 79_ 만다라를 형상화한 도시, 티베트의 라싸(Lhasa)	김중은
가던길 멈추고	
@- interview_ 피터 고든(Peter Gorden) : 도시경계와 부동산개발에 대한 새로운 시각	강창덕
서평_ 공간이론 석학과의 대화	윤대식
해외리포트_ 미국의 공간정보기반(NSDD) 구축현황과 시사점	정문섭
우리 산맥 바로세우기 1_ 다시 찾은 “백두대산줄기”	김영표
KRIHS FOCUS_ 권원태 기상청 기후연구실장 초청 특강 - 기후변화의 과학적 이해 : 현황과 전망	박인권
지역통신_ 동인천역세권 2009년까지 개발 외	
기획연재_ 해외신도시 교통시스템(2) 부킷 판장과 생강 : 싱가포르의 편리한 경전철 시스템	오성호
KRIHS 보고서	
1. 수요와 공급요인을 고려한 북한 경제특구 활용전략 : 「동북아협력시대의 북한 경제특구 활용전략」	오승렬
2. 공공공사 발주능력에 기초한 발주행정의 차등분권화 방안 제시 : 「공공공사 발주행정의 분권화 방안 연구」	이상호
간추린 소식_ 1월 주택건설실적, 예년대비 109% 증가 외	

독자와 함께_ 대화와 타협의 결실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61_ 연주봉 철옹성(連珠峰 鐵甕城)

황호민
박영순

■ 282호(2005. 4)

국토시론_ SOC 투자, 이제는 효율이어야 한다
짧은 글 긴 생각_ 안동하회마을과 평양의 풍수 금기
특집_ SOC와 민간투자사업

정해방
성동환

1.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과 SOC 투자정책 방향
2. 민간투자제도의 변화와 향후 전망
3. 건설업계에서 본 SOC민간투자의 주요 쟁점과 정책방향
4. BTL 사업추진 방향
5. 인프라펀드의 상장허용과 기대효과

정일호
송병록
왕세종
안도걸
정유경

용어풀이 80_ BTL(Build-Transfer-Lease)
정책해설_ 2005년도 주택종합계획
국토논단_ 지역산업진흥센터의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 기업체 실무자 · 전문가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지역통신_ 진해 해양공원 개관 외

권혁진
정용연
차미숙

이슈와 사람 7_ SOC 적기확충과 토지정책의 혁신 실현해야 - 진념 전 재정경제부 장관
세계의 도시 80_ 존재하지 않았던 제국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Buenos Aires)
가던 길 멈추고

정일호
곽재성
김신규

@ - interview_ 하오 쇼우 이(Hao Shou Yi) : 중국의 지역경제 발전전략과 정책
해외리포트_ 중국의 부동산 개발철자

김상욱
박인성

우리 산맥 바로세우기 2_ 전통지리서에 나타난 산줄기 체계
기획연재_ 해외신도시 교통시스템(3) 런던 도크랜드(Docklands)의 경전철 시스템
KRIHS FOCUS_ 북한의 도로망 실태와 과제 : 북한 연구회 정기세미나
KRIHS 보고서

김영표
오성호
이성수

1. 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정책수단의 종합분석 : 「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정책수단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서순탁
2. 지역산업 육성은 국가경쟁력의 기틀 : 「지역의 특성화 발전을 위한 산업별 수위도시 육성방안 연구」 김갑성

간추린 소식_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 내 국민임대주택단지 본격 개발 외
독자와 함께_ 국토정책에 있어 “참여행정”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62_ 수어장대와 청량당

하혜경
박영순

■ 283호(2005. 5)

국토시론_ 전문가 참여, 국책사업 성공의 첫걸음
짧은 글 긴 생각_ 흙의 생명력
특집_ 국책사업과 갈등관리

진영환
정현주

1. 국책사업 사회갈등의 원인과 특징
2. 국책사업 갈등관리 사례분석
3. 갈등관리 법제의 구조와 과제
4. 도로사업과 국민참여제도(PI) 도입방안
5. 갈등관리를 위한 사회교육 체계 구축

박형서
김신희
전재경
권영인
김광구

용어풀이 78_ 공공기관의갈등관리에관한기분법률, 갈등영향분석
우리 산맥 바로 세우기 3_ 한반도 산줄기의 창지개명(創地改名) 과정

정윤희
김영표

<p>국토논단_ 공공갈등 예방을 위한 갈등영향분석 : 미국사례를 중심으로 신창현</p> <p>이슈와 사람 8_ “사회구성원 간 합의 거처야 갈등유발 방지” - 정진승 KDI 국제정책대학원장</p> <p>세계의 도시 81_ 적도 아래 흐르는 차가운 물, 나이로비(Nairobi)</p> <p>가던 길 멈추고</p> <p>@ - interview_ 롭 코에프(Rob Koepp) : 창조적 클러스터에서 기업이 정신의 역할</p> <p>해외리포트_ 영국의 상업개선티구(BID) 도입</p> <p>기고_ 주택청약제도, 자세히 들여다보기</p> <p>지역통신_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외</p> <p>KRIHS FOCUS</p> <p>1. 최규성 (주)한국ESRI 이사 초청특강 -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의 GIS 역할</p> <p>2. 이영훈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초청특강 - 북한의 시장화와 경제개혁의 전개</p> <p>기획연재_ 해외신도시 교통시스템(4) 네덜란드 델프트(Delft)의 집중형 환승 체계와 신규 도시의 조화</p> <p>KRIHS 보고서</p> <p>1.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지표체계의 설정과 분석 :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잠재력 분석연구(I)」</p> <p>2. 정보통신기술산업의 지역 간 균형발전 전망 :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의 지역 간 기능분담 방안 연구」</p> <p>간추린 소식_ 주거복지실현을 위한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 외</p> <p>독자와 함께_ 휴경농지에 생명을 불어넣자</p> <p>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63_ 허물어진 남한외성(南漢外城)</p>	<p>박형서</p> <p>양철준</p> <p>김선규</p> <p>기정훈</p> <p>김미경</p> <p>김종신</p> <p>김동한</p> <p>이성수</p> <p>남기범</p> <p>권업</p> <p>양원준</p> <p>박영순</p>
<p>■ 284호(2005. 6)</p>	
<p>국토시론_ 국토관리수단, 무엇이 현안인가</p> <p>짧은 글 긴 생각_ 컨버전스형 인간</p> <p>특집_ 계획적 국토관리수단의 활성화</p> <p>1. 국토관리수단의 운용현황과 보완과제</p> <p>2. 제2중지구단위계획제도의 정착방안</p> <p>3. 개발행위허가제의 개선방안</p> <p>4. 기반시설연동제의 운용현황과 활성화방안</p> <p>용어풀이 82_ 토지적성평가 평가기준 표준화 방법</p> <p>해외리포트_ 미국의 토지적성평가(LESA) 시행현황</p> <p>이슈와 사람 9_ “참여와 협력에 의한 국토관리 시스템 구축할 예정” -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p> <p>세계의 도시 82_ 중세의 미와 현대감각의 조우, 코펜하겐(Copenhagen)</p> <p>가던 길 멈추고</p> <p>@ - interview_ 마릴린 테일러(Marilyn Taylor) : 영국의 혼합복지와 커뮤니티의 역할</p> <p>국토논단_ 지식외부효과의 공간적 특성과 지속가능한 지역혁신체제의 구축</p> <p>지역통신_ 고성군 해양심층수 개발사업, 연구센터 완공으로 본격화 외</p> <p>기획연재_ 해외신도시 교통시스템(5) 프랑스 릴(Lille)의 세계 최초 무인운영 시스템, VAL</p> <p>우리 산맥 바로세우기 4_ 광복 이후 남북한 학계에서 제시한 한반도 산줄기</p> <p>KRIHS FOCUS</p> <p>1. GIS KOREA 2005대회 - 유비쿼터스 세상을 향한 국가GIS 세미나</p> <p>2. 강인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장 초청특강 - 남북 정보통신교류협력 추진 방안</p> <p>3. 이주현 SK C&C 차장 초청특강 - 제주 ITS 및 텔레매틱스사업</p> <p>KRIHS 보고서</p> <p>1. GIS기반 공간분석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유용성 검증 : 「GIS기반 공간분석방법론 적용 연구」</p>	<p>박현주</p> <p>유인식</p> <p>채미옥</p> <p>이희정</p> <p>최희재</p> <p>김형복</p> <p>송하승</p> <p>조춘만</p> <p>채미옥</p> <p>이석우</p> <p>이영아</p> <p>임업</p> <p>오성호</p> <p>김영표</p> <p>한재일</p> <p>이성수</p> <p>한선희</p> <p>홍상기</p>

2. 정보통신기술산업의 지역 간 균형발전 전망 :「하천유역별 오염총량관리제도의 도입에 따른 지역경제 및 토지이용 민동기
간추린 소식_ 판교아파트 청약, 인터넷으로만 12일간 접수 외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64_ 북한산성(北漢山城)

박영순

■ 285호(2005. 7)

국토시론_ 도시제난, GIS로 대비하자

노삼규

짧은 글 긴 생각_ 프린티어 정신

전미옥

특집 : GIS와 방재국토

1. 우리나라 방재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2. 수해저감기술 동향과 GIS 활용
3. 신속한 지진피해평가시스템 구축
4. GIS를 활용한 과학적 재난관리체계 구축방안
5. 방재국토를 위한 통합GIS 구축방안

임정순

최영은

지현철

김경희

박종택

용어풀이 83_ 재난저지공동체, 국가 재난대응 종합훈련

서기환

지역통신_ 전북도, 신청사시대 개막 외

이슈와 사람 10_ "7월부터 집중호우예보와 지진통보가 더 정확하고 빨라집니다" - 신경섭 기상청장

김미정

세계의 도시 83_ 전일도시에서 국가수도, 캔버라(Canberra)

이왕건

가던 길 멈추고

김선규

@ - interview_ 존 젠센(John R. Jensen) : 원격탐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임정호

국토논단_ 특정지역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 내포문화권 개발계획 사례를 중심으로

차미숙

정책해설_ 교통안전법 개정 법률안

최봉기

기획연재 : 최종회_ 해외신도시 교통시스템(6) 친환경적 경전철로 그린도시 건설, 오레스타드(Orestad)

오성호

해외리포트_ 미국의 방재조직 및 재난관리

심우배

KRIHS FOCUS

1. 이상일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초청 특강 - 공간자료분석의 개요
2. 북한포럼 정기세미나 : 북한의 에너지 실태와 향후 과제
3. 지역도시정책포럼 : 도시 및 지역계획가의 위상과 역할
4. 인프라21 세미나 : 교통량 예측을 위한 공간통계학의 응용

이민파

이성수

박경현

정선영

우리 산맥 바로세우기 5_ 지질분석으로 드러난 기존 산맥체계의 문제점

김영표

KRIHS 보고서

1. 부동산시장 선진화는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기반정비부터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기반정비 연구」
2. 삼간 통합형 디지털 신등록 개척을 위한 논리적 근거 제시 :「시공자재의 세상을 향한 사이버국토 창조 방안(I)」

정의철

조우석

간추린 소식_ 금년 5월까지 주택건설실적, 전년 대비 42% 증가 외

독자와 함께_ 공공기관 이전, 당사자들에게도 관심을!

강이화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65_ 북한산성의 총 지휘본부 동장대(東將臺)

박영순

■ 286호(2005. 8)

국토시론_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 선행요건은 무엇인가

고 철

짧은 글 긴 생각_ 바람을 잃어버린 도시

배현주

특집_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

1. 국민임대주택정책의 주요내용과 발전방향
2. 국민임대주택의 지역별 배분과 제도개선

유성용

진정수

3.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 확보	최 수
4. 사회통합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혼합단지 조성	서수정
5. 외국의 공공임대주택정책	박환용
용어풀이 84_ 매입형 국민임대주택	김승중
해외리포트_ 공공과 민간의 도시개발 협력모델 : 미국 타운센터	강창덕 · 엄태호
이슈와 사람 11_ “국민임대주택 건설로 저소득층 주거안정 기해야” - 최재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진정수
세계의 도시 84_ 다양한 문화가 생동하는 주석광산도시, 팔라렘푸르(Kuala Lumpur)	홍석준
가던 길 멈추고	김신규
@ - interview_ 재클라인 휴즈올리버(Jacqueline Hughes-Oliver) : 교통 · 환경과 공간통계학의 접목	허태영
정책해설_ 하천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박종철
국토논단	
1. 남북인프라협력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이상준
2. 프랑스의 대규모 해안관광단지 개발방식 : 랑그독-루시옹과 아키텐 지역을 중심으로	정옥주
KRIHS FOCUS	
1. 일본 게이오대학 후쿠이 히로미치 교수 초청특강 - 일본의 국가GIS 계획	이영주
2. 전문가 워크숍 - 살고 싶은 도시의 비전	황승미
지역통신_ 전라북도 신청사 개청식 외	
우리 산맥 바로세우기 6	
1. 한반도 산지인식체계의 다양성과 과학성	박수진
2. 한반도 산맥체계 재정립 과정과 의의	임은선
KRIHS 보고서	
1.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단초를 마련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	송인성
2. 합리적 하천환경특성 분석을 바탕으로 하천정비방안 제시 : 「자연형하천장비를 위한 하천환경 특성분석연구」	최지용
간추린 소식_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 전략환경평가 처음 도입 외	
독자와 함께_ 부동산 정책의 “나비효과”	김순규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66_ 신라 진흥왕 북한산 순수비 유지	박영순

■ 287호(2005. 9)

국토시론_ SOC 투자, 속도조절은 아직 이르다	정일호
짧은 글 긴 생각_ 푸른 가을 하늘	정현숙
특집_ SOC 투자재원 확보, 충분인가	
1. SOC 투자현황 및 전략 : 사업재원을 중심으로	서훈택
2. 도로사업의 필요성과 추가재원 확보방안	이훈용 · 김호정
3. 철도투자 확대의 필요성과 효율적 추진방안	양근울
4. 외국의 도로투자재원 조달과 시사점	하현구 · 조남건
5. SOC 민자사업 추진방향 : 도로사업을 중심으로	김일환
용어풀이 85_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정선영
정책해설	
1.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백승호
2. 8. 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김채규
이슈와 사람 12_ “국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우선입니다” - 최종찬 전 건설경제부 장관	조남건
세계의 도시 85_ 중국 개혁 · 개방의 교두보, 광저우(廣州)	조순애
가던 길 멈추고	김신규

@ - interview_ 피터 홀(Peter Hall) : 지식사회와 21세기 도시계획	양도식
국토논단_ 문화적 경관개념의 도입과 보호체제 : 일본사례를 중심으로	오민근
지역통신_ 명지대교 본 공사 들어간다 외	
해외리포트_ 일본의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사례	조남건 · 진시현
KRIHS FOCUS	
1. 하천관리제도 개선 공청회 - 하천등급체계 조정방안	이승복
2.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	사공호상
우리 산맥 바로세우기 7_ 우리가 아는 산맥들은 실제 모습과 얼마나 비슷할까	김영표
KRIHS 보고서	
1. 공동개발을 위한 지역 간 협력의 한국형 모델정립과 정책방안 제시 : 「통합국도를 향한 지역 간 공동발전방안 연구(II)」	한표환
2. 저소득층 주거안정,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공공임대주택 배분체계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이상한
간추린 소식_ 시·도 간 운행 광역버스 이용정보 인터넷 서비스 개시 외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67_ 백운봉 암문(暗門) : 위문(衛門)	박영순

■ 288호(2005. 10)

국토시론_ 살고 싶은 도시 · 국토 만들기의 전제	최병선
짧은 글 긴 생각_ 블루오션과 구글어스	이해석
특집_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1. 생활자의 일상성과 살고 싶은 도시	홍형욱
2. 지역공동체 조성과 민관협력	이왕건
3. 도시경관과 열린도시 : “우리 도시로 살러 오십시오!”	김기호
4. 일자리 창출과 인구정착	이은진
5. 일본의 “마치즈쿠리” 사례와 시사점	최일홍 · 이창호
용어풀이 86_ Quality of Life(QOL)	변필성
정책해설	
1.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 · 규칙 제정안 주요내용	신윤근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안석환
지역통신_ 제3회 서해안포럼 군산서 개최 외	
이슈와 사람 13_ “살고 싶은 도시는 풀뿌리 도시계획에서부터” - 강병기 (사)견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대표	박재길
세계의 도시 86_ 작지만 역동적인 기술혁신도시, 오울루(Oulu)	강현수
가던 길 멈추고	김선규
@ - interview_ 우츠팡(Wu, Ci-Fang) : 중국의 경제체제 전환과정과 토지개혁	박인성
해외리포트	
1. 성과주의 도로행정관리체계 국제비교 : 미국, 영국, 일본을 중심으로	이훈기
2. 발바오와 가나자와의 도시매력 증진사례	박세훈
KRIHS FOCUS	
1. 새국토연구협의회 2005 제2차 포럼 - 국토균형발전과 농촌계획	김명수
2. 장봉 길림성 사회과학원 조선 · 한국연구소장 초청 특강 : 중국동북 구 공업지대 진흥전략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	견용수 · 황용선
우리 산맥 바로세우기 8_ 한반도 산맥들을 찾는 데 활용한 공간분석방법론	김영표
KRIHS 보고서	
1. 정의로운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진단리포트 : 「도시계획결정과 사회적 정의에 관한 연구」	김현수

2. 우리 국토, 바른 역사 찾기 : 「한반도 산맥체계 재정립 연구 : 산줄기 분석을 중심으로」	최봉문
간추린 소식_ 8월 중 전국평균 지가상승률 0.45% 외	
독자와 함께_ 생활 속의 정계전을 바란다	전혜정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68_ 인왕산 호랑이와 서울성곽	박영순

■ 289호(2005. 11)

국토시론_ 한반도 일의대수 경제권 구축전략	안충영
짧은 글 긴 생각_ 되살아난 청계천	김동현
특집_ 한반도의 통합적 인프라 구축전략	
1. 북핵 이후 한반도 정세와 남북경협 전망	동용승
2. 한반도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김경술
3. 한반도 교통 네트워크 구축	권영인
4. 한반도 인프라의 통합적 개발전략	이상준
5. 한반도 인프라 개발을 위한 재원조달과 국제협력	윤덕룡
용어풀이 87_ 바세나르 협약(Wassenaar Arrangement : WA)	이성수
정책해설_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김태곤
지역통신_ 탄광지역 2차 종합개발계획 설명회 의	
이슈와 사람 14_ “남북 간 육로연결로 대륙진출 교두보 확보해야” - 박영규 통일연구원장	김경석
세계의 도시 87_ 고대의 향기를 머금은 온천도시, 바스(Bath)	이영희
가던 길 멈추고	김선규
@ - interview_ 피터 로저슨(Peter Rogerson) : 공간통계 연구의 현재와 미래	신정엽
해외리포트_ 일본의 밀집사가지 재생을 위한 관련 정책과 법제	임준홍 · 임정민
우리 산맥 바로세우기 9_ 대동여지도와 닮은 새 산맥지도	김영표
KRIHS FOCUS	
1. 국책사업 갈등관리와 합의형성	김선철 · 조진철
2. 북한포럼 정기세미나 - 북한의 문화재 현황과 실태	이성수
KRIHS 보고서	
1. 주거환경을 고려한 개발밀도론 제시 : 「주거지역개발밀도 설정방안에 관한 연구」	남 진
2. 교통수요 분석의 객관성을 기하기 위한 매뉴얼 : 「교통수요 예측을 위한 기준 및 절차 지침 연구」	이승재
간추린 소식_ 고속도로, 하이패스 확대 개통 의 제10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수상작 및 입상자 명단	
독자와 함께_ 나의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기	김영식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69_ 좌청룡(左靑龍) 낙산성곽(鰲山城廓)	박영순

■ 290호(2005. 12)

국토시론_ 국가균형발전의 특성과 균형발전의 확대를 위한 과제	박양호
짧은 글 긴 생각_ 외갓집에 가고 싶다	정기석
특집_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추진과제	
1.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추진현황과 성과	반장식
2. 혁신주도형 지역발전정책과 개선방향	박형진
3.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개발 전략 : 행정, 기업,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윤대식
4. 수도권정책의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	이동우

5. 낙후지역정책의 추진현황과 과제	김현호
6.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	이원섭
용어풀이 88_ 정비발전지구	박세훈
지역통신_ 전남도청 신청사 개청 외	
이슈와 사람 15_ “사회운동이 미래사회를 결정합니다” - 데이비드 하비 뉴욕시립대학교 인류학과 교수	이원섭
세계의 도시 88_ 불의 신 펠레의 도시, 호놀룰루(Honolulu)	박규택
가던 길 멈추고	김신규
@ - interview_ 데니스 코스그로브(Denis E. Cosgrove) : 경관과 상상의 지리학	진중현
해외리포트_ 중국, 베트남의 경제특구 개발전략	이성수
KRIHS FOCUS	
1. 제10차 GIS 국제세미나 : 유비쿼터스 시대를 향한 국가GIS 추진전략	이영주 · 이미숙
2. 지역도시정책포럼 - 농촌발전의 새로운 방향모색	안용진
3. 북한포럼 정기세미나 - 북한의 환경문제와 환경정책	이성수
우리 산맥 바로세우기 · 최중희_ 한반도산맥 바로 잡으려면 아직도 할 일 많다	김영표
KRIHS 보고서	
1. 전자정부의 지평을 확대한 보고서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GIS활용방안 연구」	오강탁
2. 개발사업 평가작업의 진일보한 성과물 :「국토개발사업의 환경가치 평가기준 설정과 적용에 관한 연구」	권오상
간추린 소식_ 주택건설(인·허가) 실적 전년대비 3.7% 감소 외	
독자와 함께_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함	강태용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70_ 목멱산(木覓山) 봉수대와 눈썹 없는 성곽	박영순

2. 국토연구(44권~47권)

■ 44권(2005. 3)

한국의 도·농문제의 구조와 도·농 순환시스템에 관한 연구	임창욱
도심주거촉진을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제도의 도입효과에 관한 연구	채성주·윤상복
일본사태에 기인한 우리나라 방재도시계획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문 채
도시 간 기반시설 수준 평가 분석에 관한 연구 : 부산시 자매도시를 중심으로	황영우·류태창
공공-민간의 복합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자산유동화의 결합에 관한 연구	이영성·이명훈
아파트 전·월세 구성 비율 결정요인 분석	정의철·심종원
장기입대주택사업의 경제성 분석에 관한 연구	김동운

■ 45권(2005. 6)

자연환경 보호지역의 관리효율성 평가에 관한 연구 : 관리효율성 평가기법 고찰을 중심으로	허학영·안동만
빗물관리의 효율성 제고 방안 : 법령체계 및 제도 중심으로	이승복·김광목
수도권 제조업 집적경제 분석	김의준·이호민·박승규
효율적인 광역교통정책수립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이상건·오성호·정선영
정책네트워크가 정책혁신의 도입 및 확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자동통행요금징수시스템 사례를 중심으로	김성제
고속도로 이용차량에 대한 통행분포 모형의 적합성 연구 : 중력모형과 간섭기회 모형의 비교	노정현·김재진·김태균
중국의 토지수용과 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이영수
역모기지 제도 도입을 위한 고령자 의식에 관한 연구	유선종·구본영
한반도 산맥체계의 변천과 문제점 분석	김영표·임은선

■ 46권(2005. 9)

한계농지의 산지전용을 위한 정책제언 : 전용규제에 대한 법·제도를 중심으로	김재경·안소은
현명한 실행계획(WiCop)을 통한 외국 연안지역의 연안분쟁 해결사례 분석 :	
이해당사자의 참여과정과 합의강화를 중심으로	문장원·구자훈
DEA를 활용한 산업단지 관리서비스의 효율성 측정	조영석
컨벤션 개최지의 포지셔닝에 관한 연구	김시중
외국 비영리주택활동의 발전방향과 시사점	천현숙
Poisson Regression을 이용한 주거정주의 결정요인 분석	최 열·임하경
노후불량주거지의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방안 : 소규모 주택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정우형
택지개발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 한국토지공사 택지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우 경

■ 47권(2005. 12)

개발압력의 국토공간상 이동패턴 분석	김재익·정현욱
상장기업 네트워크의 공간적 특성과 시장진출 과정	안종천
광역도시권의 거주환경 분석에 관한 연구	이성용·김 영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Public Services Accessibility and Utilization : in the Case of Public Parks of Austin, Texas	조준만
자료포락분석을 활용한 지자체 도시개발공사의 효율성 분석	김홍주·이희연
대중교통지향형 도시개발 유도를 위한 금융 및 세계 지원방안 : 미국사례를 중심으로	성현곤·권영종·오재학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빨대효과 분석 : 소핑통행을 중심으로	조남건·이훈기·진시현
공영 택지개발사업에서의 주민참여에 관한 고찰	유성용

노인공동생활주택 법률정립 방향에 관한 연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주차공급 기준 연구

서민소유 자가주택 개보수 활성화의 제약여건과 정책방안 : 단독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아파트 청약경쟁률 결정모형과 그 응용

싱가포르의 주택정책과 주택공급체계

DEM을 이용한 한반도 산맥체계 재설정에 관한 연구

중장기 차원의 국가GIS 정책 분석 및 발전전략

유병선 · 홍형욱

안정근 · 김 영

배순석

손재영

진미운 · 이현정

김영표 · 임은선

김태진

3. 건설경제(43~46권)

■ 43권(2005. 5)

건설경기진단

- | | |
|---------------------------|-----|
| 1. 2005년 상반기 건설경기 동향 | 김재영 |
| 2. 2005년 상반기 해외건설 동향 및 전망 | 김종현 |

특집_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점검과 평가

- | | |
|--------------------------|-----|
| 1. 민간투자사업의 환경 및 여건변화 전망 | 정진호 |
| 2. 민간투자사업 도로부문의 사업추진방향 | 박명주 |
| 3. 민간투자사업 도시철도부문의 사업추진방향 | 손주환 |
| 4. 민간투자사업 일반철도부문의 사업추진방향 | 강용삼 |

논단_ 건설산업분야의 규제실태와 규제개혁 방안

외국의 건설정보 김성일

- | | |
|---------------------------------------|-----|
| 1. BRICs(브릭스)의 SOC 및 건설부문 투자 동향 | 고용석 |
| 2. 해외 재난정보시스템 구축 사례 : 미국,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 정선영 |

■ 44권(2005. 8)

건설경기진단

- | | |
|---------------------------|-----|
| 1. 2005년 하반기 건설경기 전망 | 김재영 |
| 2. 2005년 하반기 해외건설 동향 및 전망 | 김종현 |

특집_ 대형공공건설 사업의 추진실태와 제도 개선

- | | |
|------------------------------------|-----|
| 1. 항만부문 사업의 추진실태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 나웅진 |
| 2. 일반철도건설 사업의 추진실태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공기원 |
| 3.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 이상호 |
| 4. 교통시설 타당성 평가체계 현황과 발전방안 | 김강수 |

논단_ 건설 산업 더불어 살려면...

주요 건설통계 김명수

■ 45권(2005. 11)

건설경기진단

- | | |
|--------------------------------------|-----|
| 1. 최근 건설동향과 향후 추이 : 건축허가, 건설계약, 건설투자 | 김재영 |
| 2. 2005년도 부동산시장의 동향 및 전망 | 최 수 |
| 3. 2005년 해외건설 점검 및 진단 | 김종현 |

특집_ 건설 업역별 미래 성장동력의 진단 및 확충방안

- | | |
|----------------------------|-----|
| 1. 건설산업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방안 | 최윤호 |
| 2. 전문건설업의 미래성장 동력 확충방안 | 정하영 |
| 3. 설비건설업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발전방안 | 김경희 |
| 4.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발전 방안 | 장상구 |

외국의 건설정보_ 외국의 국가교통계획

주요 건설통계 고용석

■ 46권(2005. 12)

건설경기진단

- | | |
|----------------------------|-----------------|
| 1. 2006년 건설경기 전망 | 김재영 |
| 2.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및 2006년도 전망 | 최 수 · 박천규 · 엄근용 |
| 3. 2006년도 해외건설 전망 | 김종현 |

논단

- | | |
|--|-----------|
| 1. 건설교통부문의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성일 · 홍정열 |
| 2. 최고가치 낙찰제도: 외국 사례와 도입방안 | 이상호 |
| 3. 공동도급 계약제도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 김명수 |
| 4. 건설경기 변동의 특성 | 김민철 |
| 외국의 건설정보_ 포틀랜드 TOD추진 사례-대중교통체계 검토를 중심으로- | 정선영 |
| 신간보고서 소개_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신도시건설이 건설자재 및 인력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대응방안 | 안홍기 · 권혁진 |
| 주요 건설통계 | |
| 판매보고서 안내 | |

4. 국토정책Brief(78호~97호)

호	발간일	제목	저자명	소속
78	1. 10	부동산시장 동향 및 2005년도 전망	최 수 · 박천규	토지 · 주택연구실
79	1. 19	세계화시대의 도시문화전략	박세훈 · 김현식	지역 · 도시연구실
80	3. 14	주거복지 지원 및 전달체계 구축방안	김혜승	토지 · 주택연구실
81	3. 28	공공임대주택정책의 개선방향	박천규 · 손경환	토지 · 주택연구실
82	4. 4	프랑스형 혁신도시 "경쟁거점"	서태성 · 정옥주	국토계획 · 환경연구실
83	4. 11	행정서비스 혁신을 위한 GIS기반 전자지방정부 구현전략	최병남 · 김동한	GIS연구센터
84	4. 18	다가구매입임대주택정책의 개선방향	천현숙	토지 · 주택연구실
85	5. 2	삶의 질이 도시의 질이다	박세훈 · 김현식	토지 · 주택연구실
86	5. 9	갈등해소를 위한 새로운 계획패러다임 도입	이왕건	지역 · 도시연구실
87	5. 16	서민소유 자가주택의 개보수 활성화가 필요하다	배순석	토지 · 주택연구실
88	5. 23	지자체 GIS 발전을 위한 '통합전략'	사공호상	GIS연구센터
89	6. 27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서해남북 접경지역 평화트 구상	김영봉	국토계획 · 환경연구실
90	7. 18	지역 내 · 지역 간 도로망을 활용한 '네트워크형' 지역중합개발전략	김재영 김상욱	SOC · 건설경제연구실 지역 · 도시연구실
91	7. 25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의의와 향후 과제	진정수	토지 · 주택연구실
92	8. 16	분권화시대의 도시정책, 중앙정부는 무엇을 하여야 하나?	박세훈 · 김현식	토지 · 주택연구실
93	10. 17	일본의 국토계획체계 개편	양하백	국토계획 · 환경연구실
94	10. 24	도시지역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국가지원 강화	김호정	SOC · 건설경제연구실
95	11. 21	혁신과 클러스터를 위한 프랑스의 경쟁거점 정책(II)	서태성 · 정옥주	국토계획 · 환경연구실
96	12. 12	통계청의 기초단위구를 이용한 도시지역 설정 및 통계적 활용	변필성 · 김광익	지역 · 도시연구실
97	12. 19	도시공동체를 키우자 : 도시공동체의 역사적 경험과 미래의 도전	박세훈 · 김현식	토지 · 주택연구실

부록 Ⅱ. 보고서 색인

1. 보고서명 색인	354
2. 연구자명 색인	360

1. 보고서명 색인

2004년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개선방안 연구	271
2005년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장기 발전방안 연구	272
2004년 국가 IIS 기술표준화 연구	172
2005년 부동산 시장 및 정책 동향	220
2005년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 기반연구	273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수립연구	122
2025 파주도시기본계획	123
2025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연구	123
가야문화권 광역관광개발 계획	63
개발가능지의 합리적 선정을 위한 토지형상기준 도입방안	258
개성공단 및 남북한 서해안 연안지역 개발전략 연구용역	63
건설경기의 구조적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	150
건설공사 부실벌점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73
건설교통분야 SOC스톡 현황분석과 향후 추진방향설정 및 지역별 배분방안에 관한 기초 연구	174
건설산업구조개편에 따른 건설보증기관의 발전방안 연구(정책연구)	174
건설산업DB구축사업	175
검지기별 구간소통정보 산출 및 성능평가(II)	176
경기 서북부 국제업무 신시가지개발 타당성분석 연구	124
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산지관리제도의 개선방향	222
고도지역 지구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용역	246
고속도로 교통정보 제공에 따른 이용자 편익 연구(1차)	177
고속도로 사업효과 조사 연구	178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관련 기본조사	179
고속철도 주변지역의 효과적 개발방안 연구	64
고속철도와 국토공간 구조의 변화(1)	152
고해상도 인공위성 영상을 이용한 객체지향적 토지이용/피복분류방법 연구	274
공공갈등예방 및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125
공공기관 종전부지 활용방안 연구	246
공공참여를 통한 도로사업의 갈등관리방안	154
과천지식정보타운(가칭) 개발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126
광역교통체계 기반의 포천 신도시 개발 전략 연구	128
광역대도시권 SOC 정책의 새로운 방향(III): 전략교통모형을 중심으로	156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투자재원 확보방안 연구	94
국가기간교통망의 유고(有故) 대응전략 연구: 도로 재난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158
국가GIS 전문인력 양성사업(GIS온라인교육 및 콘텐츠 개발)	275
국가ITS 사업의 상호연동 기반구축을 위한 기술표준 적용방안	180
국민경제 안정을 위한 주택산업 발전방향 연구	224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 실현방안 연구	247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비 산출체계 구축방안 연구	248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향상 및 부동산시장 안정기반 구축 연구	226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설엔지니어링 핵심기술개발 연구: 설계내실화방안	181
국책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사회합의형성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20
국토·교통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 시행방안 연구	23
국토관련 정보체계의 연계·활용방안 연구	275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계획 수립연구	276
국토혁신을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계획 수립 연구: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160
균형발전 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	182
기업도시 기반시설 국고지원 기준 연구	184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관리 연구	64
기업도시 타당성 검토기준 및 개발이익 산정기준 연구	66
김포신도시 개발구상 및 주변지역 관리방안 연구	128
남북교류 및 동북아협력을 위한 국토계획 수립 연구: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26
남북교류증진을 위한 북한지리정보 구축방안 연구	260
남북인프라협력사업의 통합적 추진방안 연구	29
내륙 지방거점도시 삼각 테크노벨트 구축방안	129
대도시권 교통개선을 위한 재택근무 활성화방안 연구	161
대체수자원 확보에 관한 연구	67
대형 공공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163
대형 공공공사 입찰방법 선정기준 개발 연구	164
도로부문 재원운용 효율화 방안	166
도시개발제도 개선방안 연구: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중심으로	96
도시경관 관리제도 정비방안 연구	98
도시홍수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67
도시화지역 획정을 위한 시스템 개발	130

미래지향적 도시계획과 합리적 토지이용관리 체제 구축: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100
민간제안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실태와 발전방안	102
민간투자사업 중간평가와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185
밀양댐 건설공사 사후평가 연구	68
방재국토 구축을 위한 GIS 활용방안 연구(I): 방재GIS 데이터의 통합 활용방안	262
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 사업시행방안 기본조사	69
부천시 교통관련 기초조사자료 및 ITS(소통부문) 시행효과 제고방안 연구	186
북한강 유역의 남북한 평화적 이용방안	31
북한의 국토개발 및 관리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70
산업단지 개발편람 연구	103
산업입지제도 개편방안 연구	130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추진방안 연구	105
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이용계획 수립 연구	72
생태관광 활성화방안 연구: 지역주민참여 유도를 중심으로	35
생태적 도시개발을 위한 물순환 체계 확보방안 연구: 분산식 빗물관리를 중심으로	38
서울시 강남주택시장의 구조분석 연구	228
서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 수립 용역	73
수도권 개발수요 및 가용지 분석을 통한 효율적 토지수급방안 연구	277
수도권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지방이전 추진방안 연구	132
수도권 대규모 개발사업의 집합적 파급영향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107
수도권발전대책 국제용역에 따른 지원용역	133
수자원관리 및 국토방제기반 구축: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40
시공간통합 국토시물레이션모형 개발 연구(I): 국토정책시물레이션 개발 방법론	264
時空自在의 세상을 향한 사이버국토 창조방안(II): 時空自在도시 구현방안	266
신도시 개발 등이 전자재 및 건설인력 수요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187
약동하는 통합국토를 위한 국토계획 기본골격 연구: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41
연계성을 고려한 수송물류결절점 평가기법 연구	168
웅진군 종합발전계획	134
왕궁특수지역 환경개선사업 및 왕궁축산폐수 처리시설 보강공사 민간제안사업 제3차 공고 '안' 및 기획예산처 심의자료 작성	188
용수 재배분을 통한 가용수량 평가 및 확보방안(I)	75
용수 재배분을 통한 가용수량 평가 및 확보방안(II)	76
웹환경 도로기반시설물 범용시스템 개발지침 연구	278

유역통합관리를 위한 재원확보방안 연구	42
유희농지의 효율적 활용 · 관리방안 연구	231
이집트 토지개발 정책 평가와 감시능력 강화사업	135
인구저성장시대의 도시관리정책 방향 연구	109
인천 남항 · 북항 배후도로 지원신청서 검토 용역	189
인천경제자유구역 교통기본계획 수립 및 신교통시스템 도입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190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경관기본계획	77
임대사례조사 및 투자수익률 추계사업의 평가 및 발전방안: 공공의 사업추진 여부 필요성 검토 및 발전방안 등에 관한 연구	248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잠재력 분석 연구(II): 지역의 제도적 역량 및 조직화 능력을 중심으로	111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 구축: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113
재정사업 자율평가 체계구축 연구	192
전국 무역향 향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수립 용역(수요측정 및 경제성분야)	193
전국단위 표준 노드/링크DB 연계구축 사업관리	194
전주광역시 도시계획수립 용역(1차)	135
정기적 주거실태조사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	249
제2차 국가GIS사업 백서	279
제3차 국가GIS 기본계획 수립 연구	280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연구	136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연구	78
제주광역시 도시계획 수립연구	79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주민 재정착 재고방안 연구	233
주차환경개선기본계획 수립 및 주차수급실태조사 연구	195
주택소비자보호를 위한 주택품질보증체계 구축방안	236
주택수요조사연구	249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금융 역할강화 방안	238
중부내륙광역권 개발계획	136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 수정 보완을 위한 연구	197
지방분권과 지역참여를 통한 국토계획 수립연구: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45
지방분권시대의 주택거버넌스체계 정립방안 연구	240
지방분권에 따른 국토도시계획체계 재정립 방안 연구	115
지방분권화와 지역균형발전에 대비한 일반국도 노선재정비 방안 연구	198
지방분산 · 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1): 참여정부의 분산 · 분권형 균형발전정책의 진단과 개선방안	47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전략 및 추진방안: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50
지식기반산업의 군집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캐나다 밴쿠버의 바이오산업을 중심으로	52
지식정보화시대의 디지털통합국토 구상 연구: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269
지역간·계층간 주거서비스 격차 완화방안 연구(I): 주거서비스 지표의 개발 및 측정	242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농공단지의 혁신방안에 관한 연구	118
지역특성화 발전을 위한 혁신 클러스터 육성방안 연구	120
지역특성화연구개발사업 과제발굴 및 권역별 연구단 사업추진방안 연구(총괄연구단)	80
철원 평화시 건설 기본구상 연구	137
춘천미군기지 이전부지 및 그 주변지역의 활용방안 조사 연구용역	81
타당성조사 등의 비계량적 항목의 계량화기법 개발 연구	200
토지관련 부담금제 개선방안 연구	251
토지이용규제 정보화 추진방안 연구(II): 토지이용 규제내용의 정보화	253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281
토지적성평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용역	254
통합국토를 향한 지역간 공동발전 방안 연구(III): 제도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54
통행수요 추정의 신뢰수준 제고 방안 연구: 구간 통행수요 모형 개발을 중심으로	170
평택시 장기종합발전계획	83
표준 노드/링크 체계 구축사업	201
하남- 화도(국도45호) 교통량 재검토	203
한·일해협권 통합지역경제 기반구축을 위한 전략	56
한·중 토지정책연구(V): 지속가능한 개발과 토지정책	244
한반도 도로네트워크 구축방안(I단계) 연구	204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학술용역)	138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수립 연구	84
행정중심복합도시 국제공모관리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국제공모)	139
행정중심복합도시 국제공모관리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전략연구과제: 미래형 삶의 질 향유를 위한 첨단정보도시 구현방안)	281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140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관리방안연구	254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개발지침 및 편람작성 연구	141
혁신도시 입지선정기준 연구	142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조사연구 보완용역	206
홍수피해특성 분석 및 홍수피해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58

환동해경제권 형성을 선도하기 위한 동해안지역의 대외전략	60
효율적인 빗물관리방안 연구	84
European Port- City Interface and Its Asian Application	62
ITS 분야별 업무절차 및 직무표준 설정에 관한 연구	208
UTI 국가표준 및 교통정보 연계를 위한 기술기준에 관한 연구	209

2. 연구자명 색인

Cesar Ducruet	62	김성수	126
강미나	220, 226, 228, 238, 249	김성일	163, 164, 192
강태수	138, 140	김수경	181
강형주	175	김수현	68
강호제	120, 135, 141	김승중	100, 231, 233, 240, 254
강희찬	194, 201, 209	김연준	139
고용석	160	김영단	135
고지훈	175	김영봉	26, 31, 81, 137
공금록	200	김영철	123, 253
권영상	138, 139, 140	김영표	264, 266
권영선	65, 84	김원배	26, 29, 56, 60, 70
권영섭	113, 120, 129, 141, 142	김원주	77
권오성	182	김의식	135
권재원	73	김재영	150, 160, 173, 174, 175, 181, 187, 200
권창범	273	김정훈	258, 269, 277, 278, 279, 281
권혁진	150, 173, 174, 175, 185, 187	김종원	40, 42, 67, 69, 75, 76
김경모	77	김종학	152, 156, 190, 206
김경석	29, 128, 156, 160, 186, 189, 190, 201, 204	김중은	100, 109
김광구	126	김진범	72, 79, 83, 246
김광목	58, 84	김진성	73
김광익	103, 105, 111, 130, 132, 142	김창현	42, 45, 66, 69, 75, 76
김근용	220, 226, 242, 247, 249	김태영	80, 206
김기용	190	김태환	111, 113, 118, 132
김동환	264, 266, 271, 272, 273, 281	김현식	47, 102, 105, 126, 135, 137, 161
김명수	98, 138, 140	김현중	64, 126
김미정	135, 260, 271, 273, 281	김형진	122, 128, 132, 138, 140
김민영	197, 208	김혜련	178, 198
김민철	150, 163, 174, 192, 224	김혜승	226
김보영	274, 279	김호정	158, 178, 185, 198
김상욱	94, 113, 123	김훈상	66, 126, 184
김상조	115, 138, 140	김희주	125, 135
김선희	20, 50	노희순	123, 247, 249

류승환	64, 72, 79, 83, 103, 111	박화권	66, 67
류재영	192, 193	배경화	118
문정호	47, 64, 79, 84	배순석	226, 233, 247, 248
문 체	123, 247, 249	배인성	64
문 혁	173, 147, 175, 181	백인곤	175
민범식	72, 77, 98, 100, 123, 138, 140	변세일	107, 113, 126
민숙주	275, 276, 281	변태근	200
박경현	109, 120, 129, 141	변필성	105, 111, 115, 133
박동길	253	사공호상	70, 247, 260, 275, 276, 277, 280, 281
박동호	175	서관호	253
박미영	254	서기환	260, 277, 278
박상우	107	서동우	254
박상준	178	서민호	189, 204
박세훈	41, 47, 64, 67, 81	서태성	41, 47, 64, 78, 84
박승미	126	성은영	73, 246
박시영	271, 272	손경환	220, 224, 226, 246, 248
박양호	78, 136	손성경	206
박영철	45, 130	손주동	63
박용희	122	송하승	222, 246, 254
박은관	96, 100, 135	신동빈	271, 272
박익순	123	신동진	100, 126
박인련	41, 47, 54	신성해	248
박재길	100, 105, 138, 139, 140	신소영	122
박제진	195	신 연	128
박종택	262, 274, 275	신정철	122, 123, 135, 156
박진형	275, 277	심소희	133, 136
박찬호	128, 137	심우배	23, 40, 42, 67, 84, 138, 140, 262
박채운	81, 192, 254	안용진	96, 98, 123, 135
박찬규	220, 224, 226, 242, 246, 248	안인향	246, 249
박태선	40, 58, 68, 84, 192, 200, 262	안흥기	150, 174, 178, 185, 187, 189, 200
박형서	20, 56, 60, 107, 113, 125, 129, 135, 136	양하백	54, 63, 72, 73, 77, 79, 83, 246
박형일	203, 206	엄근용	220, 246

엄형민	128, 138, 222	이순자	40, 69, 72, 79, 83
오선영	77, 80	이승복	50, 58, 67, 68, 84
오성호	158, 170, 180, 190, 194, 201, 204, 209	이승용	139
왕광익	84, 122	이승욱	139
유덕상	78	이승훈	163, 192
유선철	65, 84	이영인	168
유재윤	64, 66, 163, 184, 185	이영주	279
윤별아	128, 130	이왕건	105, 109, 139
윤성민	174	이용우	23, 50, 63, 64, 73, 126, 136, 182
윤승환	67	이원섭	41, 47, 54, 78
윤양수	23, 58, 63, 72, 73, 113	이인재	122
윤영모	64	이 일	141
윤주현	226, 228, 238, 242, 249	이재석	135
윤지선	247, 248	이재영	78
윤태연	75, 76	이재원	72, 79, 83
윤하중	156, 188, 194, 203	이정수	135
윤혜정	102	이정윤	193
윤혜철	41, 47	이종열	80, 262, 273, 274, 275, 280
이강식	80	이지나	81
이경아	128, 186, 197	이진희	128
이규방	78	이춘용	79, 84, 138, 140, 154, 166, 198
이난경	246, 254	이희구	175
이동우	94, 113, 129, 132, 133, 136, 142	인연정	136
이명재	83	임관수	172, 176
이문원	26, 31, 81	임상연	23, 35, 41, 47, 126
이민파	273	임영태	135, 168, 190, 193, 206
이범현	107, 123, 138, 140	임은선	264, 266
이상건	158, 160, 172, 176, 177, 194, 197, 208, 209	임정민	123
이상준	26, 29, 60, 63, 70, 260	임지영	126
이성렬	190, 201, 209	임형빈	122
이성수	26, 29, 45, 56, 60, 63, 70, 80	장은교	72, 83
이수욱	73	장철순	52, 80, 130

전대윤	45	최병선	78
전병해	123	최성환	135
정문섭	262, 269, 280	최 수	192, 220, 231, 247, 251
정석희	120, 124, 128, 134	최영국	35, 38, 50, 77, 80
정선영	158, 172, 176, 177, 178	최일기	80
정옥주	41, 54, 62, 77, 132	최자은	63, 72, 73, 83, 113
정유진	132	최정환	81
정윤희	94, 115	최지선	174, 185
정일호	160, 170, 174, 206	최지영	137
정지호	254	최창영	128, 137
정진규	64, 152, 160, 161, 184, 206	최혁재	231, 254
정진석	271, 272	한미정	124
정호식	139	한선희	264, 266, 269, 275, 279, 281
정희남	100, 244, 247, 251, 253	한영해	38
조남건	152, 160, 179, 182	한재일	278
조미향	137	한정화	69, 83
조성찬	251	한진영	194
조응래	154	허영기	248
조지현	180, 194, 201	현창택	164
조진철	20, 31, 41, 63, 64, 66	홍정열	192, 193
조춘만	128, 138, 140, 258	황성수	124, 128, 134, 136
조판기	84, 246	황승미	105, 111, 125, 130, 274
지대식	224, 231	황용선	70
진시현	179	황정현	123, 134
진영환	64, 78	황태일	247
진정수	128, 135, 137, 240, 247		
채명기	273, 277, 281		
채미옥	100, 222, 246, 254		
천현숙	80, 233, 240		
천혜영	277		
최명섭	124, 128		
최명남	138, 140, 264, 266, 280, 281		

연차보고서 발간 전담반

반장 신동빈 정보자료팀장
반원 이수옥 연구조정팀장
권혁진 책임연구원
박세훈 책임연구원
박태선 책임연구원
오성호 책임연구원
한선희 책임연구원
송하승 연구원
임상연 연구원
황승미 연구원
최영미 전문원
간사 박순업 책임전문원
(직급별 가나다순)

2005 국토연구원 연차보고서

발행자 · 최병선
발행처 · 국토연구원
출판등록 · 제2-22호
인쇄 · 2006년 6월 15일
발행 · 2006년 6월 20일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6 (431-712)
전화 · 031-380-0114(대표)
팩스 · 031-380-0474

<http://www.krihs.re.kr>

©2006, 국토연구원

* 이 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